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지식서비스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System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for Green Growth
-Focusing on the Industrial Restructuring Towards the Knowledge Services Industry-

김진욱 Kim, Jin Wook
심경미 Sim, Kyung Mi

(a u r i

AURI-기본-2010-8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지식서비스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System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for Green Growth

-Focusing on the Industrial Restructuring Towards the Knowledge Services Industry-

지은이: 김진욱, 심경미

펴낸이: 손세관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05호

인쇄: 2010년 12월 24일, 발행: 2010년 12월 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10,000원, ISBN: 978-89-93216-67-7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1.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시리즈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기관 고유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02-14	AURI-기본-2010-8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진욱 부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원

* 해당 기관 양해 하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AURI-기본-2010-8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10-02-14로 발간함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경공업·제조업에서 IT산업 등 최첨단 산업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하고,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는 글로벌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신성장동력으로서 산업 육성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지식서비스산업의 체계 개편과 육성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2009년 정부는 『산업발전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건축분야를 명시하였다. 이는 녹색성장 등 새로운 경제성장 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OECD 가입국 27개 중 21번째로 국가 경쟁력이 취약하며 규모도 10인 미만의 사업체수가 전체의 87%로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서울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는 세계 2,076개 도시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고, 건축산업은 고도의 전문업종으로서 타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높고 타산업과 전후방연계효과가 높아 관련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신성장동력으로서 경쟁력있는 건축서비스산업이 새로운 경제성장 패턴에 대응하고 이의 육성을 위해 산업적 구조로의 전반적 체계정비와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축분야에 산업적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진흥시키기 위해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규 및 산업연관표 등에 대한 문헌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고, 특히 산업 및 법제 관련 외부 연구진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여러 차례의 전문가 포럼과 대규모 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여 수행하였다.

제2장. 건축분야 산업개념 도입의 필요성

2장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분야가 왜 산업으로 구조개편되고 인식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식서비스산업과 건축서비스산업의 산업적 가치를 분석하였으며,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구조로 개편을 위한 활동과정과 정책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식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 기여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도 성장 기여율이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고용비중에 있어서도 고학력 고용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서비스산업은 1,000억원이 투자될 경우 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 효과는 약 1.5배, 고용 효과는 약 1.9배가 창출되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고용효과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산업적 구조개편 및 정책지원은 법·제도정비, 진흥정책 수립, 재단설립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디자인 분야는 1990년대 이미 진흥법 체계의 법정비를 토대로 산업디자인분야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문인력 및 기업 양성, 디자인 연구개발 강화, 국제화 교류강화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의 디자인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음을 확인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건축분야와 유사한 엔지니어링 분야는 2010년 4월 2010년부터 5개년간 1조8천억원의 재정지원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역시 2010년 법 개정예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을 산업적 측면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건축분야의 진흥을 위해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산업적 개념 도입 및 진흥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2장에서 제시된 건축서비스산업의 산업적 구조개편을 위해 건축관련 법제도에서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설계가 어떻게 인식 또는 정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약관련 법규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계약체계가 어떠한지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건축관련 법규로는 『건축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을

중심으로, 계약관련 법규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건축기본법에 건축서비스산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정의만 명시되어 있을 뿐, 건축관련 법규에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축업은 건설업과 다르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가 여전히 건설기술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조업의 일종인 건설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인 건축 및 엔지니어링 산업을 구분하여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관련 법규에서 건축설계는 용역계약과 공사계약에 해당되는데 건설공사시 설계기준의 계약지침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공사 계약시 평가되는 설계안에 대한 계약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회계예규에서는 건축설계를 공사위주의 계약방식으로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계약관련 법규에 건축설계기준에 대한 계약지침 명시와 회계예규에 있어 용역계약 부분에 건축설계 계약방식 명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4장.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해외사례 분석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산업적 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매출규모가 큰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체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은 첫째 건축서비스업이 산업분류체계에서 조정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와 구분하여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적 정의는 일반적인 건축설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건축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까지 건축서비스업으로 그 영역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건축서비스에 관한 건축가 및 설계사무소 선정과 계약을 위한 별도의 공공계약법이 존재하여, Brook Act에 따라 최저가낙찰방식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건축가의 자질과 능력을 바탕으로 건축가 및 설계사무소를 선정하고 가격은 추후에 협상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격이 아닌 디자인능력 또는 건축가치 기준이 계약에서 우선시되고 있어 국내에 시

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일본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은 첫째 일본의 전체 법체계 속에서 건축은 『산업법』 내에 포함되어 산업법의 통칙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 둘째 『건축사법』에서 건축업무의 보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셋째 건축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관련 중소기업자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이 가능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세이프티 넷(안전망) 대부제도’와 ‘세이프티넷 보증제도’는 정부계 중소기업 금융기관에 의한 융자제도로써 건축과 관련된 넓은 범위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제도이다.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 미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건축관련 법에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은 정의되어 있지 않았으나, 『산업법』 내에 건축이 포함됨으로써 산업적 구조체계 속에서 보수기준과 재정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 건축분야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관련법 검토

3장에서 살펴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4장의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건축분야의 산업구조 개편과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검토를 하였다. 이는 크게 첫째 건축디자인 관련 법제, 둘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제, 셋째 건축기본법 체계 및 산업진흥 관련 내용 분석으로 구분하여, 각 법제들의 제정 배경 및 역할, 주요 내용 및 성격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건축관련 법에서 건축분야의 진흥을 위한 조항은 건축기본법에 부분적으로 개념이 명시되어 있으나 산업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추진 체계가 미비하여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정 산업의 육성 내지 지원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 총 33개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2010.8 기준 5개 법률 국회 계류 중), 이들 법률을 검토한 결과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재단설립, 기술 및 교육지원 등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업 행위를 하는 산업활동의 ‘활동주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제6장.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비 방향 및 추진전략

6장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정비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법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정비 추진전략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법정비 주요 목표로 첫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육성 정책의 토대 구축, 둘째 건축의 산업적 개념 도입, 셋째 건축의 경쟁력과 건축물 질 향상을 위한 건축설계 별도의 계약방식 마련 등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법정비 기본방향은 기존 관련 법률에 포섭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한 결과, 신법의 제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건축서비스산업이라는 독자적인 산업유형을 널리 확산시키고 이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간다는 취지에서 법령의 제명을 보다 폭넓은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진흥법” 체계로 전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정비 추진전략으로 첫째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 정의 방안, 둘째 건축관련 개별법 개정 방안, 셋째 건축설계 계약기준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제도 개선의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을 명확화하여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2단계로 기존의 『건축기본법』의 부분개정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을 정의하고 건축관련 개별법을 개정하며, 3단계로 새로운 법률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정책개발 추진 방안과 건축법 개정을 통한 건축행정 선진화 방안 두 가지 측면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분야 성과관리 대상의 일부로 인식되어 온 건축설계분야가 고부가가치를 가진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육성, 지원해야 할 대상임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축분야의 육성과 산업적 구조개편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건축관련 법·제도 정비와 종합적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건축서비스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녹색성장, 제도정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기본법, 건축계약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3. 관련 용어의 정의 : 건축서비스산업	11
4. 선행연구 검토	12
제2장 건축분야 산업개념 도입의 필요성	17
1. 녹색성장 산업으로서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중요성	17
1)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17
2)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	21
2.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징 및 중요성	27
1)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특징	27
2) 건축서비스산업의 타 산업과의 관계적 특성	29
3) 건축서비스산업의 중요성	32
3. 타분야 산업구조 개편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38
1) 디자인산업 분야	38
2) 엔지니어링산업 분야	44
3) 타분야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주요 성과	50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51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분류 현황	51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요	51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축서비스산업과 유사 산업과의 관계	53
3)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통한 건축 관련 산업의 활동 주체 구분	54
2. 건축관련 법제도에서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설계의 정의 현황	56
1) 건축기본법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현황	57
2)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설계의 정의 현황	57
3)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설계의 정의 현황	60
3. 국가계약 관련법에서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체계 분석	64
4. 소결 : 특성 및 문제점	69

제4장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해외사례 분석71

1. 미국의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및 관련 법	71
1) 미국 건축서비스산업 분류체계와 정의	71
2) 미국 건축서비스 산업구조 개편의 역사	74
3) 미국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체계	79
4)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특성	89
2. 일본의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및 관련 법	101
1) 일본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체계	101
2) 일본의 건축기준법 및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	108
3) 건축관련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현황	115
3. 소결 :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특성 및 시사점	117

제5장 건축분야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관련법 검토121

1. 산업관련법에서 산업의 정의 방식	121
1) 용어의 구체적 설명에 의한 정의	123
2)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정의	124
3) 세부산업 분류 및 타 법 정의와의 관계를 통한 정의	125
4) 산업의 활동 주체 명시를 통한 개념 명확화	126
2.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검토	127
1) 건축디자인 관련 법제 검토	128
2)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제 검토	137
3) 건축기본법 체계 및 산업관련 내용분석	144

3. 소결 : 특성 및 문제점	151
제6장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비 방향 및 추진 전략	153
1. 법정비 주요 목표	153
2. 법정비 기본방향	153
1) 법정비 체계의 기본방향	153
2) 법정비 내용의 기본방향	159
3) 기타 입법시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160
3. 법정비 추진 전략	162
1)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 정의 방안	162
2) 건축관련 개별법 개정 방안	166
3) 건축설계 계약기준 개정 방안	166
4. 결론 및 정책 제언	168
1) 결론 : 건축서비스산업 제도 개선 단계별 추진방향	168
2) 정책 제언	169
참고문헌	173
Summary	177
부록	181
부록 1. 관련 법 주요 내용	181
부록 2. 회계예규	199
부록 3. 건축디자인 관련 조례 및 국회계류 중인 법률(안)	219
부록 4. 일본 참고법조문 및 건축설계사무소 순위	225
부록 5. 중소기업 지원 정책	245
부록 6. 산업연관분석	283

표차례

[표 1-1]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3개분야 17대 추진과제	2
[표 1-2] 산업발전법 전면개정(2009.3.20)의 목적	3
[표 1-3]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4
[표 1-4] 건설산업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4
[표 1-5] 연구의 흐름	10
[표 1-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표 2-1] 통계청의 지식기반서비스 분류기준에 따른 세부업종	19
[표 2-2] OECD의 지식집약서비스 활동(KISA)의 유형	20
[표 2-3] EU의 비즈니스 서비스 분류	20
[표 2-4] 산업별 매출액 비중 및 연평균성장률	23
[표 2-5] 산업별 대졸이상 근로자 비중	24
[표 2-6] 국내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현황	25
[표 2-7] 산업별 중간투입율 추이	28
[표 2-8] 건축공학관련서비스업의 중간투입율과 부가가치율 변화 추이	28
[표 2-9] 건축서비스산업의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 추이	30
[표 2-10]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산업의 전후방연계 상위 20위(2005년)	31
[표 2-11]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효과(2007년 기준)	35
[표 2-12]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 추이	36
[표 2-13] 건축서비스산업의 인건비 및 부가가치율	37
[표 2-14] 1,000억 투자 시 생산 및 취업 유발효과(2007년 기준)	37
[표 2-15]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 년차별 주요 추진전략	40
[표 2-16] 제1차, 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 기본계획 주요 추진전략	48

[표 2-17]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종합대책 추진전략 및 추진대책	49
[표 2-18] 주요 엔지니어링산업 추진과제	49
[표 3-1]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부문 개정사항	52
[표 3-2]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항목표	54
[표 3-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련 산업의 구분	54
[표 3-4]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건축관련 산업 활동 주체 구분	55
[표 3-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체계	56
[표 3-6] 건축기본법에서의 용어정의(제3조)	57
[표 3-7]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용어정의(제2조)	58
[표 3-8]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58
[표 3-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하는 건축공사의 종류	59
[표 3-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의 하는 건축공사업	60
[표 3-11]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규정사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60
[표 3-12]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건축공사(제2조)	61
[표 3-13]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건축공사	62
[표 3-14]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기술영업업	62
[표 3-1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건설공사와 건축설계 관계(제13조)	63
[표 3-16] 건설기술법에 의한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	63
[표 3-17] 건설단계별 관련 법률	64
[표 4-1] SIC와 NAICS의 건축 서비스 산업 분류 비교	72
[표 4-2] NAICS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분류	73
[표 4-3] FAR에 의한 주요 용어정의	81
[표 4-4] FAR에 의한 일반적인 건축서비스용역의 선정 기준(FAR 36.602-1)	83
[표 4-5] USC Title 41에서 해당 부서 또는 기관장이 2단계 선정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83
[표 4-6] 뉴욕주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	86
[표 4-7] 뉴욕주 법에 의한 건축서비스의 정의(New York State Education Law의 § 7304)	87
[표 4-8] 미국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89
[표 4-9] 직원수에 따른 단독기업체 설립 현황	90
[표 4-10] 미국의 취업자 수 및 증가율 추이	96
[표 4-11] 일본의 법률체계	102
[표 4-12]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중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103
[표 4-13] 일본 건축기준법의 구성	105

[표 4-14] 일본 건설업법의 구성	106
[표 4-15] 일본 건설업법에서의 정의(제2조)	106
[표 4-16] 일본 건축사법의 구성	107
[표 4-17] 건축사법 중 업무의 보수(제25조)	108
[표 4-18]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쇼와25년(1950년) 12월 14일 법률 제264호)의 목적	115
[표 4-19] 세이프티넷 대부제도 및 세이프티넷 보증제도	116
[표 5-1] 우리나라 산업 관련 법 종류(2010년 10월 기준)	121
[표 5-2] 용어의 구체적 설명에 의해 정의한 예	123
[표 5-3]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산업을 정의한 예	124
[표 5-4] 세부산업 분류 및 타법 정의와의 관계를 통해 정의한 예	125
[표 5-5] 산업 활동 주체를 함께 정의한 예	126
[표 5-6] 산업 관련 법 유형 및 내용	138
[표 5-7] 소관부처별 산업관련 법	141
[표 5-8] 진흥법 구성체계 예	141
[표 5-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산업디자인 진흥법의 구성체계	143
[표 5-10] 국회계류중인 특정 산업관련 법	144
[표 5-11] 기본법 구성체계	145
[표 5-12] 건축기본법의 주요 내용	148
[표 5-13] 건축기본법 건축문화진흥 관련 규정	149
[표 5-14]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의 구성	150
[표 6-1] 산업 진흥·발전·육성·촉진 등을 위한 법 종류	158
[표 6-2] 진흥법 및 특정 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	159
[표 6-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 주요 내용 구성(안)	160
[표 6-4] 건축서비스산업 개념 정의 방안 : 1안	163
[표 6-5] 건축서비스산업 개념 정의 방안 : 2안	165
[표 6-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안)	167

그림차례

[그림 1-1] OECD 국가의 건축서비스산업 비교-업체 1개당 매출실적	5
[그림 2-1] 산업의 가치곡선 변화	21
[그림 2-2] 산업경쟁력 원천의 중요도 변화	22
[그림 2-3]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과 서비스업 비중	23
[그림 2-4] 주요 부문별 고용 비중 변화	24
[그림 2-5] 생산유발 전·후방 연계효과(2005년)	31
[그림 2-6] 지식서비스산업(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과의 관계	33
[그림 2-7] 취업자수	35
[그림 2-8] 디자인 분야의 산업적 구조개편 추진과정 및 성과	38
[그림 2-9]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6대 전략과제	41
[그림 2-10] 2003년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42
[그림 2-11] 2006년 이후 디자인산업 발전 전략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43
[그림 2-12]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의 재정지원	44
[그림 2-13] 엔지니어링분야의 산업적 구조개편 추진과정	45
[그림 2-14] 1차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기본계획에서의 정부지원계획 규모	46
[그림 2-15] 2차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기본계획에서의 정부지원계획 규모	47
[그림 2-16] 엔지니어링산업발전 종합대책(2010)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계획 규모	49
[그림 3-1]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9차개정)에서의 건축서비스산업의 분류	53
[그림 4-1] 건축서비스용역의 범위와 기간, 설계료, 계약금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설계용역 착수협약문서 예	78
[그림 4-2] 건축서비스 관련 연방계약법률	80
[그림 4-3] 건축서비스 관련 연방계약법 체계	80

[그림 4-4] 미국 건축서비스 관련 공공계약의 기본 원칙	81
[그림 4-5] ‘브룩 건축가-엔지니어 법(The Brook Architect-Engineers Act)’ 에 의한 선정절차	82
[그림 4-6] 2단계 선정절차	84
[그림 4-7] 거시경제 상황과 같은 모양을 보이는 매출 및 고용 비율	91
[그림 4-8] 매출 총액에 대한 주요 시장 분류(2010년)	92
[그림 4-9] 매출 총액에 대한 서비스 분류(2010년)	93
[그림 4-10]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진입 현황(2010년)	95
[그림 4-11] 노동집약적 특징을 지닌 건축서비스산업	97
[그림 4-12] 자본집약도	97
[그림 4-13] 건축서비스산업의 수명주기	99
[그림 4-14] 2009년 6~7월 앙케이트 조사	111
[그림 4-15] 2008년 앙케이트 조사	114
[그림 4-16] 최저가 낙찰방식의 단점을 묘사한 Cartoon	118
[그림 5-1] 건축기본법의 구성체계	149
[그림 5-2] 건축서비스산업관련 법체계정비대상 범위	152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관련 용어의 정의
4. 선행연구 검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국가차원에서 신성장동력으로서 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 대두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것으로 즉, 경제성장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자는 개념으로 선진사회 실현을 위한 원인요법에 착안한 구체적 정책해법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으론 경공업, 제조업에서 IT 산업 등 최첨단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하고,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는 글로벌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신성장동력으로서 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NNI(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2000)¹⁾, 일본의 Innovation 2025(2007)²⁾, 대만의 첨단산업 육성전략 등과 같이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제성장패턴의 변화를 통해 선진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 산업 육성

1) 바이오, 에너지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나노기술을 차세대 핵심기술로 선정, 신기술상용화를 목적으로 2008년 2단계 사업 추진(2007년 예산 13억불)

2) 2025년 일본사회의 5대 목표를 제시하고, 8대 중점 기술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추진중,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나노 재료 등

의 필요성에 따라 각 정부부처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식혁신 기반의 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지식서비스산업의 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며, 국토해양부는 2009년 3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는 2009년 3월 공동으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신성장동력 분야를 발굴하여 3개 분야 17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여기서는 녹색성장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고부가 친환경 경제’의 개념으로 확장하고, 친환경 산업, 고부가 융합산업, 지식서비스업 등을 중점 발굴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21세기 지구환경 시대에 대한 미래준비와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성장동력으로서 산업을 육성, 발굴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산업 역시 미래성장동력으로서 관련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표 1-1]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3개분야 17대 추진과제(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2009년 지식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법』 제도 정비와 건축서비스산업

정부는 세계경제의 변화와 녹색성장 등 새로운 경제성장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체계를 지원하는 『산업발전법』을 2009년 3월 20일 전면 개정하였다. 전부 개정된 『산업발전법』은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와 기후변화·자원고갈 등 환경문제의 심화에 대응하여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부문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역량 제고 및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산업전반의 구조를 녹색성장의 기본적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시작으로 관련 산업의 전반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산업발전법 전면개정(2009.3.20)의 목적

현 행 : 제1조 (목적)	개정안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된 산업발전법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의 조항이 신설(제8조 2항)되었는데, 여기서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³⁾와 관련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는데, 여기서 건축분야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1-3).⁴⁾

이로써 건축분야는 지식의 생산, 활용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인정되었으나, 정작 건축관련 법규나 건축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적으로는 건축이 제조업 중심의 성과관리 대상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분류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지식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건설산업 성과관리의 일부분과, 기술부분의 혁신부분으로 인지하고 있다.⁵⁾ 이것은 『산업발전법』의 의미와도 상충된 것이다.

이처럼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건축분야에 산업적 개념이 미비하고 관련 법규에 그 범위와 정의가 모호하므로, 건축분야에 산업적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3) 건축법 시행령(시행 2009.5.8)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4) 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대분류 72번인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

5)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의 일환으로 산업진흥적 차원에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과학기술산업 차원의 진흥정책에 따라 제정되어 『건축서비스산업』 전반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표 1-3]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 별표2, 시행 2009.5.8)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방송업	60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추출업	7390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문서작성업	7591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에 한한다)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교육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85504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컴퓨터 학원	85691
○기타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에 한한다)	869

(출처 : 김진욱 외(2008),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4 재인용)

[표 1-4] 건설산업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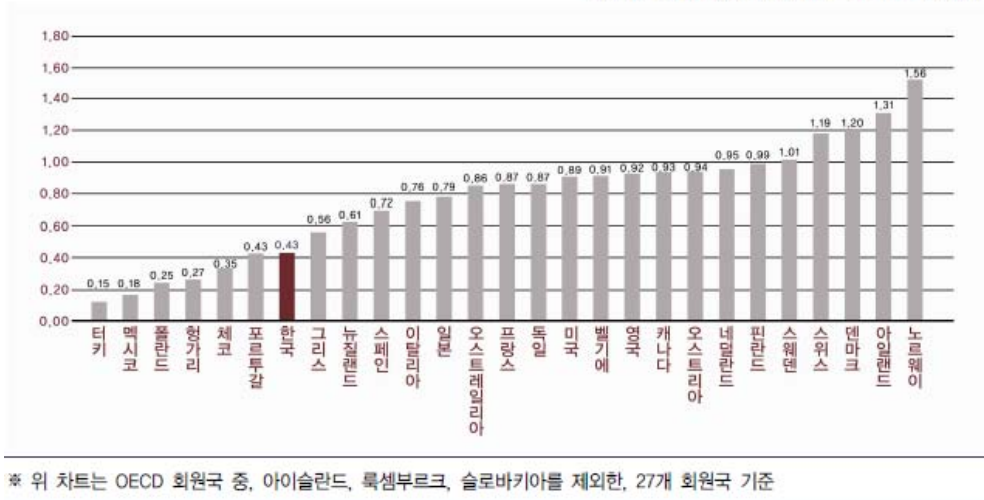
건설산업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업종 :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 주택건설업 · 해외건설업 (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업은 제외		
	건설용역업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본법 중 제6조, 제26조 및 제8장만 적용
		건축설계·감리업	
감리전문업(건설기술관리법)			

4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산업 제도개선 및 진흥, 왜 필요한가?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OECD 가입국 27개 중 매출액 규모가 21번째로 국가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며, 사업체의 규모는 10인 미만 사업체수가 전체 사업체수 중 88%로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2005년의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산업은 매출액이 약 4.2조원 시장으로 고용인구 5만명, 사업체수는 약 7천개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일본의 건축서비스산업 생산성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⁶⁾

(단위 : (\$M)/Establishments, 기준년도 : 2007)



[그림 1-1] OECD 국가의 건축서비스산업 비교-업체 1개당 매출실적

(출처 : 김진욱 외(2008),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52 재인용)

그러나,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산업은 고도의 전문업종으로서 타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높으며 타 산업과 전후방연계효과가 높아 관련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제조업에 비해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부문이다. 국제적인 기준인 OECD에서도 NACE⁷⁾ 지식서비스산업의 분류에 “건축설계·엔지니어링 활동 및 관련기술 컨설팅(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 and related technical consultancy)”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EU에서는 핵심적 중요성이 유럽의 제조업과 기타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보고되고 있다.⁸⁾ 이에 경쟁력있는 지식서비스 분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6) 김진욱 외, 2008,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52

7) NACE 분류는 유럽국가내 경제활동분류체계를 일컫는다.

8) 진미석(2008), 「산업기술관점에서의 지식서비스 인력 양성방안」, 한국산업기술재단, pp.13~14.

올해 초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활성화 방안」⁹⁾을 발표 하였는데, 인력·기술·금융 등에 2010년에서 2015년까지 5년간 1조8천억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엔지니어링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녹색·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며 일자리 창출 등을 유발하는 지식집약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동종 산업인 건축서비스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식서비스산업의 하나로 21세기 신성장동력으로 가능성이 높은 건축서비스산업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을 주지해야할 것이다.

한편, 건축설계는 지식서비스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방식과 회계예규에서 용역계약 및 공사계약에 부분적으로 해당되어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이 일관성 없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건설공사시 설계기준의 계약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설계비를 별도로 산정받기 어려운 점 등 계약구조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설계의 경쟁력과 건축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설계 별도의 계약방식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2009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¹⁰⁾,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계대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 종사자의 의견이 높게 나타난 점과, 미국 건축산업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아닌 ‘계획 및 사전설계’ 부문에서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는 산업구조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현재 『산업발전법 시행령』의 지식서비스산업에 건축서비스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녹색성장 등 새로운 경제성장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전반의 체계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위상에 맞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위상 확립과 건설업과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낙후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해 사회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실태 파악과 이의 개선 및 진흥을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9) 지식경제부(2010.4.28), 「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방안」.

10) 김진욱 외(2008),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25

2) 연구의 목적

□ 건축분야에 산업적 개념 도입 및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제시

현재 건축분야의 발전 내지는 진흥을 위해서는 이것이 예술이나 건설공사의 일부가 아닌 지식서비스산업의 하나로서, 산업적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지식서비스산업의 가치와 건축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이 사회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일차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건축분야에 산업적 개념 도입 및 진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분야가 아닌, 건축분야만의 실제적인 통계자료나 근거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산업발전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건축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을 조사·분석 하여 관련 법령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산업적 개념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건축분야 산업적 구조 개편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 제시

도출된 문제점을 근거로 건축, 건설, 공간환경, 디자인 등 건축분야와 관련된 법제도들을 중심으로 건축분야의 산업적 구조 개편을 위한 제도적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관련 법 검토를 통해 기존 법률을 포섭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비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전 단계에서, 기존 제도정비 방안을 첫째, 건축분야에 산업적 개념의 도입방향 둘째, 기존 건축관련 개별법 개정방향 셋째, 계약체계 개선을 위한 정비방향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건축분야 산업적 구조 개편을 위해 해결해야할 사항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내용적 범위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가치와 중요성 분석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가운데 고용유발 분석에서는 산업연관표에서 세세분류의 고용표가 제공되지 않아 168개 부문의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산업의 고용표를 활용하였으며, 취업유발계수는 1995-2000-2005-2007 한국은행의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다. 또한 타분야 산업구조 개편 추진현황은 건축의 설계적인 측면 및 공학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고 그 추진 효과가 상대적으로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는 디자인 산업과 엔지니어링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도입을 위한 문제점 도출과 관련하여서는 그 대상으로서 건축 디자인 또는 건축설계와 관련된 법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건축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회계예규』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건축분야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규 검토와 관련해서는 『건축기본법』, 『건축법』, 『건축사법』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산업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과 『산업디자인 진흥법』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검토하였다.

해외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분야의 산업적 구조개편과 진흥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법체계를 가진 선진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을 정의하고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산업법 내에 건축관련법이 포함되어 있는 법률체계를 가진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관련 법 체계 분석 외에도 산업분류체계 및 개편의 역사, 산업적 체계마련을 위한 행정의 역할,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함께 조사, 분석하였다.

2) 연구수행방법

□ 문헌조사 및 법규검토

본 연구는 건축분야와 다소 생소한 ‘산업’의 개념이 숙지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진 연구로서, 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활성화 정책, 녹색성장을 위한 각 산업분야

별 산업 진흥 추진전략, 산업관련 정부 정책 등과 관련된 문헌자료 및 선행연구, 신문자료 등을 조사, 참고하였다. 또한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위해 주요산업동향지표 등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자료 제도정비를 위해 국내 건축 관련 법·제도를 조사하고, 관련 내용 및 연혁, 제·개정 사유 등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였다.

한편, 해외의 미국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IBIS World Industry Report 54131」 자료와 미국 건축가협회(AIA)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 및 웹사이트 자료 등을 검토하였으며, 미국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각종 기관의 홈페이지 자료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 전문가 자문 등 외부 연구진 활용

미국과 일본의 해외 사례조사와 관련하여 각 현지 조사원을 활용하였으며, 미국의 관련 법체계 분석을 위해 법률 관련 전문가인 외부 연구진을 활용하였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산업의 중요성 및 특성을 나타내 주는 통계분석을 위해 중소기업연구원의 외부 연구진을 활용하였으며,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 검토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외부 연구진을 활용하였다. 그 밖에 학교 교수 및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등 건축관련 학회·협회 등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다.

□ 전문가 포럼 및 심포지움 개최

건축분야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구조개편을 위한 법정비를 위해서는 건축분야에 산업적 개념을 도입하고 이의 진흥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건축분야를 성과물관리대상으로 인식되어온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산업으로서 건축분야의 가치와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대시키고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관련 건축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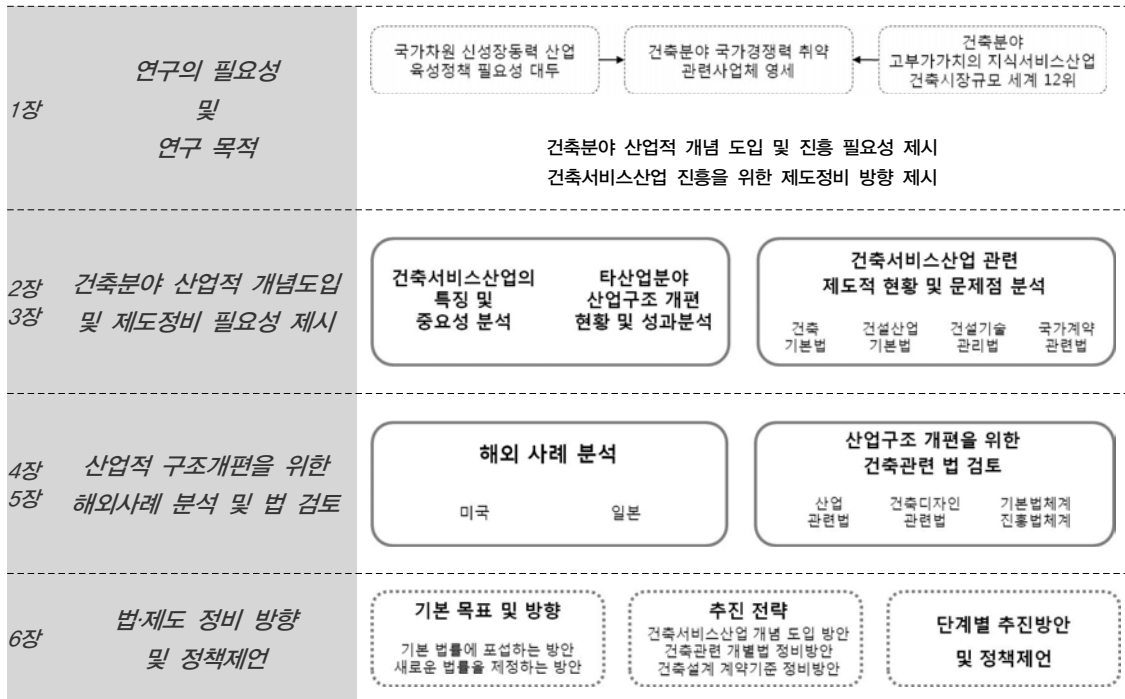
‘산업으로서의 건축의 의미’,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미국 건축서비스산업 현황과 관련 법’,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정비방안’이라는 주제로 총 4차례에 걸쳐 전문가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쟁점 논의 사항’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포럼까지 총 5차례에 걸친 전문가 포럼을 진행하였다. 전문가 포럼은 본 연구의 취지와 방향 및 연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확산과 충분한 논의를 위해 보다 큰 규모의 심포지움도 1회 개최하였다.

3) 연구의 흐름

2장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산업의 특성 및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타분야에서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추진한 활동과 주요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건축분야에 산업적 개념 도입이 왜 필요한가를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과 유사 산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건축관련 법제도의 검토를 통해 산업적 구조 개편과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법 체계 및 건축산업 현황을 검토하여 국내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어 5장에서는 건축분야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산업관련법을 중심으로 산업의 정의 방식을 살펴보고, 건축 및 산업관련 법제도를 중심으로 그 구성체계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들을 토대로 6장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비 체계 및 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표 1-5] 연구의 흐름



3. 관련 용어의 정의 : 건축서비스산업

□ 건축 분야를 산업적 관점에서 일컫는 용어의 필요

본 연구는 건축분야를 지식서비스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건축이라는 특정 분야를 산업적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건축분야를 지식서비스산업적인 관점에서 지칭할 적합한 용어는 ‘설계업’의 범주 및 관련 활동주체의 범주, 관련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분야를 지칭할 용어가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건축서비스산업’이라고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건축서비스산업’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관점과 건축의 관점과 관련된 두 개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축 관련 서비스업의 개념¹¹⁾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에는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M7211),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이 포함된다. 여기서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M7211)은 설계, 건설공정, 건축법규 및 건설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 공원 및 기타 휴양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토지, 상업·산업·거주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토지 지식, 건물 및 구축물의 배치, 토지활용, 조경설계 등의 지식을 이용한다. 또한 조경과 관련한 환경디자인도 포함한다.

한편, 엔지니어링 서비스(M7212)는 기계, 기기, 건물 및 구축물, 공정, 시스템 및 재료 등의 설계, 개발 및 이용에 관련하여 물리 및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조언제공, 타당성평가, 예비 또는 최종 계획 및 설계, 건설 및 설치에 관련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의 감사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의 개념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

11) 심우일(2005),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P.63.

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며,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 본 연구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

본 연구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축 및 조정 설계업’과 건축기본법의 ‘건축디자인’이라는 행위를 서비스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용어는 추후 실제로 건축분야에 산업적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논의와 충분한 검토 및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재정의 되어야 할 것이다.

4. 선행연구 검토

1) 관련 선행연구 현황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건축법 개정에 관한 연구와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의 건축산업에 대한 연구로 구분해볼 수 있다.

□ 건축법 개정 관련 연구

건축법 개정에 관한 연구는 건축의 다양한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루는 법령에 대한 연구와 각 개별 법령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상호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적 연구 그리고 다양한 발주방식의 도입을 위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주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

대표적으로, 황은경 외(2007)는 건축 관련 법령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건축품격향상과 건축문화증진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조사와 유사한 해외 건축법 분석을 통하여 건축법 관련 법령의 상호연관성을 도출하고 재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수립에 대해 연구하였다. 신동우 외(2007)는 다양한 발주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발주방식의 대안 조사와 발주관련 제도 분석을 통하여 발주방식의 선정방법을 설정하고 운영지침(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발주제도의 다양화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건축법과 관련된 법률과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건축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연구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의 건축 산업에 대한 연구는 건축분야의 발전·진흥을 위한 건축 산업 관련 연구와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축산업 관련 연구의 대표적인 것으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06)의 [건축설계업 발전 종합방안 연구]가 있고,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연구로는 심우일 외(2005)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와 최봉헌 외(2009)의 [지식서비스 수요활성화 정책방안]이 있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06)의 연구는 건축설계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건축설계기술의 발전,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설 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 건축·건설 산업의 현황과 공급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건축시장을 분석했다. 또한 설계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심우일 외(2005)는 제조업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지식서비스 산업의 역할에 대한 탐구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현황과 산업 연관성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봉헌 외(2009)는 지식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향후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 수요활성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우리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지식서비스 정책추이 등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지식서비스 수요기업의 수요실태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제까지 건축법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건축법』 자체만을 중심으로 발주제도 개선이나 관련 법령간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진행되었다.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과 관련된 법을 검토하고 분석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 건축설계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설계산업 보다는 건설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과 현황, 문제점을 분석

하고 있다. 2006년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 연구는 건축산업의 변화를 설명하고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사법의 시스템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다루고 있지만 이 역시 건설산업 분야의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국 건축설계 분야를 중심으로 그 발전이나 산업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지식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연구에서 건축 및 설계산업과 관련된 분석들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이 역시 전체 지식서비스산업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내용검토와 자료분석을 진행하였고, 건축설계산업 자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건축분야를 지식서비스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건축이라는 특정 분야를 산업적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산업전반에 관해 구조적 관점에서 법령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연구결과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하겠다.

[표 1-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건축관련 법령정비 연구 · 연구자(년도): 황은경 외 6인(2007) · 연구목적: 건축 품격향상 및 건축문화증진 그리고 국제 경쟁력 있는 건축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개별 법령간의 상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각 관련 개별법간의 상호 연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및 관련 법령조사 · 건축관련 전문가 면담조사 ·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축법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건축법 구성체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관련 법령조사 · 건축법 관련 법령 간 체계 구축 및 상호연관성 도출, 일관성 확보 · 개별 법 간의 문제점 파악 · 건축법 관련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 플랜 및 추진체계 수립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사업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발주제도 시범 적용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신동우 외5명(2007) · 연구목적: 건설산업의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의사결정을 고려한 발주방식 대안 조사 및 검토 · 발주기관의 해당사업에 관한 특성 및 평가 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방식의 개념 및 현황 · 발주방식별 제도 및 특성 분석 · 발주방식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 최적 발주방식 선정방법 제시 및 설정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p>· 제경쟁력 강화와 비용대비 최고 품질확보를 위하여 글로벌스탠다드의 다양한 발주방식의 추가 도입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 및 발주방식의 시범적 운용</p>		<p>· 발주방식 운영지침(안)개발 및 모니터링 성과 지표 방향 제시</p>
	3	<p>· 과제명: 건축설계업 발전 종합방안 연구</p> <p>· 연구자(년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06)</p> <p>· 연구목적: 건축설계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건축설계기술의 발전,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p>	<p>· 문헌 검토</p> <p>· 시스템 이론 및 건설 산업의 특성 파악</p> <p>· 국내 건축 산업의 현황과 공급체계 조사</p> <p>· 건설 산업의 성장패턴을 이용하여 국내건설산업의 성장경로 분석</p> <p>·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 분석</p>	<p>· 건설산업을 정의하고 건축산업과의 관련성 파악</p> <p>· 건축 산업구조 변화 양상 파악 및 국내 건축시장 분석</p> <p>· 국내 건축·건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p> <p>· 국내 설계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p>
	4	<p>· 과제명: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p> <p>· 연구자(년도): 심우일 외(2005)</p> <p>· 연구목적: 지식 서비스 산업의 역할에 대한 탐구를 위해 중소기업의 현황 파악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시</p>	<p>· 중소지식기반서비스업 통계자료로 정연승¹²⁾의 1996년, 2001년의 도소매 및 서비스 총 조사보고서의 가공자료 활용</p> <p>· 박명수 외(2004)¹³⁾의 연구결과 활용</p>	<p>·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정의 및 분류 분석</p> <p>·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현황 분석</p> <p>·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연관 분석</p> <p>· 정책적 시사점 제시</p>
본 연구		<p>· 기본연구는 건축법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축법과 연계된 관련법의 상호연계성 확보를 위한 방향 제시</p> <p>· 본 연구는 『산업발전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연구로 산업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춤</p>	<p>· 이론고찰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재정립</p> <p>·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각 산업분야별 추진전략 분석</p> <p>· 선진해외 건축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조사</p> <p>· 건축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법령정비 대안 설정</p> <p>·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산업 체계분석</p>	<p>·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도시관련 분야의 중요성</p> <p>·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의미</p> <p>·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법제 현황</p> <p>· 선진해외 각국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체계</p> <p>· 건축서비스산업과 건설산업의 동반성장 전략방향 설정</p>

12)정연승(2006), 「중소기업의 GDP 비중 산출을 위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13)박명수 외(2004),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구조변화 분석」, 노동연구원.

제2장 건축분야 산업개념 도입의 필요성

1. 녹색성장 산업으로서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중요성
2.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징 및 중요성
3. 타분야 산업구조 개편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본 장에서는 녹색성장 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지식서비스산업 가운데 건축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그 중요성을 분석하여 건축분야가 산업으로 구조개편되고 인식되어야 함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로 개편이 되었거나 추진 중인 유사 분야 사례 현황을 분석하여 건축분야에 산업적 개념이 왜 도입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녹색성장 산업으로서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중요성

1)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2000년대 들어 ‘지식서비스’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 또는 정책 분야에서 지식서비스(Knowledge service), 지식기반서비스(Knowledge based service), 지식집약서비스(Knowledge intensive service) 등 목적별로 다양한 조작적 정의가 사용되고 있다.

① 「지식기반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 협의 및 광의의 관점에서의 지식기반산업

협회의 관점에서 지식기반산업은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를 둔 지식을 노동, 자본 등의 전통적 생산요소보다 더 주된 생산요소로 활용하는 산업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자본집약적 산업과 구별된다.¹⁴⁾ 광의의 관점에서 지식기반산업은 인간의 지식과 지적 능력을 생산과정에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거나, 신기술산업을 창출하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그 자체를 제공하는 산업이며, 이러한 관점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모든 산업이 해당된다.¹⁵⁾ 지식기반산업의 개념은 전반적으로 협회의 개념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과거에는 첨단기술산업의 제조업 중심으로 개념이 정의되었으나 현재는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 OECD 「지식기반산업」¹⁶⁾

서비스산업의 개념은 기관별, 목적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거나 정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1998년 OECD가 지식기반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업의 정의, 범위 및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지식기반산업의 개념은 지식경제로의 이행과 관련한 OECD 보고서¹⁷⁾에서 산업부문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1990년대 후반 선진국에서 기업정보화와 관련하여 지식경영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던 움직임이 국내에서 시작될 무렵 지식경영, 지식산업, 지식정부 등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관해 OECD가 발간한 것이다. 여기서 지식산업에 대한 초기의 개념으로 지식기반산업이 언급되었다.

OECD가 정의한 ‘지식기반산업’은 연구개발(R&D) 활동이 활발하거나,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기술인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투입비중이 높거나, 기술혁신의 생산적 활용에 요구되는 고숙련인력(Highly skilled workers)의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을 말한다. 우주항공, 의약, 컴퓨터, 정보통신기기 등 첨단기술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이후 어떠한 업종이든 생산 활동에 있어 생산요소로서의 지식의 투입이 어느 정

14) 오상봉·김인중 외(1999),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심우일(2005),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p.13 재인용)

15) 허재완(2000), “경기도 지식기반산업의 현황과 잠재력”, 「경기논단」, 봄호

16) 최봉현·김홍석·유현선(2009), 「지식서비스 수요활성화 정책방안」, 산업연구원

17) OECD(1999), "The Knowledge Economy"

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새로운 기술과 인적 자본의 투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새로이 정의하고, 새로운 업종을 일부 포함시켰다. OECD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재정의 하고, 그 포괄범위를 확대한 것은 실제로 지식 집약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치 않고 기존의 산업통계에 기초한 산업의 엄격한 분류가 용이하지 않는 등 통계상의 이유도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이들 지식기반산업 중에서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며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문화오락 등이 포함된다.

□ 통계청에 의한 「지식기반서비스」

통계청에서는 지식을 생성하거나 이를 집약적으로 투입하여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서비스업을 지식기반서비스업과 기타서비스업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업 해당 업종은 정보통신서비스업과 기타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있다.¹⁸⁾

[표 2-1] 통계청의 지식기반서비스 분류기준에 따른 세부업종

정보통신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관련 운용업
기타 지식기반서비스업	광고업, 영화산업, 방송업, 도서관·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산업, 연구 및 개발업, 법무·회계·시장조사·사업경영상담업, 건축·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료업), 연극음악 및 기타 공연관련산업

② OECD 「기업의 지식집약서비스 활동(KISA: Knowledge Intensive Service Activity)」

OECD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정의와 별도로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지식 투입이 집약적인 활동을 정의하고 있다.

‘기업의 지식집약서비스 활동(KISA)’을 제조와 서비스부문에서 제품과 결합되거나 서비스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기업(또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활동과 생산의 통합으로 정의한다. 즉 기업 또는 산업내에서 지식의 창출, 획득, 저장, 활용 등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지식기반산업은 지식투입이 높은 산업을 의미하고, KISA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지식집약적인 활동을 의미하므로, 개념적으로 KISA가 강한 산업일수록 지식기반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 강준구(2002.5), 「주요국의 지식기반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세계경제

[표 2-2] OECD의 지식집약서비스 활동(KISA)의 유형

구 분	특 징	내 용
갱신서비스	혁신과 직접 관계된 서비스	R&D 서비스, 전략적 경영 컨설팅 등
루틴 서비스	조직내 다양한 하위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회계 등
준수 서비스	법적 틀과 다양한 규정 준수 지원 서비스	감사, 일부 법률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의사소통, 지식교환, 유연한 자원배분 촉진 서비스	비공식 개인 네트워크, 생산관련 네트워크 서비스

(출처 : 최봉헌 · 김홍석 · 유현선(2009), 「지식서비스 수요활성화 정책방안」, 산업연구원, p.56)

③ EU 「지식집약적 비즈니스서비스(KIBS: 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s)」

EU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중간투입물로 사용하여 고객기업 내부의 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생산활동에 질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 KIBS는 주로 생산자 서비스,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중에서도 지식을 보다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업종을 포함한다.

[표 2-3] EU의 비즈니스 서비스 분류

구 분				내 용
생 산 자 서비스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KIBS	소프트웨어/컴퓨터서비스, 전략/경영컨설팅, 회계/조세/법률자문, 마케팅서비스/여론조사, 기술서비스/엔지니어링, 인력훈련/헤드헌팅
			운영 비즈니스서비스	보안 서비스, 시설관리/청소, 행정/장부기입, 임시노동력 모집, 기타 운영 서비스(식당, 번역, 콜센터 등)
		유통/거래서비스, 운송/물류, 금융·보험/증권거래, 통신/택배, 에너지서비스		
	기업이 일부 사용하는 소비자 서비스(비즈니스 여행, 기업의료 서비스, 사회보험 서비스 등)			

(출처 : 최봉헌 · 김홍석 · 유현선(2009), 「지식서비스 수요활성화 정책방안」, 산업연구원, p.57)

④ 종합 :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크게 ‘지식기반 서비스’와 ‘지식활동 관련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지식기반서비스는 지식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또는 지식에 기반한 서비스산업으로, 이는 생산요소로서 지식의 투입비중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지식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광의의 지식서비스산업 개념이다. 지식활동 관련 서비스(KISA)는 기업의 업무 또는 기능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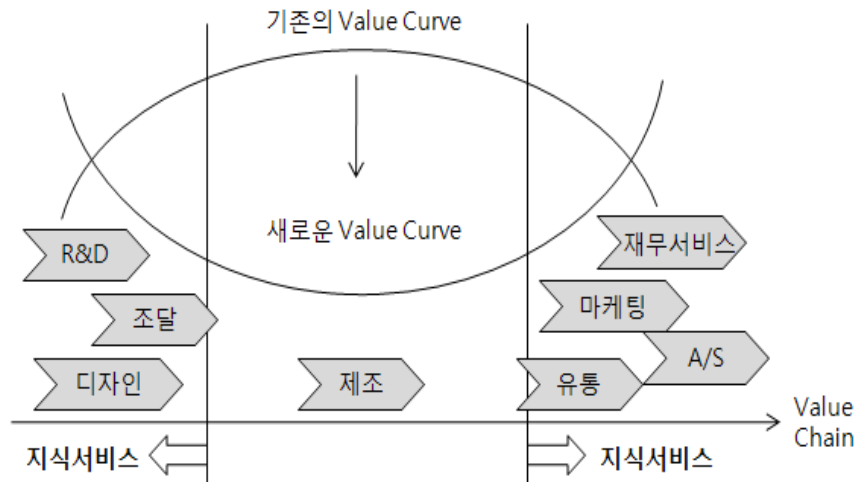
지식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활동으로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종이 해당된다. 이것은 지식서비스산업을 지식의 투입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상품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지식서비스산업은 지식을 생성하거나 이를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업을 지칭하며, 제조업 등 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증폭가치(augmented value)를 가지고 있는데¹⁹⁾, 건축서비스산업은 통신, 금융·보험, 교육, 의료, 문화오락, 컴퓨터 서비스, 기술 서비스·엔지니어링, 회계·법률 서비스 등과 함께 대표적인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한다.

2)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

□ 산업경쟁력 원천의 중요도 변화 :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공급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심화,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로 산업의 가치구조는 크게 변화했다. 즉, 부가가치 원천이 단순조립가공영역에서 디자인 등의 지식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또는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에 제조부문의 역할이 감소하고 오히려 연구개발, 디자인 등 제조 전 과정과 재무서비스, 마케팅, 유지보수 등 제조 후 과정의 역할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제조부문 국내·외 생산 전문기업들과 아웃소싱 추세 증가, 첨단 연구개발기업들을 중심으로 팜리스(farmless) 기업 수 증가, 전통적 제조기업인 IBM도 서비스기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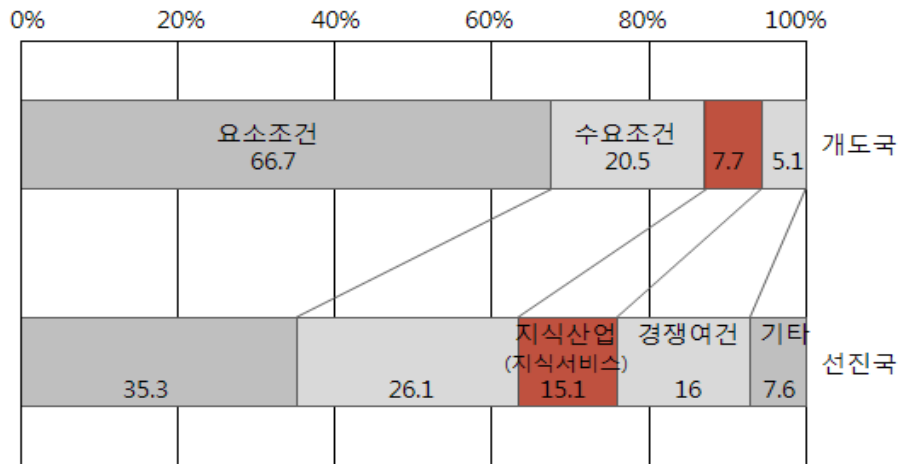


[그림 2-1] 산업의 가치곡선 변화

(출처 : 최봉현(2007),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지원방안」, 산업연구원, p.4)

19) 정종인 · 박장호 · 김영민(2007), 「사업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은행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인건비, 원재료, 생산설비 등에서 디자인, 마케팅, 금융 등 서비스 기능의 지원산업과 경쟁여건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구조가 고도화된 선진국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2] 산업경쟁력 원천의 중요도 변화

(출처 : 최봉현(2007),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지원방안」, 산업연구원, p.3)

□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증가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식서비스는 서비스산업 내 업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에 속하며, 비록 서비스이지만 산업 내 중요한 중간투입으로 기능한다. OECD내 고성장 국가의 경우,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2006년 경제성장 기여율은 59.4%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년간 제조업 위주의 성장을 지속하여 선진국에 비해 산업구조가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에 비해 서비스의 지식집약도가 낮아 지식기반산업을 통한 성장유발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역시 높은 증가세로 성장 기여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제조업보다 성장 기여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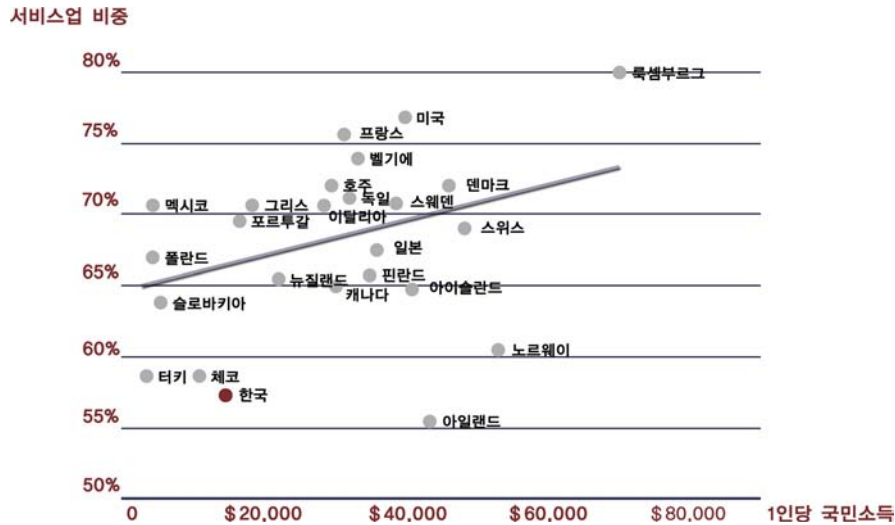
그러나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이 42%인 반면 우리나라는 25%에 그치고 있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표 2-4] 산업별 매출액 비중 및 연평균성장률(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성장률 (2004~2007)
전산업	100	100	100	100	100
제조업	55.2	52.3	52.6	53.0	8.5
서비스업	30.4	31.7	32.1	32.3	12.2
도매 및 소매업	19.0	20.2	20.5	20.5	13.0
통신업	2.7	2.4	2.4	2.3	5.1
지식서비스업	2.7	2.9	3.1	3.2	16.2

(출처 : 최봉헌 · 김홍석 · 유현선(2009), 「지식서비스 수요활성화 정책방안」, 산업연구원, p.9)

※ 2004~2007년의 경우 제조업의 연평균성장률 8.5%, 지식서비스업은 16.2%로 높은 매출액 증가를 보인다.



[그림 2-3]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과 서비스업 비중

(주 : 1인당 GDP는 2004년 수치이며, 서비스부문 비중은 2003년 수치임)

(출처 : OECD in Figures(2005), 「한미 FTA와 서비스업 경쟁력의 현주소」 (김진욱 외(2008),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1 재인용))

□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 증가

지식서비스산업은 연구개발, 전문서비스, 정보서비스 등 투입물과 최종산출물 모두가 지식 집약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학력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006년 산업별 전체 취업자 중 대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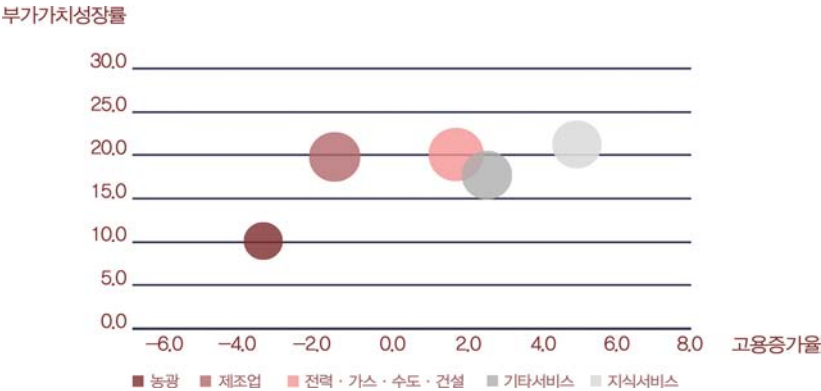
이상의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산업이 32.9%, 제조업이 22.6%인 반면,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50.4%로 2002년에 비해 7.0%가 증가하였다.(전체 4.6% 증가) 즉,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산업보다 높아 고학력 고용 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5] 산업별 대졸이상 근로자 비중(단위: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산업	전체	100	100	100	100	100
	대졸이상	28.3	28.7	28.9	31.7	32.9
제조업	전체	100	100	100	100	100
	대졸이상	18.9	19.9	20.1	23	22.6
지식서비스업	전체	100	100	100	100	100
	대졸이상	43.4	44.1	41.9	48.5	50.4

(출처 : 최봉현 · 김홍석 · 유현선(2009), 「지식서비스 수요활성화 정책방안」, 산업연구원, p.10)

고용증가율에 있어서도 제조업이나 다른 업종에 비하여 높고, 고용구조에 있어서도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산업 전체 평균보다 17.5% 높다. 이는, 실제로 기술적 숙련도보다 창의적인 사고와 지식의 융합과 창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고학력자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대학진학률이 80%를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학력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4] 주요 부문별 고용 비중 변화

주 : 1) 부가가치성장률은 1970~2004년간, 고용성장률은 1993~2003년간임

2) 원의 크기는 2004년 현재 각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출처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한국은행 내부자료, 박진수(2005.7), “지식서비스산업 발전방향”,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p.3 (김진욱 외(2008) p.17 재인용))

□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의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정책 시행

1990년대부터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가정책의 인식이 규제에서 규제완화로 전환되었으며, 2000년 초반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경기침체와 실업문제에 직면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발전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등장했다.

[표 2-6] 국내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현황

2003년	관광수지 개선대책
2004년	세제·금융·인프라 개선 등 18개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
2005년	법률·컨설팅·사회서비스 등 26개 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2006년	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07년 7월	2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07년 12월	3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08년 4월	1단계 서비스선진화 방안
2008년 9월	2단계 서비스선진화 방안
2009년 1월	3단계 서비스선진화 방안
2009년 5월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고부가 서비스산업

□ 정부의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정책 지속

정부는 2003년부터 관광수지 개선대책, 서비스분야 세제·금융·인프라 개선방안, 비즈니스 서비스 등 총 18개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2005년 27개 분야로 확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제도적 기반마련 및 분야별 경쟁력강화 등이 있고, 지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설립, 금융서비스분야 제로베이스 규제개혁(2005), 국내 로펌의 대형화·전문화 유도, 종합물류기업 활성화 등²⁰⁾이 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세 단계로 제시했다. 주요내용으로 1단계는 서비스산업 경영환경개선,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

20) 기획재정부(2006),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발전정책」

수지 적자유발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 3대 부분, 총 15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2단계는 서비스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강화, 지식기반서비스 집중육성,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등이 있다. 3단계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문화·디지털콘텐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비전과 서비스 프로세스 추진방향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그 1단계는 서비스수지 개선을 목표로 관광, 의료관광,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수지 적자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단계는 서비스산업의 규제합리화 및 제도 선진화를 목표로 투자 확대와 창업 촉진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3단계는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목표로 서비스산업의 맞춤형 인재양성, 직업훈련 확대, R&D활성화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완료, 본격적 도약을 준비했다. 이 3단계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한 후 NEXT²¹⁾를 통해 서비스산업 도약의 본격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가장 최근 2009년 초 정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로서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체적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했고 기술개발, 융복합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해외진출 방안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전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다루지 않았던 금융, 관광 부문에 대한 실행계획이 제시되었다.

21) “Now! EXecute Together!”의 줄임말로 민관이 함께 서비스산업 선진화(Service PROGRESS)를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NEXT에서는 9개 분야 제도개선과 홍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2.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징 및 중요성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²²⁾이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포함해서 평가해야 중요성을 올바르게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 건축서비스산업이 창출하는 직접적 생산관계만을 대상으로 산업연관표²³⁾를 활용함으로써, 고용을 포함한 경제적 특성 및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특징

① 노동집약적 서비스 창출 및 고도의 전문업종

건축서비스산업은 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된다²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고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이 산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영 컨설팅,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수의업 디자인 및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건축서비스산업은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노동투입시간이 감소하고 있으나, 표준화하기 어려운 업종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 인적자본의 질적·양적 투입이 높은 업종이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창출하는 전문 업종으로 노동집약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②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높음

건축서비스산업의 중간투입율²⁵⁾은 증가하는 추세(부가가치율²⁶⁾은 하락하는 추세)이

22) 산업연관표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공학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

23) 각 산업부문에 거래된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 그리고 각 산업부문생산물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에 따른 판매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한 나라의 경제의 종합적인 통계표

24) 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건축분야 분류 현황은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5) 한 산업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인 중간투입을 총투입으로 나눈 비율, 즉, 총산출액 단위당 필요한 중간투입

26) 총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한 나머지를 나타내는 부가가치를 총투입액으로 나눈 비율

나, 타 산업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는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즉, 건축서비스산업의 서비스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중간재(원료, 기계 등)의 양이 타 산업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도 중간투입율을 비교해보면 제조업 78.3%, 건설업 59.7%, 서비스업 전체 42.5%에 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은 40.3%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건축서비스산업 자체만 보면, 2006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데, 이는 CAD 또는 BIM기반 구축 등 국제 표준화 등의 기반마련을 위한 기술발달로 중간투입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7] 산업별 중간투입율 추이

구분	'06	'07	'08
제조업	75.4	75.7	78.3
건설	55.4	56.5	59.7
지식기반서비스업	40.3	41.1	42.5
건축공학관련서비스 ²⁷⁾	33.2	39.8	40.3

한편, 중간투입율이 낮다는 것은 건축서비스산업 자체로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타 산업에 비하여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율을 보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큰 변화 없이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17.7%('08)임을 비교하여본다면 건축서비스산업은 59.7%로 제조업에 비하여 부가가치율이 매우 높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8] 건축공학관련서비스업의 중간투입율과 부가가치율 변화 추이

	'06	'07	'08
부가가치율	60.1	60.2	59.7
중간투입율	33.2	39.8	40.3

27) 산업연관표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공학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

③ 장기소비형 자본재로서 감가상각²⁸⁾의 특징과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

감가상각 속도의 저하와 문화적 부가가치 창출규모는 건축설계의 완성도에 크게 의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건축물은 완공 전의 생산 활동에 의한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완공 후에는 자본재로서 임대 가치를 지니게 되며 또한 완성된 건축물은 역사성이나 시대 및 지역에 따른 문화적 부가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독특한 지역색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관광과 같은 외부 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어 문화적 부가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 건축물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도시공간은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고, 도시의 기반시설(상·하수도, 전력, 정보망 등) 등이 생활과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투입되어, 감가상각 속도를 저하시킨다고 할 수 있다.

④ 계절적 영향이 적은 편

건축설계업은 계절 산업인 건설업의 파생수요이다. 건설업의 노동시장과 타 원자재 시장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으나, 건축설계업은 감리부분을 제외하면 계절적 영향이 적은 편이다.

⑤ 국가의 도시계획, 정책 등에 민감

건설경기가 국가의 주택건설 계획, 신도시 계획 등에 민감한 것과 같이 그 파생수요인 건축설계업도 이러한 국가의 건설계획에 민감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건축서비스산업²⁹⁾의 타 산업과의 관계적 특성

① 건축서비스산업의 산출물은 타 산업의 중간재로 활용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그 용도에 따라 타 산업의 원료로 투입되는 중간재와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는 최종재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건축서비스산업은 중간재로서의 역할을 한다. 2006년 기준으로, 15조 44961억의 총 수요 중 중간수요는 14조 6644억원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중간수요율³⁰⁾은 94.6%를 기록했다. 이는, 건축서비스산업이 총수요액에서 중간재

28) 고정자산(固定資産)의 가치감소를 산정(算定)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計上)하는 절차

29) 산업연관표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공학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

30) 총수요액 중에서 중간재로 판매된 비중

로 판매되는 비중이 94.6%로 높으며, 중간재로서의 역할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준산업분류상에서도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건축서비스산업은 건물 또는 구축물이라는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 서비스 산업활동으로 중간재라고 할 수 있는데, 주요 수요처로 주택건축, 비주택건축, 발전, 건축보수, 도로, 항만건설 등이 있다.

② 건축서비스산업의 전후방연계³¹⁾가 높음

생산유발계수³²⁾를 이용하여 각 산업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전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것이 영향력계수³³⁾와 감응도 계수³⁴⁾인데, 이를 이용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타산업과의 상호의존관계 정도를 보면 후방산업에의 관련은 높아진 반면, 전방산업과의 연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타 산업에 의한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감응도 계수가 2005년 1.4323이었던 것이 2008년 0.4583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은 건축서비스산업이 타 산업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 산업으로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영향력 계수는 2005년 0.6332에서 2008년 0.6852로 상승했는데, 이는 건축서비스산업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9] 건축서비스산업의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 추이

	'95	'00	'05	'06	'07	'08
영향력 계수	0.5373	0.5443	0.6332	0.7147	0.7014	0.6852
감응도 계수	1.9684	2.0500	1.4323	0.4868	0.4817	0.4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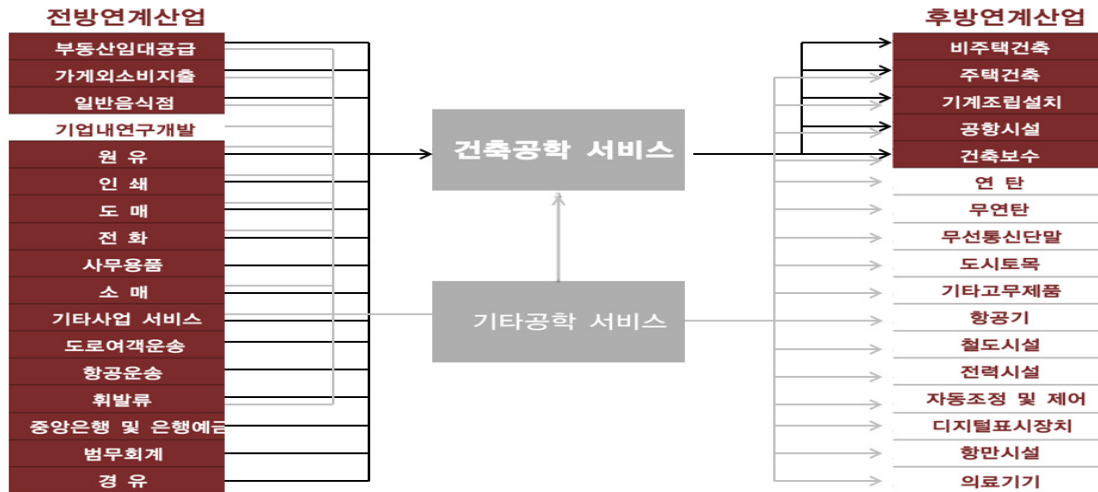
31) 전방연계는 타산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관계, 후방연계는 타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의미함

32)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산출액 단위

33)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 자동차, 전자 등과 같이 타산업을 중간재로 많이 활용하는 업종이 높음

34) 전방연쇄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계수. 석유화학과 같이 타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산업부문의 감응도 계수가 높음

생산유발 전·후방 연계효과(2005년)



[그림 2-5] 생산유발 전·후방 연계효과(2005년)

(출처 : 김진욱 외(2008),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44)

[표 2-10]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산업의 전후방연계 상위 20위(2005년)

순위	번호	부문명칭	전방연계	번호	부문명칭	후방연계
1	0167	가계외소비지출	0.058135	0012	석탄	0.087611
2	0147	부동산	0.056123	0124	비주택건축	0.046405
3	0152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	0.033988	0123	주택건축	0.044902
4	0149	기업내 연구개발	0.028957	0127	일반토목	0.035616
5	0154	기타사업서비스	0.013349	0152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	0.033988
6	0054	연료유	0.011724	0126	교통시설건설	0.033816
7	0166	사무용품	0.008858	0128	기타특수건설	0.030328
8	0133	도로운송	0.008599	0114	항공기	0.027523
9	0141	우편 및 전화	0.008400	0102	통신 및 방송기기	0.024780
10	0106	의료 및 측정기기	0.008168	0106	의료 및 측정기기	0.019036
11	0051	인쇄 및 복제	0.007904	0112	선박	0.018202
12	0150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07446	0089	일반목적용기계부품	0.018184
13	0129	도소매	0.005314	0098	전자표시장치	0.018122
14	0144	금융	0.005052	0088	내연기관 및 터빈	0.017925
15	0136	항공운송	0.004977	0142	부가통신 및 정보서비스	0.017660
16	0132	철도운송	0.004623	0090	산업용 운반기계	0.017297
17	0160	출판서비스	0.003457	0093	금속가공용기계	0.016995
18	0145	보험	0.002992	0066	기타 화학제품	0.016845
19	0157	의료 및 보건	0.002127	0100	기타 전자부분품	0.016700
20	0142	부가통신 및 정보서비스	0.002108	0107	광학기기	0.016448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 의 하위분류에 '건축서비스업' 이 분류됨

(출처 : 한국은행(2008), 산업연관표(2005), (김진욱 외(2008), p.42 재인용))

한편, 건축서비스산업은 전방산업과 연계가 감소하고 있지만, 외부산업과의 전후방 연계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설산업, 유통산업, 전문과학술서비스산업, 교육서비스, 연예·예술·오락 등의 산업이 주요 구매자(전방산업)로 주요지식기반서비스 산업과의 전방연계 효과가 높으며, 조정설계·디자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측량·지도서비스 등의 후방산업과의 연계성도 높은 중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서비스산업은 타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증폭 가치(augmented value)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향후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 생산의 중간재로서의 지식서비스산업의 시장확대 및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

3) 건축서비스산업의 중요성

①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21세기 성장동력 산업으로의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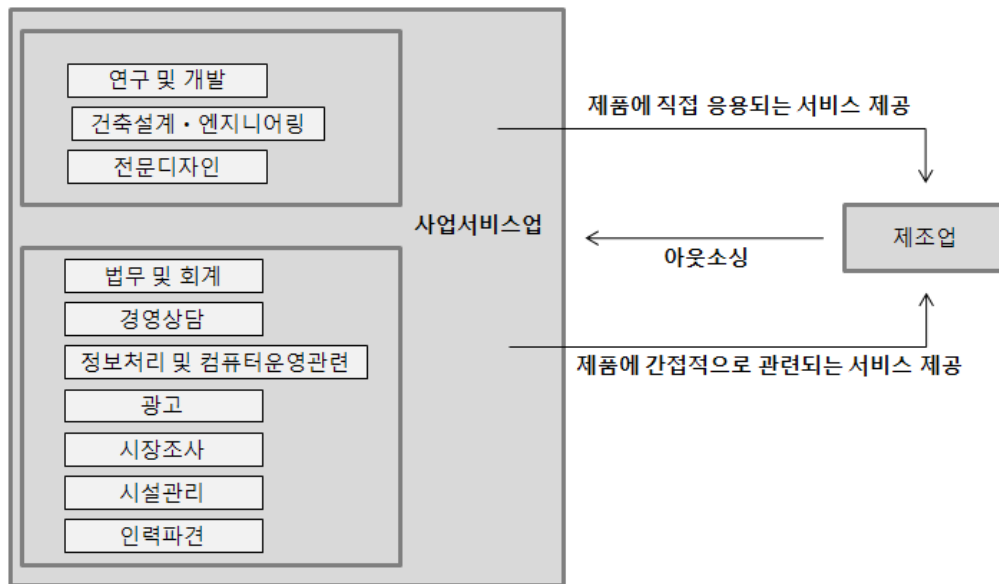
건축서비스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의 성격을 가지며, 물질 자본이나 거대장치를 주요 생산원료로 하는 일반제조업과 달리 인적 자본이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로 작용한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이러한 특징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21세기 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은 주요 수요자가 제조업인 산업이므로 그 파급효과(spill over effect)가 매우 커서, 산업으로서의 기술혁신은 그 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온 우리나라 2차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장환경에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이 포함된 지식서비스산업(사업서비스업)³⁵⁾의 생산성 향상은 타산업에서의 서비스 아웃소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전체적인 파생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³⁶⁾

서비스산업 생산의 타산업으로의 중간투입 비중 확대는 분업화, 전문화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서비스산업 자체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35) 사업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 규정(2000년 8차 개정)한 것으로 현재 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됨

36) 하봉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정체 현상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그림 2-6] 지식서비스산업(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과의 관계

(출처 :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지역팀(2007.4), 「사업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p.1, (김진욱 외(2008), p.41 재인용))

② 건축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혁신에 기여, 건축설계기업의 경쟁력 제고

2000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정책은 초기 세제·금융 개선방안 등 규제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서부터 지식서비스산업에서 중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방안과 일자리 창출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적 산업분야에도 금융, 문화관광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 또는 정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는 서비스업 육성에 대해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들은 구체적인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건축서비스산업은 향후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정책의 새로운 분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인재양성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인증획득 지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건축서비스산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③ BIM 기반구축에 의한 녹색성장 및 관련 융복합산업의 경쟁력 증진

□ 설계기술의 해외진출 등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건축설계업무를 IT기반으로 정보화하고 표준화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으로 작동함으로써 국제표준화 등의 기반 마련을 통해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다. 국제표준화를 통해 U-CITY 등 우리나라 건축도시 설계기술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할 수 있으며, 타 산업과의 연계를 창출하여 결과적으로 일자리 등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중요한 역할 수행

BIM을 통한 정보체계 구축은 탄소저감형 설계기법,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 친환경 건축설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설계기법의 기반을 마련하여,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선도하며, 결과적으로 산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BIM의 기반구축은 건축물 사용단계에서 건축물 사용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설계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용단계에서도 절약을 유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저탄소 건축기술 가이드라인 보급 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친환경 설계기법 개발 등은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축 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의 22.3%에 달하며,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CO₂량은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³⁷⁾한다. 이는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CO₂량만 줄여도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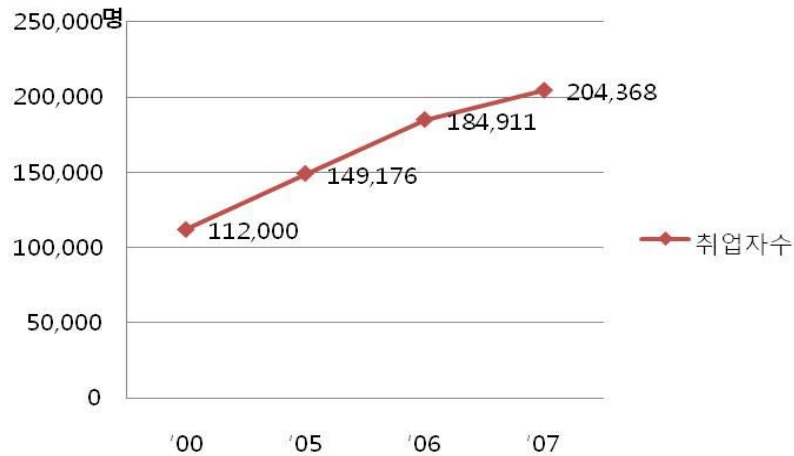
다시 말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 사용이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현시점에 산업 표준화 등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개편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37) 지식경제부(2008)

④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 증가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산업³⁸⁾의 취업자 수는 2000년 11만 2천명에서 2007년 20만 4천여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7] 취업자수 (자료 : 산업연관표 각년도)

2007년 기준으로,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산업에서 10억의 생산이 발생할 때 필요한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17.1명으로 제조업의 9.2명에 비하여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부문으로 나타난다. 취업유발계수 17.1명은 건축서비스산업에서 10억의 생산이 발생할 때 건축서비스부문에서 12.4명이 직접적으로 유발되고, 타 부문에서 4.7명 취업이 유발되어 총 17.1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표 2-11]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효과(2007 기준)

구분	제조업	건축서비스
취업유발계수	9.2	17.1

건축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 추이를 보면 [표2-11]의 계수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

38) 산업연관표에서 세세분류의 고용표가 제공되지 않아 168개 부문의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산업의 고용표를 활용. 산업연관표에서 건축서비스업은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업의 하위 분류에 위치

만 수치계산의 오차를 감안하여 비교해보면,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 19.5명에서 2007년 9.4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건축서비스산업은 1995년 14.7명에서 2007년 17.9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매년 고용창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2007년을 비교했을 때 지식서비스산업에 속한 업종 중에 높은 편으로 앞으로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2]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 추이(단위 : 명/10억 원)

구분	1995	2000	2005	2007
지식서비스	22.7	17.0	15.1	15.1
통신 및 방송	18.3	13.1	10.5	11.1
금융 및 보험	21.4	14.0	10.7	10.3
연구개발	17.0	16.3	16.1	15.9
사업관련전문서비스	18.8	11.6	9.8	13.9
광고	24.0	21.1	16.3	16.0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	14.7	10.7	15.0	17.9
컴퓨터관련서비스	28.5	16.5	16.6	15.3
교육	27.8	23.6	22.7	23.6
의료 및 보건	21.3	18.2	16.3	16.2
출판, 문화, 오락	29.7	24.0	19.2	17.8
일반서비스	33.8	24.4	21.0	20.6
서비스산업	29.4	21.5	18.5	18.2
제조업	19.5	13.5	10.3	9.4
전 산업	24.8	18.4	15.1	14.3

(자료 : 한국은행(1995-2000-2005-2007), 접속불변산업연관표)

□ 건축서비스산업의 인건비 비중이 높음

산업연관표에서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는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간접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건축서비스산업은 창출된 부가가치 중 피용자보수(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1.8%로 타 산업에 비하여 인건비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일인당 인건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타 산업에 비하여 전문인력의 투입이 많다는 것을 말한다. 즉, 노동집약적이며, 지식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3] 건축서비스산업의 인건비 및 부가가치율

구분	건축서비스	음식·숙박업	건설
인건비 비중	41.8	18.6	27.0
부가가치율	60.1	40.2	44.6

□ 건축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효과가 높음

건축서비스산업에 1,000억원이 투자될 경우에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취업자를 제조업과 비교하면 제조업에 비하여 부가가치는 약 1.5배, 고용은 약 1.9배의 효과가 있다. 고용창출이 모든 나라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용창출능력과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높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인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14] 1,000억 투자 시 생산 및 취업 유발효과(2007년 기준)

구분	제조업	건축서비스
생산유발효과	2,073억	1,500억
부가가치유발효과	626억	900억
취업유발효과	920명	1,705명

건축서비스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높으며, 인건비 비중이 높다. 이 말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징이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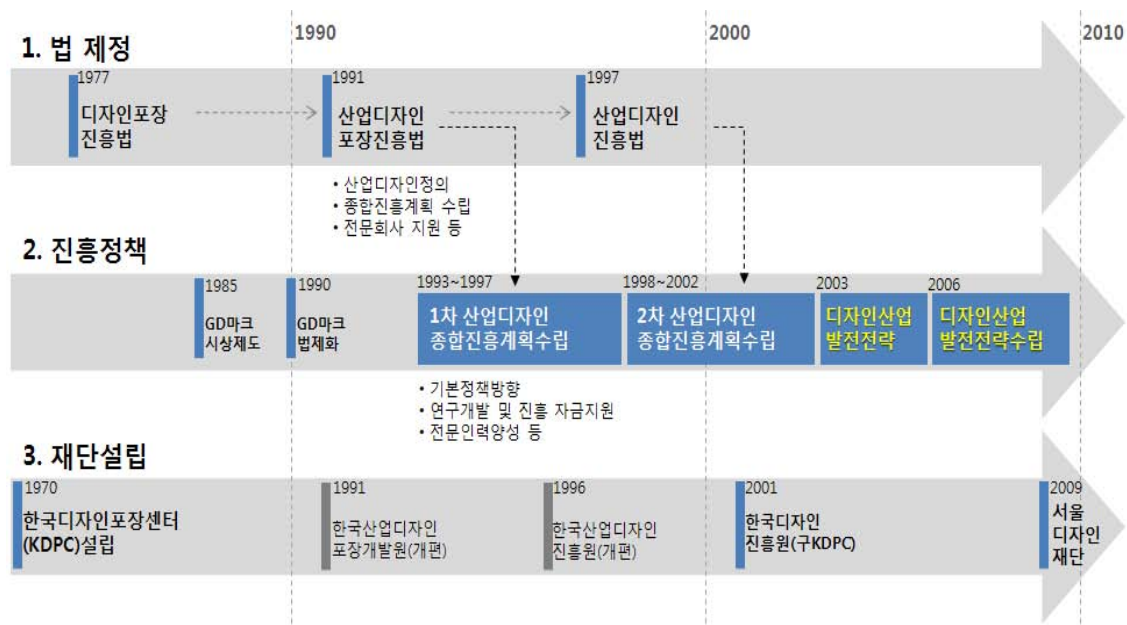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것은 고용창출효과가 높다는 것이며, 취업유발계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현 시점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앞으로 더 큰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인건비 비중이 타 업종과 비교했을 때 높은 것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문인력 투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구조개편과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을 도모하여 고용창출에 기여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3. 타분야 산업구조 개편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건축설계 분야의 산업적 구조개편 도입에 앞서, 산업으로 개편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성과가 있는가를 유사분야 사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1990년대부터 산업디자인을 진흥시키기 위해 종합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디자인산업발전전략을 세워 꾸준한 지원을 받고 있는 디자인산업분야와 건축서비스업과 같은 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엔지니어링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엔지니어링산업 분야는 올해 4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전면개정이 이루어져 엔지니어링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1) 디자인산업 분야

디자인 분야의 산업구조 개편은 1970년대 관련 법제정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관련 법 제·개정, 정부차원의 진흥정책 수립, 다양한 활동으로 산업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재단설립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2-8] 디자인 분야의 산업적 구조개편 추진과정 및 성과

① 산업적 구조개편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현재의 산업디자인진흥법은 1977년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디자인 포장 진흥법』으로 처음 제정된다. 이 후, 산업디자인 및 포장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1991년 『산업디자인 포장진흥법』으로 전문 개정되며, 1997년 지금의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1991년의 개정에서는 ‘산업디자인’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의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산업적 측면에서 1991년 개정된 산업디자인 포장진흥법에 주목할 점은 산업디자인 분야의 진흥을 위한 ‘종합진흥계획의 수립’과 ‘전문회사 지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종합진흥계획은 산업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정책방향, 자금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을 포함하며, 전문회사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은 산업디자인 및 포장에 관하여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후, 1997년 개정은 산업디자인 및 포장이 아닌 산업디자인이라는 한가지 분야로 규정하고 용어를 재 정의하였다. 이는 산업디자인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 지원 및 육성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정부차원의 진흥정책

전술했듯이, 산업디자인분야를 진흥하기 위해 1991년과 1997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차원에서 ‘진흥종합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1993년 1차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어 현재까지 4차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 목적 및 주요내용

1993년에서 1997년까지의 1차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은 1991년 산업디자인 포장진흥법을 근거로 디자인 기반 조성 및 디자인 개발 촉진 및 산업디자인의 인식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서 주요 내용은 디자인 기반조성을 위한 재단설립, 중소기업 육성강화 등 디자인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처음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의 2차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은 1997년 산업디자인 진흥법을 근거로 사회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 21세기 국제경쟁

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인프라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 주요 내용은 디자인 인프라 육성을 위해 전국 네트워크에 의한 디자인 지방화 전략을 전개하고, 디자인의 국제화를 추진한 것이다.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3차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은 디자인, 브랜드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재고하여 2007년 ‘세계 7대 디자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21세기 산업구조에서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지식기반산업인 산업디자인의 장래 성장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인 디자인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이 계획에서 주요내용은 디자인 저변확대, 세계 일류디자이너 양성, 국가이미지 혁신, 세계적 리더십 확립 등 국제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세운 것이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계획한 4차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은 디자인산업규모를 2012년까지 14.4조원으로 늘리며, 고용규모를 15만명으로 확대시키며 디자인 경쟁력을 5위로 높여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구현’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 디자인 신성장동력화 추진 및 시장창출 확대를 위해 디자인 원천기술과 디자인 R&D 지원을 강화하고 디자인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 산학협력 강화, 한국 디자인의 해외진출 확대 등이 주요 추진전략으로 세워졌다.

[표 2-15]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 년차별 주요 추진전략

	1차	2차	3차	4차
목표	디자인발전원년	디자인 인프라육성	세계 7대 디자인 선진국, 브랜드 수출국으로 발전	창의적인 디자인강국 구현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산업디자인센터설립 •정보유통체계구축 •전문회사 육성 및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국제협력강화 •사회적 저변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관특성화 유도 및 전문인력양성 지원 •디자인조기교육 및 교육의 질적 강화 •디자인정보시스템강화 •벤처 및 전문회사 창업 지원 •국제화 교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의 저변확대 •세계 일류디자이너 양성 •전국적인 디자인혁신 네트워크 구축 •디자인 연구개발 능력강화 •국가이미지 혁신 •세계적 리더십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인 인재 양성 •기반조성 강화 •신성장동력화 및 시장 확대 •디자인을 통한 혁신 촉진

□ 디자인 산업 발전전략 수립

국가적 차원에서 디자인 진흥에 앞장서며 정부주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자인 산업분야는 1998년 국가전략산업으로 디자인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는 등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양한 정부정책으로 디자인 산업을 성장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3년 3차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동북아시아 디자인 중심 국가로 만들자는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한 「디자인 산업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에 정부는 기업의 상품개발을 돕는 디자인이 아닌, 디자인 자체를 산업의 한 분야로 육성하도록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디자인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2008년 ‘세계 7위의 디자인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산업의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 국제화, 지방화 및 일자리 창출, 동북아 협력 강화 등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다.

1 디자인산업의 창출과 육성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디자인 전문회사 육성	스타 디자이너 발굴·육성	디자인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2 산업의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	디자인과 기술의 연계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기업의 디자인 혁신 지원	우수디자인(GD) 상품 세계 시장 진출	
3 국제 디자인 HUB와 및 동북아 협력강화	코리아디자인센터의 국제디자인 HUB와 추진	동북아 협력기반 구축	세계적 디자인 대학과 협력체제 구축	남북디자인 협력기반 구축
4 지방의 디자인 혁신능력 강화	지역 특화산업과 디자인간 네트워크화	지역특산품의 디자인 개발 및 브랜드개발 활성화		
5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잠재인력 활용	인력 공급체제 구축 및 취업알선	1기업 1디자이너 보유사업 확대	디자인 인턴십 확충	
6 디자인 문화 확산	디자인 생활화를 위한 환경 조성	“생활디자인센터” 운영 및 확산	디자인 조기 교육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그림 2-9]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6대 전략과제

(출처 : 산업자원부(2003), 「참여정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p.12)

정부의 디자인산업 재정적 지원으로 디자이너 선정 1인당 1억원 이내의 지원을 통해 스타 디자이너를 발굴, 육성하고 기업과의 공동디자인 프로젝트로 매년 20개, 20억원을 지원 하도록 하며, 지역 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을 위한 센터당 50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추진사항 중 2004년에는 디자인 문화 확산과 인력육성사업에 집중 추진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인력, 전문회사 육성방안을 발표했으며, 2005년에는 디자인 산업의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2003년부터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2005년까지 매년 발표된 것은 디자인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003 디자인 산업전략

1.0억원/인

디자이너 선정
5년간 100명

20억원

기업과의 공동디자인 프로젝트
(매년 20개)

5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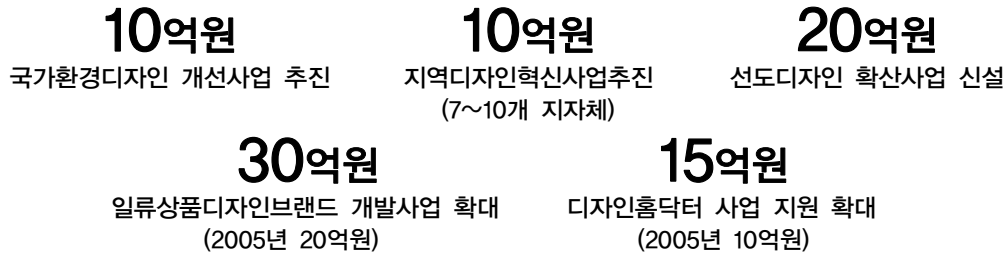
지역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센터당)

[그림 2-10] 2003년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2003년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수립 후 기업과 전문가들과의 협의로 정책효과와 환경변화를 고려해 2006년 이후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을 다시 세웠다. 기본방향은 ‘디자인기반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디자인을 새로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부각시키고 개성과 통일성이 조화된 지역과 국가의 이미지를 조성하고 제품보다 디자인을 사는 성숙한 디자인 소비문화를 배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요 정책내용으로는 국가, 지역 통합형 디자인 혁신체제 마련, 디자인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제고, 디자인 지향적 산업사회기반을 구축시키는 것이다. 즉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015년까지 세계 5위의 디자인선진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6년 정부는 디자인 산업 재정지원으로 국가환경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10억원 지원 및 지역디자인혁신사업추진을 위한 7~10개 지자체 10억원 지원, 선도디자인 확산사업 신설을 위한 2006년 2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류상품디자인브랜드 개발사업확대를 위해 2005년 20억원 지원에서 2006년 30억원으로 재정을 늘렸으며, 영세디자인기업의 마케팅 및 경영역량 확충을 지원하여 자생기반을 구축시키기 위해 디자인 홀닥터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2005년 10억원 지원에서 2006년 15억원으로 늘렸다.

2006 디자인산업전략



[그림 2-11] 2006년 이후 디자인산업 발전 전략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③ 재단설립 및 지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이 개편된 것이며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으로 디자인진흥을 위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주도로 운영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중심주체로 진흥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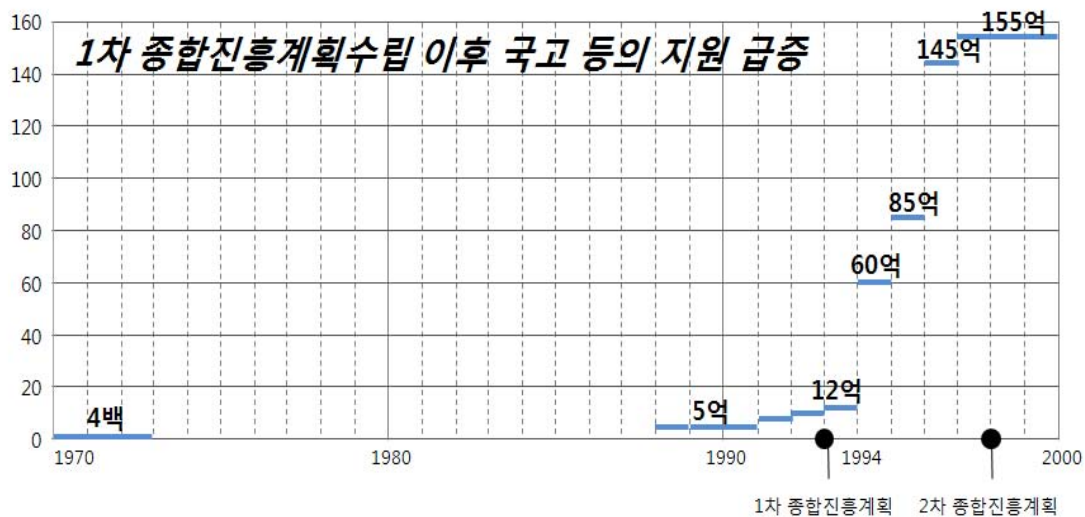
디자인 포장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이 논의되며 디자인 포장 연구 개발 및 진흥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1970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를 설립하였다. 이 후 1991년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한국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으로 개편하여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996년에는 산업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디자인과 포장기술 두가지 분야가 아닌 산업디자인을 위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다시 개편하게 된다. 이는 디자인 진흥 전담으로 발전하게 되며 2001년 4월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다시 바뀌며 산업디자인으로 국한된 사항에서 디자인 전 분야를 진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연구개발 및 진흥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국가경제발전을 기여하는 목적으로 개편한 것이며 전문인력양성 및 디자인 정보화 구축 등 디자인산업의 육성기반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 재단설립을 위한 국고 보조 규모

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정부는 1970년 9억 5,900만원의 출연금으로

「한국디자인포장센터」를 발족한다. 그리고 1994년 이후 「한국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으로 개편된 후 정부는 국고보조금과 기반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디자인 진흥정책을 강화한다. 이는 1993년 1차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후 적극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국고보조금과 기반자금 모두 합쳐 매년 155억 원의 예산을 집중지원³⁹⁾하고 「산업디자인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디자인산업 선진국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재단설립에 대한 국고보조가 이루어져 온 것은 1991년 『산업디자인 포장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종합진흥계획 수립이 시작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2]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의 재정지원(단위: 억원)

2) 엔지니어링산업 분야

엔지니어링산업분야는 엔지니어링의 산업적 구조개편을 위해 2010년 현재 산업진흥을 위한 법으로 전면개정⁴⁰⁾하고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디자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산업적 구조개편을 위한 활동은 크게 법제개정, 종합적인 정책계획 수립, 관련 재단 설립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39) 윤태호(1994), 「한국의 디자인진흥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8; 천호선(1998), 「디자인 산업 진흥정책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9

40) 법률 제10250호(2010.4.12 전부개정, 2010.10.13 시행), 법제처



[그림 2-13] 엔지니어링분야의 산업적 구조개편 추진과정

① 산업적 구조개편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국내 기술용역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국내 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73년 『기술용역육성법』으로 처음 제정된다. 이 후, 1990년대에 들어와 국제규범의 틀에 부응하도록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술용역육성법은 1993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산업으로써 진흥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다시 전면 개정된다.

1993년 전면개정은 ‘기술용역’에서 ‘엔지니어링기술’로 용어를 변경, 정의하였다.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기술개발, 협회 설립 등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을 위한 것으로, 그리고 2002년 엔지니어링기술분야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수립’과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후, 2010년 개정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용어정의를 이루어지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엔지니어링기술을 산업적 측면으로 보기 시작하였으며,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엔지니어링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는 기반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엔지니어링기술분야 진흥을 위한 진흥정책수립

전술했듯이, 엔지니어링기술분야를 진흥하기 위해 2002년 법률이 일부개정되고 ‘기본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2003년 1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현재 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 기본계획까지 진행되었다.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기본계획수립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시행된 1차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기본계획은 엔지니어링 기술능력 혁신을 통해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엔지니어링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 주요 내용은 전문인력 육성·관리, 엔지니어링 기술 혁신을 위한 R&D 활성화, 엔지니어링 정보유통체계 구축 등 국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전개하였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에 관한 기본정책방향을 처음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차 기본계획의 5년간 정부는 총 113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인력 육성관리 지원에 약 43.1억원, 정보유통 체계구축에 약 13.8억원, 기술혁신을 위한 R&D 활성화에 32.6억원, 해외시장진출 및 시장개척지원에 23.5억원을 지원하였다⁴¹⁾. 하지만 법제도 및 인프라 정비를 위한 정부지원은 당시에는 없었으며 민간에서의 지원만 받았다. 이는 법제도로써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제도, 산업구조 정비, 센터 육성 등의 발전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1차 기본계획 5년간 정부지원



[그림 2-14] 1차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기본계획에서의 정부지원계획 규모

41)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8),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2008~2012)」, 과학기술부

「1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시행된 2008년에서 2012년의 2차 기본계획은 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을 ‘세계 7대 강국’으로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서 주요내용은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으로 1차 계획과 전략방향은 유사하지만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세계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및 정책 정비와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전문 교과과정 마련을 통해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전략을 세웠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는 총 697.5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는 데⁴²⁾ 이 중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에 233억원, R&D투자확대를 통한 미래원천기술확보에 171.5억원,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182억원,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인프라 혁신에 13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차 기본계획 시 지원이 전무하였던 법제도 및 정책정비에 56.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차 기본계획 5년간 정부지원

697.5억원

233억원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171.5억원

R&D 투자확대를 통한
미래원천기술확보

182억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131.5억원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인프라 혁신

56.5원

법제도 및 정책 정비

[그림 2-15] 2차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기본계획에서의 정부지원계획 규모

42)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8),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2008~2012)」, 과학기술부

[표 2-16] 제1차, 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 기본계획 주요 추진전략

구분	1차	2차
목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	3만 달러시대 주력 성장동력으로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육성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능력 확충 및 해외진출 지원 • 우수한 엔지니어의 육성 및 유인 • R&D 확충 및 효율성 제고로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 • 지식공유, 확산을 위한 효율적 정보시스템 구축 • 기술능력 확충을 위한 법,제도 및 인프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개척지원 • 글로벌 환경대응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정비 • 엔지니어링기술진흥 인프라 혁신 •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R&D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 원천기술 확보

□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전략

2010년 국가전략산업으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올해 전면개정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7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한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엔지니어링 역량을 높이고 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중점 추진대책으로 ‘엔지니어링 핵심 기술 역량 강화’, ‘경험축적 및 Track-Record 확보’, ‘전문대학원 설립 등의 인력양성기반 확충’,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중소업체 간 협업 활성화’, ‘기업 친화적 시장 환경 구축’ 등의 6대 추진대책을 세웠다.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엔지니어링산업발전 종합대책」으로 정부는 1조 8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 R&D분야에 1조원을 투자하며 프로젝트 수주 및 M&A 등 금융지원에 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진출종합전략 수립 및 해외수주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규칙을 개정하며, 엔지니어링 콤플렉스 조성 및 전문대학원 설립 할 예정이다.

엔지니어링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과 녹색·신성장동력 선도, 일자리 창출 등을 유

발하는 지식집약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엔지니어링산업발전 종합대책

1조8000억원

1조원

R&D 투자

2000억원

프로젝트 수주 및 M&A 등 금융지원

[그림 2-16] 엔지니어링산업발전 종합대책(2010)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계획 규모

[표 2-17]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종합대책 추진전략 및 추진대책

추진전략	추진대책
1. 핵심영역 역량제고	① 핵심·원천기술 자립화 ② 경험 축적 및 Track Record 확보
2. 인력양성 기반강화	③ 전문대학원 등 인력양성 기반 확충
3. 수출지원 기반확충	④ 해외시장 진출지원 강화
4. 성장 인프라 조성	⑤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 ⑥ 기업 친화적 시장환경 구축

[표 2-18] 주요 엔지니어링산업 추진과제

① 정부 엔지니어링분야 R&D에 '10~15년까지 총 1조원 투자 ② 건설 기반 엔지니어링이 아닌 엔지니어링 기반 건설로의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경험 축적 및 Track-Record 확보 (例: '1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건설·플랜트 분야에 단계적으로 추진) ③ 국내 주요 공과대학원에 "엔지니어링전문대학원" 설립('11년 2개) ③ 국제인증자격자 양성 확대('10년 1,2만명 → '20년 3만명) ④ 중소·중견기업 수출(담보)보증한도 확대(공제조합 자기자본 10% → 20%) ④ 프로젝트 수주 및 M&A 등 금융지원 자금 2,000억원 조성(공제조합) ④ 해외진출 종합전략 수립 및 해외수주 지원센터 구축('09년 4개 → '10년 8개) ④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위원장: 지경부장관) ⑤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엔지니어링 Complex를 조성하여 비즈니스 타워(200여개 업체 입주), 기술지원센터, 연구장비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 ⑥ 20년간 업계 희망사항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단계적 현실화('13년까지) ⑥ 현행 93개 전문분야를 1/2로 대폭 축소 및 기술 융복합에 따른 신규분야 신설 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10월까지)
--

(출처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0.4.28), "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방안")

③ 재단설립 : 엔지니어링 진흥센터

엔지니어링 진흥센터는 「1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 기본계획」의 근거로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해 2003년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산하조직으로 설립되었으며 수요자의 필요를 감안한 맞춤형 개별교육으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엔지니어링 진흥센터에서는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을 구성해 업체별 교육수요에 맞는 전문가를 연결하고, 교육 참가자들의 국제연수를 지원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며, 엔지니어링 관련기술 및 사업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하여 종합적인 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한다.

2차 기본계획에서 세부추진계획 중 엔지니어링 진흥센터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사항이 있는데, 전문인력 양성,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단지 조성 및 관리,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등 엔지니어링 기술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였다.

3) 타분야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주요 성과

디자인산업분야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법에 근거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종합계획에서 더 나아가 전략적인 디자인 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적 차원의 발전전략을 세웠다. 시대가 변화할수록 디자인분야가 국제 경쟁력의 기반이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디자인산업의 세계경쟁력도 점차 높아졌다. 한국의 디자인경쟁력이 2002년 25위에서, 2005년 14위, 2007년 9위로⁴³⁾ 매우 빠르게 상승해왔음은 이러한 정책과 국가적 지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엔지니어링산업분야는 건축과 유사한 업종이지만 올해 엔지니어링기술활동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이 전면개정되었고 정부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올 4월에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을 육성 발전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방안」⁴⁴⁾을 발표 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 분야에 5년간 1조8천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발전대책과 지원책은 엔지니어링분야가 산업으로서 인식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43) 핀란드 헬싱키대학 디자인연구소 조사자료, 국가 디자인경쟁력 조사

44)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0.4.28), “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방안”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분류 현황
2. 건축관련 법제도에서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설계의 정의 현황
3. 국가계약 관련법에서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체계 분석
4. 소결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분류 현황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요⁴⁵⁾

한국표준산업분류(KSIC-08)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 확보를 위해 1963년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분류가 제정되고, 이듬해 4월 비 제조업 부문을 추가하며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체계를 완성하였다. 이는 UN의 국제산업분류(ISIC)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이후 국제표준산업분류의 개정과 국내의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2010년 현재까지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2000년에 개정, 고시된 8차 개정 분류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고, 서비스산업 활동의 비중 증대 및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여 개정한 것이었으나, 국제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되고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환경관련 산업 등의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제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8차 개정 후 7년만인 2007년에 제9차 개정작업을 완료하여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분류

2008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21개의 대분류를 기본으로 전체산업을 분류하고 있는데,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설업’과는 구분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에 속해있다. 대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은 이전 8차 분류에서는 대분류

45) 통계청(2007),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및 원칙」 참고하여 재작성

‘사업서비스업’의 하위인 중분류로 포함되어 있던 분야이다. 현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UN이 제시하는 산업분류체계를 참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의 변화는 2007년에 개정된 미국 산업분류체계(NAICS)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⁶⁾

새롭게 대분류로 등장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은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산업으로, 연구 개발업 외 총 4개의 중분류 산업이 포함되는데, 이전에 중분류였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내 소분류의 7개 산업이, 연구개발업을 제외한 3개의 중분류 산업으로 분류되어 포함된다.[표3-1] 즉,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에 속해있는 중분류 산업들이다.

이 가운데 건축서비스업은 중분류인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에 속해있으며, 다시 소분류인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M721), 세분류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M7211), 그리고 세세분류의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세세분류, M72111)에 포함되어 있다.

[표 3-1]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부문 개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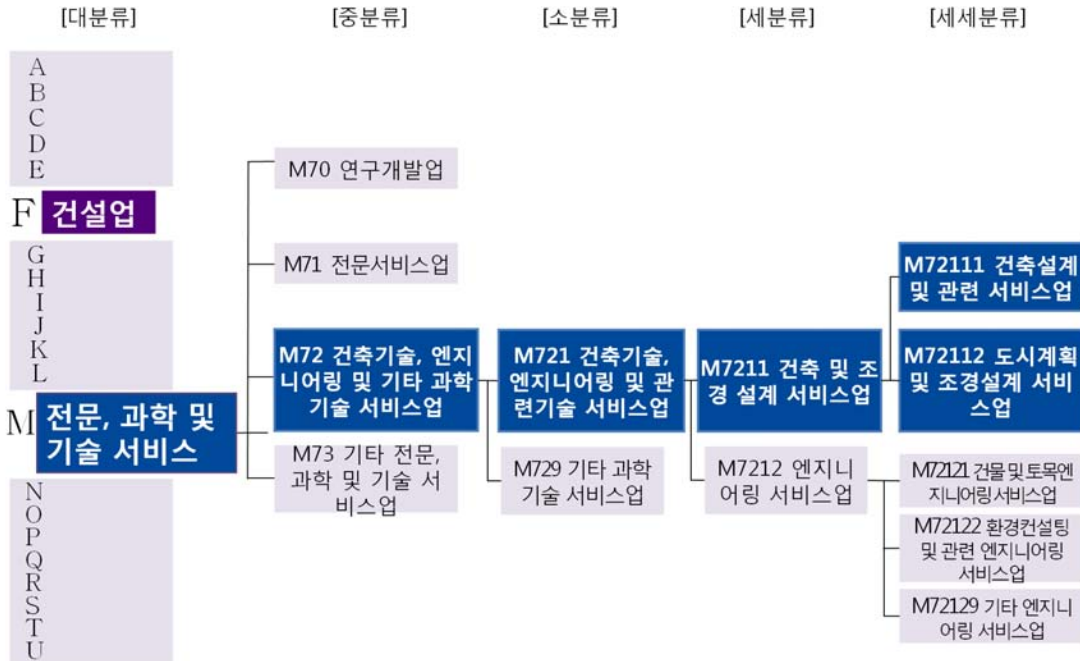
8차 산업분류(2000)	9차 개정산업분류(2008)
M. 사업서비스업 - 연구 및 개발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①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②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③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④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⑤광고업 ⑥전문 디자인업 ⑦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연구 개발업 - 전문 서비스업(①,②,⑤)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③,④)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⑥,⑦)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46) 미국 산업분류체계 변화 및 연혁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축서비스산업과 유사 산업과의 관계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서비스산업은 대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의 세분류인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M7211)에 속해 있는데, 이는 종합건설업(F41)과 전문직별공사업(F42)을 포함하는 건설업(F)과 대분류에서부터 구분된다는 점에서 업태의 성격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관련 산업을 구분해보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에 해당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산업은 건설업(F41, F4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M7211)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에는 건축설계(M7211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M72112)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설계, 도시계획, 조경설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림 3-1]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9차개정)에서의 건축서비스산업의 분류

[표 3-2]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항목표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B	광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C	제조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P	교육 서비스업
F	건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H	운수업	S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U	국제 및 외국기관
K	금융 및 보험업		

[표 3-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련 산업의 구분

산업명		코드	산업 통칭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i>M721</i>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M7211	건축서비스산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M7211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M721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	엔지니어링산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1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3	
건설업		<i>F41, F42</i>	건설산업

3)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통한 건축 관련 산업의 활동 주체 구분

앞에서 현행 산업관련법에서 산업을 정의할 때, 활동 주체의 정의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활동 주체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직업분류를 통해 관련 산업의 활동주체를 구분해 보고자 한다.

직업분류는 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며⁴⁷⁾,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직업구조 및 실태에 맞도록 표준화한 것이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활동 주체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대분류, 2)’ 내에서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중분류, 23)’에 포함되는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소분류, 231)’ 중에서,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2311), 조경 기술자(2313), 도시 및 교통 설계 전문가(2314) 등으로 볼 수 있다.

건축가(23111) 및 건축감리 기술자(23112)의 경우 『건축사법』에서 그 직능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에 있어서는 『건축사법』의 정의를 준용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5에서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기술사를 명시하고 있다.

[표 3-4]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건축관련 산업 활동 주체 구분

직업	코드	관련법 및 구분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1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2311	
건축가	23111	건축사법 건축사 및 건축사보 건축서비스산업
건축감리 기술자	23112	
건축구조설계 기술자	23113	
건축시공 기술자	23114	
건축설비 기술자	23115	
건축안전환경 기술자	23116	
그 외 건축관련 기술자	23117	
토목공학 기술자	2312	(세세분류 생략)
조경 기술자	231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 조경설계 기술사
조경 기술자	23130	
도시 및 교통 설계 전문가	2314	
도시계획 및 설계가	2314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계획 및 설계가	23142	
교통안전 연구원	23143	
교통영향 평가원	23144	

47) 박천수 외(2006),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56

2. 건축관련 법제도에서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설계의 정의 현황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건축관련 법제도는 크게 건설업(F)과 엔지니어링산업(M7212), 그리고 건축서비스산업(M7211)과 관련된 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이 있으며,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해서는 『건축기본법』과 『건축사법』이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업(건설업 F)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의 기본이념, 정의, 건설업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기술 정보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관리,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M7212)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기술사의 고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축기본법과 같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법이 없다. 건축서비스산업(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M7211)의 경우, 건축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는 『건축기본법』과 건축사 인력과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신고 등을 다루는 『건축사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들 관련법들을 중심으로, 건축디자인산업의 개념과 이와 관련된 건축설계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표 3-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체계

산업명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	건축서비스산업
표준산업분류체계	건설업 F41, F42	엔지니어링서비스업 M7212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M7211
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기본이념, 정의, 건설업 등록, 경영합리화, 협회 등)	—	건축기본법 (기본이념, 정의, 기본계획, 위원회, 건축문화진흥)
인력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진흥계획, 연구개발지원, 건설공사 관리, 품질관리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문인력양성, 기술사 고용, 기술 개발지원, 사업대가, 협회 등)	건축사법 (건축사자격, 시험, 건축사사무소, 건축사협회)
진흥법	—	—	—

※ 서비스업 중에서 진흥법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 제작업(M7292)의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전문디자인업(M732)의 산업디자인 진흥법, 교육 서비스업(P)은 과학교육진흥법,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다.

1) 건축기본법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현황

□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부재

건축서비스산업이 건축디자인을 서비스하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산업이라고 볼 때, 건축기본법에서 이러한 산업적 개념의 정의는 되어있지 않다. 다만, 제3조 정의 부분에서 ‘건축디자인’이 어떠한 활동을 일컫는지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다. 즉,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설계와 관련된 분야(건축서비스)에 대한 산업적 정의나 산업개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건축서비스산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디자인이 어떠한 활동인지 그 범주에 대한 정의만 되어있다 할 수 있다.

[표 3-6] 건축기본법에서의 용어정의(제3조)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공공공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설계의 정의 현황

⇒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설계’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에 의한 설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에 의한 설계로 정의 될 수 있으며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에 국한된 설계가 건축설계로 정의되고 있음

□ 정의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설용역업으로 간주됨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부분 1항에서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제3항 건설용역업에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부분을 명시하고 있어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설 공사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건설공사는 4항에서,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으로 여기서 언급된 건축공사는 건축설계에 의해 진행된다.

[표 3-7]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용어정의(제2조)

제2조(정의)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제5호 이하생략)

□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부분에서 건축설계에 의한 건축공사를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부분에서 ‘건설공사’가 명시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에 관하여 개념을 분리함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설공사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건설공사는 1항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로, 여기서 언급된 건축공사는 건축설계에 의한 것이다.

[표 3-8]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

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제2항 이하 생략)

□ 다중 이용 건축물 및 시공사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 규정에 건축설계를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에서 건축물들은 건축공사에 포함하는 건축물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이는 건축공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설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표 3-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하는 건축공사의 종류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종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3.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사항에서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개념 분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서는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사항에서 건축공사업은 제2호에 주거용, 상업용, 광공업용, 교육·사회용, 전통양식건축 기타 건축공사분야로 별도 명시되고 있어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개념을 분리함을 알 수 있다.

[표 3-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의 하는 건축공사업

제25조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공사업 : 도로·교량, 댐, 항만, 공항, 철도·지하철,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상·하수도 기타 토목공사분야
2. 건축공사업 : 주거용, 상업용, 공공업용, 교육·사회용, 전통양식건축 기타 건축공사분야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생산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공사분야
4. 조경공사업 : 수목원, 공원 조성 그 밖의 조경공사분야

□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에 건축사 포함

시행규칙 제25조의3 에서는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 명시되어 있는데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으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도 포함하고 있어, 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설계로 정의하여 건축설계로 해석된다.

[표 3-11]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규정사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설계의 정의 현황

⇒ 건설기술관리법에서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를 제외하여 법률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에서 제외

그러나, 부실측정, 용역업자 선정 부분 등에서 건축설계를 포함하므로 단서조항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조항에서는 건축설계가 포함됨

□ 정의에서 건설기술에 건축설계를 제외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정의부분의 제2호에서는 건설기술, 건설기술용역 등에 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는데, 가목 건설기술의 정의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중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고 명시함으로 건설기술에서 건축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있어 건축설계도 제외된다. 또한 제4호 설계 등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중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건설기술용역의 역무에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가 포함되어 있어 건축설계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제4호에서 설명하는 건설공사에는 건축공사가 제외되므로 건축설계도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표 3-12]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건축공사(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設計監理)·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목이하 생략)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직무(職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 등 용역"이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 및 안전성 검토
 -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제5호~제7호 생략)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라 한다) 중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9호 이하 생략)

□ 부실측정시에는 건설공사에 건축공사 포함

제21조의4에서, 1항 3호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함으로 건설공사에 건축공사가 포함되며 건축공사와 관련된 건축설계가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을 할 때 건설공사에 건축공사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표 3-13]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건축공사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主務官廳)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불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감리전문회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 용역 및 시공평가 등 부분에서 건축사 포함

법 제36조 용역 및 시공평가 등 부분의 1항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건축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2항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건축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표 3-14]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기술용역업

제36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
① 건설업자의 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설계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출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를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용역업자의 선정 부분에서 건축설계 포함

시행규칙 제13조 2항 2호 나목에 건축공사는 대경간(大徑間) 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공사, 환승복합 역사공사를 말함으로 여기서 언급된 건축공사는 건축설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표 3-1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건설공사와 건축설계 관계(제13조)

<p>13조(용역업자의 선정)</p> <p>① 발주청(영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1. 용역비가 영 제36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검측감리·시공감리·책임감리·건설사업관리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p> <p>가.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또는 설계감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 별표 5 제1호에 따라 평가</p> <p>나.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에 따라 평가</p> <p>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에 따라 평가</p> <p>(제2호 이하 생략)</p> <p>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제1호 가~마목 생략)</p> <p>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에 대하여는 제1호 각 목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정밀안전진단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토목공사: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의 특수교량, 댐, 공항, 항만시설 중 5만 톤급 이상 말뚝구조 및 20만 톤급 이상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배수갑문, 하저터널, 첨단교통체계시설의 공사</p> <p>나. 건축공사: 대경간(大徑間) 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공사, 환승·복합 역사공사</p> <p>다. 플랜트공사: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 공사, 고도처리방식에 따른 정수장 공사, 하수·폐수 처리 공사, 폐기물소각시설 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공사, 열병합·화력 발전설비 공사 (3호 이하 생략)</p>	
---	--

□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부분에 건축설계 포함

시행규칙 제13조의2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부분 제2항에 별표 5 제3호(건설기술용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표 7(「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인 경우에 해당한다)에 명시하고 있어 건축설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표 3-16] 건설기술법에 의한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

<p>제13조의2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p> <p>② 발주청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과 별표 5 제3호(건설기술용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표 7(「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인 경우에 해당한다)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작품을 평가하여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p>	
---	--

3. 국가계약 관련법에서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체계 분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항에서 건설공사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와 관련된 자재, 노동력, 각종 기계 설비를 투입하여 조직적으로 생산하는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⁸⁾, 이를 통해 건설공사에 포함하고 있는 건축공사도 동법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크게 기획·발주, 입찰·계약, 건설생산, 유지관리 4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건설공사 각 단계별로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단계별 적용되는 관련 법률은 다음 표와 같으며, 건설공사계약에 관련된 법률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소관의 회계예규가 있다.

건설공사계약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계약체계를 살펴본다.

[표 3-17] 건설단계별 관련 법률

구분	기획·발주	입찰·계약	건설생산	유지관리
국가 기관	국가재정법 건설기술관리법 (국토해양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국토해양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 회계예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 (국토해양부) ※사후평가지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해양부) ※하자담보기간

(출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2009) 「정부청사 건립 실무편람」, p.10, (이상민 외(2009),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운영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50 재인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서 용역계약과 공사계약에 건축설계 포함

법 제4조 1항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서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

48)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가 있음

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건축설계는 이 중 용역계약과 공사계약에 해당한다.

□ 개산계약 부분에서 건축설계 미포함

법 제23조 개산계약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발시 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의 경우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술용역은 개산계약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용역계약은 연구용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기술용역인 건축설계는 개산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2단계 경쟁등의 입찰 부분에서 설계용역계약 포함

시행령 제18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 부분에서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을 명시하여 설계용역계약을 포함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부분에서 건축설계 제외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부분 제10항에서는,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명시하고 있어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건설기술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설계가 제외된다.

□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에서 건축설계 포함

시행령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라고 명시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건설공사로 건축공사를 포함하여 해석되어야 하므로, 건축설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건축설계 포함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1항 4호 차목 특정인의 기술을 요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건축설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제5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라고 명시함으로 건축공사 즉, 건축설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부분에 건축설계 제외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라고 언급하고 있어, 건축설계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부분에 건축설계 제외

시행령 제73조의2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부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축공사를 포함하여 건축설계가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 입찰참가자격에 건축사 참가자격 포함

시행령 제84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의 제1항 제2호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이라고 명시함으로 건축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공사 원가에 설계비 미책정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부분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으로 명시하고 있어 공사시공과정 비용뿐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비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② 회계예규

□ 〈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부분
 -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가치기준이 아닌 기술기준이 적용된다.

- 2항 1호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어 건축사의 자격여건은 배제된다.
- 제4장 수의계약운용
 - 제8조 집행기준 부분, 10조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부분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어 수의계약 운용에 해당사항이 없다.
 - 집행기준 8조 1항 4호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10조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1항 3호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⁴⁹⁾.
 - 위 두 조문을 해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용역은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어 수의계약 운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규정에 따라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상에서는 설계비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 〈2. 예정가격작성기준〉

-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 3절 공사원가계산
 - 본장에서 공사 원가에 설계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
 - 15조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⁵⁰⁾으로 명시하고 있어 공사시공과정 비용뿐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비

49) 별첨 ‘별표 1. 계약실적 총보고서(2-1) 및 II-1-2. 공사 및 용역’ 참고

50) 별첨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및 별표 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별표3 일반관리비율’ 참고

는 따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제3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 이 장에서도 건축설계에 대한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 37조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에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건축설계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 공사 위주의 가격산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제4장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 건축사가 등록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47조 전문가가격조사기관 등록 시 등록기준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관련 별표5(기술기능분야)에 의한 기계, 전기, 통신, 토목, 건축 직무분야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건축사는 등록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11. 용역계약일반조건〉

- 3장 감리용역 계약조건
 - 제39조 정의 부분 : 감리용역에 관한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즉, 건축설계는 제외하고 명시하고 있어 위 조문에서 감리용역에 건축설계는 제외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 11항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설계용역은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어 위 조문에서 설계자는 건축설계자를 제외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 제 42조 발주기관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부분 : 감리용역에 관한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즉, 건축설계는 제외하고 명시하고 있어 감리용역에 건축설계는 제외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 국가계약법에서는 건축설계가 용역으로 분류되나 부분적으로 회계예규와 조문에 건설공사의 일부항목으로 표기되고 있음
- 건설공사는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그 대상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대상의 설계를 제출하여 그 설계안을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대한 계약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4. 소결 : 특성 및 문제점

1) 건축관련 법제도상 건축서비스산업 정의 부재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법령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축기본법 등을 검토하였으나, 건축기본법에 ‘건축디자인’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을 뿐 산업적인 개념은 부재하며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축설계는 건설산업에 포함되는 건설용역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용역이란 뜻은 영문으로 Service를 지칭하므로, 건설용역업은 건설서비스로 해석되어져 건설 관련산업이 건설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처럼 현재 건축 관련 법에서의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이 부재하고, 건설산업 등과의 관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정립을 위하여 건축관련 법상에 명확하게 정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건축 관련법상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필요

2) 건축관련 법제도상 설계의 정의 혼돈

건축과 관련된 위의 법들 가운데 ‘설계’의 정의는 건축사법 제 2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기술’은 ‘건축사법’의 설계를 제외하고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설계 등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사과정에서 설계는 건설기술의 설계, 즉 건축설계를 제외한 설계로 해석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용역업’을 정의하면서 설계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건축서비스산업을 건설용역업의 분류에 포함한다 할 수 있으나, 이때 설계는, 건축설계를 포함하고 있어 그 정의가 건설기술관리법과 혼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건축 관련법을 검토해보면 건축설계가 여전히 건설기술의 일부로써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의 일종인 건설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인 건축과 엔지니어링 산업을 구분하여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 건축설계 개념 인식전환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설계기준의 계약지침 부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설계는 용역계약과 공사계약에 해당하며, 용역으로 건축설계가 포함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일부항목에 제외되기도 한다. 그리고 **건설공사 시 설계기준의 계약지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설계관련 계약사항을 포함시키거나 별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그 대상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대상의 설계를 제출하여 그 설계안을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대한 계약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회계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공사 위주의 계약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용역계약에 관한 부분에 건축설계 계약방식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국가계약법에 물품, 용역, 공사의 큰 틀로 나뉘는 계약의 관계에 있어서 건축설계, 혹은 엔지니어링설계를 포함한 설계가 용역으로 분리되어 하나의 틀을 제시할 것인지,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원가계산 방식에 표현 될 것인지 건축서비스산업으로 구조개편 시 그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계약관련 법규에 건축설계기준의 계약지침 명시 필요**

제4장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해외사례 분석

1. 미국의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및 관련 법
2. 일본의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및 관련 법
3. 소결 :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특성 및 시사점

1. 미국의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및 관련 법

1) 미국 건축서비스산업 분류체계와 정의

□ 미국 산업분류체계(NAICS) 개요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산업분류는 미국의 전체 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인 ‘북미산업분류체계(The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에서 찾아볼 수 있다. NAICS는 연방 통계 사업체들을 분류할 때 미국 기업 경기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일에 기준이 되도록 개발되었다. NAICS는 연방정부 통계기관인 ‘미국통계청(U.S. Census Bureau)’ 뿐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는 공신력 높은 산업분류 체계이다. 이러한 NAICS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서인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의 감독아래 1997년 기존의 ‘표준산업분류(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IC)’ 체계를 대체하여 채택되었다. NAICS는 미국의 U.S. Economic Classification Policy Committee(ECPC), 캐나다의 ‘Statistics Canada’, 그리고 멕시코의 ‘Mexico's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가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변화하는 산업 및 경제활동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현재는 2007년 버전이 사용되고 있으며 2012년에 새로운 버전이 나올 예정이다.

□ NAICS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분류 및 인식

2007년 개정된 NAICS는 20개의 대분류를 기본으로 전체 산업을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설업”과는 구분되는,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에 속해 있다. 대분류 54번인 전문적, 과학적 및 기술적서비스(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는 NAICS가 도입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그룹으로, 소위 지식과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산업들을 한데 묶은 분야이다. 기존 SIC에서는 특별한 기준 없이 여러 유사 산업들을 한데 묶어 놓은 명칭(Engineering, Accounting, Management and Related Services)을 사용했던 데 비해, NAICS가 되면서 이러한 그룹의 특성과 존재 의의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 자본의 투입이 중요한 산업들이 이 새로운 분야로 묶어졌다. 이 분야의 산업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숙련성에 따라 정의된다. 47개의 산업이 이 분야에 포함되며, 그 중 28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이다.

[표 4-1] SIC와 NAICS의 건축 서비스 산업 분류 비교

SIC					
Division			Industry Group		Industry
70–89	Services	>	87	>	8711 Engineering Services
					8712 Architectural Services
					8713 Surveying Services
				

NAICS					
Industry Sector			Industry Group		Industry
54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	5413	>	541310 Architectural Service
					541320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541330 Engineering Services
				

여기에는 법률서비스업, 회계업, 특화된 디자인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서비스업 등과 더불어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업(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Related Services)”이 속해 있고, 이는 다시 ‘건축서비스(Architectural Services)’, ‘조경서비스(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엔지니어링서비스(Engineering Services)’ 등으로 분류된다. 즉, 미국 산업분류체계속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설업과는 명백히 구분되며, 법률, 회계,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등과 더불어 지식관련 서비스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4-2] NAICS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분류

대 분류	중분류 / 소분류
11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nd Hunting 21 Mining, Quarrying, and Oil and Gas Extraction 22 Utilities 23 Construction 31-33 Manufacturing 42 Wholesale Trade 44-45 Retail Trade 48-49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51 Information 52 Finance and Insurance	5411 Legal Services 5412 Accounting, Tax Preparation, Bookkeeping, and Payroll Services
54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5413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Related Services 54131 Architectural Services 54132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54133 Engineering Services 54134 Drafting Services 54135 Building Inspection Services 54136 Geophysical Surveying and Mapping Services
53 Real Estate and Rental and Leasing 55 Management of Companies and Enterprises 56 Administrative and Support and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61 Educational Services 62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71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72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81 Other Services (except Public Administration) 92 Public Administration	5414 Specialized Design Services 5415 Computer Systems Design and Related Services 5416 Management, Scientific, and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5417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5418 Advertising, Public Relations, and Related Services 5419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미국에서 건축서비스 관련 산업에 대한 공식명칭은 “Architectural Service”이며, 이에 대한 정의는 NAICS와 연방계약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NAICS는 건축서비스산업을 “디자인, 시공절차, zoning 규제, 건축법, 건물재료들에 관한 지식을 적용하여 주거, 교육, 레저, 상업, 공업 등 용도의 건물과 구조물을 계획하고 디자인(설계)에 관련된 산업⁵¹⁾”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NACIS에서 토지의 직접적 개발을 위한 계획과 설계는 조경서비스업(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으로 분류되고, 건물, 고속도로, 구조물 등의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은 “건설업(Construction)”으로 분류하여 다시 한 번 건축서비스 산업을 건설업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계약법인 USC Title 40, §1101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은 1) 건축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 의해 본 법에 의해 정의되는 서비스가 실행되거나 승인되는 것이 요구되는 건축적 성격을 갖는 전문적 서비스, 2) 토지에 관련된 연구, 조사, 계획, 개발, 디자인(설계), 시공, 개축, 수선, 수리와 연관되어 계약에 의해 실행되는 건축적 성격을 갖는 전문적 서비스, 3) 건축전문가가 일을 수행할 때 논리적 또는 당연히 건축적 성격을 갖는 전문적 서비스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예: 연구, 조사, 맵핑, 시험, 평가, 컨설팅, 개념설계, 기본설계, 기획, 시방서, 시공단계 서비스, 토지공학,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도면 점검 등)를 모두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2) 미국 건축서비스 산업구조 개편의 역사

미국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이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1857년 미국건축가협회, 즉 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의 창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867년 일리노이주가 처음으로 건축사법을 제정한 이후 약 50년에 걸쳐 모든 미국의 주가 건축사법을 제정하였으며, “건축가(architect)”라는 법적 정의와 건축서비스에 관한 규정과 명칭 등에 관한 법적 조항은 1897년 이후에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의 건축

51) “This industry comprises establishments primarily engaged in planning and designing residential, institutional, leisure, commercial, and industrial buildings and structures by applying knowledge of design, construction procedures, zoning regulations, building codes, and building materials.”

사면허는 AIA와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NCARB)가 공동으로 건축실무에 관한 기준을 개발·관리하고 있다.

① AIA 개요

AIA는 1857년 2월 23일 13명의 건축가들이 만나 "건축업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회원들의 과학적, 실무적 완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AIA가 처음 만들어진 1857년 당시에는 건축전문학교나 건축사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목수, 벽돌공 등 건축과 관련된 누구나 원하면 건축가로 자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13명의 작은 단체가 향후 미국의 건축계를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건축가에 대한 사회적 지위도 구체화 시키게 되었다. AIA의 처음 명칭은 'The New York Society of Architects'이었고, 자체적인 정관을 만들고 법인을 등록하면서 시작하였다.

1858년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AIA의 설립목적을 "예술적, 과학적, 실무적 전문성 증대(to promote the artistic, scientific, and practical profession of its members); 회원들의 교류와 협력 증진(to facilitate their intercourse and good fellowship); 건축가의 전문적 지위 향상(elevate the standing of the profession); 그리고, 예술분야의 일반적 진보를 위해 건축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을 통합(to combine the efforts of those engaged in the practice of Architecture, for the general advancement of the Art)" 한다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정기적 모임과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강연회, 도서관 설립, 건축모델과 디자인 컬렉션을 개발하였으며, 정치적, 종교적 주제는 금지하였다.

1867년에는 설립목적을 "미국 내 건축가들을 통합하고 전문가로서 예술적, 과학적, 실무적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통합하는 것(The objects of this Institute are to unite in fellowship the Architects of this continent, and to combine their efforts so as to promote the artistic, scientific, and practical efficiency of the profession.)"이라고 재수정하면서, 건축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 미국 건축가들의 통합이라는 목표를 표방하였다.

이후 1884년에 다른 건축가 협회인 The Western Association of Architects가 미 중서부와 남부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시카고에서 조직되었고, 건축을 위한 면허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주장되었는데, 1889년 이 협회는 AIA와 통합되어 AIA의 위상이 더욱 강화

되었다. AIA의 회원수는 1857년 29명에서 1957년 11,500명, 그리고 2005년에는 75,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⁵²⁾

② AIA 역할

13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AIA는 전 세계 건축가들을 위한 가이드, 서비스, 기준 등을 제공하는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AIA는 물리적 환경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가들의 목소리를 지원하는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AIA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건축가(사) 권익보호 및 향상

가장 중요한 AIA의 역할은 건축가, 건축사들의 권익보호와 향상이다. 전술했다시피 미국에서 건축서비스 분야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기까지는 AIA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고, 건축서비스산업의 법적 정의, 설계비 산정기준,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하고 이를 관련 법에 적용시킴으로서 건축서비스 분야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현재 미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위상을 확립하고 건축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켜 왔다.

□ 연방정부 자문

AIA는 1910년 미국의 미술, 예술, 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는 ‘미국 예술위원회(U.S. Commission of Fine Arts)’ 설립과 위원회의 임명에 관여하였고, 오늘날에도 국가 예산에 영향을 주는 예술과 건축 관련 사항에 대해 연방정부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워싱턴 DC의 개발과 링컨 고속도로(the Lincoln Highway) 개발, the Vietnam Veterans Memorial 개발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최근에도 학교건설을 위한 예산, 브라운필드 관련 법제도 개편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건축미와 안전(security concerns)을 통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표준계약서 제공

19세기에 AIA의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설산업에서 사용되는 계약서를 표준화 하는 것이었다. 1866년 첫 번째 표준 문서가 바로 ‘설계비 일정(fee schedule)’인데, 여기서 건축가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법적 정의를 수립하

52) 초기 AIA 회원자격은 실무건축가에 제한되었다. 이후 준회원과 명예회원이 허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AIA 회원은 AIA (licensed architects), Associate AIA (interns, academics, non-licensed architects), FAIA (Fellows of the AIA), and AIA Emeritus (retired licensed architects) 등 4종류가 있다.

였으며, 1870년에는 건축가는 “건물설계에 관한 계획(planning), 감독(overseeing), 공모를 위한 심사와 판정(judging competitions)”에 관여한다고 명시하여, 건축가의 역할을 공공프로젝트의 심사와 선정에까지 확대하였다. 이후 1888년에 AIA는 첫 건설관련 문서인 A-201이라고 이름 붙여진 건축가와 건축주간의 협약(agreement)을 만들었고, 현재 모든 설계와 시공단계를 위한 70여개의 계약서와 관련 문서들을 제공하고 있다.

□ 건축 교육


1867년 AIA는 미국 건축교육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다. 초기에는 프랑스의 the Ecole des Beaux-Arts를 모델로 국가 건축교육기관 설립을 검토하기도 하였고, 제도, 미학, 예술 및 건축사에 관한 야간학교를 구상하기도 하였다. 불행히도 기금마련이 실패로 돌아가 국가 건축교육기관은 실현되지 못했으나, 협회는 대신 당시 MIT를 위해 개발된 Robert Ware의 건축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후 Cornell(1871), University of Illinois(1873), Columbia University(1881) 등으로 전문적인 건축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현재 미국에는 113개의 AIA가 인증한 건축학교가 있고,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ure Students(AIAS), the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Architecture(ACSA), and the 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NAAB)와 함께 수준 높은 건축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Fee 체계

민간부문에서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의 설계료(fee) 체계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시간당 투입노동력, 건물면적에 따른 단위당 계산, 총합, 총공사비의 비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출되고, 일반적인 계약법(Contracts)과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의 원칙을 따르게 된다.⁵³⁾ 그러나, 공공공사에 있어 연방정부의 국가계약법은 1939년 이후부터 건축서비스 용역에 있어 설계료를 총 공사비의 6%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6% 상한선이 만들어진 배경은 1861년 설계료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당시 관습에 의해 총공사비의 5%를 산정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반적으로 총공사비의 5%를 설계비로 추산하였고 이를 1886년 AIA가 최초로 도입한 fee schedule의 기준으로 도입된다. 이후 1908년 AIA가 6%로 인상하였고 이를 1939년 국가계약법에서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기관들은 총공사비의 6%에 포함되는 부분을 “디자인, 계획, 도면작성, 시방서의

53) 공사비 비율로 보면 일반적으로 총공사비의 5~8%에 해당한다.

작성과 제출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면서, 대지/부지조사, topographical work, soil borings, inspection of construction, master planning, and similar services 등은 6%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ASSOCIATES

SAN FRANCISCO
CAMBRIDGE
NEW YORK
LONDON

September 07, 2007

[Redacted] Group, Inc.
[Redacted] Broadway
NY, NY 10018

Attention: [Redacted]
Project Name: Design competition for residential complex in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of [Redacted]
HA Project #: MAC 07PM

212 337 [Redacted] T
212 337 [Redacted] F
[Redacted].COM

Dear Kim:

[Redacted] Associates is pleased to submit the following proposal for Professional Services in connection with the Design competition for residential complex in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of Korea.

This Agreement is by and between [Redacted] Associates and [Redacted] Group, Inc.

We shall provide consultation on the Request for Proposal dated September 07, 2007. Project duration will be approximately (3) weeks. (September 17th – October 5th)

[Redacted] Associates will provide

- Site Analysis Diagram
- Conceptual Diagram
- Illustrative Plan
- 2-3 Perspectives
- Precedent Images

Services shall be provided on an hourly basis as follows:

Personnel	Rate
Hargreaves	\$325.00/hour
Jones	\$275.00/hour
Principal	\$140.00-240.00/hour
Associate/Sr. Associate	\$80.00-160.00/hour
Staff	\$50.00-100.00/hour

Rates are valid for the current calendar year but may be increased subsequently without written notice.

Fee for Professional Services shall not exceed US\$40,000.00 without further authorization.

[Redacted] Associates will require receipt of a retainer in the amount of US\$12,000.00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work. Remaining fees for professional services shall be paid at the completion of work.

Design competition for residential complex in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of [Redacted]
MAC 07PM
September 7, 2007

GEORGE [Redacted]
MARY MARGARET JONES

GLENN ALLEN
CAVIN MCMILLAN
KIRT RIEDER
TIM ANDERSON
CATHERINE MILLER
KEN HAINES
JACOB PETERSEN
MEGAN MANN
BRIAN JENCEK
SCOTT SMITH

MATTHEW J. TUCKER
YOUNGCHUL CHO
BERNWARD ENGELKE
YUMI LEE
JAMIE MASLYN
ANDY HARRIS
SUE BAILEY
MONICA RICHGELS

[그림 4-1] 건축서비스용역의 범위와 기간, 설계료, 계약금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설계용역 착수협의문서 예

3) 미국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체계

미국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원화된 정부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특성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분해 볼 수 있다⁵⁴⁾. 연방정부 관련법은 연방정부 관련 프로젝트와 연방정부 및 관련 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주정부 관련 프로젝트는 해당 주정부의 관련법을 따르게 된다. 또한, 주정부의 계약법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자의 계약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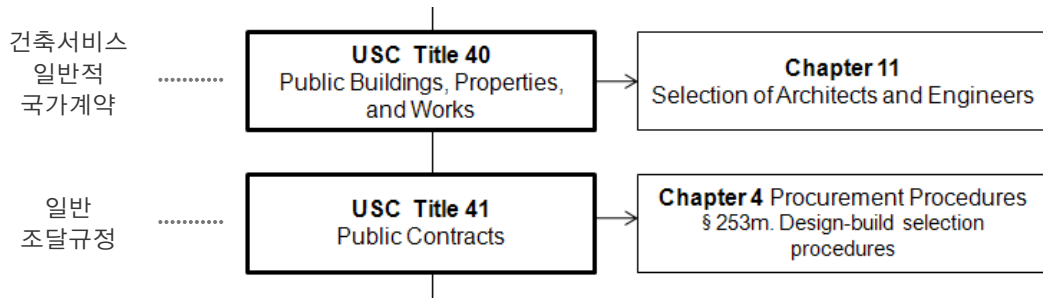
① 연방정부의 건축서비스관련 법 : 계약법

연방정부 차원에서 건축서비스와 관련된 법규는 연방계약법이다. 연방계약법에서는 연방정부의 건축관련 프로젝트의 발주와 계약, 그리고 건축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에 대한 정의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계약법에 해당하는 연방계약법은 USC(United States Code) Title 40과 41, 연방행정규칙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1, 그리고 연방조달규정인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⁵⁵⁾에서 규정되어 있다. 법체계에 있어 USC는 연방정부의 최상위 법률들을 Title로 구분하여 종합해 놓은 것으로서, 6년마다 개정되며 현재 50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국가계약 및 조달에 관한 내용은 Title 41의 “공공계약(Public Contracts)”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건축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물품의 조달과 용역(service) 선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Chapter 4의 “조달절차(Procurement Procedures)” 중 253m의 “Design-build selection procedures”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에 관한 계약관련 사항은 Title 40의 “공공건물, 자산, 작업(Public Buildings, Properties, and Works)”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건축에 관한 계약은 조달과 같은 일반적인 계약과는 별도로 다루고 있다. 특히, Title 40의 Chapter 11은 “건축가와 엔지니어 선정(Selection of Architects and Engineers)”에 관한 별도의 규정으로서 일반적인 건축서비스에 관한 국가계약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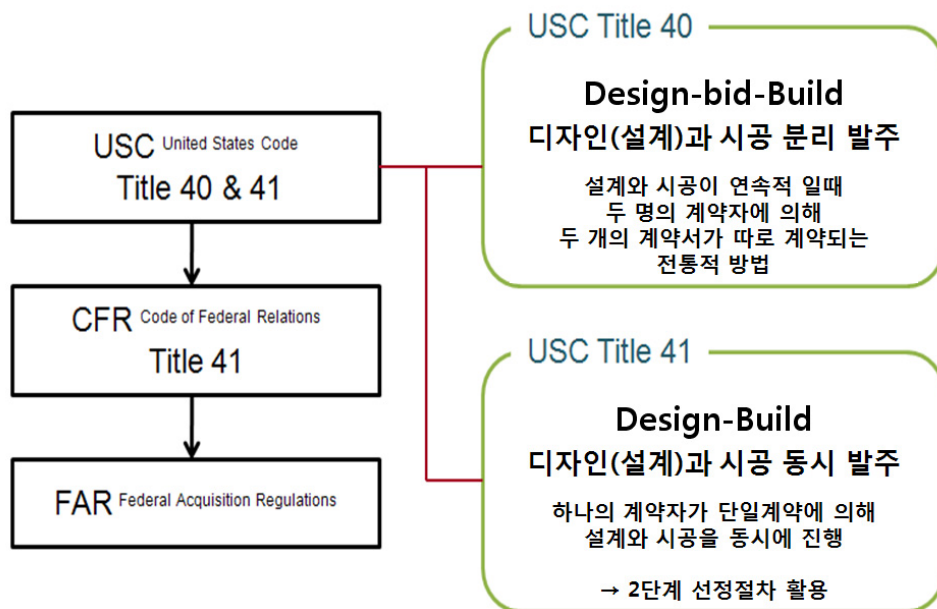
54) 원칙적으로 연방정부는 미국 연방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 이외에는 주정부에 간섭할 수 없다.

55) CFR Title 48, Chapter 1



[그림 4-2] 건축서비스 관련 연방계약법률

이처럼 미국의 연방법률인 USC Title 40과 Title 41은 건축서비스 관련 공공계약에 있어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자세한 사항들은 연방행정규칙(CFR)과 FAR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먼저, 국가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틀과 용어를 살펴보면, Title 40과 Title 41은 미국의 공공계약방식의 두 가지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즉, Title 40은 건축서비스 관련 계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으로서 디자인(설계)과 시공이 각각 독립된 계약으로 진행되는 ‘Design-bid-Build’ 방식을 위한 것이고, Title 41은 Title 40에 해당되지 않은 상황을 위해 2단계 선정절차를 통한 ‘Design-Build’ 방식을 위한 것이다.



[그림 4-3] 건축서비스 관련 연방계약법 체계

[표 4-3] FAR에 의한 주요 용어정의

Design	기능적 관계, 기술적 시스템(건축적, 환경적, 구조적, 전기적, 기계적, 방화 등), 기술적 시방서와 도면들, 견적서 등의 건설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한 것들을 포함
Design-bid-Build	디자인과 시공이 연속적이고 두 명의 계약자에 의해 두 개의 계약서가 따로 계약되는 전통적 방법
Design-Build	하나의 계약자와 단일 계약에 의해 디자인과 시공을 같이 진행하는 방법
Two-phase Design-Build selection procedures	제한된 제안자(일반적으로 5명 이하)가 1단계에서 선정되고 자세한 제안서는 2단계에서 제출하는 방식

□ 브룩 건축가-엔지니어 법(The Brook Architect-Engineers Act)에 의한 ‘자격조건기준선정’ 방식

국가계약법 중에서 건축서비스에 관련한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법률은 『**브룩 건축가-엔지니어 법(The Brook Architect-Engineers Act)**』로 이름 붙여진 USC Title 40, Chapter 11이다. 1972년에 제정된 이 법은 연방정부 또는 기관·부서와 디자인 계약을 위한 건축가 선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핵심적인 내용은 해당 프로젝트의 건축서비스를 위한 건축가 또는 설계사무소는 건축가의 경쟁력과 자질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서 협상에 의한 ‘**자격조건기준선정절차(Qualification-based Selection Process)**’에 의하여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건축서비스 관련 공공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방식이며, 중요한 것은 건축서비스를 위한 입찰과 건축가 선정에 있어 입찰가격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건축서비스 관련 공공계약의 기본 방향은 건축의 가치기준 중심의 정책기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브룩 건축가-엔지니어 법(The Brook Architect-Engineers 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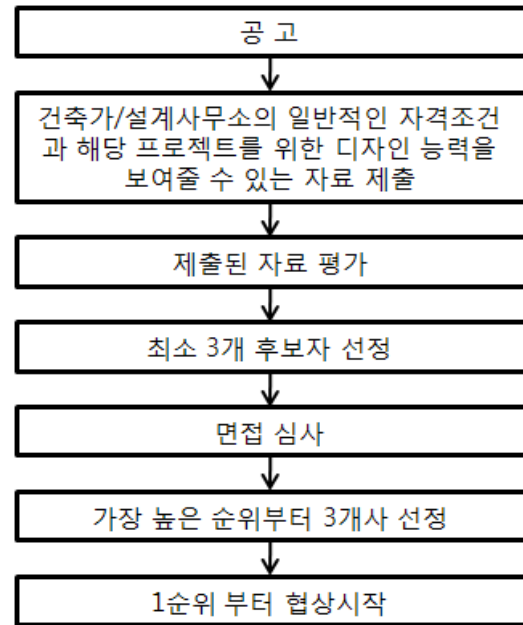
“건축가와 건축서비스에 관한 계약은 요구되는 전문적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검증되는(demonstrated) 경쟁력(competence)과 자격조건(qualification)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협상하여 결정한다”

USC Title 40, Subtitle I, Chapter 11. Selection of Architects and Engineers §1101. Policy

“The policy of the Federal Government is to publicly announce all requirements for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and to negotiate contracts for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on the basis of demonstrated competence and qualification for the type of professional services required and at fair and reasonable prices.”

[그림 4-4] 미국 건축서비스 관련 공공계약의 기본 원칙

처음 연방정부가 건축서비스 관련 공공계약법을 제정한 것은 1939년인데, 이전에는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이 직접 건축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1939년에 제정된 최초의 건축서비스 관련 계약법은 연방정부가 민간 건축가 또는 건축서비스업체와 계약하도록 명시하였고, 설계비를 총 공사비의 6%로 제한하게 된다. 이후 1967년에 이전 법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었고, 의회로 하여금 건축서비스업을 위한 공공계약에 있어 가격경쟁에 의한 방식이 적합한지가 논의되었고, 결국 건축서비스업의 특성상 가격경쟁에 의한 건축가의 선정과 계약은 결과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결론을 내리게 됨으로써 1972년 브룩 건축가-엔지니어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그림 4-5] ‘브룩 건축가-엔지니어 법(The Brook Architect-Engineers Act)’에 의한 선정절차

따라서 이 법에 따른 건축서비스 용역을 위한 건축가·설계사무소 선정절차 역시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가장 적합한 디자인 능력을 갖춘 회사를 찾는 것이 주된 목표라 할 수 있다. 건축가 또는 설계사무소의 선정은 공공의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범위와 선정일정을 파악하고 RFQ(Request for Qualification)과 함께 공모의 공고로서 시작된다. 이에 따라 관심 있는 설계회사들은 신청서류를 통해 지원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해당 설계회사의 매년 실적보고서(annual statement of qualifications and performance data)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디자인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⁵⁶⁾. 신청서가 접수되면, 평가를 거쳐 최소 3개 회사를 선정하게 된다. 이 때 더욱 자세한 선정기준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작성한 선정 기준에 따르게 된다. 그리고 선정된 업체를 바탕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와 평가자료를 수집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1순위부터 3순위까지를 선정하고 1순위부터 본

56) 이를 위해 미국 국방부가 건축가 및 엔지니어의 자격조건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Architect-Engineer Contract Administration Support System (ACASS)” 이 다른 연방기관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격적인 가격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가격산정에 있어 해당 사업의 범위, 복잡성, 전문적 성격, 예상되는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연방조달규정인 FAR은 일반적인 건축서비스용역의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4-4] FAR에 의한 일반적인 건축서비스용역의 선정 기준(FAR 36.602-1)

- 1) 요구되는 용역의 만족스러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 능력과 자격
- 2) 에너지절약, 환경오염방지, 폐기물 감축, 재활용재료의 사용 등을 포함하는 요구되는 용역을 위한 특별한 경험과 기술적 경쟁력
- 3) 요구된 시간 안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4) 비용조절, 작업의 질, 공정 등의 관점에서 국가기관과 민간부분에서의 과거 수행 실적
- 5) 해당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지역에 대한 지식과 일반적인 지리적 요건
- 6) 다른 적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적합성

□ 2단계 선정절차 방식

USC Title 41의 §253m⁵⁷⁾은 Design-Build 선정 방식에 의한 2단계 선정절차(two-phase selection procedures)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조달규정인 FAR⁵⁸⁾ 역시 The Brook Architect-Engineers Act에 의한 선정 및 계약방식이 아니라면, USC Title 41 §253m의 2단계선정절차에 따라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USC Title 41에서 해당 부서 또는 기관장이 2단계 선정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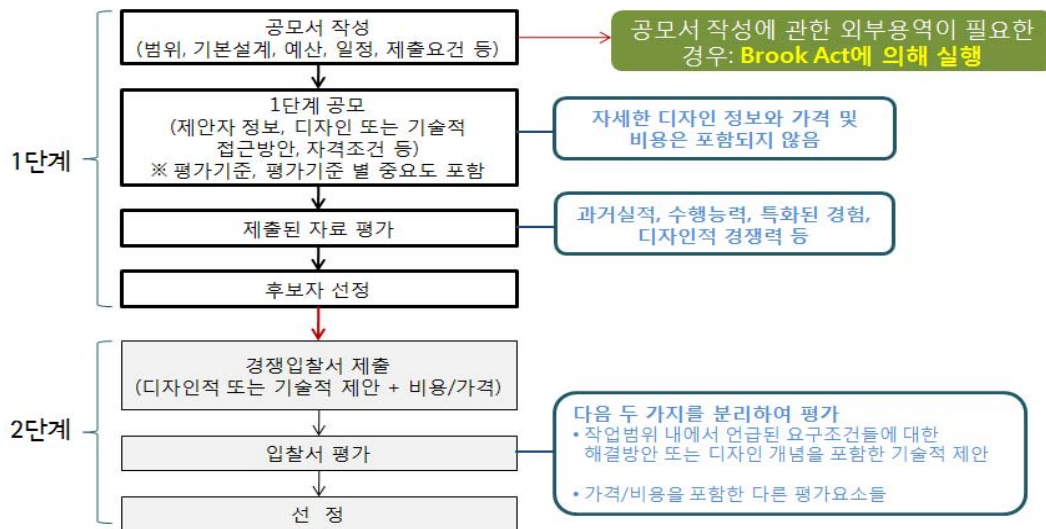
[표 4-5] USC Title 41에서 해당 부서 또는 기관장이 2단계 선정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1) 계약공무원이 세 개 이상의 제안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때
- 2) 설계작업이 제안자가 해당 계약을 위해 가격과 비용에 관한 제안을 발전시킬 수 있기 전에 실행되어야 할 때
- 3) 제안자가 해당 제안을 준비함에 있어 상당한 비용이 들 때
- 4)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같은 정보를 고려할 때
 - 가. 프로젝트 요구사항이 제대로 정의된 정도
 - 나.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시간제한
 - 다. 잠재적 계약자의 능력과 경험
 - 라. 2단계 선정절차를 위한 프로젝트의 적합성
 - 마. 2단계 선정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해당 주무기관의 능력
 - 바. 기타 해당 주무기관이 만든 기준들

57) Title 41 Public Contracts, Chapter 4, Procurement Procedures, Subchapter IV, Procurement Provisions, § 253m, Design-build selection procedures

58) CFR Title 48, Chapter 1, Subchapter F, Part 36: Construction and Architect-Engineer Contracts

2단계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먼저, 해당 기관이 제안자에게 프로젝트의 정의와 정부요구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요구사항들(범위, 기본설계, 예산, 일정, 제출요건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참여 예정인 제안자에게 제공하는 공모서에 작업내용의 범위를 작성한다. 이 때, 해당 기관이 작업내용의 범위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면, 브룩 건축가-엔지니어 법(The Brook Architect-Engineers Act)에 의하여 건축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자에 관한 정보, 디자인적 (또는 기술적) 접근 방안, 디자인 또는 기술 자격조건(qualification) 등이 포함된 1단계 제안서를 공모한다. 이 때, 자세한 디자인 정보와 가격 및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림 4-6] 2단계 선정절차

1단계 제안서를 평가할 때 사용된 평가기준은 공모서에 언급하여야 하고, 특히 제안팀의 과거실적, 수행능력, 특화된 경험과 디자인적 또는 기술적 경쟁력을 평가해야 하며, 비용 또는 가격관련 평가요소는 제외시킨다. 또한 각 공모서에는 1단계 제안서를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평가요소, 부평가요소 들에 할당된 중요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2단계에서 선정되는 입찰자 수를 최대 5팀까지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2단계 절차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하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모서에서 명시된 가장 자격조건이 되는(qualified) 수만큼의 제안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기술적 제안과 비용과 가격 정보가 포함된 2단계 경쟁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하게 요

청하여야 한다. 이 때, 2단계 공모서는 다음을 포함하고, 평가시 분리하여 평가하게 된다.

- 작업범위 내에서 언급된 요구조건들에 관한 제안된 해결방안 또는 디자인 개념을 포함한 제안서를 위한 기술적 제안
-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평가요소들(가격/비용 포함)

② 뉴욕주의 건축서비스 관련법

미국의 각 주정부들은 각자의 공공계약법과 건축사법 등을 운용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The Brook Architect-Engineers Act의 원칙은 뉴욕주를 비롯한 41개주들이 기본적인 건축서비스 관련 공공계약을 위해 채택하고 있다. 본 항에서는 뉴욕주를 대상으로 자세히 주정부 차원의 건축서비스 관련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뉴욕주의 건축서비스 관련법들은 『New York State Finance Law』에 의한 공공계약법, 『New York State Education Law』의 건축사면허 관련법, 그리고 『New York St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Law』와 『New York State Business Corporation Law』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서비스 관련 회사설립에 관한 법 등이 있다.

□ 공공계약법

기본적으로 뉴욕주에서는 연방정부와 같이 Design-Build 방식은 건축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뉴욕주의 건축서비스 관련 공공계약에 관한 기본 법은 뉴욕주의 재정법인 New York State Finance Law에서 명시하고 있고, 기본방향은 The Brook Architect-Engineers Act의 원칙인 ‘자격조건기준선정절차(Qualification-based Selection Process)’를 따르고 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New York State Finance Law의 Chapter 56, Article IX “계약(Contracts)” 부분에서 §136-a의 “건축, 엔지니어링, 조사서비스(Contracts for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surveying services)”를 통해 “...건축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위한 능력과 자질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협상하는 것이 뉴욕주의 기본 정책이다⁵⁹⁾”라고 명시하여, 건축서비스는 최저가 낙찰을 기

59) 원문내용 : It is the policy of New York state to negotiate contracts for architectural and/or engineering services and/or surveying services on the basis of demonstrated competence and qualification for the type of professional services required and at fair and reasonable fees

본으로 하는 다른 조달 또는 용역계약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가 또는 설계 사무소 선정과 가격 협상에 있어, 해당 설계비는 해당 프로젝트의 비용, 범위, 난이도, 성격 등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계비 산정시 직접노무비와 간접 비용, 그리고 협상에 의해 조정되는 이윤 등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일반적인 시공사 선정을 위한 가격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Design-Build 방식과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뉴욕주 법원 역시 건축서비스처럼 “특별한 기술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을 요구하는 서비스를 위한 공공계약은 가격경쟁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⁶⁰⁾

□ 건축사 면허 관련법

뉴욕주는 New York State Education Law의 §7302에서 건축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건축사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의 건축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뉴욕주에서 실무가 금지된다. 그러나 허가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임시로 허용될 수는 있다⁶¹⁾. 또한 건축사자격이 없다 해도 건축사 이외 사람에 의한 기본 및 디테일 도면작업, 건축사의 지시와 감독에 따른 직원에 의한 작업, 시공 또는 구조변경 작업 등을 감독하는 하청업자, 그리고 시공관리와 시공계약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자 등은 건축 관련 실무를 담당할 수 있다⁶²⁾.

뉴욕주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⁶³⁾.

[표 4-6] 뉴욕주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

- 뉴욕주 교육국(Department of Education)에 신청서 접수
- 교육위원회(Commissioner of Education)의 규정에 따른 건축학사 또는 상위과정을 포함한 건축교육
- 적정한 건축서비스 관련 실무와 경험이 총 대학교육과 경험을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충분한 경험
- 규정에 따른 건축사 시험
- 만 21세 이상
- 도덕성
- 수수료

60) Fawcett v. City of Buffalo, 275 A.D.2d 954 (4th Dep't 2000)

61) New York State Education Law의 § 7306(1)(d)

62) New York State Education Law의 § 7306(1)

63) New York State Education Law의 § 7304

[표 4-7] 뉴욕주 법에 의한 건축서비스의 정의(New York State Education Law의 § 7304)

The practice of the profession of architecture is defined as rendering or offering to render services which require the application of the art, science, and aesthetics of design and construction of buildings, groups of buildings, including their components and appurtenances and the spaces around them wherein the safeguarding of life, health, property, and public welfare is concerned. Such servic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consultation, evaluation, planning, the provision of preliminary studies, designs, construction documents, construction management, and the administ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s.

□ 건축서비스업 관련법

건축사는 joint enterprise, partnership, 또는 전문서비스회사 등의 형태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고⁶⁴⁾,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도 허용된다⁶⁵⁾. 이러한, 건축서비스업을 위한 회사 또는 사무소는 해당 서비스를 규정하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설립될 수 있으며⁶⁶⁾, 임원진 이상은 반드시 건축사이어야 한다⁶⁷⁾. 일반적으로, 이러한 회사나 사무소는 건축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⁶⁸⁾, 유한회사의 형태일 경우에는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다른 사업도 병행할 수 있다⁶⁹⁾.

건축서비스 전문회사 또는 사무소가 아닌 일반적인 회사가 건축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 같은 예외적인 경우는 우선 해당 회사가 1929년 4월 12일 이전부터 건축서비스업을 시작했어야 하며, 건축서비스업 관련 부서의 장은 반드시 건축사이어야 하고, 건축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즉 건축설계, 도면작업, 시방서 작성 등은 반드시 건축사에 의해 감독되고 최종적으로 해당 건축사의 서명이 요구된다⁷⁰⁾.

64) New York State Educational Law의 § 7307(4)

65) New York St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Law § 1201

66) New York State Business Corporation Law § 1504(a)

67) New York State Business Corporation Law § 1508

68) New York State Business Corporation Law § 1506

69) New York St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Law § 1206

70) New York State Education Law § 7303(4)

③ 뉴욕시의 공공계약법 : 경쟁입찰 방식

연방정부 뿐 아니라 뉴욕주 정부도 Brook Act에 의한 자격조건기준선정방식(QBS)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건축서비스 관련 건축가 선정과 계약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주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뉴욕시이다. 뉴욕시 역시 Brook Act의 원칙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아직 찬반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뉴욕시의 건축서비스 관련 공공계약법은 Brook Act가 아닌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쟁입찰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뉴욕시의 건축서비스를 포함한 일반적 조달과 계약은 뉴욕시 최상위법인 New York City Charter의 Chapter 13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조달과 계약은 경쟁에 의한 최저가낙찰방식(Competitive sealed bidding)이 활용되고 있지만, 건축서비스에 관한 건축가 선정과 계약은 일반적 최저가 낙찰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뉴욕시의 건축서비스를 위한 건축가 또는 설계사무소 선정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시기관 또는 부서가 해당 프로젝트의 작업범위와 선정에 있어 선정기준 등의 내용과 함께 RFP(Request for Proposal) 공모를 위한 공고에 의해 시작된다. RFP에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디자인적, 기술적 제안과 함께 설계비가 포함된다.

그러나 RFP를 심사함에 있어 가격은 가장 마지막에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은 제안자의 경험, 능력, 디자인 접근방식 등 Brook Act에 의해 자격조건기준선정방식(QBS)에서 평가하는 기준과 유사하다. 평가는 최소 3명이상의 건축 또는 기술 전문공무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몇 개 안을 대상으로 제안한 설계비를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1차로 평가한 내용과 제안된 설계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 역시 Brook Act에서처럼 가격을 완전하게 평가조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제안자의 능력과 자격조건을 평가하고 나중에 가격을 포함하여 평가함에 따라 일반적인 최저가 낙찰방식과는 차별된다고 볼 수 있다.

4)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특성

①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

2002년을 기점으로 심각한 침체를 겪은 건축서비스산업은 그 이후 국가 차원의 경제회복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듯 했으나, 2008년 세계 실물경제의 위기상황과 맞물리면서 침체위기를 맞이하였고, 현재(2010년) 국가 차원의 경제적 침체 상황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수요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과 부동산 시장에서의 침체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건축서비스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현황

2010년 기준으로 미국의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약 69,000개, 종사자수는 약 238,614명으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매출액의 경우에도 2009년 최고의 하락률을 보였으며 2010년에 이르기까지 하락률이 지속되고 있다.

[표 4-8] 미국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구분	연 도					연도별 변화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사업체(개)	73,692	74,044	74,035	70,003	69,164	0.5	0.0	-5.4	-1.2
매출액 (백만\$)	40,822	44,951	45,420	41,178	39,522	10.1	1.0	-9.3	-4.0
종사자(인)	250,014	255,920	259,683	242,910	238,614	2.4	1.5	-6.5	-1.8

(출처 : Kevin Culbert(2010.4), 「IBISWorld Industry Report 54131 Architectural Services in the US」, p.31 재정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구성은 주로 개인소유자 또는 그들의 파트너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사무소들로 이루어진다. 건축서비스산업의 2/3이상이 1인, 혹은 2~4인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단독기업들이며 이들은 연간 총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 기반 시장에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건축서비스산업의 비교적 낮은 집중도는 이 시장에서 어떤 기업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업계 매출 상위 4위까지

의 사업체들이 매출 총액의 4~5%만을 차지하고, 상위 50개사는 매출 총액의 16%를 차지한다고 예상된바 있듯이⁷¹⁾ 건축서비스산업의 이러한 소규모 및 세분화 구조는 아래 표와 같이 미국 센서스국의 연간 카운티비즈니스패턴(CBP)통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 4-9] 직원수에 따른 단독기업체 설립 현황

직원수(명)	사업체 수	성장률(%)
1~4	13,985	61.1
5~9	4457	19.5
10~19	2523	11
20~49	1353	5.9
50~99	367	1.6
100명 이상	204	0.9
총 계	25,331	100

(출처 : US Census Bureau County Business Patter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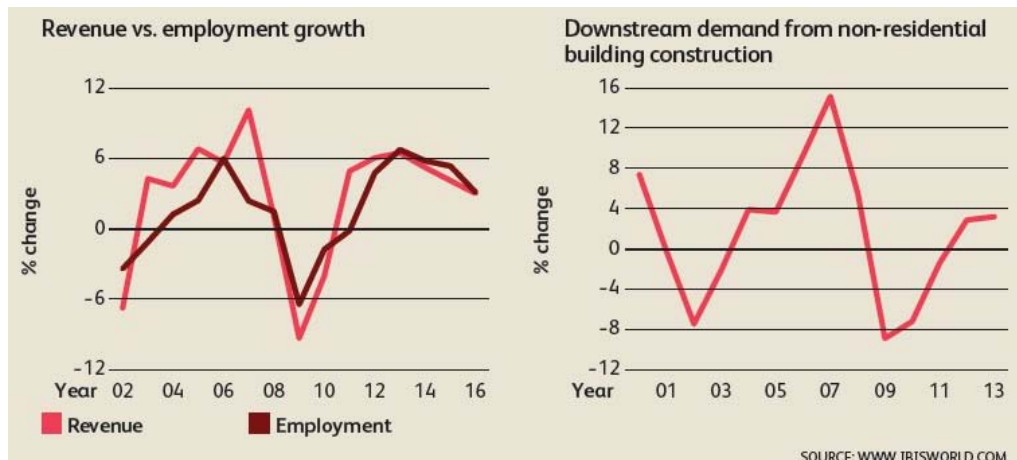
향후 5년간, 건축서비스산업에서의 시장점유 집중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업계 선두기업들의 지역적인 확장과 사업의 다양화 전략에 따라 점차 많은 고객들이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큰 규모의 회사들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건축서비스산업의 실적 현황

건축서비스산업의 매출은 1/3정도가 현존하는 건축물의 재정비 및 개보수 업무에서 발생하며, 나머지 2/3가 신규건설프로젝트에서 창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서비스산업은 전반적인 경제상황, 이자율, 기업 및 소비자의 동향 등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매출의 약 50%는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통시설 등을 포함하는 공공재 건설부분에서 창출되고, 이러한 기공공재 건설부분은 정부 기금 의존도가 절대적이므로 공공기관의 예산 및 수익 동향에 민감하고 결과적으로 전반적 경제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2008년에 이르기까지 5년간 경제적 부흥기에서는 건축서비스

71) IBISWorld industry report 54131 Architectural Services in the US, 2010, 4, p.19.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주거부문(업무, 상업, 산업)의 수요 및 생산이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던 반면, 2008년 이후 비주거부문의 건설 수요 하락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전체 매출의 침체,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 거시경제 상황과 같은 모양을 보이는 매출 및 고용 비율

※ IBISWorld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서비스산업은 향후 5년간 연간 3.7%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비주거용 건축 시장에 따라 향후 5년간 연간 약 5.3%정도의 매출 신장이 예상됨

(출처 : Kevin Culbert(2010.4), 「IBISWorld_Architectural Services in the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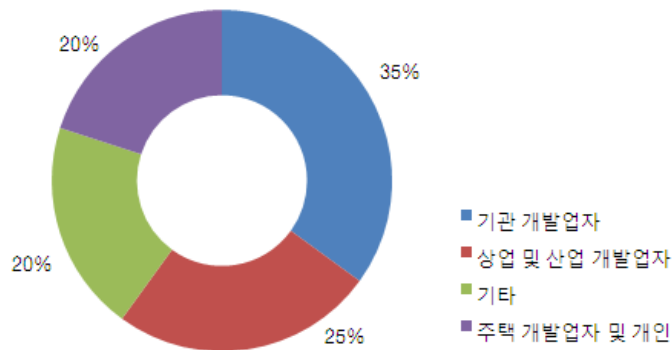
2008년까지 약 5년 이상 연간 3.3%, 4.4%에 이르는 성장세를 나타낸 상업 및 업무용 건물 건설 실적에 따라 2007년에는 10.1%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기관용 건물 건설은 6.2% 증가, 산업용 건물 건설은 10.1% 증가 등 성장세에 보탬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세는 세계 경기 하락 이전에 시작되었던 장기 프로젝트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실행이 지연되기 시작한 2008년에 이르러 하락하게 되었다. 2009년 이후, 비주거용 건물 수요는 상당 수준 악화되었고, 이와 동시에 주거용 건물(주택부문) 건설 시장의 위축으로 인하여 2009년까지 5년간 주택 건설 수요는 매년 19%씩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위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매출을 연평균 약 0.4% 하락한 395억만 달러 정도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서비스산업의 수요 및 시장 현황

건축서비스 시장은 크게 기관, 상업 및 산업, 주거, 기타 등 4부문으로 구분되고, 건축서비스산업은 주로 비주거 부문의 서비스 의뢰를 통해 그 수익을 실현한다. 기관 개

발업자들은 전체 건축서비스 시장의 약 35%의 매출을 담당한다. 기관부문의 수요 중 가장 큰 시설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시설로 전체 서비스시장의 20%에 해당하고, 보건 및 의료 시설이 그 뒤를 이어 10%를 차지한다. 상업 및 산업부문 비율은 연간 매출의 약 25%로 12%는 업무용 오피스빌딩, 6~7%는 쇼핑센터를 포함한 유통시설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체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의 약 20%를 기록하는 주거부문의 경우, 9.5%를 차지하는 다가구(공동주택), 11.0%의 단독주택이 이를 구성하고 있다. 그 외에 보존 및 복원, 인테리어 디자인, 엔지니어링 및 도시설계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기타시장이 전체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서비스산업의 가장 큰 고객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 총 매출의 약 26%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기업 등 민간부문이 24%, 비영리기관들이 16%, 건설회사 및 부동산 개발업자 14% , 민간인 11%, 연방정부 5%, 기타 엔지니어 및 설계 전문가들 3%로 공공 부문 발주가 서비스 수요⁷²⁾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8] 매출 총액에 대한 주요 시장 분류(2010)

(출처 : Kevin Culbert(2010,4), 「IBISWorld industry report 54131 Architectural Services in the US」,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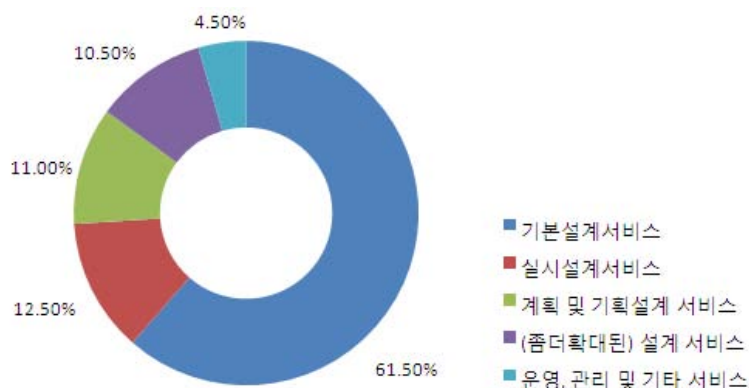
□ 건축서비스산업의 생산관련 현황

건축서비스산업의 주 매출원은 공공기관상업 부문의 건축물에 대한 사전 기획, 컨설팅, 설계활동 등에 관련된 전문서비스 수수료에서 비롯된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사업체들은 측량, 건축허가 및 신청 관련업무, 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하는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서비스업체들과 외주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서비스의 경우, 건

72) AIA의 회원사 조사 결과(2003).

설 및 부동산개발 회사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설계’ 서비스로서, AIA에서 조사한 회원사 매출 총액 비율을 살펴보면, 61.5%이상이 기본설계(basic design)서비스에서 비롯되었으며, 매출의 12.5%는 실시설계과정에서, 11%는 기획 및 사전설계(planning&pre-design)서비스에서, 10.5%는 확장된 기본설계에서, 4.5%는 운영 및 유지보수, 기타 서비스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시간집약적 특성을 지니는 실시설계에 비해, 계획 및 사전설계(planning & pre-design) 및 전방위에 걸쳐 확대된 설계 서비스 부문의 수익성이 높은 편이다.



[그림 4-9] 매출 총액에 대한 서비스 분류(2010)

(출처 : Kevin Culbert(2010.4), 「IBISWorld industry report 54131 Architectural Services in the US」, p.13)

□ 건축서비스산업의 비용 구조(생산관련 현황)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디자인 및 설계 기술을 지닌 숙련된 전문가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원가구조상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총 인건비는 2010년 건축서비스산업 연간 총매출의 약 36.9%를 차지하는 직원 임금과 16%를 차지하는 협력업체의 용역인건비를 포함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연간 총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전문서비스 산업군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IBISWorld는 건축서비스 산업에서 임금과 감가상각이 각각 전체 매출의 36.9% 와 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곧 설비 및 기술의 사용 및 교체에 1달러를 사용할 때 임금에는 12.3달러가 소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화된 작업에 대한 외주서비스는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의 경우에 특수 건축, 시공건설 서비스 회사들과의 전략적 제휴 관계를 통해 업무부하를 조정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요구되어지며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건축서비스 산업에서 비(非)인건비성 비용은 소비재의 구입 및 비즈니스 서비스(전체 매출의 18%를 차지함)이며, 이는 컴퓨터 및 사무용 장비의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서비스, 휴대폰, 인터넷, 각종 유선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통신 및 운송서비스, 일반적 관리비, 사무용품, 각종 보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에서 최근 실행자책임보험(Practice-based Liability Insurance)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건축서비스산업은 프로젝트 수요 감소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사업 수익은 현 상황이 시작된 2006년 매출 대비 11.9%에서 약 8.2%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익성은 프로젝트별로, 회사의 규모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대체로 규모가 큰 프로젝트일수록 높은 수익을 보인다. 대규모 사업체들은 시장의 수익성이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임금 등 각종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수익성이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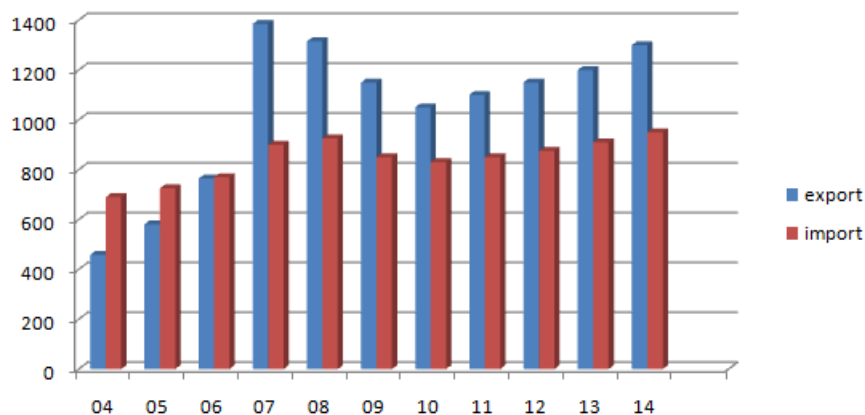
□ 해외경쟁력 관련 현황

건축서비스산업에서는 제한적인 국제 거래만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규모 건축서비스회사들만이 프로젝트 규모가 크거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외 프로젝트에 한해 참여하고 있으며, 역으로 자격조건의 제한 및 치열한 경쟁으로 외국 국적의 대형 회사만이 미국 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까다로운 조건의 국제 등록 절차, 주정부 차원에서의 허가 및 등록 요건, 해당 지역 건축 관련법규에 대한 지식 요구 등은 건축서비스산업 자체를 국제 시장이 아닌 지역 시장 기반으로 국한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로 인하여 미국과 캐나다 건축가들은 양국에서 자유로운 건축서비스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멕시코 등지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AEDAS Architects Group, Forster & Partners Limited 등 유럽의 여러 대형 건축회사들은 미국 내 지사, 미국 현지 전문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국 내 주요 프로젝트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해외 회사들의 미국 건축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은 주로 작업의 적절한 분배, 노동원가 절감, 프로젝트 생산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해외 전문가들에게 외주 용역을 맡기는 데에서 기인하여 성장해왔다. 미국건축가협회(AIA) 회원사의 2004년 5월 조사에 의하면 국내 회사의 11%가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해외에 외주 용역을 실시했으며, 특히 연간 매출액이 5백만 달러 이상인 대형 건축회사의 경우 그 18%가 해외에 외주 용역을 맡겼으며 그 외 27%가 해외외주용역을 주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 회사들의 미국 건축서비스 시장 진입 규모는 현재 8억 5천만 달러로 국내 수요의 약 2.2%에 이르고 있으며, 2009년까지 지난 5년간 연간 4.3%씩 성장하여왔다. 반대로 Gensler와 HOK Inc. 등을 그 필두로 한 국내 회사들의 해외 진출 규모는 지난 5년간 연간 20%씩 급등하여 2009년에는 11억 5천만 달러(\$1,150m), 건축서비스산업 연간 매출의 2.8%에 달했다. 미국의 연간서비스산업통계에 따르면 미국 건축서비스 회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규모는 2005년에 5억 2천7백만 달러(\$527m), 건축서비스산업 수익의 1.4%에서 급등하여 2008년에는 17억 8천 5백만 달러(\$1,785m)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는 유럽대륙, 영국, 일본 등 여러 주요 시장의 불황 여파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4-10]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진입 현황(2010)

(출처 : Kevin Culbert(2010.4), 「IBISWorld industry report 54131 Architectural Services in the US」, p.31 재정리)

□ 미국의 취업자 수 및 증가율

미국의 경우를 보면, 지식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및 증가율은 타 산업과 유사하나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이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산업분야 중 1.6%로 가장 높은 추이를 보인다.

그리고 지식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05년에 174만 명에 달하였는데, 건축서비스 관련 분야가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1만 명)이 사업서비스업 중 4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의 사업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은 취업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10] 미국의 취업자 수 및 증가율 추이(천명,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가율
전산업	13,635 (2.4)	13,913 (2.0)	13,903 (-0.1)	13,793 (-0.8)	13,761 (-0.2)	13,709 (1.1)	14,122 (1.5)	0.8
제조업	1,726 (-1.3)	1,746 (1.1)	1,653 (-5.3)	1,535 (-7.1)	1,460 (-4.9)	1,440 (-1.4)	1,433 (-0.5)	-2.8
서비스업	8,713 (3.1)	8,898 (2.1)	8,928 (0.3)	8,914 (-0.2)	8,943 (0.3)	9,082 (1.6)	9,260 (2.0)	1.3
지식서비스업	1,740 (5.3)	1,740 (0.0)	1,682 (-3.3)	1,642 (-2.4)	1,631 (-0.7)	1,674 (2.7)	1,738 (3.8)	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분야 포함)	709 (5.5)	752 (6.0)	732 (-2.6)	710 (-2.9)	709 (-0.2)	722 (1.9)	750 (3.8)	1.6
지주회사	175 (2.0)	180 (3.0)	171 (-4.8)	169 (-1.7)	169 (0.1)	170 (1.1)	175 (2.6)	0.3
사업지원 서비스업	856 (5.9)	808 (-5.6)	779 (-3.6)	763 (-2.0)	753 (-1.3)	782 (3.8)	814 (4.1)	0.1

※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미국 B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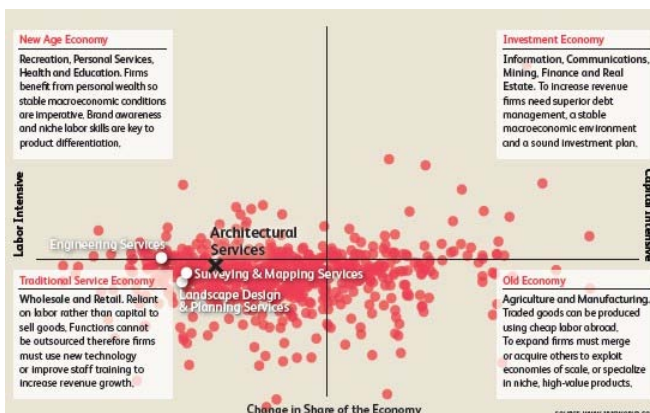
②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성

□ 산업적 측면에서의 노력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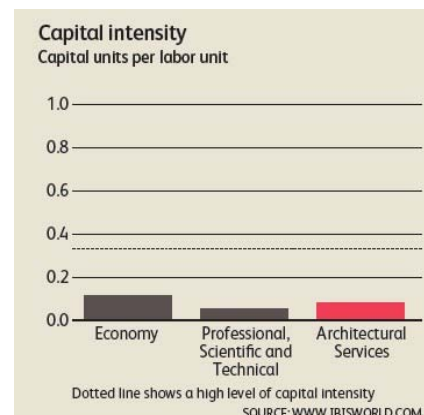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건축서비스산업이 “건설업”과 구분되어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은 건축서비스산업이 자체적으로 산업적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에 기인하여 민간조직인 미국 건축가협회(AIA) 차원의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산업의 발전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닐 수 없다.

□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축 ‘서비스’ 산업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식기반 산업으로 특화된 전문 기술과 고객을 만족시킬만한 설계와 계획 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주 매출원은 건축 프로세스 상에서 사전 기획 및 설계, 개별 프로젝트 진행상에서의 자문, 기본적 설계 작업 등에 관련된 전문 서비스 수수료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건축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도가 높다. CAD(computer aided design)프로그램과 그 외 컴퓨터 주변기기 사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기반으로하는 고급 노동력이 산업의 필수요소이다. ‘전문서비스산업군’에 속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신경제산업, 전통적서비스산업에 속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은 노동력에 대한 투자 및 차별화를 산업성장력의 제일 큰 요소로 여긴다.



[그림 4-11] 노동집약적 특징을 지닌 건축서비스산업



[그림 4-12] 자본집약도

(출처 : Kevin Culbert(2010.4), 「IBISWorld industry report 54131 Architectural Services in the US」, p.27)

New Age Economy(신경제산업)_여가, 개인서비스, 의료, 교육 등

기업의 이익은 개인의 부로부터 창출되기 때문에 안정적 거시경제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브랜드인지도와 틈새 노동 기술력이 차별화의 가장 큰 변수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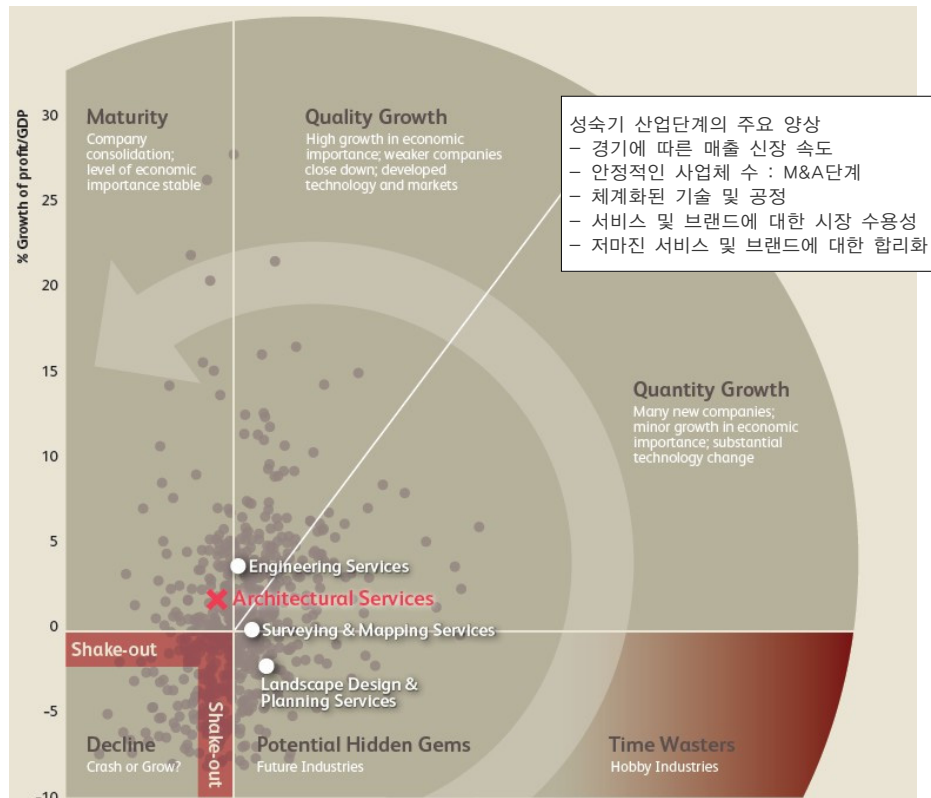
Traditonal Service Economy (전통적 서비스 경제)_도매업과 소매업

상품판매는 자본보다는 노동과 직결된다. 노동기능의 외부의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증대는 신기술과 직원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수명주기상 성숙기 단계

미국의 건축서비스산업은 산업의 수명주기상 성숙기 단계에 있다. 건축서비스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수요는 하위 시장인 비주거용 건축물 건설 시장의 투자동향으로부터 비롯되고,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수요는 경제 활동, 인구, 산업개발 등 거시적 성장에서 비롯된다. 결과적으로 건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거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점에서 성숙기 단계의 주요 양상을 나타낸다.

최근 건축서비스산업은 ‘원스탑 풀서비스’를 지향하는 건설회사들(종합설계 및 건설 회사들)과의 상당한 수준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사전설계에서부터 턴키베이스까지, 더욱이 프로젝트 금융 및 시공 후 운영에 이르는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두루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가들간의 경쟁은 그들이 제공하는 디자인 솔루션의 창의성과 실현가능성에 달려있다. 뚜렷한 가격 경쟁이 존재하는 한편, 고객에게 프로젝트의 계획부터 설계, 시공건설, 외장까지를 모두 커버하는 종합 디자인 및 건설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턴키베이스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는 곧 건축가와 다른 분야의 건축, 건설 업자들간 전략적 제휴 및 외주계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산업간 경쟁의 심화 및 취약한 운영 환경은 지난 5년간 산업 내 합병 및 정리를 야기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회사의 수는 약 1.1% 감소하여 2010년에는 69,164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숙기 단계의 두 번째 양상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고객들이 종합건설솔루션을 추구하기 시작함에 따라 건축서비스업계의 경쟁상황도 변화하고 있다. 많은 회사들이 건축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 건축서비스회사에 접근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림 4-13] 건축서비스산업의 수명주기

(출처 : Kevin Culbert(2010,4), 『IBISWorld industry report 54131 Architectural Services in the US』, p.10)

□ 주정부차원의 엄격한 규제 및 정책, 민간중심의 산업적 지원책 실행

건축가와 건축 관련 사업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의 통제력과 영향력이 미약한 대신, 건축서비스산업은 각 주별 법규를 적용하며,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정책적 영향을 받는다. 동시에 미국건축가협회(AIA)는 과반수 이상의 건축가들을 그 회원으로 하고 건축과 건설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안에 관여하여 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준이 되는 건축 및 건설 계약 서식을 출간하고 건축가들을 위한 멘토링과 자문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간 차원의 산업적 지원책을 실행해오고 있다.

□ 건축서비스산업 내 대규모 사업체 중심의 글로벌화 진행

건축서비스 산업은 국가별로 전문 건축가의 자격요건이 상이하고, 주단위로 자격이 등록되며, 국가별 건축법규의 표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내시장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건축서비스 및 건설회사 상위 300 리스트에 따르면, 상위 5개의 건축전

문회사는 각각 그들의 2009년 매출의 20% 이상을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창출하였다.

대표적으로 M.Arthur Gensler Jr. &Associates Inc.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그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해외 약 25개 도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Callison Architecture Inc.는 그 본사를 시애틀에 두고 일본과 중국에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건축, 인테리어디자인, 도시계획 및 설계, 컨설팅, 그래픽서비스 등 전방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미래 전망

□ 부가가치를 극대화한 전방위 건축서비스 제공 필요

기획 및 사전 설계, 기본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큰 규모의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에너지 효율, 친환경빌딩에 대한 수요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는 설계서비스 자체 비용의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이미 지 증진, 향후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래 건축서비스산업은 디자인 솔루션의 창의성과 실현가능성,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통해 건축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통해 경쟁적 시장에서의 선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LEED Green Building Rating System(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친환경에너지우수설계-친환경빌딩 등급시스템)인증 수요가 증가하였고 그 실례로 HOK그룹(미국의 주요 건축디자인회사)은 연간 매출의 26%를 이러한 친환경 건축디자인 프로젝트로부터 창출한 예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예견하는 것이다.

□ 세계 경제회복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 예상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거치며 침체되어있던 세계 경제의 회복과 함께 주택, 오피스 빌딩 등 건축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향후 5년간 상업용 및 산업용 빌딩 건설 물량의 증가, 특히 주택건설 시장 역시 향후 5년간 연평균 11.7%의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는 건축서비스산업 전체 매출 신장에 견고한 디딤돌이 될 예정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은 향후 5년간 연간 약 5.3%정도의 매출 신장을 통해 2015년 513억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견고한 수요에 대응하는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일본의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및 관련 법

1) 일본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체계

① 일본의 법률 체계 속에서의 건축 관련법

일본의 법률체계는 크게 헌법과 법령통칙을 제외하고 행정법, 판례법, 민사법, 형사법, 사회법, 산업법, 환경법 등 약 11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다. 건축은 일본의 전체 법체계 속에서 『산업법』 내에 포함되어 있다. 산업법(7)의 통칙(7.1)은 건축 관련법의 상위개념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중에서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기술사법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축 관련법 중에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건축기준법』, 『건설업법』, 『건축사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법체계속에서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인식정도와 그 범위와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② 산업법 내 건축관련법(7.1 통칙 내)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은⁷³⁾ 사적 독점, 부당한 거래 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 방법을 금지해 사업 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결합, 협정 등의 방법에 따르는 생산, 판매, 가격, 기술 등의 부당한 제한, 그 외 모두의 사업 활동의 부당한 구속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총칙 제1조)으로 하는 일본의 법률이다.

이 법은 사적 독점 및 부당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사적 독점에 대해서 배치조치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부당한 거래제한은 전형적으로는 담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또한 배치조치 및 과징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 하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사업자 단체규제 및 결합, 양도 등의 규제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사업단체에 있어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제하고 있고, 사업 지배력의 과도집중을 규제하고 독점적 상태를 규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또한 배치조치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73) 쇼와 22년(1947년) 4월 14일 법률 제 54호, 최종 개정 : 헤세이 21년(2009년) 6월 10일 법률 제51호

[표 4-11] 일본의 법률체계

1.헌법·법령통칙		·일본국헌법 ·일본국헌법의 개정 수속에 관한 법률 ·황실전범 등 약 33개
2.행정법	2.1 행정조직	·내각법, 국가공무원법, 국가행정조직법
	2.2 지방자치	·독립 행정법인 통칙법, 내각부설치법 등 약 9개
	2.3 행정수속·구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약 6개
	2.4 재정·조세	·행정수속법, 행정대실행법, 행정불복 심사법 등 약 9개
	2.5 경찰·방위	·재정법, 회계법, 물품관리법
	2.6 국토개발·도시계획	·국유재산법, 회계조사원법, 지방재정법 등 약 20개
	2.7 교육·문화	·경찰법, 경찰관직무실행법, 화약류취체법
	2.8 기타	·파괴활동방지법, 해상보안청법, 방재법 등 약 23개
3.재판법		·국토조사법, 토지기준법, 토지수용법 등 약 13개 ·교육기본법,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17개 ·행정서사법
4.민사법	4.1 민법	·재판소법, 재판 신속화에 관한 법률
	4.2 상법	·최고재판소 재판관국민심사법, 재판관분한법 등 약 15개
	4.3 민사수속	·민법, 전자서명 및 인증 업무에 관한 법률
	4.4 기타	·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약 36개
5.형사법	5.1 형법	·상법, 유한회사법, 상업등기법 등 약 12개
	5.2 형사수속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등 약 14개
	5.3 교정보호(矯正保護)	·토지가족조사법, 공인회계사법
6.사회법	6.1 노동법	·형법,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폭발물 단속법칙 등 약 22개
	6.2 복지·위생	·형사소송법, 교통사건 즉결 재판수속법 등 약 8개
	6.3 소비자 보호	·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등 약 8개
7.산업법	7.1 통칙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취직안정법 등 약 12개
	7.2 농림수산업	·사회복지법, 생활보호법, 유아복지법
	7.3 공업	·장애자기본법, 신체장애자복지법 등 약 60개
	7.4 금융·보건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계약법, 할부판매법 등 5개
	7.5 건축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부당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 ·중소기업 등 협동 조합법 ·기술사법 ·계량법 ·물가통제법 ·국가 총동원법
	7.6 운수	·농업기본법, 농약취체법, 가축개량증식법 등 약 13개
	7.7 전기통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약 24개
		·금융상품거래법, 자금업법, 보험업법 등 약 8개
8.지적재산권		·건축기준법 ·건설업법 ·건축사법 ·택지건물거래업법 ·주택의 품질확보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 ·맨션의 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 장애장등의 이동등의 원활화의 추진에 관한 법률 등 9개
9.환경법		·제도법, 육상교통사업 조정법, 철도사업법 등 약 28개
10.외사(外事)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전파법 등 약 7개
11.관광		·특허법, 운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 약 11개
12.기타		·환경기본법, 약취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탁방지법, 토양오염대책법, 소음규제법 등 약 35개 ·중고차수출규제법, 관세정률법 등 약 8개 ·관광건국추진기본법 등 약 3개 ·훗카이도 구토인 보호법 등 약 2개

출처 : 日本ウィキペディアフリー百科事典

□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은 「중소 규모의 상업, 공업, 광업, 운송업, 서비스업 그 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 근로자 그 외의 사람이 상호부조의 정신에 따라 협동하고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에 대해 정하여 이러한 사람의 공정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보하고 그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일본의 법률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으로서의 6종류를 정해 그것을 통괄하는 조직으로서 중소기업 단체 중앙회에 대해 정하고 있다(총칙 제1조). 본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은 협동조합의 자격 및 업무, 관리 및 해산 등에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7조에서는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성을 명시하고 있다.

[표 4-12]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중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다음의 조합은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쇼와 22년 법률 제54호.이하 「사적 독점 금지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법 제 22조 제 1호의 요건을 갖추는 조합으로 간주한다.

1. 사업협동조합, 화재공제 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에 있어, 그 조합원인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쪽인가에 해당하는 자
 - ㄱ.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3억엔(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0만엔,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엔)을 넘지 않는 법인인 사업자
 - 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명(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50명,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명)을 넘지 않는 사업자
 - ㄷ. 사업협동 소조합
 - ㄹ. 앞의 2호에 해당하는 조합을 가지고 조직 하는 협동조합 연합회
2. 사업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연줄, 전항 제 1호A. 또는 B.에 드는 사람 이외의 사업자를 조합원에게 포함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조합이 사적 독점 금지법 제 22조 제 1호의 요건을 갖추는 조합에 해당할지의 판단은, 공정 거래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3. 전항에 해당하는 는 조합은, 제1항 제1호 ㄱ. 또는 ㄴ.에 드는 사람 이외의 사업자가 조합에 가입한 날 또는 사업자인 조합원이 동호 ㄱ. 또는 ㄴ.에 해당하는 자로 끝나고 부터 1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정 거래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기술사법

이 법률은 기술자 등의 자격을 정해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은 크게 총칙을 바탕으로 기술사 시험, 기술사 등의 자격에 관한 특례, 기술자 등의 등록, 기술사 등의 업무, 일본기술사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률은 제1조 총칙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의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서비스산업과의 관계성은 약하다고 판단된다.

③ 건축 관련법(7.5 건축 내)

□ 건축기준법

『건축기준법』⁷⁴⁾은 국민의 생명·건강·재산의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부지·설비·구조·용도에 대해 그 최저 기준을 정한 법률로서 예전에는 『시가지 건축물법』⁷⁵⁾이었다. 이 법은 건축법규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 건축기준법 시행령·건축기준법 시행규칙·건축기준법 관계고시가 정해져 있어 건축물을 건설할 때나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건축기준법이 일본국민의 생명·건강·재산 보호의 최저 기준을 지시할 방침을 내걸고 있는데 비해, 건축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건축기준법의 규정을 받고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정책을 정하고 있으며, 건축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건축기준법과 건축기준법시행령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설계도서나 사무 서식을 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기준법 관계고시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공시되어 복수 분야의 기술 혁신에 의해 날마다 변화해 나가는 것에 따라가기 위해서 건축기준법·건축기준법 시행령·건축기준법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건축물을 기획·설계하고 건설하여 실제로 이용자가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법 외에 건축물내의 소방활동과 관련되는 『소방법』, 건축물이 늘어선 가구나 광역적 현지로부터 연계되는 『도시계획법』, 자연의 지형을 활용해 흙이나 성토로 조성하는 것으로 택지화할 때에 연계되는 『택지조성등규제법』, 대표적인 도시 인프라와 제휴하는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 건축물의 이용에 의해서 배수되는 오수와 제휴하는 『정화조법』,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약자의 지원과 연계하는 『배리어 프리법』,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건축 재료의 품질을 일정한 기준 내에서 정하기 위한 『품질확보법』, 지진국의 일본에 있어 내진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진개수 촉진법』,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요구되는 직능을 규정하는 『건축사법』, 건축물을 시공하는 사업소의 업태

74) 쇼와 25년(1950년) 5월 24일 법률 제201호

75) 다이쇼8년(1919년) 법률 제37호

를 규정하는 『건설업법』 등이 다양한 건축 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는다. 건축기준법은 이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기능하는 법률이다. 건설하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문화재 보호법·행정 수속법·경관법 등과도 관련한다.

『건축기준법』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건축물의 부지·설비·구조·용도 등 전반적인 건축물의 성능에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고, 건축서비스산업관련 사항은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 용어의 정의에서도 건축물, 특수건축물, 건축 설비, 주요 구조부벽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을 뿐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을 다루는 용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표 4-13] 일본 건축기준법의 구성

제1장 총칙(제1조-제18조의 3)
제2장 건축물의 부지, 구조 및 건축 설비(제19조-제41조1조)
제3장 도시계획구역 등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부지, 구조, 건축설비 및 용도
제1절 총칙(제41조의 2-제42조)
제2절 건축물 또는 그 부지와 도로 또는 벽면선과의 관계 등 (제43조-제47조)
제3절 건축물의 용도(제48조-제 51조)
제4절 건축물의 부지 및 구조(제 52조-제61조)
제4절의 2 도시 재생 특별 지구(제61조의 2)
제5절 방화 지역(제61조-제67조)
제5절의 2 특정방재가구정비지구(제67조의 2)
제6절 경관 지구(제68조)
제7절 지구 계획 등의 구역(제68조의 2-제68조의 8)
도시계획구역 및 준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및 구조(제68조의 9)
제3장의 2 형식 적합 인정등 (제68조의 10-제68조의 26)
제4장 건축협정(제69조-제67조)
제4장의 2 지정 자격 검정 기관 등
제1절 지정 자격 검정 기관(제77조의 2-제77조의 17)
제2절 지정 확인 검사기관(제77조의 18-제77조의 35)
제3절 지정 구조 계산 적합성 판정 기관(제77조의 35의 2-제77조의 35의 15)
제4절 지정 인정 기관등 (제77조의 36-제77조의 55)
제5절 지정 성능 평가 기관등 (제77조의 56-제77조의 57)
제4장의 3 건축기준 적합 판정 자격자의 등록(제77조의 58-제77조의 65)
제5장 건축심사회(제78조-제83조)
제6장 잡칙(제84조-제97조의 6)
제7장 벌칙(제98조- 제106조)
부칙

□ 건설업법

『건설업법』⁷⁶⁾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자질의 향상, 건설공사의 청부계약의 적정화 등을 도모하는 것에 의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여 발주자 및 하청의 건설업자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고 공공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본 법률의 전체적인 구성은 아래 표와 같으며,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건설업법에서는 「건설공사」, 「건설업」, 「하청계약」, 「발주자」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건축서비스산업관련 용어정의는 되어 있지 않다.

[표 4-14] 일본 건설업법의 구성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제2장 건설업의 허가(제3조-제17조)
제1절 통칙
제2절 일반 건설업의 허가
제3절 특정 건설업의 허가
제3장 건설공사의 청부계획(제18조-제24조 7)
제1절 통칙
제2절 원청부담인의 의무
제3장의 2 건설공사의 청부계약에 관한 분쟁의 처리(제25조-제25조의 24)
제4장 시공기술의 확보(제25조 25-제27조 22)
제4장의 2 건설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의 심사 등(제27조의 23-제27조의 36)
제4장의 3 건설업자 단체(제27조의 37-제27조의 38)
제5장 감독(제28조-제32조)
제6장 중앙건설업심의회 등(제33조-제39조의 3)
제7장 잡칙(제39조의4- 제44조의5)
제8장 부칙(제45조-제55조)

[표 4-15] 일본 건설업법에서의 정의(제2조)

- 이 법률에 있어서 「건설공사」란, 토목 건축에 관한 공사로 별표1의 상란에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이 법률에 있어서 「건설업」이란, 원청, 하청 그외 어떠한 명의를 가지는가를 불문하고, 건설공사의 완성을 하청받는 영업을 말한다.
- 이 법률에 있어서 「건설업자」란, 제3조 제1항의 허가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이 법률에 있어서 「하청 계약」이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아 부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다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체결되는 청부계약을 말한다.
- 이 법률에 있어서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주문자를 말하고 「원청부인」이란, 하청 계약에 있어서의 주문자로 건설업자인 것을 말해, 「하청부인」이란, 하청 계약에 있어서의 청부인을 말한다.

76) 쇼와 24년(1949년) 5월 24일 법률 제100호

□ 건축사법

『건축사법』⁷⁷⁾이란, 건축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실시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정하고,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질 향상에 기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⁷⁸⁾. 일본의 건축사법은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일본의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가장 밀접한 법률로 판단된다. 특히, 2006년에 발생한 일본의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설계 위조사건인 「아네하 사건」의 영향으로 개정된 건축사법은 현재까지 일본의 건축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법률의 전체적인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4-16] 일본 건축사법의 구성

제1장 총칙(제1조-제3조의3)
제2장 면허 등(제4조-제11조)
제3장 시험(제12조-제17조)
제4장 업무(제18조-제22조의3)
제5장 건축사회 및 건축사회연합회(제22조의4)
제6장 건축사 사무소(제23조-제27조)
제7장 건축사사무소협회 및 건축사사무소협회연합회(제27조의2-제27조의5)
제8장 건축사 심사회(제28조-제33조)
제9장 잡칙(제34조-제37조)
제10장 부칙(제38조-제44조)

본 법률에서는 「건축사」, 「1급 건축사」, 「2급 건축사」등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으나, 「건축서비스산업」과 일치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하고 있지 않다.

제4장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설계 및 공사업’, ‘설계의 변경’, ‘업무에 필요한 표시 행위’, ‘지식 및 기능의 유지향상’, ‘정기 강습’, ‘정기 강습의 강습기관의 등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설계의 변경’, ‘업무에 필요한 표시행위’에 있어서, 2006년의 구조위조사건 이후 개정된 건축사법에 의해 더욱 엄격해져 명함의 표시에 대한 기명 및 날인에 대한 표시 의무가 강해졌다. 특히, 건축사의 직능에 대한 독창성과 전문성을 유지 향상하기 위해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 감리에 필요한 직능 및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법률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기 강습 및 강습 기관의 등록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건축사회(建築社會) 및 건축사회 연합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77) 쇼와 25년(1950년) 5월 24일 법률 제 202호

78) 제1장 총칙의 제1조 「목적」

건축사의 품위의 보관유지 및 그 업무의 진보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축사에 대한 건축 기술에 관한 연수 및 사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실시하는 목적으로 각종 건축 기술에 관한 연수를 담당한다. 즉, 교육 및 육성에 관한 법제화를 통해 건축사의 독창성 및 사회적 지위를 유지·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7장에서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자는 설계 등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매 사업년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해야하며, 도도부현 지사는 이를 일반의 열람에 제공해야 하는 체제가 법제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개정법 이후 제도의 엄격함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의 고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자가 그 업무에 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축사법 제25조의 업무의 보수에 관한 고시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의 고시내용에서는 업무 보수의 결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1인 1시간당 필요로 하는 인건비에 건물 면적 및 용도별로 표준 업무인(業務人)×시간수를 명시하여 업무의 보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4-17] 건축사법 중 업무의 보수(제25조)

제25조[업무의 보수]

국토교통장관은, 중앙 건축사 심사회의 동의를 얻고,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자가 그 업무에 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을 정해 이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일본의 건축기준법 및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

① 건축기준법 및 건축사법 개정의 배경

건축기준법 및 건축사법 개정은 아네하 건축설계사무소에 의한 구조 계산서의 위조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조 계산서 위조 문제는 2005년 11월 17일에 국토교통성이 치바현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아네하 건축설계사무소)의 1급 건축사가 지진 등에 대하는 안전성의 계산을 기록한 구조 계산서를 위조하고 있던 것을 공표한 것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으로 내진 위장 문제라고도 불린다. 일련의 내진 위장 사건은 발각 당초는 조직적인 사기라고도 볼 수 있었지만, 공판에서는 「1급 건축사에 의한 “개인 범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 지방 법원은 해당 건축사에게 징역 5년, 벌금 180만엔의 실형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직후에는 건축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준법과 건축사법의 개정의 움직임이 급속히 전개되어 중소설계사무소의 경영은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② 건축기준법 및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경영동향

개정건축사법의 영향으로 미래가 불투명했던 건축계가 2006년도의 각사의 결산을 보면 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설계사무소의 설계·관리 매출액은 102사중 64사가 증가했다. 102사에 대해서 2006년도의 매출액을 합하면 전년대비 3.7% 증가하였다. 2004년에서 2005년의 증가율이 1.6%였기 때문에 2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또한, 매출액 50억엔 이상의 10개사를 대규모, 10~50억엔의 27개사를 중규모, 10억엔미만을 소규모로 분류하면, 중규모의 매출액이 평균 9.1%로 매우 높다. 대규모는 평균 0.2%증가, 소규모도 평균 2.6%증가에 멈추고, 중규모 사무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07년도에는 설계사무소의 건축설계·관리 매출액은 전년도와 비교가능한 52개사에서 36개사가 증가했다. 전체 회사의 매출액을 합하면, 전년도대비 4.2%증가, 06년도는 3.7%증가했기 때문에 0.5포인트 정도 증가되었다. 규모별로 보면, 매출액 50억원이상의 대기업 설계사무는 12개사 중에 11개사가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늘었다. 그렇지만 매출액이 10억~50억원의 설계사무소는 30개사 중에 12개사의 매출이 떨어졌다.

중소 및 대기업의 설계사무소에 있어서 2007년도와 2008년도의 비교가 가능한 54사의 2008년도의 결산을 보면, 설계·관리매출액은 전년도대비 4.2% 늘었다. 반면에 이익 확보의 현황을 분석하면, 영업이익은 전체에서 5% 줄었다. 대기업설계사무소가 설계·관리 사업 시장의 견인역할을 하였다. 설계·관리 매출액의 상위 10개사 중 9개사의 매출액이 늘었다. 하지만 11위이하의 설계사무소에서는 42개사 중 과반수이상인 24개사가 매출액이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3년간 대기업 설계사무소의 매출액 비중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2008년의 경우 설계·관리매출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은 5%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06년의 건축사법개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6년 건축사법개정에 따라 구조 및 설비관련 1급건축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회사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⁷⁹⁾.

③ 개정된 건축기준법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건기법 불황

아네하 내진 건축 위장사건에 의해서 건축기준법이 개정되었지만, 건축을 둘러싼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 개정 건축기준법의 시행 전후 1년간의 통계를 비교하면, 신설 주택의 착공수는 시행전이 127만호, 시행후가 99만호, 전 건축물의 착공 바닥면적은 시행전이 1억9천만㎡, 시행후가 1억 4천만㎡이다. 전 건축물의 공사비로 하면, 1년간에 8.8조엔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 된다. 공사비만으로 국가 예산의 1할을 넘는 수치이며, 게다가 이것은 국교성의 건축기준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정책만의 영향이다. 개정된 건축기준법 영향에 의한 기업도산은 1년간에 105사(부채액수 1,000만엔 이상)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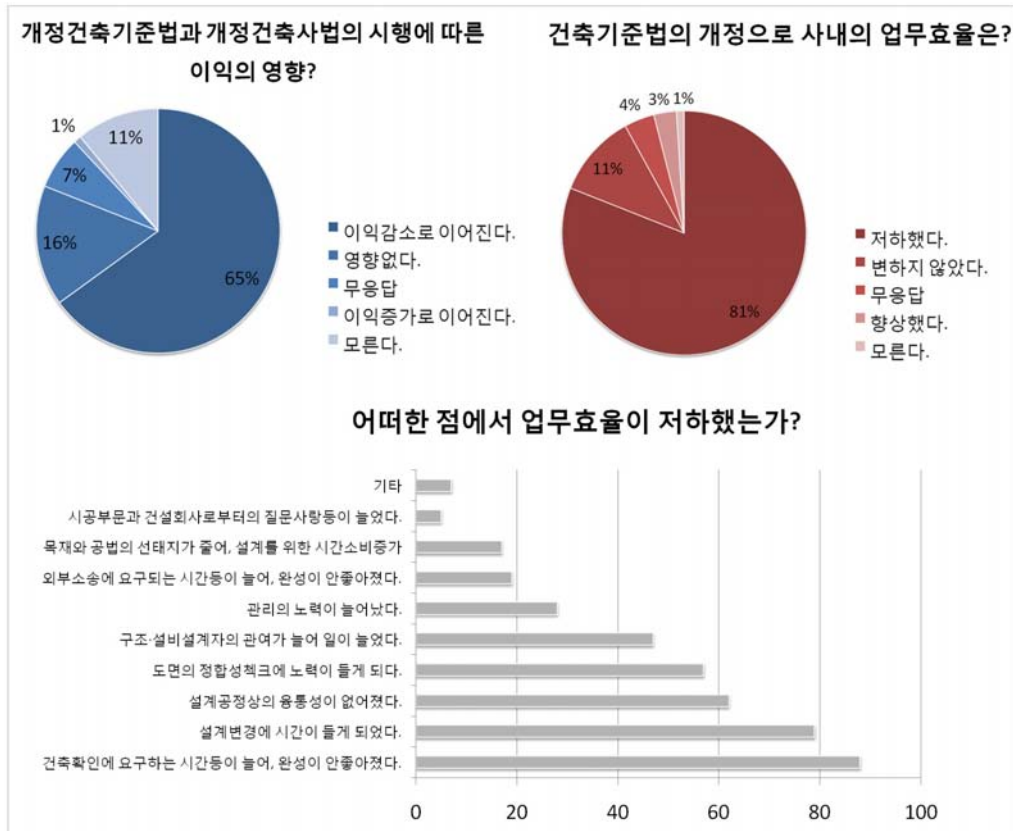
2007년 개정된 건축기준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2009년 6월에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⁸⁰⁾에서 회답한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 합계 121사 중에서 81%가 ‘업무효율이 저하되었다’라고 대답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88%가 응답한 ‘건축확인에 필요한 시간 등이 늘어 완성도가 미흡해졌다’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조계산 적합성 판정에 대한 소요일수의 증가, 확인 검정기관으로부터의 지적 내용 수정에 따른 소요일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개정된 건축기준법과 건축사법의 시행이 ‘이익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회답이 65%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건기법 불황’이란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개정된 건축기준법이 2007년 6월 20일에 시행됨으로써 전국적으로 건설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이 방해되고 일본이 경기감속에 빠지게 된다. 개정된 건축기준법 불황, 국토 교통성 불황, 컴플라이언스 불황이라고도 불린다. 당시의 국토교통성 대신이었던 후유시바 테츠조의 이름을 따서 ‘후유시바 불황’이라고 부르는 주간지 등도 존재하였다.

2007년의 초, 일본의 내각은 2007년도의 국내 총생산의 전망을 521.9조엔으로 예상했으나 2007년 말의 시점에서 내각은 2007년도의 실적 전망을 516.0조엔으로 하부수정하고, 실질 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의 2.0%증가에서 1.3%증가로 하부수정되어 명목 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의 2.2%증가가 0.8%증가로 하부수정 되었다. 이 원인에 대해 마치무라 노부타카 내각 관방 장관은 실질 경제 성장률의 0.7%의 하부수정분이 주로 건축기준법의 개정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79) 부록 별첨 [표 부록4-1,2,3] 최근 3년간의 일본의 건축 설계사무소의 순위 집계표 참고

80) 출처 : 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



[그림 4-14] 2009년 6~7월 앙케이트 조사
(출처 : 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 (2009.9.14))

④ 개정된 건축사법의 문제점

□ 개정된 건축사법의 내용 및 개요

구조설계서의 위조사건에 대응해 6월에 시행한 개정된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실적 등의 보고의무와 법령위반에 대한 벌칙의 강화 등이 도모되었다.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새롭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항목으로서 업무 보고서의 제출, 정보공개, 도면과 증명서의 교부, 도면의 보존, 벌칙의 강화, 표기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업무보고서의 제출이다. 건축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확인 신청 도서에의 건축사의 기명의 사용이 엄격해졌다. 보고하는 주요 내용은 최근의 사업년도에 직접한 설계·관리업무의 실적과 소속하는 건축사의 업무 실적 등이다.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늦추면 30만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업무보고서 이외에 건축사사무소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가 되는 것이 계약시의 도면 교환이다. 원청의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자가 건축주에 도면을 교환할 필요가 있는 종래의 규정을 하청계약에도 확대했다. 하청의 설계·관리업무의 조약에 따라서 하청 측의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자가 도면을 교환한다. 도면에는 업무내용과 담당한 건축사의 이름 등을 기입한다. 서면의 교부를 게을리하는 등을 하는 경우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새롭게 계획되었다.

그밖에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는 이 설계내용의 안전성에 의문이 없다고 증명하는 서류를 위임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정보공개 또한 진행되었다. 제출이 의무화된 업무보고서는 도도부현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건축사의 징계와 건축사사무소의 열람처분의 결과가 공시되도록 되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한 서류에는 배상책임보험 등에의 가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가 첨가되었다.

설계도서 등 도면의 보존기간이 늘어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성 후 5년간이었던 도면의 보존기간이 15년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벌칙의 강화도 개정에서 중시되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기존의 벌칙을 강화한 후에, 명의차용과 건축사의 사망신고 제출의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또한 새롭게 계획되었다.

□ 전문자격자의 부족과 그에 따른 대응

개정된 건축사법은 5월27일부터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의 설계에 구조설계 1급건축사와 설비설계 1급건축사의 관여를 의무화했다. 이 때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던 것은 설비설계 1급건축사의 부족이었다. 어떤 중견설계사무소의 설계자는 ‘사내에서 설비설계에 관계하는 실무자와 유자격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특이한 것이 아니다. 유자격자에 일이 집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건축사제도 보급협회는 2009년 3월 바닥면적 5천~12만㎡의 38종 건축에 대해서 설비의 법적합 확인에 요구하는 업무량을 조사하였는데 1동당 평균 22명/시였다. 법적합 확인은 2009년 11월에 완료되었고, 이로 인한 건축계가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되고 있었다.

유자격자의 부족감을 가지는 요인은 공공사업에서의 발주요건에도 있다. 프로포절과 입찰의 참가자격으로서 구조설계 1급건축사와 설비설계 1급건축사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나왔기 때문이다. 사내에 유자격자가 없어 입찰에 참가불가능한 회사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성은 2009년 5월 29일 ‘개정건축사법은 구조·설비 설계 1급건축사가 소속하지 않는 설계사무소의 입찰 등에의 참입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통지하고 있으나, 입찰 등의 운용은 각 지자체에 위임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불투명하다. 한편 구조·설비설계사무소등에의 전문자격자의 존재를 새롭게 일로 연결하는 움직임으로도 판단된다. 이를 반영하듯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부터는 대기업 및 중소설계사무소의 구조 및 설비 1급건축사의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고, 설계사무소에게 있어서는 수주를 위해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업무량의 증가 및 시급계산에 따른 보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 보고서의 제출, 정보공개, 도면과 증명서의 교부, 도면의 보존, 벌칙의 강화, 표기 등, 건축확인 수속만이 아닌 사무소경영에 중요 사항 설명과 연차보고 등 부가적인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간이 다른 직종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개정된 건축사법의 시행 후에 대한 건축실무자 639명의 의식조사 결과(출처: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 개정된 건축사법에 대해서 ‘마이너스의 영향’에 61.8%가 응답했다. 개정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높고 ‘상세히 이해하고 있다’, ‘대략 이해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실무자는 83.1%로 높았다. 영향이 큰 사항으로서 최대의 응답을 받은 것이 ‘구조 설계 1급건축사와 설비 설계 1급건축사의 관여의 업무’이다. ‘정기강습’, ‘중요사항설명’으로 이어졌다. 설비설계 1급건축사, 구조설계 1급건축사 등 인재확보가 회사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위해 회사별 건축사의 수험지원, 자격취득 강습의 복수 수강, 자격우선 인재도입 등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주일당 평균노동일수는 설계사무소에서 5.7일, 건설회사는 5.6일, 주말 이틀에는 차이가 많은 실정이 다시 한 번 확인 가능했다. 특히 종업원이 3인 이하의 설계사무소에서는 1주일 당 노동 일수가 6일 이상이라고 하는 회답이 60%를 넘었다. 이 비율은 종업원이 10인 이상의 설계사무소에 비교해 2배 이상에 상당한다. 더욱이, 1일당의 평균노동시간은 설계사무소에서 10.2시간, 건설회사에서 10.9시간이었다. 어느 쪽도 1주일당의 평균노동시간을 단순계산하면, 약 60시간에 이른다. 건축사의 70%가까이는 노동시간을 ‘길다’ 또는 ‘약간 길다’라고 느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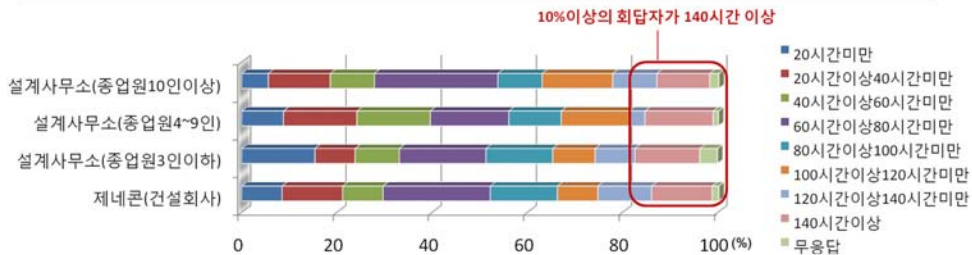
1주간의 평균노동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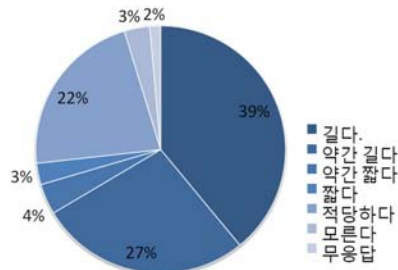
1일의 평균노동시간



피크시의 1개월간 잔업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생각



개정건축법이 노동시간에 준 영향



[그림 4-15] 2008년 앙케이트 조사
(출처 : 日経アーキテクチャ (2008.4.14))

개정된 건축기준법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2007년 6월의 동법시행후에 노동시간이 ‘늘었다’ 또는 ‘조금 늘었다’ 라고 대답한 건축사는 63.7%에 달했다. 종업원 10인 이상의 설계사무소에서는 75.9%의 일량의 증가를 호소했다. 앙케이트를 근거로 하면, 법개정후에는 일정의 규모를 가진 회사에 일을 수주하기 쉬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노동시간과 수입의 관계를 조사하면, 건축사의 노동대가가 낮은 실정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주간동양경제가 2007년 5월 보고한 직업별 50세 시점의 시급을 보면, 부동산업의 상장회사가 평균 3,560엔인 것에 대비해 일급건축사는 2,602엔으로 약 1,000엔이 싸다. 건축사의 시급은 본지의 조사에서도 동등했다. 다만, 종업원이 3인 이상의 설계사무소의 시급에 한정하면, 힘들게 해도 2000엔을 넘기 어려운 수준이다.

3) 건축관련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현황

국토교통성은 불황인 건축업계를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건축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법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자의 채무의 보증에 대해 보험을 행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4-18]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쇼와25년(1950년) 12월 14일 법률 제264호)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자의 채무의 보증에 대해 보험을 행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확인, 건축작공의 감소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건축관련 중소기업자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에 대해서는 ‘세이프티 넷(안전망) 대부제도’와 ‘세이프티넷 보증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세이프티넷 대부제도는 정부계 중소기업금융기관에 의한 융자제도이다. 건축확인, 건축작공의 감소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넓은 범위의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대부 및 보통대부와 비교해 융자한도액과 원금반환기간에 우대장치가 있다. 또한 담보조건의 특례제도가 이용가능하다. 세이프티넷 보증제도는 각도도부현등의 신용보증협회가 채무보증을 행하는 것에 의해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쉽게 하는 제도이다. 일반보증과 비교해 보증한도액이 별도의 틀이 있는 것과 동시에 저렴한 보증료로 보증이 가능하다.

이는 지정업종에 소속하고, 최근 3개월간의 매출액등이 전년동월도 비교 마이너스 5%이상의 업무자가 대상이 되고, 대상사업자는 지정기간 안에 시동읍장에 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표 4-19] 세이프티넷 대부제도 및 세이프티넷 보증제도

1. 세이프티 넷 대부제도(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해 융자제도)

○대상 : 건축 확인, 건축 착공의 감소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자금유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또는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융자조건

	중소기업금융공고	국민생활금융공고	상공회중앙공고
융자한도액	4.8억엔	4,800만엔	4.8억엔
융자이율	기준이율		
융자기관	운전자금:7년 이내, 설비자금:15년 이내		
원금상환기간	3년 이내		
기타	일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면제가 허용되는 제도가 있다.		일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면제가 허용되는 제도가 있다.

2. 세이프티 넷 보증제도(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의 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제도는 민간금융기관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 신용보증협회가 채무보증을 행하는 것에 의해 중소기업의 모두가 융자를 받기 쉽게 한다. 세이프티 넷 보증제도는 경영의 안정에 지장을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모두에 대해서 일반의 보증조건과는 별도의 조건으로 보증을 행한다.

○대상 : 전국적으로 업계현황의 악화하고 있는 업종으로서 지정받은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에 있어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동·읍면장 또는 특별구장의 인정을 받은 자. 더불어, 지정업종이외의 업종의 중소기업이더라도, 일반보증의 이용은 가능하다.

○인정요건 : 최근3개월간의 평균 매출액등 전년동월 대비 마이너스 5%이상의 중소기업자

○보증한도액의 별도 조건화

(일반 보증 한도액) (별도조건 보증 한도액)

·보 통 보 증 2억엔 + 2억엔
·무담보보증 8,000만엔 + 8,000만엔
·무담보 무보증인보증 1,250만엔 + 1,250만엔

○보증료 : 대개 1.0%이내에서 신용보증협회 및 신용보증제도 마다 정해져 있다. 일반 보증과 비교해서 저렴한 보증료가 된다(평균 1.35%→0.8%정도로 경감).

○수속절차의 흐름 : 본점(개인 사업주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시·읍·면(또는 특별구)의 상공 담당과 등의 창구로 지정 기간 내에 인정 신청서 2통을 제출(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 인정을 받아 희망의 금융기관 또는 소재지의 신용보증협회에 인정서를 지참 후, 보증 부 융자를 신청하게 된다. 그 후, 금융 심사를 거치고, 융자 및 보증의 가부가 정해진다.

3. 소결 :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특성 및 시사점

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성과 법체계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미국과 일본의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성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① 건축서비스업 독립된 산업으로 인식되며 그 영역 매우 포괄적

미국의 건축서비스 산업의 분류체제와 정의는 건축서비스업이 ‘건설업(Construction)’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영역에 있어서도 협의의 건축설계 또는 디자인 뿐 아니라 건축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어 건축서비스업의 영역을 매우 넓게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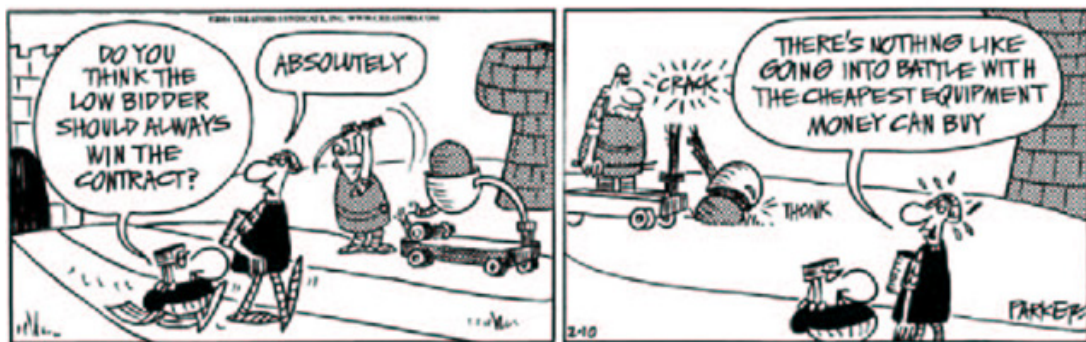
미국에서 건축서비스(Architectural Services) 산업은 산업분류체계 상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에서 법률서비스업, 회계업, 디자인서비스업 등과 같이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업(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Related Services)”으로 분류되며, 더 세부적으로 ‘조경 서비스(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엔지니어링 서비스(Engineering Services)’와 구분하여, ‘건축서비스(Architectural Services)’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건축서비스의 법적 정의는 일반적인 건축설계 뿐 아니라 토지에 관련된 연구, 조사, 계획, 개발, 디자인(설계), 시공, 개축, 수선, 수리와 연관되어 계약에 의해 실행되는 건축적 성격을 갖는 전문적 서비스와 건축설계 과정에서 연관되는 연구, 조사, 시험, 평가, 컨설팅, 기획, 시방서, 시공단계 서비스, 도면점검 등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② ‘가격’ 보다는 ‘건축가의 능력과 자질’을 우선시하도록 건축서비스 관련 계약법 규정

둘째 미국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의 공공계약법에 있어 건축서비스에 관한 건축가 및 설계사무소 선정과 계약은 Brook Act에 따라 일반적인 조달이나 시공에서 사용하는 최저가낙찰방식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건축전문가를 자격조건과 능력을 바탕으로 선정하고 가격을 추후에 협상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Brook Act의 원칙은 아니지만, 뉴욕시와 같이 가격경쟁요소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건축가의 자질과 능력, 설계접근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가격은 최종적인 선정단계에서 고려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건축서비스 관련 공공계약의 기본은 Brook Act에 의해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자격조건, 즉 디자인능력 또는 건축가치 기준의 선정방식(selection based on qualifications)이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다른 용역을 위한 계약방식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즉 다른 분야의 공공계약일 경우 가격은 입찰방식에 의해 정해지는데 반해, 건축서비스 관련 공공계약에 있어 가격산정은 해당 프로젝트의 분석과 협상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시공(construction)의 경우 프로젝트의 모든 중요한 범위(재료의 양, 시공방식 등)가 미리 정해질 수 있어 가격산정이 비교적 정확하고 이에 따라 최저입찰자가 선정될 수 있지만, 건축서비스의 경우는 초기 개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디자인과 계획의 범위와 작업 양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 당시에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비용에 있어서 최저가낙찰방식은 초기의 설계비가 저렴하다 할지라도, 결국 설계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완공이후 관리비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프로젝트 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근거가 되고 있다. 결국,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초기 프로젝트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최저공사비, 최저설계비, 최저관리비를 추구하지만, 결국 프로젝트의 성공과 관리 측면에서 보면 “가치(value)”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초기의 최저설계비는 결코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Copyright © 2004 Creators Syndicate, Inc.

[그림 4-16] 최저가 낙찰방식의 단점을 묘사한 Cartoon

따라서 건축서비스와 관련된 건축가 또는 설계사무소 선정과 계약방식에 있어 일반적인 최저가 낙찰방식이 아닌 건축의 가치기준에 의한 Brook Act의 계약방식은 건축서비

스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바탕이 되어 수립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 조달이나 시공사 선정과 같이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해서만 진행되어 결국 건축설계의 질적 확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현실적인 설계비가 지급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 관련 공공계약방식에 있어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③ 건축서비스산업 관련분야에서 서비스를 의뢰받는 개념: ‘사전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도 수익 발생

마지막으로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은 관련 분야에서 서비스를 의뢰받는 개념으로써 이에 따라 사전기획 및 설계, 실시설계 부문의 수익성이 높은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건축디자인산업은 비주거용 빌딩, 특히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사무용 건축 프로젝트의 사전설계 및 디자인에 있어서 수수료지급형태의 계약으로부터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의 주 매출원은 공공용, 기관용, 상업용 지역 등에 대한 사전설계, 자문, 설계활동에 관련된 전문용역수수료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발주 중심의 수요구조를 갖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집중도가 낮은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사업체 규모면에서 직원수 5인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의 6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위 4위까지의 연간 매출이 전체의 4~5%만을 차지하고, 상위 50개사가 전체 연간 시장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사업체 규모면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대형사무소들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⁸¹⁾, 대형사무소 뿐만 아니라 중소형규모 사무소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산업체제 구조개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2) 일본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성 및 시사점

① 건축분야 ‘산업법’ 내에 포함되어 산업법의 통칙 적용

일본의 전체 법률 체계 속에서 건축은 농림수산업, 공업, 금융·보건, 운수, 전기통신 분야와 함께 『산업법』이라는 큰 틀에 포함되어 있다. 산업법 1조(7.1)는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 조합법, 기술사법 등 산업법의 통칙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분야가 산업법 내에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건축산업과 관련하여

81) 2009년 국내 50대 건축사사무소의 총매출은 국내 건축설계 총매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여 추정된 대한건축사협회 내부 자료)

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축 관련법내 ‘산업’에 대한 관련 규정 또는 개념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② 건축업무의 보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

둘째 『건축사법』에서 건축업무의 보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2005년 아네하 건축설계사무소의 구조 계산서 위조사건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되면서, 법개정 이후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설계 등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건축사 사무소 업무에 관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 미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건축관련 법에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은 정의되어 있지 않았으나, 『산업법』내에 건축이 포함됨으로써 산업적 구조체계 속에서 보수기준과 재정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건축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의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건축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관련 중소기업자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이 가능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세이프티 넷(안전망) 대부제도’와 ‘세이프티넷 보증제도’는 정부계 중소기업금융기관에 의한 융자제도로써 건축과 관련된 넓은 범위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제도로써, 불황인 건축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성이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내에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금융·기술·인력 지원 사업 등을 펼쳐오고 있으나⁸²⁾, 구체적으로 건축분야와 관련된 지원과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82) 부록 5.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자료 참고

제5장 건축분야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관련법 검토

1. 산업관련법에서 산업의 정의 방식
2.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검토
3. 소결

1. 산업관련법에서 산업의 정의 방식

산업관련법에서 산업을 어떻게 정의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통계청 고시 제 2007-53호)에 의한 산업과 산업활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며, 산업 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산업 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의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

현행 법상 특정 산업의 육성 내지 지원에 관한 산업 관련법은 약 33개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공간정보산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그리고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산업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과 같이 문화 및 디자인분야의 산업법도 있으며, 건축분야와 관련한 것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에너지이용산업진흥법』이 포함되어 있다.

[표 5-1] 우리나라 산업 관련 법 종류(가나다 순)

(2010년 10월 기준)

법률명	산업유형	비고(시행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	2010.7.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2011.1.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고령친화산업	2010.7.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	2010.8.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2010.10.1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산업	2010.7.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2009.11.28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산업	2009.12.1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	2011.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	2010.12.11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	2008.2.29
산업발전법	지식서비스산업	2010.4.14
산업디자인 진흥법	산업디자인	2009.5.21
석탄산업법	석탄산업	2010.7.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	2008.12.6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 산업	2011.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2010.5.5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	2010.12.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2010.10.13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	2010.4.23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	2010.12.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2010.12.1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이러닝 산업	2010.7.5
인삼산업법	인삼산업	2010.3.1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인쇄문화산업	2009.9.6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산업	2011.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	2010.8.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2010.9.23
종자산업법	종자산업	2010.9.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철도산업	2009.12.1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2010.6.18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 산업	2010.12.1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	2009.4.1

이들 산업 관련법에서 산업을 정의하고 있는 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용어의 구체적 설명에 의한 정의

이것은 해당 법에서 직접 그 용어의 정의와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산업 활동을 직접 설명하여 산업을 정의하는 경우이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산업디자인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에서는 문화산업,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직접 정의하고 있다.

[표 5-2] 용어의 구체적 설명에 의해 정의한 예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p>제2조(정의)</p> <p>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p> <p>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p> <p>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p> <p>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p> <p>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p> <p>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p> <p>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p> <p>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p> <p>아.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p>
산업디자인 진흥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p>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p>제2조(정의)</p> <p>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p> <p>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p>

2)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정의

이것은 지원·진흥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산업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경우로, 주로 관련 사업의 분류나 사업의 설명을 통해 산업 활동을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간정보산업법』의 경우 ‘공간정보사업’의 종류를 나열하여 공간정보산업을 설명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는 관련사업의 설명을 통하여 정의하고 있다.

[표 5-3]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산업을 정의한 예

공간정보 산업법	<p>제2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측량업 및 수로사업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라.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4. “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p>제2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3) 세부산업 분류 및 타 법 정의와의 관계를 통한 정의

이것은 해당법에서 세부적으로 관련산업을 분류하여 설명하거나, 연관된 타 법에서 정의한 내용과 관계지어 산업을 정의하는 경우이다. 가령,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산업을 정의하기 위해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으로 세부 관련 산업을 분류하는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정의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고 명시하는 등, 관련 산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된 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을 인용해 그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표 5-4] 세부산업 분류 및 타법 정의와의 관계를 통해 정의한 예

세부산업 분류에 의한 정의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정의)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타법 정의와의 관계를 통한 정의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와 관련한 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4) 산업의 활동 주체 명시를 통한 개념 명확화

산업 관련 법들의 정의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산업 활동의 주체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산업 활동이 더욱 분명히 정의됨을 알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와 ‘건설기술자’ 등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엔지니어링기술자’를, 『공간정보산업법』에서는 ‘공간정보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기술자’, 그리고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에서는 ‘이러닝사업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는 ‘고령친화사업자’ 등 산업의 정의에 산업 활동의 ‘활동 주체’를 함께 정의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표 5-5] 산업 활동 주체를 함께 정의한 예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정의)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 2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6.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간정보 산업법	제2조(정의) 4. "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닝 (전자학습) 산업 발전법	제2조(정의) 4. "이러닝사업자"라 함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4.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3. "고령친화사업자"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검토

□ 출발점 : 타 법령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체계정당성의 원리)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 내지 발전이라는 정책이 그 적격성과 정당성의 검증을 거쳐서 어느 면에서도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그 정책을 입법화할 경우에 법체계에 있어서의 위치를 고려하면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내용의 종합적 조정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 법령 또는 법령의 각 개별규정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호간 또는 개별법령규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부하면서 종합적인 법제도·법령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들 규정 사이에는 조화의 관계 내지 균형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입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Prinzip der Systemgerechtigkeit)라고 한다(헌법재판소 결정례 1995.7.21. 94헌마136).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수평적 관계이건 수직적 관계이건)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으로서, 규범 상호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 내지 발전을 위한 입법구상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제군이 상호 저촉되거나 모순·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규정된 각종 정책내용이 조화롭고 원만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운용·집행될 것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이라는 용어에는 건축개념, 디자인개념 및 산업개념 등 다양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나, 근래에는 ‘건축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법령상 독자적으로 정의되고 있고, 건축서비스산업은 결국 이러한 건축디자인과 관련된 활동영역을 서비스하는 산업이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건축디자인과 관련되는 법제유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건축서비스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 가운데 하나의 ‘산업’으로서 정착되어 운용되고 있는 각종 산업관련법제와의 관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디자인을 정의하고 있는 건축기본법도 산업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건축디자인 관련 법제 검토

① 건축기본법

우리 법제에서 처음으로 건축디자인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건축기본법』은 2007년 4월 6일 강길부 의원등 15인이 발의한 의원입법으로 2007년 12월 21일 성립한 것으로서, 이 법률은 건축행정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제도의 목표·방향대강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에 대하여 시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전형적인 ‘정책형 기본법’의 유형에 속한다.

□ 건축디자인의 개념 정의

- 이 법률에서는 건축디자인의 개념을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3조제4호).
- 건축디자인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정의되어 있고, 법률에 규정된 건축디자인과 관련되는 여러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건축디자인의 개념을 ‘건축’과 ‘디자인’이라는 개념요소를 별도로 분리해서 보기보다는 ‘건축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용어로 파악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품질’ 내지 ‘품격’이라는 표현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내리는 최종적인 가치평가의 결론을 표현하는 추상적인 기준으로서,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사안에 합당하다는 정도의 기준을 제공할 따름이다.
 - 법령상 사용하는 용어는 오랜 기간 그것의 의미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어 그 성과가 쌓여있고 다수의 행정해석과 관련 판례들이 풍부하게 집적되어 그 의미 내용의 전체적 윤곽이 형성되고 구체적 사안들에서 특히 법률전문가들에게는 무엇이 여기에 해당하고 무엇이 해당되지 않는 것을 판단하기에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가 되어야 하나, 건축디자인의 관념에 포섭된 용어들은 법집행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임의로 해석 적용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 이 법률의 국회심의과정에서 “동 법에서는 건축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

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는 건축을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이라고 달리 규정하고 있어서 용어상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다.

- 이에 대해 당시 건설교통부는 『건축법』은 건축허가 등 행위허가를 하기 위한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건축법』에서의 ‘건축’이라는 용어는 용이한 법문 표현을 위해 신축·증축·개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의 양상을 축약한 말로서, 이는 유사한 행위인 ‘대수선’이나 ‘리모델링’ 등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건축’의 개념적 정의를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건축기본법안』은 ‘건축’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정책에 대한 선언적·행정적 규정을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념 정의가 두 법률 간의 상충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또한 이 법률의 국회심의과정에서 건축디자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2006년 10월 23일 제안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등이 제안한 것으로서 임기만으로 폐기됨)』에서 ‘건축디자인’을 생활환경 및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게 디자인하는 환경디자인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건축기본법상의 개념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 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건축디자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환경디자인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는 것으로 부처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건축디자인이란 인간생활에 필요한 환경 및 공간을 보다 적합하게 하기 위한 환경디자인(environment design)의 분야로 분류된다는 점, 건축디자인은 건축의장(建築意匠)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고안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건축디자인에 관한 준거법으로의 다양한 역할 규정

○ 한편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디자인에 관한 정의 외에도 건축디자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고, 건축디자인에 관한 준거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건축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직접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제2

향).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 되도록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제5조제2항).

- 국가의 건축정책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계획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항목에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항목과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항목 등 두가지 건축디자인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제11조제4호 및 제8호).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이나 공간 환경 시설물에 대한 건축디자인에 관한 기준(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는 건축디자인의 조성 목표와 그 수행 과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설정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이나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민간이 발주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특별건축구역이나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그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제5호 및 제6호).

②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 연혁 및 성격

- 『건축기본법』 제21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위임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년 12월 28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있다(고시 2009- 1325호).
-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설정된 건축디자인 기준은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원칙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축도시 관련 행정담당자,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 공공부문 건축디자인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참고하여야 할 지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주요 내용

- 이 고시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건축디자인과 관련하여 그 원칙과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디자인 단계별 기준 및 실효성 확보방안까지 규정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고시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특화사업,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조성사업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준과 지역 기준 및 사업별 기준을 토대로 좋은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등에 반영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기준이 단순한 지침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도 있게 규정하고 있다(제6조).
- 고시에서는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계획, 설계 및 개선에 관한 5가지 주안점

으로서 ① 친환경적이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며, 재사용이 용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도록 지속가능할 것 ②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되고, 재해·범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할 것 ③ 성별, 연령, 소득계층, 인종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변화하는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다양성과 융통성을 확보하고 장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⑤ 지역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인문·지리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자산을 보존·활용하며 미래에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 창조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제8조).

- 고시에서는 『건축기본법』에서 건축디자인의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특히, 제26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준에 따른 세부이행사항을 항목별로 체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디자인평가지표(Design Quality Indicator)를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제시된 내용은 매우 망라적이거나 사실은 **건축디자인의 개념요소에 함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건축디자인의 범위설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건축디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군

건축디자인은 응용 미술, 엔지니어링 및 건축기술이 혼합되어 있는 기술로서, 건축물은 항상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그 건축에 의하여 그 장소의 의미가 더욱 확대되는 상호 메커니즘을 가진다. 건축디자인은 하나의 건축물의 색채, 형태 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도시환경 등의 측면과 연관되어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건축디자인은 도시디자인, 환경디자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건축디자인은 문화예술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산업으로서의 산업디자인을 구성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디자인은 도시계획 특히 미관지구나 경관지구 등과 연관되어 있고 도시디자인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고 있는 도시미관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지식경제부장관이 주관하고 있는 산업디자인 그 외에 공공디자인과도 연관되는 등 여러 부처, 여러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

□ 건축법

- 『건축법』은 건축물안전과 기능유지를 위해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는 전형적인 규제법제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 건축물의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디자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제유형이라 할 수 있다.
-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건축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 건축에 관한 법제의 지도법에 위치하고, 이 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시법으로서 각종 건축관계 법령(건축법 등)이 위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건축디자인 개념은 『건축법』에도 당연히 포섭되어야 하나, 현행 『건축법』에서는 이를 포섭하는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
- 『건축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일정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9조), 이에 따라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구역으로서 위의 『건축법』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을 규정하고 있다(제20조)⁸³⁾.

□ 건축사법

- 『건축기본법』에서 건축디자인이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러한 행위를 수행하는 자의 대표적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를 지적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건축디자인과 관련한 직접적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 건축사는 주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를 담당하여 건축물이 안전하게

83)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건축에 대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도지재정비촉진구역,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등의 지역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일정 용도나 규모 이상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례가 적용된다.

완공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건축 관련 분쟁이나 건축계획 등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등의 업무도 담당하므로, 『건축사법』은 건축물의 설계와 일정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반드시 건축사가 하도록 하고(제4조),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제7조), 건축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제10조), 건축사가 아닌 자는 건축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제12조) 등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헌재결 2008. 5. 29. 2005헌마195).

- 건축물이 구조와 기능, 형태, 설비 등 다양한 부분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디자인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조정·관리되는 것인바, 현대사회에서 건축물이 대형화,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조정·관리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직접 관계있는 건축사의 책무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 다만, 현행 건축기본법상의 건축디자인의 개념정의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규정을 살펴보는 경우 건축사의 업무영역에 건축디자인업무가 당연히 포섭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불분명하다.
 -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을 수행하는 활동전문가(민간전문가)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1조).

□ 경관법

- 『경관법』상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제2조), 건축디자인의 의미내용에는 경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디자인은 『경관법』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 『경관법』 제16조에서는 토지소유자등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협정의 내용으로서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협정내용은 사실상 건축디자인 개념과 매우 상응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

- 특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6조제4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기준, 지역 기준 및 사업별 기준을 토대로 좋은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제6항제3호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등 『경관법』과 건축디자인의 밀접한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 주택관계법

- 주택은 건축물로서 건축디자인의 대상인 건축물에는 주택이 당연히 포함되고, 또한 주택을 둘러싼 공간환경도 건축디자인의 대상이 되므로 각종 주택관계법도 건축디자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 『주택법』 제16조에서는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동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주택단지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주택과 단지 및 지구환경을 기획 설계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시행 2010.3.1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44호)」을 마련하고 있다.
- 특히 이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동 기준이 각 지역별 도시 및 건축디자인 기준이 제시하는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각 지역여건과 특성에 따라 창의적이고, 미래 발전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화 또는 구체화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은 지방의 도시 및 지역 디자인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지자체별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5조제2항에서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의 하나로서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과 복원,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시하고 있고(제3조), 이를 위해 각종 계획과 지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계획과 지구에서는 건축디자인의 개념요소가 포함되고 있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경관지구⁸⁴⁾ 또는 미관지구⁸⁵⁾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6조제4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기준, 지역 기준 및 사업별 기준을 토대로 중

84)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나,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또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85) 미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되,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 또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진다.

은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 등의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옥외광고물은 도시 등의 미관풍치와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건축디자인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 이 법률에서는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일정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옥외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옥외광고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제 검토

건축디자인이라는 행위요소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구비되어야 하지만, 결국 건축서비스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성장,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정 산업의 육성, 조성 내지 진흥관련 법제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제도설계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이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종류의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모든 생산단위의 집합”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란 통상적으로 “각 생산단위가 ①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②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을 의미한다(헌재결 2006.12.28. 2005헌바59).

① 특정 산업관련 현행법제 및 체계

□ 특정 산업관련 현행법제

현행 법제상 특정 산업의 육성 내지 지원을 위한 법률유형은 아래에 제시한 것처럼

약 33개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유형 이외에도 개별 조문상 특정한 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들도 일부 존재한다(『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산업, 『공연법』 상의 공연산업, 『낙농진흥법』 상의 낙농산업, 『발명진흥법』 상의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상의 보건의료산업 등).

각 산업부문별로 다원화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전문화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으나, 관련 법령간의 중복, 상충으로 인한 과다 규제 및 입법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소관 부처별로 개별법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산업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이 곤란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에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표 5-6] 산업 관련 법 유형 및 내용

법률명	산업유형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 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용역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제작·유통·이용 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고령친화 산업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 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 산업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 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 업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 나무, 누에고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 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하는 산업,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로부터 인체에 유용 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하는 산업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산업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률명	산업유형	내 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서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과 관련된 산업
석탄산업법	석탄산업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등의 사업(석탄광업) 및 석탄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석탄가공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 시설등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영위,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소프트 웨어산업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
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 산업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 산업	엔지니어링활동(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와 이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및 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온라인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으로 전부 개정)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를 수집·가공·제작·저장·검색·송신 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인 원양어업과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인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유통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음악의 창작·공연·교육,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제작·유통·수출·수입, 악기·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

법률명	산업유형	내 용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법	이러닝 산업	이러닝콘텐츠(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과 이러닝(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의 수행·평가·자문과 관련된 서비스업
인삼산업법	인삼산업	특별한 정의규정이 없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인쇄문화 산업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
산업발전법	지식서비스 산업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산업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생산하는 산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 산업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와 관련한 산업,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
종자산업법	종자산업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철도산업	철도운송·철도시설·철도차량 관련산업과 철도기술개발관련산업 그 밖에 철도의 개발·이용·관리와 관련된 산업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 산업	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 산업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 산업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료를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 또는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등 항공기사용자가 그 운항상의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을 제외한다)

[표 5-7] 소관부처별 산업관련 법

부 처	소관 법률
국토해양부(3)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농림수산식품부(8)	근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인삼산업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종자산업법
문화체육관광부(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보건복지부(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지식경제부(9)	석탄산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이터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산업발전법, 전시산업발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기상청(1)	기상산업진흥법
소방방재청(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특정 산업관련 현행법 구성체계

앞서 살펴본 현행 법제상 특정 산업의 육성 내지 지원을 위한 법률의 큰 틀은 대체로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크게 제1장 총칙과, 제2장으로 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시작하여, 제3장에서 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및 다양한 지원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진흥기관, 협회, 지원단체 등 진흥을 위한 단체 및 기관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보칙과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8] 진흥법 구성체계 예

순 서	내 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기본 이념 및 기본 방향 등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실시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진흥사업 실시 등
제3장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등
제4장 단체 또는 기관 설립 등	지원 단체 및 지원 기관 등
제5장 보칙	—
제6장 벌칙	—

-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은 다른 특정산업을 다루는 법과는 달리, 전반적인 ‘산업’에 관한 발전을 도모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특정산업의 진흥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990년대 말 한국산업계는 WTO 체제와 개방화, 외환위기를 겪고 2000년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와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신대응과 신전략이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비제조업을 포함하는 한국산업 전체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기존 『공업발전법』을 폐지하였다.

이 법은 8개장 50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제5장 산업기술·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제7장 사업자단체 등, 제8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은 산업에 지식과 기술을 접목시켜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도 없었으며, 관련 법률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20년간 근본적인 개정도 없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0년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발전대책 [10.4.28]을 수립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제명(2010.10.13 시행)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주력을 두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등 총 7개장 48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개발 촉진과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산업디자인의 정의와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 산업디자인의 포괄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산업디자인 진흥 중합계획의 수립, 제4조는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제5조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개발사업, 제6조는 우수 산업디자인 상품의 선정, 제7조는 우수산업디자인 표지의 부착 금지, 제8조는 전문 인력 양성, 제9조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제10조는 산업디자

인의 보호 및 통계의 조사 등을 다룬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진흥원의 설립 및 사업, 경비 지원 및 자료의 제공 요청,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보고 및 검사, 비밀엄수의 의무 등이며, 제19조는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다루고 있다.

[표 5-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산업디자인 진흥법의 구성체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2조 정의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조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5조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제6장 보칙	제6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제7장 벌칙	제7조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착금지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제10조 산업디자인의 보호
	제10조의2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제11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제12조 진흥원의 경비 지원
	제13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 보고 및 검사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19조 벌칙

② 국회계류중인 특정 산업관련 법제

2010.8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특정 산업의 진흥 내지 육성에 관한 법률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므로 향후에도 산업유형이 세분화되고 발달될 수록 다양한 법률안이 제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산업관련 법률안은 여러 부처가 관계되어 있어서 관련 부처간 소관 권한을 둘러싸고 이견과 쟁점이 많고,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조율을 거친 국가전체차원의 정책적 중요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되는 사례가 많다.

[표 5-10] 국회계류중인 특정 산업관련 법

법률명	산업유형	내 용	비 고
조선해양산업 진흥법(안)	조선해양산업	선박, 해양구조물, 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의 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 수리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기술·서비스 등을 개발·촉진하기 위한 사업	2010.8.3 의원입법 (국회계류중)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공예문화산업	공예품 또는 공예상품(공예품을 이용하 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 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의 기획· 개발·제작·유통·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	2010.7.8 의원입법 (국회계류중)
말산업육성법(안)	말산업	말의 생산·개량·조련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 승마체험, 말 트레이닝, 재활승 마 등 말을 이용한 서비스·용역을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말의 식육 및 부산물을 이용하여 식품·건강기 능식품·약품 및 향장품(香粧品) 등의 생 산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009.12.9 의원입법 (폐기)
뷰티디자인산업 진흥법(안)	뷰티디자인 산업	뷰티디자인활동(인체에 대하여 헤어디 자인·메이크업디자인·네일디자인·스킨케 어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미적·기능적 창작행위·개선행위 및 표현행위)을 통하 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2009.11.30 의원입법 (국회계류중)
외식산업진흥법(안)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	외식산업	외식상품의 기획·개발·조리·생산·유통·소 비·수출·수입·가맹사업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2009.10.22 의원입법 (폐기)

3) 건축기본법 체계 및 산업관련 내용분석

1절에서의 현황 분석 결과,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의 명확화 및 진흥을 위한 법제도화
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서 충돌·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
련된 법제 유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술했듯이 건축 관련법으로는 크게 『건축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관리법』의 세 가지 법이 있으나, 특히 법률 제정시에는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기본법의 구성체계를 검토하고,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제정된 법의 구
성체계를 살펴보고, 그 중 건축에 관한 기본법으로써 『건축기본법』의 체계를 검토한다.

① 기본법의 특성 및 구성체계

□ 기본법의 특성

기본법이 제정된 이상, 기본법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들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기본법의 입법목적이나 기본이념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되며,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충실하게 제정·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입법내용의 종합적 조정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 법령 또는 법령의 각 개별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호간 또는 개별법령규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부하면서 종합적인 법제도·법령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들 규정 사이에는 조화의 관계 내지 균형의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⁸⁶⁾.

□ 기본법 구성체계

대부분의 주요 기본법 구성체계를 보면 1장 총칙으로 목적, 기본이념, 용어정의 등만 규정하는 법도 있으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법을 적용시킬 범위, 국가 등의 기본 책무까지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2장은 정책의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를 다루며 정책의 시행계획과 정책을 계획하는 위원회를 규정하고 3장에서는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며 4장, 5장은 보칙, 벌칙으로 구성된다.

[표 5-11] 기본법 구성체계

규 정 순 서	규 정 내 용	비 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기본방향, 기본원칙
	제3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용범위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제2장 ○○정책의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6조(○○기본계획)	
	제7조(시행계획)	
	제8조(○○위원회)	
제3장 ○○		정책의 구체적 내용
제4장 보칙	제9조(국회보고)	연차보고
	제10조(권한의 위임, 위탁)	
제5장 벌칙		

(출처 : 박영도 외(2007.8), 「국방·군사시설 기본법 제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38 재인용)

86) 박영도 외(2007.8), 「국방·군사시설 기본법 제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6년 12월 제정되었다. 이 법은 11개장 100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총칙,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기업자 지원,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9장 시정명령 등, 10장 보칙, 11장 별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은 입법목적 및 교육이념,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관계당사자의 교육권의 개념, 교육의 기회균등,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교원의 지위, 교육제도법정주의 보장,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의 원칙, 교육기관 설립의 자유 및 사학교육지원 원칙, 재외국민교육, 국제교육 및 국제교육협력 교육 등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 과학기술기본법

5개장 33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그리고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보화 촉진기본법

정보화라는 새롭게 대두된 영역을 규정하는 기본법이지만, 10년간의 제정과정을 거치면서 산발적으로 관련 개별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이러한 개별 법률에 대해서도 기본법의 역할을 하게 된다.

목적, 개념,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 정보화, 정보통신, 정보보호,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정보자원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정보화사업과 전기통신사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국무총리위원장, 장관참여, 정보통신부 주관, 한국전산원의 지원) 등과, 국가사회정보화의 촉진(각 부문별, 문화, 교육, 환경, 의료, 지역 등 포함),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등을 규정한다. 이후 2009년 5월 22일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었다.

6개장 51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제1장은 총칙,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5장 연차보고 등, 제6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로 구성되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전법』 이외에 1977년 『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환경보전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3개 법률이 국가환경시책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체계도 문제가 있어,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과 개별 대상을 규율하는 법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이 법은 국가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관련법률 상호간의 합리적 체계를 정립하여 환경보전시책이 국가 전체로서 유기적 연관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5개장 41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총칙, 제2장 환경보전 계획수립등, 제3장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제4장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건축기본법 체계 및 산업진흥 관련 내용 분석

□ 건축기본법의 개요

『건축기본법』은 건축의 생활적·사회적·문화적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 및 주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어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행정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제도의 목표·방향·대강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에 대하여 시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전형적인 ‘정책형 기본법’의 유형에 속한다. 개별 필지단위로 조성되는 건축물에서 확장하여 건축물의 집합관계에 중점을 두고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개별 건축물 위주의 규제적인 건축법과 달리 규범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⁸⁷⁾.

87) 차주영 외(2009.10), 「살고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경관·건축디자인 설정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1, p.31.

□ 건축기본법의 구성체계

이 법은 총 5개장, 24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국가 및 지자체, 국민의 책무 등을 다루고 있다.

제3조 정의에서 건축디자인의 개념을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으로써 ①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제7조), ②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제8조), ③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제9조)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내용,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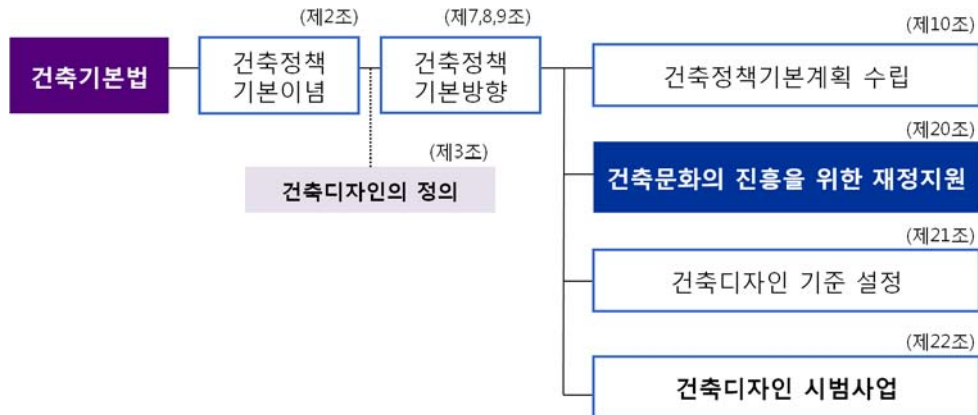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에서는, 제2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제21조) 및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제22조)에 관한 사항과 민간전문가의 참여(제23조),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의 시행(제24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표 5-12] 건축기본법의 주요 내용

1장	총칙	법의 목적, 건축의 기본이념, 용어정의, 주체와 책임과 의무
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기본방향의 실현원칙
3장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정책의 수립체계와 내용
4장	건축정책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구성·운영
5장	건축문화의 진흥	건축진흥의 재원 및 방안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구체적 지원체계 미흡

법 제2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부분에서는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등의 지침만 명시할 뿐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부족하며, 건축문화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만 언급하며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행사항인 계획과 제도, 추진체계,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국민지원사업 등 구체적인 체계가 부족하다.



[그림 5-1] 건축기본법의 구성체계

[표 5-13] 건축기본법 건축문화진흥 관련 규정

건축기본법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3.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5.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6.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7.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령 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려면 사전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3.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표 5-14]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의 구성

건축기본법 (총 5장 본문 24조 부칙)	건축기본법 시행령 (본문 21조 부칙)
<p>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p> <p>제2조 기본이념</p> <p>제3조 정의</p> <p>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제5조 국민의 의무</p> <p>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p> <p>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p> <p>제7조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p> <p>제8조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p> <p>제9조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p> <p>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p> <p>제10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p> <p>제11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p> <p>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p> <p>제4장 건축정책위원회</p> <p>제13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p> <p>제14조 국가건축정책위원 회의 기능</p> <p>제15조 건축정책 국회보고</p> <p>제16조 건축 기본조사</p> <p>제17조 기획단</p> <p>제18조 지역건축위원회</p> <p>제19조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p> <p>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p> <p>제2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p> <p>제21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p> <p>제22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p> <p>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p> <p>제24조 설계공모의 시행</p> <p>부칙</p>	<p>제1조 목적</p> <p>제2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p> <p>제3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p> <p>제4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p> <p>제5조 당연직 위원</p> <p>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p> <p>제7조 위원장의 직무</p> <p>제8조 위원회 회의</p> <p>제9조 간사</p> <p>제10조 분과위원회</p> <p>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p> <p>제12조 조사·연구의 의뢰</p> <p>제13조 수당 등</p> <p>제14조 운영 세칙</p> <p>제15조 건축 기본조사</p> <p>제16조 기획단</p> <p>제17조 지역건축위원회</p> <p>제18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p> <p>제19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p> <p>제20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p> <p>제21조 민간전문가의 참여</p> <p>부칙</p>

3. 소결 : 특성 및 문제점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조항 미흡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내용은 건축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개념이 명기되어 있다. 즉, 건축기본법에서는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부분 제20조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부분적으로 지원 사항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산업적 관점이기 보다는 건축도시관련분야의 부분적 지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건축설계는 건설산업의 용역업으로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보다는 건설산업의 성과관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조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건축기본법에는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추진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하다.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재단설립, 산업관련협회, 기술·교육지원 등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2001년, 건축서비스산업의 일부분으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한 지원 체제의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면 개정되어 최근까지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4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상의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건축서비스산업 부분은 포괄하지 않고 엔지니어링 부분에 국한되어 개별적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업과 엔지니어링산업은 건축서비스산업과 상호 연계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우 건설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전후방연계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산업구조는 관련 건설업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호 산업성장의 기반 강화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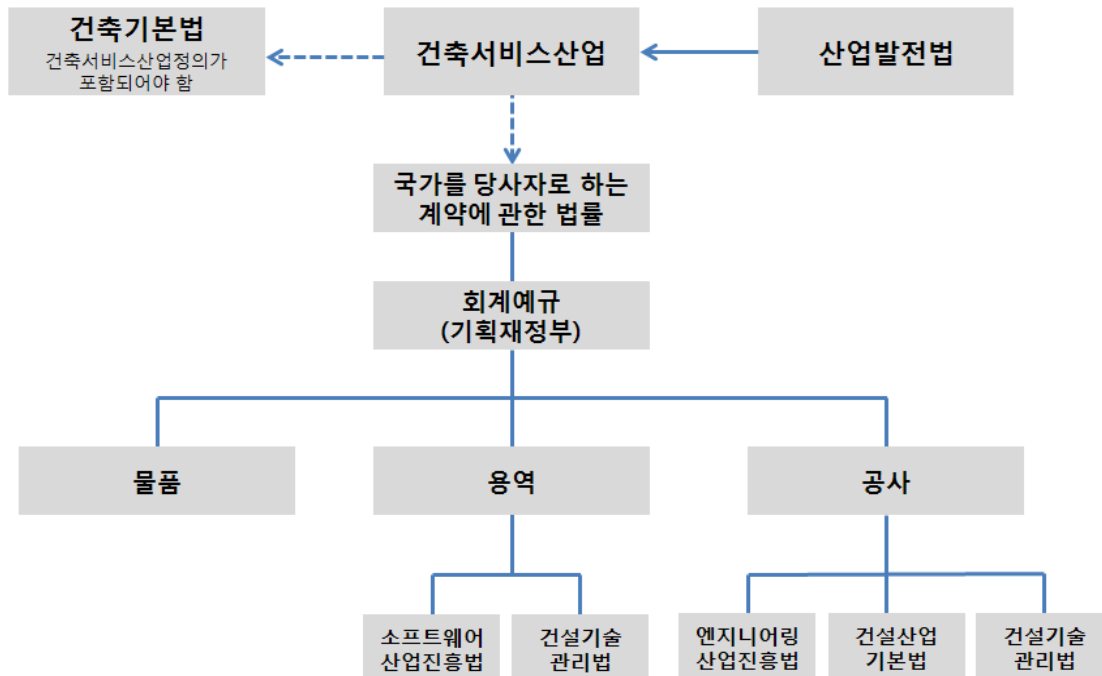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산업의 정의에는 산업활동의 ‘활동주체’가 함께 정의되어야 함

특정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산업관련 법들에서 산업을 정의할 때 산업 활동의 주체를 명시하는 경우 해당 산업활동이 더욱 분명히 정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와 ‘건설기술자’ 등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기술자’를, 『공간정보산업법』에서는 ‘공간정보사업자’ 등 산업의 정의에 산업 활동의 ‘활동 주체’를 함께 정의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이 건설이 아닌 건축(설계)분야를 서비스하는 산업이라 할 때, 현재 건축관련 법들 간 설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 행위를 하는 ‘활동주체’를 함께 고려하면서 활동주체와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주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정의될 필요가 있다.

➡ 명확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 정립을 위해
산업의 정의에 산업활동의 ‘활동주체’ 함께 고려 필요



[그림 5-2] 건축서비스산업관련 법체계정비대상 범위

제6장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비 방향 및 추진 전략

1. 법정비 주요 목표
2. 법정비 기본방향
3. 법정비 추진 전략
4. 결론 및 정책 제언

1. 법정비 주요 목표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을 법제도의 체계 속에 명시하여야 하며, 전략적 목표설정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육성 정책의 토대 구축

2) 건축의 산업적 개념 도입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마련

3) 건축의 경쟁력과 건축물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설계 별도의 계약방식 마련

2. 법정비 기본방향

1) 법정비 체계의 기본방향

이제까지 살펴봤듯이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축과 관계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이라는 개념의 특징적 요소와 이의 발전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입법정책적인 관점이 미성숙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명확한 입법안의 제시가 불가능한 시점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향후 여건의 추이를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입법을 위한 방

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내용을 한정하고자 한다. 우선 체계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 관련 법률을 활용하여 이에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과 관련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서비스산업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① 기존 관련 법률에 포섭하는 방안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필요한 각종 육성 내지 지원조치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행 법제에서 이를 규율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점은 우리의 법제가 부처별로 소관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서비스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그 대상이 되는 건축디자인이라는 점에 중점을 둔 산업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경우 이의 소관부처는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관련 법제에서 건축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4항에서는 국토정책국의 건축문화경관팀에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원 등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소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과 가장 관련성이 깊은 국토해양부 소관 현행 법제로서는 앞서 살펴본 『건축기본법』을 지적할 수 있으며 특히, 동 법률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디자인이라는 개념요소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서비스산업의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기본법』은 국가의 건축 관련 정책 전반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전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제유형이다. 이에 후술하는 것처럼 기본법의 성격상 관련 정책 전반이 아닌 특정 시책의 심층적인 추진과 전개를 위한 각종 조치나 처분 등을 상세히 규정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건축서비스 관련정책 전반을 『건축기본법』에 규율하기에는 입법상 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과 정책내용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규율사항이 많아지게 되고, 이를 현행 『건축기본법』에 편입할 경우에는 『건축기본법』 입법체계가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결과가 되어, 국가건축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감퇴될

우려가 많다. 다만, 현재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정책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 개념정의와 구체적인 시책의 방향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이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설정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율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태도라고 여겨진다.

②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입법 등 국가활동의 정책체계로서의 일관성은 반드시 새로운 법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의 법률의 존재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즉, 정책의 흐름이나 구체적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 기존의 법령을 검토하여 합리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체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형식의 남용이며 결코 바람직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산업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의 발전을 위한 각종 행정상, 재정상 시책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입법정책적인 당위성이 강력할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산업의 진흥 내지 발전을 위해서 현재에도 다수의 법제유형이 존재하고 있고, 국회계류중인 법안도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필요성이 있다면 신법의 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법률의 제정시에는 일반법 또는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와 일반법으로 한다면 어떠한 성격의 법률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일단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 내지 진흥정책이 사안의 긴급성 내지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를 통한 특별법으로 하기에는 곤란하므로 **일반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법적인 성격으로 추진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입법상 신법의 제정은 정책일반의 대강을 제시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특정 정책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실시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 두 가지 성격의 법률 가운데 어떠한 입법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본법으로서 제정하는 방안

현행 법제상 법령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법률유형은 대체로 국정의 중요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의 방향성과 대강을 천명·지시하는 정책입법·프로그램입

법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격을 가진 기본법을 제정하는 의의로서는 당해 정책의 이념이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의 준비를 도모하려는데 있다.

기본법은 국가차원에서 그 분야의 정책이 중요하고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인식을 제시하고, 그 책무나 결의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그곳에서 제시된 방향성과 지침에 따라 정책을 계획적·종합적·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 많다. 또한 사회상황의 변화에 수반하여 그 분야의 정책을 크게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새로운 이념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관련 개별법의 정비나 정책의 변경을 도모해가는 방법을 채용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아울러 입법수법령수의 증대, 무계획적인 입법, 법제도의 고도화·복잡화 등에 수반하여 법률간의 모순·충돌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정책의 통일성·체계성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정책의 기본적 방향과 전체상을 명확히 하면서 그 정서를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기본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부처간의 권한갈등 등의 원인이 되어온 부처이기주의행정의 폐해를 완화·시정하기 위해 관련되는 시책을 횡단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종합조정을 도모하는 구조로서 기본계획의 제도, 관계부처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심의회 등을 설치하는 등 조정이나 연대를 도모하여 정책전체로서의 종합적인 체계를 기대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한편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에서 형성되기보다는 현실의 정책을 장기적·종합적인 시야전망에 입각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의 구성이나 내각이 변경되더라도 관련 정책이 유지되도록 정책의 계속성·일관성·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법은 조직·인력 및 예산획득의 근거로서 의원이나 소관부처의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 기본법이 존재하는 정책분야와 기본법이 없는 정책분야의 구분에 관한 원칙이 없다는 점, 기본법의 규정내용이 새로운 정책을 규율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책을 옹호하고 고정화하는 것이 많다는 점, 규정내용이 선언적·훈시적이기 때문에 법규개념과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많은 비판이 있다.

또한 기본법이라는 법률의 존재는 법규범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나아가 법치주의 원칙을 형해화할 우려도 있으며, 규정내용이 추상적이므로 정부의 재량의 여지가 크고 기본법의 목적달성이 정부의 기본법 운용에 좌우되기 쉽다는 점에서 국민에 대하여 심리적인 만족감을 부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존재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부처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기본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실시법률의 단계에서 협의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법의 취지가 퇴색되는 상황도 존재한다.

이에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은 입법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은 해당 산업의 구체적 발전을 위한 주요 조치가 상세히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법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축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건축기본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태여 다시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오므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 진흥법 등 실시법으로 제정하는 방안

건축서비스산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디자인과 관련하여, 『건축기본법』에 건축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각종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건축기본법』의 실시법으로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5장의 산업관련 법제유형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진흥법’, ‘조성법’, ‘육성법’, ‘촉진법’, ‘발전법’이라는 제명으로 제정하고 있다. 현행법제상 그 제명에 각종 ‘진흥법’, ‘육성법’, ‘조성법’, ‘촉진법’ 등의 명칭이 붙은 법률은 기본법에 규정된 내용과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과 이들 법령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국정의 중요분야에 있어서 지도법적·지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위치되고 있으나, 다수의 기본법의 경우에는 그 구성과 규정에 관하여 일정한 유형이 있다. 대개의 경우 그 유형을 답습하고 있으나, 각종 진흥법·조성법·육성법·촉진법 등에서도 기본법과 거의 같은 규정을 두어 기본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도 많다. 법률의 제명에 ‘기본법’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 내지 내용을 가지는 진흥법·조성법·육성법·촉진법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결정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입안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면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조성’이라 함은 어떠한 활동을 지원,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여건·정보·인력 등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정비·보강함으로써 당해 활동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진흥’은 조성·개발·육성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널리 사용된다.

『관광진흥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진흥의 의미는 조성, 개발, 육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조에서도 “이 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진흥의 의미를 운영·지원·육성·발전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각종 특정 산업관련법상 제명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6-1] 산업 진흥·발전·육성·촉진 등을 위한 법 종류

제명	법률명	제명	법률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육성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지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법	석탄산업법 인삼산업법 종자산업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발전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기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산업발전법		
	전시산업발전법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법정비 방향 : “진흥법” 체계로 전개

건축서비스산업이라는 독자적인 산업유형을 널리 확산시키고 이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간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법령의 제명을 좀 더 폭넓은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진흥법” 체계로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법정비 내용의 기본방향

현행 법제상 그 제명에 기본법이 사용되는 법령과 진흥법·조성법·육성법·촉진법 등을 사용하고 있는 법령을 비교하는 경우 어느 것도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 되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일정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과 내용적인 면에서도 거의 변함이 없고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법령과 그렇지 아니한 법령간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입법정책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규율대상이 되는 사항을 특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진흥법체계나 특정 산업발전법제에서는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집행 시스템과 산업 인프라의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수요의 창출과 산업 신규 진입 유인, 산업 규모화 등이 핵심적 과제이고 이들 사항을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표 6-2] 진흥법 및 특정 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

법률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입법 목적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주요 내용	국가 등의 책무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등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고용 촉진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협회 및 공제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창업의 활성화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표준화의 추진 유통의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위의 입법사례를 기초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에 포함되어야 할 입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 주요 내용 구성(안)

부문	주요내용
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집행 시스템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 관련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산업 인프라의 구축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장려에 관한 규정 • 표준화에 관한 규정 • 디자인심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전문인력의 양성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구(협회, 단체 등) 설치에 관한 규정 •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수요의 창출과 산업 신규 진입 유인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술 내지 산업의 촉진에 관한 규정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 관련업무 종사자의 지원 내지 보호정책 등에 관한 규정
산업 규모화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규정 • 실태조사 등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3) 기타 입법시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① 건축서비스산업 개념의 명확화 필요

현행 건축기본법상의 건축디자인 개념도 상당히 불명확한 시점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정의하는 경우에 법 전체의 체계정립도 상당히 어렵게 되고, 결국 법의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때문에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건축디자인의 개념을 재설정하는 한편 건축서비스산업이라는 개념도 보다 정치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② 건축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활동주체의 범위 명확화 필요

건축서비스산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디자인과 관련하여, 『건축기본법』에서 ‘건축디자인’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행위를 영위하는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 활동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서는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소만들기

관점에서 건축, 토목, 조경 등 관련된 각 분야가 통합된 디자인이 구현되어야 한다”(제3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건축디자인 분야는 계획 및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 등의 분야에서 여러 활동주체가 혼재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한편,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을 수행하는 활동전문가(민간전문가)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1조).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 정의와 함께 이들 전문가 외에 ‘건축디자인’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활동주체로 포함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 법정비 추진 전략

1)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 정의 방안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전술했듯이 활동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련법령에 명기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의 대상 및 활동주체의 범위는 추후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우선 크게 두 가지 대안으로 나누어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각각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과 관련된 법조문에 해당하는 개정안 및 대안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 1안 :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건축설계에 국한

첫 번째 대안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주를 『건축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축설계’ 부분으로 규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범주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축 관련 서비스업’의 개념을 준용하면,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설공정, 건축법규 및 건설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로 규정할 수 있으며, 활동주체는 『건축사법』에 명시하고 있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포함’하여 정의할 수 있다.

장점

건축서비스산업의 활동범위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으로 그 범위를 한정지음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가 건축설계로 명확하다.

단점

건축서비스산업의 활동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M72111)’에 한정됨으로써 세세부 산업의 단일산업군만을 대상으로 산업진흥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표 6-4] 건축서비스산업 개념 정의 방안 : 1안

개정전	개정후
<p>건축기본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p> <p>2. "공간환경(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p> <p>3. "공공공간(공공공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p> <p>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p> <p>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p> <p>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p> <p>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건축기본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p> <p>2. "공간환경(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p> <p>3. "공공공간(공공공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p> <p>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p> <p>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p> <p>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p> <p>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8.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설공정, 건축법규 및 건설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p> <p>9.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p> <p>10. "건축서비스사업자"는 「건축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포함하여 건축디자인 및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 2안 : 건축서비스산업에 건축설계, 도시계획, 조경설계산업 정의 포함

두 번째 대안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주를 건축설계, 도시계획, 조경설계 부문까지 포함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범주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관련 산업의 개념을 준용하면, 건축서비스산업은 “설계, 건설공정, 건축법규 및 건설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 공원 및 기타 휴양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토지, 상업·산업·거주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토지지식, 건물 및 구축물의 배치, 토지활용, 조경설계 등의 지식을 이용한다. 또한 조경과 관련한 환경디자인도 포함한다.”로 규정할 수 있으며, 활동주체는 『건축사법』에 명시하고 있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를 포함하여 정의할 수 있다.

장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을 활동범위로 규정하듯이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M7211)의 세분류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관련사업과의 동반성장과 함께 사업연계를 통한 신규사업 창출이 가능하고, 부가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점

도시설계와 조경설계는 현행법상 정의를 갖고 있지 않아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5] 건축서비스산업 개념 정의 방안 : 2안

개정전	개정후
<p>건축기본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공공공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p>건축기본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공공공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u>“건축서비스사업”이란 설계, 건설공정, 건축법규 및 건설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사업 말한다.</u> 9. <u>“도시설계 및 조경설계 사업”이란, 공원 및 기타 휴양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토지, 상업·산업·거주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를 포함하며, 토지지식, 건물 및 구축물의 배치, 토지활용, 조경설계 등의 지식을 이용한다. 또한 조경과 관련한 환경디자인도 포함한다.</u> 10. <u>“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u> 11. <u>“건축서비스사업자”는 「건축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사 및 건축사보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를 포함하고, 건축서비스사업, 도시설계 및 조경설계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u>

2) 건축관련 개별법 개정 방안

여기서는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별도의 ‘진흥법’이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을 관련법에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건축설계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건축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서비스사업에 관한(사업범위 및 활동주체에 관한 정의) 정의를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현재 제2조(정의)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이 건설용역업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건설용역업’을 ‘건설관련산업’으로 개정하여 건축설계가 용역업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개정한다.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에서의 설계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가기술자격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설계가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제2조(정의) 등)한다.

3) 건축설계 계약기준 개정 방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축설계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이 『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건축기본법』 등 건축관련법에 정의가 선행되어야 실행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회계예규

회계예규에 ‘건축설계’와 관련된 계약 기준을 신설한다.

[표 6-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안)

개정전	개정후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p> <p>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p> <p>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9.8.18, 2009.8.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본조신설 2003.12.11]</p>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p> <p>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p> <p>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9.8.18, 2009.8.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u>건축기본법</u>』 제2조00호 규정에 의한 건축서비스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다. <p>(이하 좌동)</p>

4.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건축서비스산업 제도 개선 단계별 추진방향

① 1단계 : 건축관련법에 건축서비스산업 개념 명확화를 통한 확산

□ 건축서비스산업 개념 및 활동주체 범위 명확화

현재 법제도 여건 상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을 단순히 정의하는 경우 법 전체의 체계 정립도 상당히 어렵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로 건축서비스산업 개념을 보다 정치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의 활동 주체의 전문자격 기준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법 정비에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확산을 위한 활동영역 구분

건축서비스산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디자인’과 관련하여 『건축기본법』에서의 정의와 ‘건축디자인기준’이 적용될 범위를 고려해 볼 때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와 범위에 포괄해야 할 활동영역의 문제를 명확히 하여야 관련 산업분야의 확산이 유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② 2단계 : 『건축기본법』 부분개정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정의 및 개별법 개정

□ 건축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방향설정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

『건축기본법』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과 정책내용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경우, 관련되는 규율사항이 많아지게 되고 이를 현행 『건축기본법』에 편입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결과가 되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감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설정에 필요한 조항만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3단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안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흥법’ 마련

건축서비스 산업이라는 독자적인 산업유형을 널리 확산시키고 이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간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법령의 제명을 좀 더 폭 넓은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진흥법’체제로 전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기본방향

건축서비스산업관련 입법정책이 명확하지 않아 규율대상이 되는 사항을 특정할 수 없으나, 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집행 시스템과 산업인프라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수요의 창출과 산업 신규 진입 유인, 산업규모화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전반적인 산업진흥에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정책 제언

①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 정책개발 및 추진

□ 건축서비스산업 핵심영역 역량제고

- IT·시공 등 국내 비교우위 분야의 기술력을 토대로 핵심·원천 기술을 자립하여 건축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건축서비스산업의 글로벌 마켓에서 한국은 세계 12위 시장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IT 인프라면에서도 정부주도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기반이 마련된 상태이나,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부재로 산업전반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략방향이 부재한 상태이다.
 - 또한 세계 유수의 고 난이도의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으나, 건축설계 부분은 세계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 따라서 정부차원의 글로벌 마켓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IT·시공기술과 접목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미래 시장지배력 강화가 예상되는 유망분야 위주로 R&D 사업 전략 수립 필요
 - 수익성·예술성·기술성·성장성 중심의 전략을 발굴하고 분야별 R&D 방향 및 추진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 글로벌 인력양성 기반강화

- 건축서비스사업의 특화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 지배력 강화
 - 국내에는 현재 프로젝트 및 리스크 관리 개념, 기획설계 등 건축서비스산업의 핵심분야의 전문교육기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우수한 건축학 관련 대학을 중심

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술·환경에 대응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 재직자 현장교육강화, 인턴십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를 통해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업규모별, 지역별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 하여야 한다.

□ 해외 수주·수출지원 방안 수립

○ 지역 분야별 전략시장 발굴 및 중장기 전략 도출

-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수주는 리스크가 높은 시장에 대부분이 진출하고 있으며, 2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에는 진출하지 못한 상황이나,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의 건축설계사무소는 이미 한국시장에 진출하여 일정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니켄세케이 건축사 사무소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매년 매출 1,2위를 다투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다.
- 따라서 KOTRA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세계 건축서비스산업 시장분석을 토대로 전략시장을 발굴하고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해외수주 지원센터 운영

- 현재 해외진출을 돕는 다양한 기관과 조직이 상존하나 건축서비스분야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우선적으로 권역별 미래 전략시장으로 부각될 중심지역 위주로 수주지원 허브를 구축하여야 한다.

□ 성장 인프라 조성

○ 중소기업간 금융지원 강화를 통한 기업친화형 시장환경 조성

- 국내 건축서비스분야의 사업체의 규모는 10인 미만의 사무소가 88%이며, 100인 이상의 사무소 1.3%가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 따라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건축서비스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공동활용하게 하여 협업을 유도하고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 ‘신성장산업 집적시설’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대가기준 현실화

- 현재 동종 산업군인 엔지니어링 협회에서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예산편성지침’ 요율의 현실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와 비교한 건축서비스분야의 사업 대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도 엔지니어링 산업 사업대가의 80%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실제정부사업 발주에 있어서는 이것에 미치지도 못 한다.
-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유특성과 기술적 난이도,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합리적인 대가 마련이 시급하다.

② 건축법 개정을 통한 건축행정 선진화 방안

□ 『건축법』 분리 및 개정 연구 필요

○ 기능과 역할에 따른 법 정비방안

- 현재 건축법은 ‘건축인허가’에 대한 규정,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건축물의 유지 관리’, ‘건축행위에 대한 규정’,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 인증’ 등 행정상의 내용이 상이한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업무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축법』 분리 개정을 위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 일부 행정기능 민간부여 및 행정 분리

- 일본에서는 행정선진화를 위해 건축인허가를 민간에게 일부 허용하고 행정소요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인허가 대행업 인증과 전문가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건축서비스관련 행정을 전문화 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능을 민간에게 양도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 건축관련 업무 통합화 추진

- 현재 건축관련업무가 행안안전부 청사관리소, 기획재정부 소속 조달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산재되어 있어 행정민원의 원활한 처리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건축관련 통합 부서 추진을 통해 건축행정 업무 전문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강준구(2002.5), “주요국의 지식기반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8),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2008~2012)”, 과학기술부.
- 기획재정부(2006),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발전정책」.
- 김원규·오영식·김인철(2009),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배경과 기본방향”, 「e-KIET 산업경제 정보」, 산업연구원, 제389호.
- 김진욱 외(2008),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철수(2005), 「21세기 한국산업디자인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경립(2005), “세계화와 건축설계 환경의 변화”, 제37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 박명수 외(2004),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구조변화 분석」, 노동연구원.
- 박영도 외(2006), 「국방·군사시설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령체계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박영도 외(2007), 「국방·군사시설 기본법 제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박정수 외(2009), 「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의 경쟁우위 확보전략」, 산업연구원.
- 박진수(2005.7), “지식서비스산업 발전방향”,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 박천수 외(2006),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산업자원부(2003), 「참여정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 신동우 외(2007), 「사업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발주제도 시범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 심우일(2005),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유병규·정희식(2002.12), 「국내 서비스업의 문제점과 육성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윤영태(2005),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윤탤희(1994), 「한국의 디자인 진흥 정책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건우(2009),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제439호.

이상민 외(2009),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운영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작·이건우(2003), 「정책목표별 주요 서비스업 분류 및 서비스산업 정책지원 방안」, 산업연구원.

이영주(2009), 「지식서비스의 아웃소싱,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e-KiET 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제374호.

정연승(2006), 「중소기업의 GDP 비중 산출을 위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정종인·박장호·김영민(2007), 「사업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은행.

정형곤·이성봉·나승권(2009),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중·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0.4.28), 「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방안」.

진미석(2008.5), 「산업기술 관점에서의 지식서비스인력 양성방안」,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이동원 외(2008.3), 「한국의 경제규제비용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9), 「살고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경관·건축디자인 설정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천호선(1998), 「디자인 산업 진흥정책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경미(2008), 「글로벌 시대의 디자인 산업 육성 선진화 정책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봉현(2007),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지원방안」, 산업연구원.

최봉현·김홍석·유현선(2009), 「지식서비스 수요활성화 정책방안」, 산업연구원.

하봉찬(2006.9),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정체 현상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외(2006), 「디자인 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 김태년의원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06), 「건축설계업 발전종합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2009), 「정부청사 건립 실무편람」.

허재완(2000), 「경기도 지식기반산업의 현황과 잠재력」, 「경기논단」, 경기개발연구원, 봄호.

황은경 외(2007), 「건축관련 법령정비 연구」, 대한건축학회.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지역팀(2007.4), 「사업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은행(2005), 「지식서비스산업 발전방향」.

한국은행(2008), 「2005년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2009), 「2006년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2009), 「2007년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2010), 「2008년 산업연관표」 .

통계청(2007), 「2006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통계청(2007),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

통계청(2007),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및 원칙」 .

법률, 건축기본법(2008.6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건축법(2010.12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2009.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산업발전법(2009.5 전면개정), 법제처.

회계예규, (2010.4.15 개정·시행), 기획재정부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www.kidp.or.kr/>.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 <http://www.kfda.or.kr/>.

OECD(1999), 「The Knowledge Economy」 .

AIA(2006), 「The Business of Architecture」 .

Symeon Christodoulou(2003), “A Study on The Procurement of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for Public Works”, A Case for Qualifications-Based Selection(QBS), TRB 2003 Session on Managing Design Quality.

American Council of Engineering Companies(2004.10), 「Qualifications-Based Selection」 .

National Oceanic & Atmospheric Administration Acquisition & Grants Office(2006.01), The Brooks A&E Act.

US Army Corps of Engineers(2004.09), Competing for Architect-Engineer Contracts Awarded by the U.S.

Kevin Culbert(2010.4), 「IBISWorld Industry Report 54131 Architectural Services in the US」 .

C.Barnes&Co(2010), 「Worldwid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NAICS 54131)」 , IBISWorld.

US Census Bureau County Business Patterns.

United States Code, Title 40.

United States Code, Title 4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1.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New York State Education Law,
New York State Finance Law,
New York St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Law,
New York State Business Corporation Law,
New York City Charter,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http://www.aia.org/>.
Bidcontract, [http://www.bidcontract.com/State_County_City_Bids/government_contracts_bids_
New_York_State_NY.aspx](http://www.bidcontract.com/State_County_City_Bids/government_contracts_bids_New_York_State_NY.aspx).
NYS Architecture : Law, Rules & Regulations, <http://www.op.nysed./prof/arch/article147.htm>.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http://trb.metapress.com/content/e0365w7674vm8413>.
Qualifications Based Selection, <http://www.nysqbs.org/process.asp>.
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2007.9.10).
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2008.4.14).
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2008.9.8).
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2009.9.14).
日本ウィキペディアフリー百科事典.

A Study on the Legal System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for Green Growth

Kim, Jin Wook
Sim, Kyung Mi

In 2009, the government clearly stated, upon complete revision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that the architectural sector comes under the category of the knowledge services industry to lead green growth.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follow-up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 response to the new pattern of economic growth including green growth. However,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s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is extremely fragile, with the businesses remaining small-scale.

The market size of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of Seoul takes the 13th place of a total of 2,076 global cities.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creates high added value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with huge impact on the entire industries related because it is linked to a lot of industries.

As such, the study begins with the awareness that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as a potential growth engine needs to accommodate new patterns of economic growth, and that it is required to reorganize the industry towards an industrial structure and prepare measures for legal assistance to nurture the industry. In this vein, the study intend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industry to the architectural sector, suggest the need to revise architecture-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vide directions towards restructuring of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explore the reason the architectural sector, as a knowledge services industry, needs to be restructured into and recognized as an industry, Chapter Two analyzes the industrial value of the knowledge and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ies. In addition, the chapter examines the activities for the industrial

restructuring have been carried out primarily in the sectors of design and engineering, along with the current status of policy support.

The findings show that the contribution of the knowledge services industry is increasingly growing, bigger than the manufacturing. In addition, the industry turned out to have become a key method of increasing employment for the highly educated.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has added value of 1.5 times and employment impact of 1.9 times that of the manufacturing respectively, once 100 billion won is invested into the industry.

As for the design sector, the Promotion Act has gone through revisions since the 1990's. Also, the engineering sector began to recognize engineering technology from the industrial perspectiv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in 2010. Based on the revision, the Master Plan was established for the promotion of each individual industry, and policy support has been consistently provided accordingly. Currently,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s design is growing rapidly in the global market. In April 2010,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lan to support the engineering sector by providing 1.8 trillion won over the next five years. This reaffirms the urgency for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and preparation of promotion policies in regard of the development of a certain area.

Chapter Three investigates how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and the architectural design are recognized or defined in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architecture, in order to provide directions towards the restructuring of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In addition, the chapt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contract system for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examining the contract-related stipulations, and draws out the problems with the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s, while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stipulates on the definition of 'architectural design' that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targets, the provisions lack the concept of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In addition to that, it has been found that architectural design is still recognized as a target of performance management, as part of construction technology. The regulations involving contract fail to provide specific guidelines for design criteria, with those of accounting dealing with architectural design on the basis of a construction work-oriented contract.

With the intent to explore directions towards legal amendments so as to

reorganize the nation's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towards an industrial structure, in Chapter Four, the study reviews related foreign cases primarily of the US and Japan, where the industry is globally competitive and takes a large market share. First, in the US, the scope of architectural services is broadly stipulated under the law, and instead of the Lowest Price Award System, architects and architectural design firms are selected based on the qualifications and capabilities for the project concerned, and the cost is negotiable afterwards pursuant to the Brook Act. The fact that in entering into a contract, the priority is given not to price but to the capability of the architect or the criteria of architectural value,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What characterizes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of Japan is that, first architecture comes under the general principles of industrial rules included in the Industrial Act; second, exact criteria for the remuneration for a range of architectural tasks is stipulated in the Certified Architects Act; and third, a legal system is put in place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the architectural industry.

As a result of the review on architectur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imed at the restructuring of the architectural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it has been found that the stipulations involving the promotion of the architectural sector are partly provided in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However, they lack an industrial perspective and fail to provide detailed methods of implementation, as well as promotion system, all of which results in insufficient provision of viable solutions. Based on the review of a total of 33 laws and regulations aimed to support the promotion and assistance of specific industries, the study provides suggestions to prepare concrete measures to support and foster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including nurturing of professionals,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and assistance for technology and education.

In Chapter Six, the study sets up major goals of legal system improvement which are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Accordingly, the study provides directions towards the mod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and suggests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the legal system improvement from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The goals of legal system improvement include construction of the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policy for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industry to architecture, and preparation of a separate method of contract for architectural design. The directions towards legal system improvement are set to legislate a new Act. Here, the study suggests entitling the Act following the system of 'Promotion Act,' and accordingly provides suggestions for the structure of the contents. The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measures as strategies to push forward the legal system modification: measures to defin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revise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involving architecture, and amend the contract criteria for architectural design.

In the final chapter, the study provides directions to the promotion of legal system improvement for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for each stage of the promotion. The study suggests the first stage focus on clarifying the concept of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spreading the concept in society. In the second stage, it is recommended to amend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in part to defin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and revise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involving architecture. In the third stage, it is advised tha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be newly legislated. Coupled with this, the study provides policy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from the two different perspectives as follows: promotion of policy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Building Act.

The research is of significance as it provides opportunities for the society to recognize that the sector of architectural design, which has been acknowledged as target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construction sector, needs to be fostered and supported as a knowledge services industry with high added value. Also, the study provides the need and directions towards legal system improvement for the nurturing and restructuring of the architectural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the research will be the foundation for the policy establishment for both the modification of architecture-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d the overall fostering and support for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Key words :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Knowledge Services Industry, Green Growth, Legal System Improvemen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Architectural Contract

부록 1. 관련 법 주요 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기술관리법
3. 건축기본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기타 기본법 체계
6. 기타 산업진흥법 구조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0.7.5)

제2조 (정의)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 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이하 생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하는 건축공사의 종류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종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3.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의 하는 건축공사업(제25조)

제25조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 ①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공사업 : 도로·교량, 댐, 항만, 공항, 철도·지하철,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상·하수도 기타 토목공사분야
 2. 건축공사업 : 주거용, 상업용, 공공업무용, 교육·사회용, 전통양식건축 기타 건축공사분야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생산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공사분야
 4. 조경공사업 : 수목원, 공원 조성 그 밖의 조경공사분야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 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5조의3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 직무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체계

건설산업기본법					
장	조항	조문	장	조항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2조	정의		제55조	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제3조	기본이념		제55조의2	운영위원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5조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제57조	공제규정
	제6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제6조의2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9조	지분의 양도등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7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제8장 건설분쟁조정 위원회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등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제62조	대리인의 선임
	제9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제63조	책임준비금등의 적립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64조	시공상황조사등
	제11조	표시제한		제65조	조사 및 검사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제66조	보증금정수의 제한
	제14조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제69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	건설업양도의 공고		제69조의2	위원회의 관할
	제19조	건설업양도의 내용등		제70조	위원회의 구성
	제20조	건설업양도의 제한		제71조	위원회의 회의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제72조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제21조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		제73조	조정외의 거부 및 중지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74조	처리기간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75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23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76조	조정부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제77조	조정전 합의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제78조	조정의 효력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제79조	비용의 분담
	제27조	견적기간		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80조	위원회의 운영등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9장 시정 명령등	제81조	시정명령등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제82조	영업정지등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83조의2	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제31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제84조	영업정지등의 세부처분기준
	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 구
	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85조의2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86조	청문
	제3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86조의2	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0장 보칙	제86조의3	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8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 행
	제42조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제87조의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5장 경영 합리화와 중소건설 업자지원	제45조	경영합리화등의 노력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46조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제90조	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7조	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48조	건설업자간의 협력		제92조	수수료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제93조	별칙
제6장 건설업자 의 단체	제50조	협회의 설립	제11장 벌칙	제94조	별칙
	제51조	협회설립의 인가절차등		제95조	별칙
	제52조	건외와 자문등		제95조의2	별칙
	제53조	「민법」 규정의 준용		제96조	별칙
				제97조	별칙
				제98조	양벌규정
				제99조	과태료
				제100조	과태료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10.10.13)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건축공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設計監理)·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마. 건설공사의 감리
 -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사. 건설사업관리
 - 아.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직무(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 등 용역"이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 및 안전성 검토
 -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5. "발주청(發注廳)"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설계감리"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 법령과 제34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라 한다) 중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15호 생략)
-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主務官廳)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감리전문회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기술용역업 제36조

제36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

- ① 건설업자의 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설계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출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를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3~7항 생략)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는 개념 분리

13조(용역업자의 선정)

- ① 발주청(영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36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검측감리·시공감리·책임감리·건설사업관리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또는 설계감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 별표 5 제1호에 따라 평가
나.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에 따라 평가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에 따라 평가
 2. 삭제 <2009.12.28>
 3. 삭제 <2001.8.13>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6의3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이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복합의 정도, 친환경 건설기법(건설폐자재의 활용 등을 말한다)의 요구 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지질이 특이하거나 공사대상이 문화재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할 것
(가~마목 생략)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에 대하여는 제1호 각 목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정밀안전진단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토목공사: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의 특수교량, 댐, 공항, 항만시설 중 5만 톤급 이상 말뚝구조 및 20만 톤급 이상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배수갑문, 하저터널, 첨단교통체계시설의 공사
나. 건축공사: 대경간(大徑間) 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공사, 환승·복합 역사공사
다. 플랜트공사: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 공사, 고도처리방식에 따른 정수장 공사, 하수·폐수 처리 공사, 폐기물소각시설 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공사, 열병합·화력 발전설비 공사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삭제 <2006.12.29>
- ⑤ 삭제 <1999.12.6>
- ⑥ 삭제 <2006.12.29>

시행규칙 제13조의2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 ① 삭제 <2009.12.28>
- ② 발주청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과 별표 5 제3호(건설기술용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표 7(「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인 경우에 해당한다)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작품을 평가하여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체계

건설기술관리법			
장	절	조항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등의 조정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제6조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제6조의3	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 등
		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2절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 1절 모두삭제)	제15조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15조의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제16조	공동연구·개발등
		제16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제16조의3	기술평가기관의 설립
		제17조	건설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제18조	신기술의 활용등
		제18조의2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19조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제20조	건설기술용역의 육성
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제20조의2	설계등 용역업자들의 의무
		제20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제20조의5	설계등 용역업자들의 현황 통보
		제2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제21조의2	건설기술의 공모
		제21조의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21조의4	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제21조의5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제22조	설계감리
		제22조의2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4장 건설공사 품질관리등		제22조의3	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제22조의4	건설사업관리의 대가
		제22조의5	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제23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등
		제23조의3	설계등의 표준화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24조의2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제24조의3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
		제24조의4	공장인증의 취소등
		제25조	품질검사의 대행등
		제26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등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26조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제26조의4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제26조의5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26조의6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제26조의7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27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제27조의2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제27조의3	감리원의 책무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제28조	감리전문회사
		제28조의2	감리원의 관리
		제28조의3	감리원의 결격사유
		제28조의4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제28조의7	설비공사의 감리
		제29조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제30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제31조	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계속
		제32조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제33조	감리원의 업무정지등
		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제35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제36조	용역 및 시공평가등

장	절	조항	조문
제5장 건설감리협회		제36조의2	건설감리협회의 설립
		제36조의3	협회의 설립인가등
		제36조의4	업무
		제36조의5	임원 및 선출방법등
		제36조의6	보고등
		제36조의7	「민법」 규정의 준용
제6장 건설기술인협회		제36조의8	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제36조의9	협회의 회원
		제36조의10	협회의 설립인가등
		제36조의11	업무
		제36조의12	총회
		제36조의13	임원 및 선출방법등
		제36조의14	지원·육성시책의 강구
		제36조의15	지도·감독등
		제36조의16	「민법」 규정의 준용
제7장 보칙		제36조의17	시정명령
		제37조	자료등의 요청
		제37조의2	청문
		제38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등 금지
		제39조	권한등의 위임·위탁
		제4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의2	수수료
제8장 벌칙		제41조	벌칙
		제41조의2	벌칙
		제41조의3	벌칙
		제42조	벌칙
		제42조의2	벌칙
		제43조	과태료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3. 건축기본법 (시행 2008.6.22)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공공공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3.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5.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6.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7.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시행령 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려면 사전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3.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①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기타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위탁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성질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제23조 (개산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7. 삭제 <1999.9.9>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라.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
- 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 게 임대하는 경우
 - 타.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등을 제조·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및 공사 현장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에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 나. 삭제 (2006.12.29)
 - 다.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하는 경우
 -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다.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재배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택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확인후 2년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 아.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한 전시동원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 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
-

정한다)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7호 바목 및 사목, 동항제8호 다목 내지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 및 제7호 가목 내지 마목·사목·아목, 제1항제8호 나목·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3조의2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84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 무신고를 한 자일 것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①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④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제2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 ②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2.23, 1999.9.9, 2003.12.12, 2005.9.8, 2009.3.5>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2.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

5. 기타 기본법 체계

교육기본법(시행 2008.6.22)			과학기술기본법(시행 2010.2.4)		
장	조항	조문	장	조항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교육이념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학습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제6조	국가과학기술혁신 체계의 구축
	제7조	교육재정	제2장 과학기술정책 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
	제8조	의무교육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9조	학교교육		제9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10조	사회교육		제10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장 교육 당사 자	제12조	학습자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제13조	보호자		제13조	과학기술예측 등
	제14조	교원		제14조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제15조	교원단체		제15조	기초과학의 진흥
	제16조	학교등의 설립,경영자		제16조	민간기술개발 지원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7조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제3장 교육 의진 흥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증진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촉진
	제18조	특수교육		제19조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제19조	영재교육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확 충	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제20조	유아교육		제21조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제21조	직업교육		제22조	과학기술진흥
	제22조	과학 ,기술교육		제23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제24조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제23조의2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		제25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6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제25조	사학의 육성		제27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제28조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제29조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제28조	장학제도 등		제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제29조	국제교육		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제33조	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정보화 촉진기본법(시행 2009.7.23)		
장	조항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연차보고 등
제2장 정보화촉진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제5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제8조	정보화촉진위원회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의2	정보화책임관의 임명 등
	제9조의3	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제10조	한국전산원의 설립
제2장의2 국가사회정보화의 촉진	제11조	공공정보화등의추진
	제12조	정보문화의확산
	제12조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 등
	제14조	정보보호 등
	제14조의2	(삭제)
	제15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 등
	제15조의2	정보시스템에대한감리
	제16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16조의2	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
	제16조의3	정보통신응용서비스이용 등의활성화
	제16조의4	지적소유권의보호
제3장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제18조	기술개발의 추진
	제19조	정보통신 표준화의 추진
	제20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21조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
	제22조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의2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23조	유통구조의 개선
	제24조	정보화촉진 등의 국제협력 촉진
	제25조	정보통신관련기관의 지원 등
제4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제26조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성화
	제27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8조	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제29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초고속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제33조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
제5장 정보화촉진기금	제34조	기금의 재원과 용도
	제3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35조의2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립 등
제6장 보칙	제36조	권한의 위임
	제37조	과태료

6. 기타 산업진흥법 구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시행 2010.1.2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시행 2009.8.22)		
장	절	조항	조문	장	조항	조문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1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①	제2장 창업·제작·유통	제5조	연차 보고
		제6조	통계의 작성 ^②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창업의 지원 ^③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④
	제2절 정보통신기술 의 진흥	제7조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①		제9조	투자조합 ^⑤
		제8조	연구과제 등의 지정 ^⑥		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⑤
		제9조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⑦		제10조의2	임성보증제정의 설치 등 ^⑤
		제10조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11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⑤
	제3절 정보통신표 준화 및 인증 촉진	제11조	기술예고		제12조	유통활성화 ^⑤
		제12조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⑧		제12조의2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⑤
		제13조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③		제13조	디지털 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⑨
		제14조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③		제14조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 ^⑤
	제4절 정보통신산 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15조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③		제15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⑤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⑩		제15조의2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⑤
		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⑪		제15조의3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⑤
		제18조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⑩
	제5절 정보통신기 업 지원정책	제19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16조의2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20조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⑫		제16조의3	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제2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⑫		제16조의4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제22조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⑫		제17조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제6절 정보통신산 업진흥원	제23조	기술지도		제17조의2	기술료의 징수
		제24조	각종 정보의 제공		제17조의3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제25조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제17조의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준용
		제26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⑬		제18조	디지털문화콘텐츠 표준화의 추진 ^⑬
제3장 지식정보 산업의 육성	-	제27조	사업 ^⑭		제19조	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⑬
		제28조	재원 등 ^⑭		제20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⑮
		제29조	업무의 지도·감독 ^⑭		제21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⑮		제2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31조	「만남」의 준용 ^⑮		제23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제32조	지식정보산업의 육성 등		제24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제33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제25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34조	결격사유		제26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제4장 정보통신 진흥기 금	제35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합병 등		제27조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제36조	휴업·폐업·재개		제28조	인·허가 등의 의제
		제37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취소 등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38조	보고 등		제28조의3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제4장 정보통신 진흥기 금	-	제39조	기록·자료의 보존 등		제29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제40조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 설립		제30조	세제지원 등
		제41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제30조의2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42조	기금의 조성		제30조의3	문화산업통계의 조사
제5장 보칙	-	제43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30조의4	소비자 보호
		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제6장 문화산업전문 회사	제3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⑮
		제4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3조	문화산업전문회사 ^⑮
		제46조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제44조	회사의 형태 ^⑮
제6장 벌칙	-	제47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45조	사원의 수 ^⑮
		제48조	비밀 업무		제46조	사원총회 ^⑮
		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7조	겸업 등의 제한 ^⑮
		제50조	벌칙		제48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⑮
제6장 벌칙	-	제51조	양벌규정		제49조	업무 ^⑮
		제52조	과태료		제50조	회계처리 ^⑮
					제51조	업무의 위탁 등 ^⑮
					제52조	등록 등 ^⑮
제6장 벌칙	-				제53조	해산 ^⑮
					제54조	합병 등의 금지 ^⑮
					제55조	감독·검사 등 ^⑮
					제56조	등록취소 ^⑮
제6장 벌칙	-				제56조의2	정보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⑮
				제7장 보칙	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59조	과태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시행 2009.3.18)		산업디자인 진흥법(시행 2009.5.21)	
조항	조문	조항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의2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②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③
제3조의3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지원 ^④	제5조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⑤
제3조의4	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촉진 시책	제6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제3조의5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⑥	제7조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착금지
제3조의6	기술사의 고용확대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②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⑥
제5조	정부등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제10조	산업디자인의 보호
제6조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지원 등 ^④	제10조의2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⑦
제1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⑥
제11조	지원배제	제12조	진흥원의 경비 지원
제12조	협회의 설립 등 ^⑥	제13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3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⑥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	법인격	제15조	보고 및 검사
제15조	정관의 변경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15조의2	협회·조합임원의 자격요건		
제16조	공제규정		
제19조	보고·검사 등		
제20조	행정조치		
제21조	위임규정		
제2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4조	성과품에의 서명날인		
제25조	비밀누설금지		
제26조	권한의 위탁		
제27조	벌칙		
제2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29조	양벌규정		
제30조	과태료		

※ 각 법률의 공통사항

- ① : 계획수립
- ② : 전문인력 양성
- ③ : 국제 표준화
- ④ : 연구, 개발지원
- ⑤ : 사업지원
- ⑥ : 진흥원(전문회사)
- ⑦ : 통계(DB구축)
- ⑧ : 해외진출 지원

부록 2. 회계예규

1. 회계예규 1
2. 회계예규 2
3. 회계예규 9
4. 회계예규 11

1. 회계예규 1 (2010.4.15 개정·시행)

제5조(제한기준)

- ①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있어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한다.
-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있어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시행령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있어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2.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가.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 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3.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4. 당해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예:동일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를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사·도의 관한구역안

- 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예: 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제한]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9.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시행령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감리용역이 당해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감리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6조(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다음 각목의 공사의 경우에 지방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억원이하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1억원이하

제8조(집행기준)

- 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정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②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3. 〈삭제〉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④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77조(계약실적의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 및 특례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8조(계약실적보고서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실적보고서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첨 1 및 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의 목적
 -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적용여부)
 -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이하 같다)
 -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의 목적
 -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 다. 계약의 변경내용
 - 라. 계약변경의 사유
-

제79조(조달청 위탁계약의 계약실적보고 작성)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그 위탁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에 조달청에 위탁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0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5조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실적보고서는 별첨 3 내지 6서식에 의하여 회계별(또는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 그 위탁관서는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이를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관서 소관의 회계별 계약실적보고서를 집계하여 별표 각호 서식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계약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합산하여야 한다.
3.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2조(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조달청장은 정부수요물자와 비축물자의 구매계약, 용역 및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각호 서식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소관별·회계별(또는 기금별)로 작성하여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축물자와 정부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구매실적은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외의 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물품 및 용역의 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한 후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3조(실적보고대상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적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86조(설계비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에 규정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7조(설계비 보상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

[별첨 3] 계약실적 총보고서

I. 계약실적 총보고서(1)

(단위 : 건, 백만원)

	유형	일반경쟁		제한경쟁 ⁸⁸⁾		지명경쟁		수의계약		계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국제입찰 대상계약	고시금액 이상	물품									
		용역									
		공사									
		계									
국제입찰 비대상 계약 ⁸⁹⁾	고시금액 이상 ⁹⁰⁾	물품									
		용역									
		공사									
		계									
	고시금액 미만	물품									
		용역									
		공사									
		계									
	소계	물품									
		용역									
		공사									
		계									
계	물품										
	용역										
	공사										
	계										

88) 국제입찰 대상계약은 제한경쟁을 별도구분하지 않고 일반경쟁에 포함(제한경쟁은 “0” 으로 기재)

89) 임의 국제입찰(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은 아니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법 제4조제3항, 특례규정 제3조제4항, 회계규칙 제11조제4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실시한 국제입찰) 포함(상세내역은 <표 III-5>에 기재)

90) 고시금액이상 계약중 협정, 법, 특례규정, 지방재정법 및 회계규칙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실적을 기재(국제입찰 제외사유별 상세내역은 <표 III-1>에 기재)

I. 계약실적 총보고서(2)⁹¹⁾ : 공사계약의 금액에 따른 구분

(금액단위 : 백만원)

유형	금 액 구 분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익계약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앙 행정 기관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81억원미만										
	81억원이상~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소 계										
광역 지방 자치 단체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244억원미만										
	244억원이상~1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소 계										
정부 투자 기관 등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244억원미만										
	244억원이상~1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소 계										
총 계											

91) 공사계약에 대하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금액구분에 따라 실제 계약실적을 해당되는 부분에 기재한다.

I. 계약실적 총보고서(2-1)⁹²⁾: 입찰에 의한 공사계약 구분

(금액단위 : 백만원)

유형	구 분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 앙 행 정 기 관	턴 카· 대안 입찰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내역 입찰	PQ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비PQ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총액입찰										
	소 계											
광 역 지 방 자 치 단 체	턴 카· 대안 입찰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내역 입찰	PQ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비PQ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총액입찰										
	소 계											
정 부 투 자 기 관 등	턴 카· 대안 입찰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내역 입찰	PQ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비PQ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총액입찰										
	소 계											
총 계												

92) 공사계약에 대하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금액구분에 따라 실제 계약실적을 해당되는 부분에 기재한다.

I. 계약실적 총보고서(3)⁹³⁾

(단위 : 건, 백만원)

		유형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익계약		계	
			건수	계약금액 추정가격	건수	계약금액 추정가격	건수	계약금액 추정가격	건수	계약금액 추정가격	건수	계약금액 추정가격
국제 입찰 대상계 약	고시 금액 이상	물품										
		용역										
		공사										
		계										
국제 입찰 비대상 계약	고시 금액 이상	물품										
		용역										
		공사										
		계										
	고시 금액 미만	물품										
		용역										
		공사										
		계										
	소계	물품										
		용역										
		공사										
		계										
계		물품										
		용역										
		공사										
		계										

93) 계약실적 총보고서(3)에는 설계변경 등이 반영된 당해연도 말 계약실적(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계약금액이 조정된 총 계약금액)을 기재
 - 단, 총보고서(1)과 건수, 추정가격은 같아야 함
 - 기타사항은 총보고서(1)의 작성 방법과 동일 함

[별첨4]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중 II-1-2. 공사 및 용역 발체

(단위 : 건, 백만원)

품목번호 ⁹⁴⁾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⁹⁵⁾		계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계								

94) 품목번호는 UNCPD(국제연합표준상품분류)에 따른 품목을 의미하여, 내용은 다음과 같음

95) 협정 제15조 및 특례규정 제23조에 의한 수의계약(Limited Tendering) 으로 집행된 국제입찰을 말하며
 <표 I> 및 <표 II-2>의 굵은 선대 통계와 일치해야 함

품목번호	HS Chapter	내 용
1	51	건설공사
2	61	“모터차량·모터사이클 판매 및 유지보수”
3	62	중개·도매(모터차량·모터사이클 중개·도매 제외)
4	63	소매, 개인·가정용품수리
5	64	호텔·식당
6	71, 73	육상·항공 운송
7	72	해상운송
8	74	보조운송
9	75	우편·통신
10	81	금융중개
11	82	부동산
12	83	중개인 없는 리스·임대
13	84	컴퓨터관련
14	85	연구·개발
15	86	법률·회계·감사·장부기장·세무, 시장조사·여론조사, 경영컨설팅, 설계·엔지니어링·기타 기술용역
16	87	기타 경영용역
17	88(a)	농업, 광업, 제조업(인쇄·출판 제외)
18	88(b)	인쇄·출판
19	89	무형자산
20	91	행정, 치안
21	92	교육
22	93	보건·사회복지
23	94	오물·쓰레기 처리, 공중위생 기타 환경보호
24	95	회원제조직용역
25	96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26	97	기타용역
27	98	고용인 있는 주거용역
28	99	국외조직에 의한 용역

※ 2, 3, 5, 10, 11, 14, 19, 20, 21, 22, 24, 26, 27, 28번 품목은 국제입찰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0으로 기재

2. 회계예규 2 (2010.4.15 개정·시행)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9조제3항 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18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5조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제19조(경비)

①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5.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

제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한다.

일 반 건 설 공 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미만	5.5	5천만원~3억원미만	5.5
30억원이상	5.0	3억원이상	5.0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2조(공사손해보험료)

①공사손해보험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를 곱하여 계상한다.

②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를 곱하여 계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37조(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45조(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이 장은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정가격의 합리적 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등록신청)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할 경우에는 별표 7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제46조제2호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조사요원 재직증명서 1부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관련 별표5(기술·기능분야)에 의한 기계, 전기, 통신, 토목, 건축 직무분야 중 3개이상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인 자의 재직증명서 1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공사기간: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비목						
순공사 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 공 식 〉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 (가)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 공 식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계상방법

- (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나)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를 객관성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 (다)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공사 종류별	건 축 공 사	14.5
	토 목 공 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5
공사 규모별	5억원 미만	14
	5~30억원 미만	15
	30억원 이상	16
공사 기간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17%+14.5%)/3 = 15.5%

(별표3) 일반관리비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타·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물품의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3. 회계예규 9 (2010.4.15 개정·시행)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와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 ④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⑤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 ⑥ 제2항 각호의 사유 및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회계예규 11 (2010.4.15 개정·시행)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을 말한다.
2. “책임감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와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주요구조물인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3. “감리전문회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써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감리원”(검측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검측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보좌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지속적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 및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감리업무수행지침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침서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발주기관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발주기관은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품·설비의 제공
 -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 라.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 마.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 사. 기타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건설기술관리법」 제52조제1항의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감리원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임화·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

부록 3. 건축디자인 관련 조례 및 국회계류 중인 법률(안)⁹⁶⁾

1. 자치단체의 건축디자인 관련 조례
2. 디자인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1. 자치단체의 건축디자인 관련 조례

「건축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들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서는 건축디자인이라는 용어외에도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들 개념요소를 검토할 경우 건축물, 공간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디자인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전체적인 의미는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① 광주광역시 건축디자인 진흥조례(시행 2009.10.1, 조례 제3736호)

이 조례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제명에서 “건축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건축디자인에 관한 개념설정, 건축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기타 건축디자인 진흥을 위한 조치 등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축디자인”의 개념과 관련하여 현행 「건축기본법」 상의 개념과 약간 달리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가 설계·조성하는 건축물의 형태·공간·시설 등에 대해 심미적·기능적·상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행하는 계획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로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조례에서는 건축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건축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건축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제15조), 우수디자인 건축의 권장 등(제16조), 국내·외 교류협력의 증진(제17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추진(제18조), 공공건축물의 설계 공모(제19조), 건축디자인 공모전 개최(제20조), 우수건축디자인 선정 및 홍보(제2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96) 본 내용은 박영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작성한 원고를 정리한 것임

②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시행 2010.7.15, 조례 제5001호)

이 조례에서는 건축디자인 개념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도시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채용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의 개념을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조례에서는 시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3조),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4조)

기타 조례에서는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제5조),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설치(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시행 2009.5.7, 조례 제3874호)

이 조례에서는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 창의적인 예술성의 추구,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및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이라는 공공디자인의 개념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시각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로서 정의하고 있다.(제2조)

기타 조례에서는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와는 별도로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시행 2009.5.7, 경기도 조례 제3875호)”를 마련하여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④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시행 2008.8.8,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현행 「경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을 혼합한 “경관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도시경관”을 도시 및 자연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한 도시시설물의 색채·형태·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한 계획 및 사업으로 정의하고,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로서 정의하고 있다. 기타 이 조례에서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제2장),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제3장), 경관협정(제4장) 및 경관디자인위원회(제5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디자인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현재 디자인과 관련되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개의 의원제안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으며, 이 법률안의 내용들은 건축디자인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공공디자인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률안은 2009.9.11 전여옥 의원 등이 제안한 의원입법으로서, 제안이유는 법령의 미비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의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워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공공디자인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목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

제6조(공공디자인의 감리)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확보)

제8조(공공디자인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률안에서는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 중 공공기관이 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을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감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의 대부분의 내용이 혼시적이거나 지칭적인 내용으로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내용은 없으나,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등록과 출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 개념(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도시건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또는 배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공공디자인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법률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을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감리를 받도록 하고, 감리를 받아야 하는 공공디자인의 범위나 전문가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법률안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감리대상 공공디자인의 범위와 전문가자격에 관해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2) 디자인 기본법(안)

이 법률은 2008.10.2 남경필 의원 등이 제안한 의원입법으로서, 입법취지는 디자인 분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종합적 디자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위한 기본법적인 근거도 부재하므로 디자인문화 및 산업 전반의 진흥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디자인 기본법(안) 목차

제1조(목적)	제9조(위원회 심의·조정 결과의 통보 등)
제2조(기본이념)	제10조(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정의)	제11조(종합계획의 승인 등)
제4조(디자인의 구분)	제12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3조(협조 요청)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디자인 교육)
제7조(국가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디자인에 관한 조사·연구)
제8조(사무처)	제16조(여론 수립)

특히, 이 법률의 제정취지는 현재 지식경제부는 ‘산업디자인 진흥법’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국토해양부는 ‘건축기본법’에,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각각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디자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므로 정부부처간 단편적이고 단절적인 정책수립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이 어렵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디자인의 진흥·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안 제7조 제1항), 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가디자인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7조 제2항),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정하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안 제7조 4항)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서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그 밖의 디자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문화산업의 하나로 분명히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산업의 영역이 아닌 문화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디자인정책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 부처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이 법률안도 문화무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법률에서는 정의규정에서 디자인을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공간디자인, 뉴미디어디자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법률상의 디자인 개념과 각 개별법상의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혼재되어 있으며, 하나의 디자인 영역에 대하여 각기 다른 명칭이 사용되어 법체계적으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간디자인은 「건축기본법」 상의 건축디자인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으며,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공간디자인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상의 산업디자인의 하위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는 ‘산업디자인’을,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디자인’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개념이 기본법인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본법과 개별법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제정안과 「건축기본법」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정안이 디자인 영역을 총괄하는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간디자인의 한 영역으로서 건축디자인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함으로써 건축디자인이 제정안의 디자인 개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조경기본법(안)

이 법률은 2010.1.5 허천 의원 등이 제안한 의원입법으로서, 입법취지는 조경을 관할하는 기본 법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국토기본법, 건설 및 건축 관련법, 산림 관련법 등 인근 유사 분야에 분산 규정됨으로써 각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상충될 수 있는 조경관련 조항을 총괄하고, 향후조경관련 개별법의 정비 및 추가 제·개정의 기준이 되는 모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경기본법(안) 목차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조경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국가조경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국가조경기본계획의 내용)
- 제8조(지역조경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연차별 조경집행계획의 수립)
- 제10조(조경집행실적의 제출·승인 및 보고)
- 제11조(계획 간의 조정)
- 제12조(조경동향에 대한 연차보고)
- 제13조(조경정책의 국회보고)

제3장 국가조경정책위원회 등

- 제14조(국가조경정책위원회의 설치)
- 제15조(정책위원회의 심의)
- 제16조(분과위원회 및 사무처)
- 제17조(조경심의위원회)

제4장 보칙

- 제18조(조경진흥기금의 설치 등)
- 제19조(조경디자인 기준 설정)
- 제20조(조경 품질인증제도)
- 제21조(조경 시범사업의 실시)
- 제22조(조경 전문인력의 양성)
- 제23조(국토통일 대비 조경사업)

이 법률안은 그 체계 및 절차와 관련하여 대체로 「건축기본법」과 매우 유사하게 구성하고 있는 바, 제정안이 조경관련 법률들에 대한 기본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와 기존제도와의 중복문제 등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제정안은 “조경”에 대해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환경과 경관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전, 복원, 창출 및 개선하기 위한 제반의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안 제3조제1호), “국토공간”에 대해서는 “건물에 의하여 건폐되지 아니한 광의의 녹지 개념인 오픈스페이스를 포함한 자연 및 도시환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안 제3조제2호)

이와 같은 용어정의가 국토환경 및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유사취지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바, “조경”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의 개념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녹화” 등의 개념과 유사하며, “국토공간”에 대해서는 「건축기본법」상 “공간환경”과 개념적 차이가 크지 않은 측면이 있다.

부록 4. 일본 참고법조문 및 건축설계사무소 순위

1.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2.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3. 기술사법
4. 건축기준법
5. 건설업법
6. 건축사법
7. 중소기업 신용보험법
8. 건축설계사무소 순위

일본의 법률체계는 헌법·법령통칙, 행정법, 재판법, 민사법, 형사법, 사회법, 산업법, 지적재산권, 환경법 등 약 11개의 큰 분류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산업법 내에 통칙, 농림수산업, 공업, 금융·보건, 건축, 운수, 전기통신 등의 법률체계를 갖고 있는데, 건축서비스산업관련 법률체계가 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관련 법률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법 내의 관련법들중에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 조합법, 기술사법, 건축기준법, 건설업법, 건축사법 등의 법조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사적 독점 및 부당한 거래 제한

제2조 5항[사적독점]

이 법률에 대해 「사적 독점」이란, 사업자가, 단독에, 또는 다른 사업자와 결합해, 혹은 통모하여, 그 외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배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6항[부당한 거래제한]

이 법률에 대해 「부당한 거래 제한」이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그 외 어떠한 명의를 불문하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대가를 결정, 유지 혹은 올리거나 수량, 기술, 제품, 설비 혹은 거래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서로 그 사업 활동을 구속하거나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9항[불공정한 거래방법]

이 법률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 방법」이란,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경쟁자와 공동 하고,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 ㄱ. 어느 사업자에 대해, 공급을 거절해, 또는 공급과 관련되는 상품 혹은 역무의 수량 혹은 내용을 제한하는 것.
 - ㄴ. 다른 사업자에게, 어느 사업자에 대한 공급을 거절시켜, 또는 공급과 관련되는 상품 혹은 역무의 수량 혹은 내용을 제한시키는 것.
2. 부당하게, 지역 또는 상대방에 보다 차별적인 대가를 가지고, 상품 또는 역무를 계속해 공급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시킬 우려가 있는 것
3.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상품 또는 역무를 그 공급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현저하게 밑도는 대가로 계속해 공급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시킬 우려가 있는 것
4. 자기의 공급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드는 구속의 조건을 붙이고, 해당 상품을 공급하는 것
 - ㄱ. 상대방에 대해 그 판매하는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을 정해 이것을 유지시키는 것 이외 상대방의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의 자유로운 결정을 구속하는 것
 - ㄴ. 상대방의 판매하는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사업자의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을 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이것을 유지시키는 것 이외 해당 사업자의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의 자유로운 결정을 구속시키는 것
5.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에게 우월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고,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 ㄱ. 계속해 거래하는 상대방(새롭게 계속해 거래하려고 하는 상대방을 포함한다. ㄴ에 대해서도 같다.)에 대해서, 해당 거래와 관련되는 상품 또는 역무 이외의 상품 또는 역무를 구입시키는 것.
 - ㄴ. 계속해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금전, 역무 그 외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시키는 것
 - ㄷ.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의 거래와 관련되는 상품의 수량을 거절해,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와 관련되는 상품을 수령한 후 해당 상품을 해당 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수하게 해 거래의 상대방에 대해서 거래의 대가의 지불을 늦추어 혹은 그 액을 줄여 그 외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의 조건을 설정해, 혹은 변경해, 또는 거래를 실시하는 것.
6. 앞의 각 호로 드는 것의 외,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중 공정 거래 위원회가 지정하는 것
 - ㄱ.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
 - ㄴ. 부당한 대가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
 - ㄷ.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또는 강제하는 것
 - ㄹ.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
 - ㅁ.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
 - ㅂ. 자기 또는 자기가 주주 혹은 임원인 회사와 국내에 있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그 거래의 상대방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해당 사업자가 회사인 경우에 대하여, 그 회사의 주주 혹은 임원을 그 회사의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도록, 부당하게 유인 혹은 강제하는 것.

사업자 단체규제 및 결합, 양도 등의 규제

제8조 [사업자 단체규제]

사업자 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
 2. 제6조에 규정하는 국제적 협정 또는 국제적 계약을 하는 것.
 3. 일정한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
 4. 구성 사업자(사업자 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
 5.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방법으로 해당하는 행위를 시키도록 하는 것.
-

제15조 [사업 결합규제]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합병에 있어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2. 해당 합병이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따르는 것인 경우
-

제15조 2항 [공동 신설분할·흡수분할]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 신설 분할(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 하고 하는 신설 분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거나 또는 흡수 분할을 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공동 신설 분할 또는 해당 흡수 분할에 있어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2. 해당 공동 신설 분할 또는 해당 흡수 분할이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따르는 것인 경우
-

제16조 [사업의 양도의 규제]

회사는, 다음에 드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의해 다음으로 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다른 회사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 양도 수령
 2. 다른 회사의 사업상의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 양도 수령
 3. 다른 회사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 입차
 4. 다른 회사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한 경영의 수입
 5. 다른 회사와 사업상의 손익 전부를 공통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

제9조 [사업 지배력 과도집중 회사의 규제]

다른 국내의 회사의 주식(사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회사는, 이것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8조 4항 [독점적 상태의 규제]

독점적 상태가 있을 때는, 공정 거래 위원회는, 제8장 제2항에 규정하는 수속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사업의 일부의 양도 그외 해당 상품 또는 역무에 대해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치에 의해,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공급하는 상품 혹은 역무의 공급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현저한 상승을 가져오는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축소해, 경리가 불안정하게 되거나 또는 국제 경쟁력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해당 상품 또는 역무에 대해 경쟁을 회복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조치가 강구되는 경우는, 이 제한이 없다.

1. 연간 하나의 사업자의 쉐어가 50%를 넘을까 2의 사업자의 쉐어의 합계가 75%를 넘는 것
 2. 다른 사업자가 신규 참가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것
 3. 그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정한 상품 노동에 대해서, 상당 기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비의 변동에 대비하여,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는지, 그 저하가 작은 동시에 그 기간에 있어 다음의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고 있는 것
 - ㄱ. 표준적인 이익율을 현저하게 웃도는 이익을 얻고 있는 것
 - ㄴ. 표준적인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에 비교해 현저하고 고액의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
-

2.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다음의 조합은,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쇼와 22년 법률 제54호, 이하 「사적 독점 금지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법 제 22조 제 1호의 요건을 갖추는 조합으로 간주한다.

1. 사업협동조합, 화재공제 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에 있어, 그 조합원인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자
 - ㄱ.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3억엔(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0만엔,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엔)을 넘지 않는 법인인 사업자
 - 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명(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50명,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명)을 넘지 않는 사업자
2. 사업협동 조합 소조합
3. 앞의 2호에 해당하는 조합을 가지고 조직 하는 협동조합 연합회

2. 사업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연줄, 전항 제 1호A, 또는 B.에 드는 사람 이외의 사업자를 조합원에게 포함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조합이 사적 독점 금지법 제 22조 제 1호의 요건을 갖추는 조합에 해당할지의 판단은, 공정 거래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3. 전항에 해당하는 는 조합은, 제1항 제1호 ㄱ. 또는 ㄴ.에 드는 사람 이외의 사업자가 조합에 가입한 날 또는 사업자인 조합원이 동호 ㄱ. 또는 ㄴ.에 해당하는 자로 끝나고 부터 1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정 거래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기술사법

정의 및 기술사의 업무와 관련된 조항

제2조 [정의]

이 법률에 대해 「기술사」란, 제32조 제1항의 등록을 받아 기술사의 명칭을 이용하고, 과학기술(인문과 학에만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고등의 전문적 응용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평가 또는 이것들에 관한 지도의 업무(다른 법률에 대해 그 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는 업무를 제외하다.)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이 법률에 대해 「기술사보」란, 기술사가 되는데 필요한 기능을 수습하기 위해, 제32조제2항의 등록을 받아 기술사보의 명칭을 이용하고, 전항에 규정하는 업무에 대해 기술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장 [기술사 등의 업무]

제44조 [신용 실추 행위의 금지]

기술사 또는 기술사보는, 기술사 혹은 기술사보의 신용을 손상시켜 또는 기술사 및 기술사보전체의 불명예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5조 [기술사 등의 비밀 보관 유지 의무]

기술사 또는 기술사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그 업무에 관해서 파악한 비밀을 흘리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45조의 2항[기술사 등의 공익 확보의 책무]

기술사 또는 기술사보는, 그 업무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공공의 안전, 환경의 보전 그 외의 공익을 해치는 일이 없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46조[기술사의 명칭 표시의 경우의 의무]

기술사는, 그 업무에 관해서 기술사의 명칭을 표시할 때는, 그 등록을 받은 기술 부문을 명시하고 하는 것으로 해, 등록을 받지 않은 기술 부문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47조[기술사보의 업무의 제한 등]기술사보는,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에 대해 기술사를 보조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 기술사보의 명칭을 표시해 해당 업무를 행해서는 안 된다.

2.전조의 규정은, 기술사보가 그 보조하는 기술사의 업무에 관해서 하는 기술사보의 명칭의 표시에 대해 준용한다.

제47조의 2항[기술사의 자질 향상의 책무]

기술사는, 향상, 그 업무에 관해서 가지는 지식 및 기능의 수준을 향상시켜, 그외 그 자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건축기준법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률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에서 해당하는 용어의 의미는,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것에 의함.

1.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가운데, 지붕 및 기둥 혹은 벽을 가지는 것(이것에 유사한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이것에 부속하는 문 혹은 담, 관람을 위한 공작물 또는 지하 혹은 고가의 공작물 내에 마련하는 사무소, 점포, 흥행장, 창고 그 외 이것들에 해당하는 시설(철도 및 궤도의 선로 부지내의 운전 보안에 관한 시설 및 과선교, 플랫폼의 가건물, 저장조 그외 이것들에 비슷한 시설을 제외하다.)을 말하고, 건축 설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특수 건축물 학교(전수학교 및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이한다.), 체육관, 병원, 극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백화점, 시장, 댄스 홀, 유기장, 공중탕, 여관, 공동 주택, 기숙사, 하숙, 공장, 창고, 자동차 차고, 위험물의 저장고와 축장, 화장터, 오물처리장 그 외 이것들에 해당하는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건축 설비 건축물에 계획되는 전기,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냉방, 소화, 배연가스 혹은 오물처리 의 설비 또는 굴뚝, 승강기 혹은 피뢰침을 말한다.
4. 거실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외 이것들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실을 말한다.
5. 주요 구조부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또는 계단을 말하고,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사이칸막이 벽, 셋기둥, 붙임 기둥, 기름마루, 최하층의 마루, 회전무대의 마루, 국부적인 소계단, 옥외 계단 그 외 이것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6.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인접지 경계선, 도로 중심선 또는 동일 부지내의 2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백평방 미터 이내의 건축물은, 1의 건축물로 간주한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하,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하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방화상 효과가 있는 공원, 광장, 강 등의 공지 혹은 수면 또는 내화 구조의 벽 외 이것들에 해당하는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하다.
7. 내화 구조벽, 기둥, 마루 그 외의 건축물의 부분의 구조 가운데, 내화 성능(통상의 화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화재에 의한 건축물의 파괴 및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건축물의 부분에 필요하게 되는 성능을 말한다.)에 관해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조, 벽돌구조 외의 구조로, 국토 교통장관이 정한 구조 방법을 이용하는 것 또는 국토교통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 7의2. 준내화구조벽, 기둥, 마루 그 외의 건축물의 부분의 구조 가운데, 준내화 성능(통상의 화재에 의한 연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해당 건축물의 부분에 필요하게 되는 성능을 말한다.)에 관해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국토교통장관이 정한 구조 방법을 이용하는 것 또는 국토교통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8. 방화구조 건축물의 외벽 또는 처마 구조 가운데, 방화 성능(건축물의 주위에 대해 발생하는 통상의 화재에 의한 연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해당 외벽 또는 처마에 필요하게 되는 성능을 말한다.)에 관해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철망 모르타르도, 등 외의 구조로, 국토 교통 대신이 정한 구조 방법을 이용하는 것 또는 국토 교통 대신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5. 건설업법

용어의 정의

제2조 [정의]

- 이 법률에 있어서 「건설공사」란, 토목 건축에 관한 공사로 별표1의 상란에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률에 있어서 「건설업」이란, 원청, 하청 그외 어떠한 명의를 가지는가를 불문하고, 건설공사의 완성을 하청받는 영업을 말한다.
3. 이 법률에 있어서 「건설업자」란, 제3조 제1항의 허가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 법률에 있어서 「하청 계약」이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아 부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다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체결되는 청부계약을 말한다.
5. 이 법률에 있어서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주문자를 말하고 「원청부인」이란, 하청 계약에 있어서의 주문자로 건설업자인 것을 말해, 「하청부인」이란, 하청 계약에 있어서의 청부인을 말한다.

6. 건축사법

용어의 정의 및 직책

제2조 [정의]

- 이 법률에서 「건축사」란, 1급 건축사, 2급 건축사 및 목조 건축사를 말한다.
- 2 이 법률에서 「1급 건축사」란, 국토교통장관의 면허를 받아 1급 건축사의 명칭을 이용하고, 건축물에 관해, 설계, 공사 감리 그 외의 업무를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이 법률에서 「2급 건축사」란, 도도부현 지사의 면허를 받아 2급 건축사의 명칭을 이용하고, 건축물에 관해, 설계, 공사 감리 그 외의 업무를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이 법률에서 「목조 건축사」란, 도도부현 지사의 면허를 받아 목조 건축사의 명칭을 이용하고, 목조의 건축물에 관해, 설계, 공사 감리 그 외의 업무를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이 법률에서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도면(현수지도 그 외 이것에 비추는 것을 제외한다.) 및 시방서를, 「설계」란 그 사람의 책임을 두고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6 이 법률로 「구조 설계」란 기초도, 구조 계산서 그 외의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도서로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이하 「구조 설계도서」라고 한다.)의 설계를, 「설비 설계」란 건축 설비(건축 기준법 (쇼와 25년 법률 제201호)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건축 설비를 말한다.)의 각종 평면도 및 구조 상세도 그 외의 건축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로 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설비 설계도서」라고 한다.)의 설계를 말한다.
- 7 이 법률에서 「공사 감리」란, 그 사람의 책임에 있어, 공사를 설계도서와 조합해, 그것이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8 이 법률에서 「대규모의 수선」 또는 「대규모의 형태변경」이란, 각각 건축 기준법 제2조 제 14호 또는 제15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9 이 법률에서 「연면적」, 「높이」, 「채의 높이」 또는 「계수」란, 각각 건축 기준법 제9십2조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산정 방법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 제2항 [직책]

건축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 업무에 관한 법령 및 실무에 정통하고, 건축물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공정하고 성실하게 그 업무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업무

제18조[설계 및 공사업무]

건축사는, 설계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계와 관련되는 건축물이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2. 건축사는, 설계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계의 위탁자에 대해, 설계의 내용에 관해서 적절한 설명을 하기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건축사는, 공사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 즉시, 공사 시공자에 대해서, 그 취지를 지적해, 해당 공사를 설계도서대로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공사 시공자가 이것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 상황을 건축주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9조[설계의 변경]

1급 건축사, 2급 건축사 또는 목조 건축사는, 다른 1급 건축사, 2급 건축사 또는 목조 건축사에 의해 설계된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1급 건축사, 2급 건축사 또는 목조 건축사의 승낙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승낙을 요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승낙을 얻을 수 없었을 때는, 자기 책임을 지고, 그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에 필요한 표시 행위]

1급 건축사, 2급 건축사 또는 목조 건축사는, 설계를 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서에 1급 건축사, 2급 건축사 또는 목조 건축사인 명함의 표시를 하여 기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다.

2. 1급 건축사, 2급 건축사 또는 목조 건축사는, 구조계산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했을 경우에 있어서 지체 없이, 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그 취지의 증명서를 설계의 위탁자에 교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는, 이 제한이 없다.

3. 건축사는, 공사 감리를 종료했을 때는, 즉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그 결과를 문서로 건축주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건축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로의 보고에 대신하고, 정령으로 정하 것에 의해 해당 건축주의 승낙을 얻고, 해당 결과를 전자 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의 정보 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해당 건축사는, 해당 문서로 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건축사는, 대규모의 건축물 그 외의 건축물의 건축 설비와 관련되는 설계 또는 공사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건축 설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해 국토교통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전항 전단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보고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 해당 보고의 내용)에 대해서, 그 취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2조[지식 및 기능의 유지 향상]

건축사는, 설계 및 공사 감리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의 유지 향상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국토교통장관 및 도도부현 지사는, 설계 및 공사 감리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의 제2항[정기 강습]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사는 3년이상 5년 이내에 있어서 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마다, 다음의 조 제1항의 규정 및 동조 제2항에 대해 준용하는 제10조의 23으로부터 제10조의 25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것에 의해 국토교통장관의 등록을 받은 사람(다음의 조에 있어 「등록 강습 기관」이라고 한다.)이 가 실시하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강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①1급 건축사(제23조 제1항의 건축사 사무소에 속하는 것에 한정한다.) 별표 제2(1)의 항 강습의 란에 해당하는 강습
 - ②2급 건축사(제23조 제1항의 건축사 사무소에 속하는 것에 한정한다.) 별표 제2(2)의 항 강습의 란에 해당하는 강습
 - ③목조건축사(제23조 제1항의 건축사 사무소에 속하는 것에 한정한다.) 별표 제2(3)의 항 강습의 란에 해당하는 강습
 - ④구조설계일급건축사 별표 제2(4)의 항강습의 란에 해당하는 강습
 - ⑤설비설계일급건축사 별표 제2(5)의 항강습의 란에 해당하는 강습
-

제22조의 제3항[정기 강습의 강습 기관의 등록]

전조의 등록은, 별표 제2의 각항의 강습의 란에 해당하는 강습의 구분별로 이러한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실시하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한다.

3.전조의 등록 및 강습 및 등록 강습 기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건축사회(建築社會) 및 건축사회 연합회

제22조의 제4항[건축사회 및 건축사회 연합회]

그 명칭 중에 건축사회(建築社會)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하는 일반 사단법인(다음 방향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건축사의 품위의 보관유지 및 그 업무의 진보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축사에 대한 건축 기술에 관한 연수 및 사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건축사를 사원으로 하는 취지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2.그 명칭 중에 건축사회 연합회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하는 일반 사단법인은, 건축사의 품위의 보관유지 및 그 업무의 진보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축사에 대한 건축 기술에 관한 연수 및 사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전항에 규정하는 일반 사단법인(이하 이 조에 대해 「건축사회」라고 한다.)을 사원으로 하는 취지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3.전2항에 규정하는 정관의 규정은,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

4.건축사회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일반 사단법인(이하 이 조에 대해 「건축사회 연합회」라고 한다.)은 성립했을 때에는, 성립의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등기 사항 증명서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고, 그 취지를, 건축사회에 있어서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건축사회 연합회에 있어서는 국토교통장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5.건축사회 및 건축사회 연합회는, 건축사에 대해, 그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 기술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6.국토교통장관은 건축사회 연합회에 대해서, 건축사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건축사회에 대해서, 건축사의 품위의 보관유지 및 그 업무의 진보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지도, 조언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건축사 사무소-설계 등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

제23조의 제6항[설계 등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사업년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설계 등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매사업년도 경과후 3월 이내에 해당 건축사 사무소와 관련되는 등록을 한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 ① 해당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해당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의 실적의 개요
 - ② 해당 건축사 사무소에 속하는 건축사의 이름
 - ③ 전호의 건축사의 해당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업무의 실적
 - ④ 전3호에 해당하는 것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3조의 제9항[등록부등의 열람]

도도부현 지사는, 다음으로 제시하는 서류를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등록부
 - ② 제23조의 6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설계 등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
 - ③ 그 외 건축사 사무소에 관한 서류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
-

제24조의 제4항[장부의 비치등 및 도서의 보존]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그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2. 전항에 정하는 것 외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자는 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한 그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도서로 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보존해야 한다.

제24조의 제5항[표식의 게시]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자는, 그 건축사 사무소에 있고, 공중의 보기 쉬운 장소에 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표식을 내걸지 않으면 안 된다.

제24조의 제6항[서류의 열람]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자는, 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건축사 사무소에 대비해 두어, 설계 등을 위탁하려고 하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열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해당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의 실적을 기재한 서류
 - ② 해당 건축사 사무소에 속하는 건축사의 이름 및 업무의 실적을 기재한 서류
 - ③ 설계등의 업무에 관계되어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
 - ④ 그 외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 및 재무에 관한 서류로 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
-

업무의 보수

제25조[업무의 보수]

국토교통장관은, 중앙 건축사 심사회의 동의를 얻고,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자가 그 업무에 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을 정해 이것을 권고할 수 있다.

[국토 교통성 고시 제15호]

건축사법(쇼와 25년 법률 제202호)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해,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자의 업무에 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헤세이 21년(2009년) 1월7일

첫째, 업무 보수의 결정방법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자가 건축물의 설계, 공사 감리, 건축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 또는 건축공사의 지도 감독의 업무(이하 「설계 등의 업무」라고 한다.)에 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보수는, 복수의 건축물에 대해 동일한 설계도서를 이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둘째의 업무 경비, 셋째의 기술료 등 경비 및 소비세에 상당하는 액수를 합산 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둘째, 업무경비

업무경비는 다음의 A.부터 D.까지 정하는 것에 의해 각각의 산정되는 직접인건비, 특별경비, 직접경비 및 인접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한 경비에는 과세 매입의 대가에 포함되는 소비세에 상당하는 액수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A.직접 인건비

직접 인건비는, 설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각각 붙은 해당 업무에 관해서 필요되는 급여, 성과급, 상여, 퇴직급여, 법정 보험료 등의 인건비의 하루당 금액에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연일수를 곱해 얻은 금액의 합계로 한다.

B.특별경비

특별경비는, 출장여비, 특허사용료 그 외의 건축주의 특별의뢰에 의해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C.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인쇄제본비, 복사비, 교통비 등 설계 등의 업무에 관해 직접필요가 되는 비용(B에서 정한 경비를 뺀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D.간접경비

간접경비는 설계 등의 업무를 행하는 건축사사무소를 관리운영해가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연구조사비, 연수비, 감가상각비, 통신비, 소모품비등의 비용(A.부터 C.까지에서 정하는 경비를 뺀다.) 중에, 해당업무에 대한 필요가 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셋째, 기술료 등 경비

기술료 등의 경비는 설계 등의 업무에 있어서 발휘되는 기술력, 창조력 등의 대가로서 지불되는 비용으로 한다.

넷째, 직접 인건비등에 관한 약산방법에 의한 정산

업무비용에서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의 합계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둘째의 A, C 또는 D에 관계없이, 다음의 A또는 B에 정하는 결산방법을 표준으로 한 약산방법에 의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별첨2〉의 건축물의 유형별 〈별첨3〉의 바닥 면적의 합계의 란으로 제시하는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밑도는 건축물 또는 가장 큰 값을 웃도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약산방법에 따를 수 밖 없는 것으로 한다.

A.직접 인건비

설계 등의 업무로 그 내용이 〈별첨1〉의 표준 업무내용인 것과 관련되는 직접 인건비의 산정은, 〈별첨2〉에서의 건축물의 유형에 따르고, 통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한 명에 대해 1시간당에 필요로 하는 인건비에 〈별첨3〉에서의 표준 업무인·시간수를 곱해 산정하는 방법

B.직접경비 및 간접경비의 합계액

직접 경비 및 간접 경비의 합계액의 산정은, 직접 인건비의 액수에1.0을 표준으로 하는 배수를 곱해 산정하는 방법

2. 전항A에 정하는 산정 방법에 있어서, 표준 업무내용 중 일부의 업무만 실시하는 경우는, 별첨3에서 표준 업무인·시간수로부터 행해지지 않는 업무에 대응한 업무인·시간수를 삭감하는 것으로서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항 A에 정하는 산정 방법에 있어서, 별첨4에서의 업무내용 등 표준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는, 별첨3에서의 표준 업무인·시간수에 해당 업무에 대응한 업무인·시간수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제1항의 B에 정하는 산정방법에 있어서,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가 통상의 경우에 비교해 현저히 다른 경우는, 곱하는 배수를 조정하는 것에 의해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쇼와54년 건설성고시 제206호는 폐지한다.

〈별첨1〉

표준 업무는, 설계 또는 공사 감리에 필요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는 경우에, 일반적인 설계 수탁 계약 또는 공사 감리 수탁 계약에 근거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업무로서, 그 내용을 이하와 같다.
(예시) 기본설계에 관한 표준업무)

항 목		업 무 내 용
설계조건 등의 정리	조건 정리	내진 성능이나 설비 기능의 수준 등 건축주로부터 제시된다. 다양한 요구 그 외의 제조건을 설계 조건으로서 정리한다.
	설계조건의 변신 등의 경우의 협의	건축주로부터 제시되는 요구의 내용이 불명확 혹은 부적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또는 정리한 설계 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또는 건축주라고 협의한다.
법령상의 제조건의 조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령상의 제조건의 조사	기본 설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법령 및 조례상의 제약 조건을 조사한다.
	건축 확인 신청에 관계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본 설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건축 확인 신청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실시한다.
상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등의 공급 상황의 조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기본 설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지에 대한 상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등의 공급 상황 등을 조사해, 필요에 대응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한다.
기본 설계방침의 책정	종합검토	설계 조건에 근거해, 여러가지 기본 설계 방침안의 검토를 통해 기본 설계를 정리해 가는 생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로 인한 업무 체제, 업무 공정 등을 입안한다.
	기본설계방침의 책정 및 건축주의 설명	종합 검토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기본 설계 방침을 책정해, 건축주로 대해 설명한다.
기본 설계도서의 작성		기본 설계 방침에 근거해, 건축주와 협의한 후, 기본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계산공사비의 검토		기본 설계도서의 작성이 완료한 시점에 두고, 해당기본 설계도서에 근거하는 건축공사에 통상 필요로 하는 비용을 계산하여, 공사비 계산서(공사비 내역 명세서, 수량 조서등을 제외하다.이하 같다.)를 작성한다.
기본 설계 내용의 건축주에게의 설명 등		기본 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동안, 건축주에 대해서, 작업 내용이나 진척 상황을 보고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건축주의 의향을 확인한다. 또, 기본 설계도서의 작성이 완료한 시점에 있어서, 기본설계도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 건축주로 대해 설계 의도(해당 설계와 관련되는 설계자의 생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본 설계 내용의 종합적인 설명을 실시한다.

(예시)목조건축에 관련한 성과도서)

설계의 종류	성과도서
(1) 종합	①사양개요서 ②완성개요표 ③배치도 ④평면도(각층) ⑤단면도 ⑥입면도 ⑦공사비계산서
(2) 구조	①사양개요서 ②공사비계산서
(3) 설비	①사양개요서 ②설비위치도(전기 , 급배수 위생 및 공조 환기) ③공사비계산서

〈별첨2〉

건축물의 유형	건축물의 용도등	
	제1류(표준적인 것)	제2류 (복잡한 설계등을 필요로하는 것)
1. 물류 시설	차고, 창고, 입체주차장 등	입체창고, 물류 터미널 등
2. 생산 시설	조립 공장 등	화학공장, 약품공장, 식품공장, 특수시설을 부대하는 공장등
3. 운동 시설	체육관, 무도관, 스포츠 짐 등	옥내 풀, 스타지움 등
4. 업무 시설	사무소 등	은행, 본사 빌딩, 청사 등
5. 상업 시설	점포, 요리점, 수퍼 마켓 등	백화점, 쇼핑센터, 쇼룸 등
6. 공동 주택	공영주택, 사택, 임대공동주택, 기숙사 등	분양 공동 주택 등
7. 교육 시설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
8. 전문적 교육·연구시설	대학, 전문학교 등	대학(실험시설등이 있는 것), 전문학교(실험시설등이 있는 것), 연구소등
9. 숙박 시설	호텔, 여관 등	호텔(연회장 등을 가지는 것), 보양소 등
10. 의료시설	병원, 진료소 등	종합 병원 등
11. 복지·위생시설	보육원, 노인 홈, 노인 보건 시설, 재활훈련 센터	다기능 복지시설등
12. 문화·물류·공익시설	공민관, 집회장, 커뮤니티 센터등	영화관, 극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연수원, 경찰서, 소방서 등
13. 단독주택(상세설계 및 구조계산을 필요로 하는 것)	단독 주택	-
14. 단독주택(상세설계를 필요로 하는 것)	단독 주택	-
15. 그 외 단독 주택	단독 주택	-

〈별첨3〉

시설용도에 따른 바닥면적별 업무량측정(사람×시간)

〈별첨3-표1〉물류시설(예시)

(단위 사람·시간)

바닥면적의 합계(㎡)		1,000	1,500	2,000	3,000	5,000	7,500	10,000	15,000	20,000
설계	종합	1,200	1,400	1,600	2,000	2,500	3,000	3,500	4,200	4,800
	구조	350	440	510	640	850	1,100	1,200	1,600	1,800
	설비	290	350	400	470	590	710	800	950	1,100
공사 관리 등	종합	760	860	940	1,100	1,200	1,400	1,500	1,800	1,900
	구조	130	140	160	180	210	240	270	300	330
	설비	110	120	130	140	160	170	180	200	210

〈별첨3-표2〉생산시설(예시)

(단위 사람·시간)

바닥면적의 합계(㎡)		1,000	1,500	2,000	3,000	5,000	7,500	10,000	15,000	20,000
설계	종합	1,500	1,800	2,200	2,700	3,600	4,500	5,300	6,600	7,700
	구조	420	540	660	850	1,200	1,500	1,900	2,400	2,900
	설비	250	340	420	570	850	1,200	1,400	2,000	2,500
공사 관리 등	종합	1,100	1,200	1,300	1,400	1,600	1,800	1,900	2,100	2,300
	구조	120	160	180	230	310	390	460	580	680
	설비	76	99	120	160	220	280	340	440	540

〈별첨3-표3〉상업시설(예시)

(단위 사람·시간)

바닥면적의 합계(㎡)		1,000	1,500	2,000	3,000	5,000	7,500	10,000	15,000	20,000
설계	종합	1,700	2,000	2,200	2,500	3,000	3,400	3,700	4,300	4,700
	구조	520	620	700	840	1,100	1,300	1,400	1,700	1,900
	설비	450	530	590	690	840	990	1,100	1,300	1,500
공사 관리 등	종합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구조	160	190	200	230	270	300	330	370	400
	설비	170	190	220	250	300	350	390	450	490

〈별첨3-표4〉공동주택(예시)

(단위 사람·시간)

바닥면적의 합계(㎡)		1,000	1,500	2,000	3,000	5,000	7,500	10,000	15,000	20,000
설계	종합	2,400	3,000	3,400	4,300	5,600	6,900	8,100	10,000	12,000
	구조	730	910	1,100	1,300	1,700	2,100	2,500	3,000	3,500
	설비	510	640	760	950	1,300	1,600	1,900	2,300	2,700
공사 관리 등	종합	1,100	1,300	1,500	1,800	2,300	2,700	3,100	3,700	4,200
	구조	240	300	360	460	620	790	940	1,200	1,400
	설비	200	240	270	330	410	490	550	660	750

7. 중소기업 신용보험법

목적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쇼와25년(1950년) 12월 14일 법률 제264호)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자의 채무의 보증에 대해 보험을 행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률에 대해 「중소기업자」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3억엔(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5천만엔,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명(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50명,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에 있어서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이하 「특정 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는 것(다음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 1의 2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그 업종 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그 업종 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수이하의 회사 및 개인에 있어서 그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실시하는 것
- 2 중소기업등 협동조합, 농업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생산산림조합, 산림조합 연합회, 소비 생활협동조합 및 소비 생활 협동조합 연합회에 있어서 특정 사업을 실시하는 것 또는 그 구성원의 3 분의 2이상이 특정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인 것
- 2의 2 협업 조합에 있어 특정 사업을 실시하는 것
- 3 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백명 이하의 것(전각호로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4 상공조합 및 상공조합 연합회에 있어 특정 사업을 실시하는 것 또는 그 구성원이 특정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인 것
- 4의 2 상가 진흥 조합 및 상가 진흥 조합 연합회에 있어서 특정 사업을 실시하는 것 또는 그 구성원의 3 분의 2이상이 특정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인 것
- 5 생활 위생 동업 조합, 생활 위생 동업 소조합 및 생활 위생 동업 조합 연합회에서 연줄, 그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의 3 분의 2이상이 5천만엔(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엔) 이하의 금액을 그 자본금의 액수 혹은 출자의 총액으로 하는 법인 또는 상시 50명(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백명) 이하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람 중 특정 사업을 실시하는 것 또는 그 구성원이 특정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인 것
- 6 주조 조합, 주조 조합 연합회 및 주조 조합 중앙회에서 연줄, 그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인 주류 제조업자의 3 분의 2이상이 3억엔 이하의 금액을 그 자본금의 액수 혹은 출자의 총액으로 하는 법인 또는 상시 3백명 이하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람인 것 및 주판 조합, 주판 조합 연합회 및 주판 조합 중앙회에 있어 그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인 주류 판매업자의 3 분의 2이상이 5천만엔(주류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1억엔) 이하의 금액을 그 자본금의 액수 혹은 출자의 총액으로 하는 법인 또는 상시 50명(주류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백명) 이하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하 「주류업 조합」이라고 총칭한다.)
- 7 내항 해운 조합 및 내항 해운 조합 연합회에 있어 그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인 내항 해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3 분의 2이상이 3억엔 이하의 금액을 그 자본금의 액수 혹은 출자의 총액으로 하는 법인 또는 상시 3백명 이하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람인 것

이 법률에 대해 「소규모 기업자」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20명(상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섯 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에 있어서 특정 사업을 실시하는 것
- 2 사업 협동 조합에 있어서 특정 사업을 실시하는 것 또는 그 조합원의 3 분의 2이상이 특정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인 것
- 3 특정 사업을 실시하는 기업 조합에 있어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수가 20명 이하의 것
- 4 특정 사업을 실시하는 협업 조합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20명 이하의 것
- 5 의술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20명 이하의 것(전 각 호로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8. 건축설계사무소 순위

[표 부록4-1] 일본 2006년도 사무소 랭킹(출처: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 2007-9-10)

순위	회사명	결산일	설계·관리 매상고 (백만엔)	총매상고 (백만엔)	당기이익 (백만엔)	외주비율	업무종별 매상고		최고매상고 건물용도 및 매상고		관청에 의한 프로젝트 에의 대응		유자격자수(인)			직원 수 (인)
							관청 발주	리뉴 얼업 무	용도	매상고 (백만엔)	참가 건수	당선 건수	1급	구조	설비	
1	日建設計	06.12	27,791	31,788	1,521	-	3,650	-	업무	7,958	77	25	606	32	185	1,330
2	NTTファシ リティーズ	07.3	20,333	233,233	-	-	1,326	-	생산	12,788	18	6	731	36	149	5,800
3	三菱地所設 計	07.3	13,315	13,780	1,462	-	-	2,374	업무	6,096	21	4	268	21	74	453
4	日本設計	06.9	13,237	13,237	146	-	-	-	업무	2,766	-	-	367	33	91	678
5	久米設計	06.5	8,726	8,726	272	-	2,686	1,071	의료	1,998	-	-	311	33	54	527
6	山下設計	06.9	7,111	7,111	34	-	2,545	1,137	교육	2,009	-	-	266	15	60	427
7	ジェイアール 東日本	07.3	6,092	6,092	-	-	106	701	생산	2,700	1	1	151	9	21	270
8	梓設計	06.6	5,448	5,448	-	-	1,646	201	의료	984	-	-	169	13	33	295
9	石本建築事 務所	07.3	5,204	5,204	-	-	1,425	538	상업	1,005	-	-	174	6	37	299
10	安井建築設 計事務所	07.3	5,064	5,064	46	24.5	756	-	업무	1,320	-	16	174	16	39	284
11	松田平田設 計	06.6	5,063	5,063	-	-	678	-	업무	1,444	-	-	166	6	23	329
12	日立建設設 計	07.3	4,567	7,437	-	-	-	-	생산	2,669	8	3	133	1	10	252
13	大建設計	06.9	4,517	4,517	124	-	1,646	-	생산	1,575	42	7	154	8	21	246
14	佐藤総合計 画	07.3	4,516	4,516	83	34.0	2,520	620	관청	880	70	24	135	4	27	233
15	類設計室	07.3	4,385	5,856	506	7.7	1,447	136	주거	859	26	14	157	1	29	408
16	アール・ア イ・エー	07.3	4,205	4,205	15	-	1,837	-	상업	1,565	-	-	119	3	5	206
17	東急設計コ ンサルタント	06.9	4,110	4,135	461	-	235	-	주거	1,348	-	-	108	0	12	215
18	INA新建築 研究所	06.9	3,782	3,790	-	-	197	19	주거	2,270	15	3	148	8	8	278
19	塩見	07.3	3,570	3,700	-	25.5	715	198	주거	664	17	6	76	5	5	225
20	東畑建築事 務所	06.5	3,560	3,560	24	-	925	580	교육	640	48	8	173	11	29	263
21	昭和設計	06.10	2,992	2,992	1	-	1,454	-	주거	606	52	8	103	3	18	204
22	IAO竹田設 計	06.4	2,279	2,329	62	36.9	23	5	주거	2,147	-	-	45	0	2	139
23	内藤建築事 務所	06.9	2,179	2,179	1	-	1,221	-	의료	1,144	39	6	78	0	17	173
24	横河建築設 計事務所	06.5	2,173	2,192	-	-	1,290	332	의료	1,314	8	2	63	1	12	124
25	ブランテッ ク総合	07.3	2,110	2,110	23	45.1	0	521	상업	871	2	0	29	0	0	120

26	日総建	07,3	2,101	2,101	36	39,3	-	-	-	-	-	-	81	8	6	139
27	総合設備 コンサル	07,3	1,855	2,272	18	35,5	939	15	-	-	58	28	14	0	55	146
28	交建設計	07,3	1,698	1,701	37	43,2	130	187	생산	854	4	2	56	2	8	94
29	バシフイッ クコンサル	06,9	1,383	34,980	892	-	753	45	관청	249	21	8	46	0	4	1304
30	構造計画研 究所	06,6	1,275	10,323	360	-	-	-	-	-	-	-	78	14	0	536
31	伊藤喜三郎 建築	07,1	1,171	1,171	1	16,9	-	-	의료	824	-	-	83	6	21	146
32	青島設計	06,8	1,150	1,150	-	8,7	213	20	생산	298	10	2	46	1	5	97
33	日和エンジ ニアリング	07,3	1,102	1,102	18	42,6	12	-	-	-	6	2	2	0	14	63
34	教育施設研 究所	06,5	1,095	1,095	11	40,6	700	-	교육	807	40	28	50	2	8	115
35	楠山設計	07,3	1,088	1,091	5	35,2	572	97	교육	342	24	7	46	0	4	81
36	観光企画設 計社	07,3	1,066	1,086	385	26,2	-	-	숙박	976	0	0	27	0	0	70
37	入江三宅設 計事務所	06,7	1,046	1,139	-	-	53	-	주거	397	0	0	48	2	2	73
38	イクス・ アーク都市 設計	06,5	1,010	1,012	24	34,0	0	0	주거	895	0	0	31	2	2	82
39	協立建築設 計事務所	06,6	1,006	1,006	0	22,1	123	-	주거	800	3	0	-	1	0	86
40	北海道日建 設計	06,12	969	1,038	-	-	231	105	업무	186	5	2	43	1	9	77
41	マルタ設計	07,3	952	1,052	13	7,8	180	30	-	-	3	0	19	3	4	37
42	綜企画設計	06,9	950	1,154	1	29,2	858	0	교육	344	103	42	35	0	5	120
43	浦野設計	07,1	948	1,027	54	35,4	543	265	교육	295	21	3	52	3	11	90
44	レーモンド設 計事務所	06,9	930	930	4	-	420	-	복지	126	20	3	50	3	4	66
45	相和技術研 究所	06,9	905	917	15	-	644	-	관청	209	12	5	30	2	6	74
46	伊藤建築設 計事務所	06,12	865	871	12	19,6	105	-	상업	275	9	1	33	1	3	64
47	共同建築設 計事務所	06,8	845	862	4	32,6	214	12	의료	539	-	1	40	2	4	68
48	桂設計	06,5	790	851	-	-	590	82	교육	284	26	6	30	2	3	69
49	中日設計	06,11	759	772	67	9,3	37	0	의료	96	3	0	33	1	5	57
50	岡野建築設 計事務所	06,12	732	732	25	38,4	34	0	-	-	1	0	32	0	0	37

[표 부록4-2] 일본 2007년도 사무소 랭킹(출처: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 2008-9-8)

순위	회사명	결산일	설계·관리 매상고 (백만엔)	총매상 고 (백만엔)	당기 이익 (백만 엔)	외주 비율	관청발 주 매상고 (백만엔)	최고매상고 건물용도 및 매상고		유자격자수(인)			직원 수 (인)
								용도	매상고 (백만엔)	1급	구조	설비	
1	日建設計	07.12	29,755	34,453	1,567	-	3,957	업무	11,770	638	39	186	1,556
2	NTTファシリティーズ	08.3	20,427	222,386	-	-	1,038	생산	12,251	720	41	147	5,600
3	三菱地所設計	08.3	14,094	14,740	1,964	-	571	업무	5,467	298	21	75	497
4	日本設計	07.9	13,259	13,259	224	-	2,238	업무	3,175	393	30	89	700
5	久米設計	07.5	9,402	9,402	1,089	-	2,163	교육	2,059	305	31	58	530
6	ジェイアール東日本	08.3	7,719	7,719	-	-	79	생산	3,039	152	10	23	287
7	山下設計	07.9	7,409	7,409	13	-	2,900	교육	1,852	266	21	60	427
8	梓設計	07.6	5,709	5,706	-	-	1,773	의료	873	180	12	34	329
9	安井建築設計事務所	08.3	5,602	5,602	23	22.7	801	교육	1,046	180	19	40	286
10	大建設計	07.9	5,343	5,343	199	-	1,449	생산	1,915	151	10	20	249
11	東急設計コンサルタント	08.3	5,191	5,232	408	-	239	주거	1,442	121	0	12	222
12	石本建築事務所	08.3	5,100	5,100	-	-	1,486	상업	1,016	175	6	37	297
13	佐藤総合計画	08.3	5,070	5,070	33	36.2	2,890	업무	1,120	138	4	25	244
14	松田平田設計	07.6	4,757	4,758	-	-	742	업무	1,541	160	7	24	352
15	日立建設設計	08.3	4,446	6,404	-	-	-	생산	3,010	130	2	12	257
16	類設計室	08.3	4,182	6,207	440	8.8	1,357	교육	997	152	2	31	428
17	INA新建築研究所	07.9	4,079	4,083	-	-	743	주거	1,965	156	9	10	306
18	東畑建築事務所	07.5	4,063	4,063	14	-	970	업무	807	165	9	28	268
19	アール・アイ・エー	08.3	4,031	4,031	30	-	2,185	상업	1,759	116	4	5	209
20	塩見	08.3	3,645	3,818	-	21.7	888	주거	1,120	79	6	3	262
21	日建ハウジングシステム	07.12	2,854	2,854	78	-	-	주거	2,720	66	6	11	137
22	昭和設計	07.10	2,804	2,804	16	-	1,642	주거	531	101	3	12	202
23	ブランテック総合計画事務所	08.3	2,489	2,491	67	-	0	생산	1,528	30	0	0	130

[표 부록4-3] 일본 2008년도 사무소 랭킹(출처: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 2009-9-14)

순위	회사명	결 산 일	설계· 관리 매상고 (백만엔)	총매상 고 (백만 엔)	당기 이익 (백 만엔)	외주 비율	관공청 발주건 매상고 (백만엔)	최고매상고 건물용도 및 매상고		유자격자수(인)						직원 수 (인)
								용도	매상고 (백만엔)	1급	구조 1급	설비 1급	구조	설비		
1	日建設計	08.12	29,584	36,022	1,420	—	3,287	업무	11,516	637	64	23	37	192	1,694	
2	NTTファシリティーズ	09.3	20,555	238,560	—	—	1,038	생산	13,224	707	46	35	40	154	5,500	
3	三菱地所設計	09.3	16,375	16,888	1,928	—	102	업무	7,663	294	23	17	22	76	516	
4	日本設計	08.9	15,690	15,690	171	—	2,324	업무	5,197	409	34	17	28	87	720	
5	久米設計	08.5	9,416	9,416	108	—	1,849	업무	1,969	300	37	13	31	58	538	
6	山下設計	08.9	8,082	8,082	26	—	3,496	교육	1,726	267	26	17	12	64	434	
7	ジェイアール東日本	09.3	7,752	7,752	—	—	8	생산	3,277	183	13	5	12	26	327	
8	梓設計	08.6	6,552	6,552	—	—	2,587	관청	1,174	192	15	10	12	34	347	
9	松田平田設計	08.6	5,468	5,469	—	—	870	업무	1,604	167	14	3	7	23	350	
10	佐藤総合計画	09.3	5,445	5,445	28	35.6	2,777	교육	1,038	145	8	2	4	24	267	
11	安井建築設計事務所	09.3	5,408	5,408	10	18.0	786	생산	1,063	180	26	5	19	37	289	
12	東急設計コンサルタント	09.3	5,188	5,188	53	—	63	주거	1,596	118	6	4	0	13	230	
13	大建設計	08.9	5,161	5,161	2	—	1,298	생산	2,160	162	22	13	10	24	267	
14	日立建設設計	09.3	4,819	6,867	—	—	250	생산	3,371	130	14	6	2	13	270	
15	石本建築事務所	09.3	4,758	4,758	—	—	1,517	교육	909	171	19	12	6	38	302	
16	東畑建築事務所	08.5	4,657	4,657	57	—	1,336	업무	1,264	166	13	11	11	27	277	
17	INA新建築研究所	08.9	4,126	4,129	—	—	709	주거	1,950	158	5	2	6	9	311	
18	類設計室	09.3	4,035	6,381	286	12.2	1,772	교육	1,143	122	6	13	2	29	430	
19	アール・アイ・エー	09.3	3,991	3,991	11	—	1,848	주거	1,218	112	4	3	4	7	203	
20	塩見設計	09.3	3,271	3,420	—	32.3	1,442	교육	926	77	13	0	5	2	285	
21	昭和設計	08.10	2,872	2,872	29	27.0	1,534	문화	470	94	4	3	3	9	204	
22	東電設計	09.3	2,808	22,805	903	—	44	생산	897	63	19	5	—	9	643	
23	日建ハウジングシステム	08.12	2,715	2,715	—	—	—	주거	2,459	70	5	4	7	12	145	

부록 5. 중소기업 지원 정책⁹⁷⁾

1. 자금(금융)지원
2. 기술지원
3. 판로/수출지원
4. 인력지원 사업

1. 자금(금융)지원

1) 창업기업지원자금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융자규모 : 11,000억 원
-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단, 지식서비스업(별표4),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5) 업종영위 중소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대출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97) 본 내용은 심우일 박사(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가 작성한 원고를 정리한 것임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 용자규모 : 1,580억 원
- 신청대상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별표4),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5)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용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용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시설자금	운전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3)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용자규모 : 11,600억원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이상 중소기업
 -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별표4),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5) 영위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용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 협동화 및 협업 신청시 <1.공통사항> 마. 용자제한기업 ⑩항 적용에서 예외
-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쿠폰제권설통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 및 컨설팅을 받은 기업
 - * 단,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용자

□ 용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 기업간 인수·합병계약에 의거 유·무형자산, 주권 인수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위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혁신형기업(별표2),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별표3, 3-1), 지식서비스업(별표4),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5)을 영위하는 기업, 협동화 승인 및 협업 승인을 얻은 자는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용자 가능

□ 용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시설자금	운전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 원(운전자금 5억 원)
 - * 단, 20억 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 원
 -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 원(운전 5억 원), 참가기업 40억 원(운전 5억 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 원(운전 30억 원), 참가기업 30억 원(운전 20억 원)
 - * 협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 원(운전자금 5억 원), 참가기업 40억 원(운전자금 5억 원)

4)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용자규모 : 2,500억 원

□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긴급경영안정사업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 자 하는 중소기업

□ 용자범위

긴급경영안정사업	<p>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p> <p>*일시적 경영애로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KIKO 등 환해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p>*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용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용자제한)</p>
수출금융지원사업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용자조건 및 방식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후 수출한 어음 매입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 (최장 1년 이내)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원부자재 구입용도 이외의 운전자금은 연간 3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기업당 20억원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20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대출금리 (변동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1.23%p차감(기준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진단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순수신용, 보증서부(한국수출보험공사) 직접대출

5) 사업전환자금

□ 사업목적 :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

□ 용자규모 : 1,475억원

□ 신청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6>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품목)	전환 진출업종(품목)
모든 업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⁹⁸⁾ (단, <별표1> 업종 제외)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용자제한기업 ⑥항, ⑦항 적용에서 예외)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7>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8>

□ 용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기업간 인수·합병계약에 의거 유·무형자산, 주권 인수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용자조건

대출금리 (변동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4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98)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6) 소상공인지원자금

- 사업목적 : 서비스 산업 등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및 슈퍼마켓 등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샵⁹⁹⁾으로 육성

- 용자 및 대출안내

구분	소상공인지원자금	스마트샵육성자금
용자규모 : 3,000억 원	2,000억 원 *우선 지원대상 : 소상공인지원자금 중 1,000억원 별도 운영	1,000억원
용자시기	2010. 1. 7 ~ 자금 소진시까지	2010. 4월초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 업원 10인 미만 기업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 원 5인 미만 기업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0)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우선 지원대상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 이 수자 등 경쟁력 제고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 교육·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	다음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중 혁 신의지가 강하여 스마트샵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매장면적 300㎡ 이하 슈퍼마켓(47121), 체인 화 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47129), 단,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 점은 제외 * 지원대상 선정기준 : 혁신의지, 상권 등 경쟁 력 향상 가능성, 신용수준 등 평가결과 60점 이상자 중 선정
용자범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리모델링, 전사·판매시설, 에어컨, 진열대 교 체, 구매자금 등
대출금리 (변동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대출한도	5천만원	1억원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 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 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 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 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대출취급은행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 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 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추후 지정(별도공고)

99) 상권특성에 적합한 시설구비 및 상품구색, 가격·서비스·위생·정보화 등에서 선도적인 우수 점포

□ 융자절차

구분	소상공인자금	스마트삼육성자금
신청접수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지방청 사업성 평가 반영, 자체 신용 및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자금추천서 발급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자금추천서 발급	-	지방중소기업청 ■ 업체 사업성 평가 후 자금추천서 발급
자금대출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대출 취급은행 ■ 지방청 사업성 평가 반영,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자금(금융)지원 1~6 공통사항(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융자제한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세부 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¹⁰⁰⁾

□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까지(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60억원)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2)과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별표3, 3-1)에 대한 시설자금, ② 협동화협업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③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 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⑤ 업력 5년 미만 기업, ⑥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이라 한다) 대출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시

* 공자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공지사항 ‘2010년 매분기 적용할 공자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기업평가등급(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시의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융자 방식

100)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 중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중 일부 자금은 주식사채 인수 방식으로 병행 지원(성장공유형 자금지원)

□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
- 융자대상 결정 절차
 - 진단·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진단·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 기술사업성 전용자금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업평가등급으로 산정
 - * 일반자금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비중 반영을 최소화
 - 융자대상 결정: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 '09.1월 이후 5인 이상 추가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가에서 우대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 대출자금의 용도와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융자제한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중진공 기업평가등급 B+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자산규모 50억원 이상 기업 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기업 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기업은 융자 대상으로 포함)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9)을 초과하는 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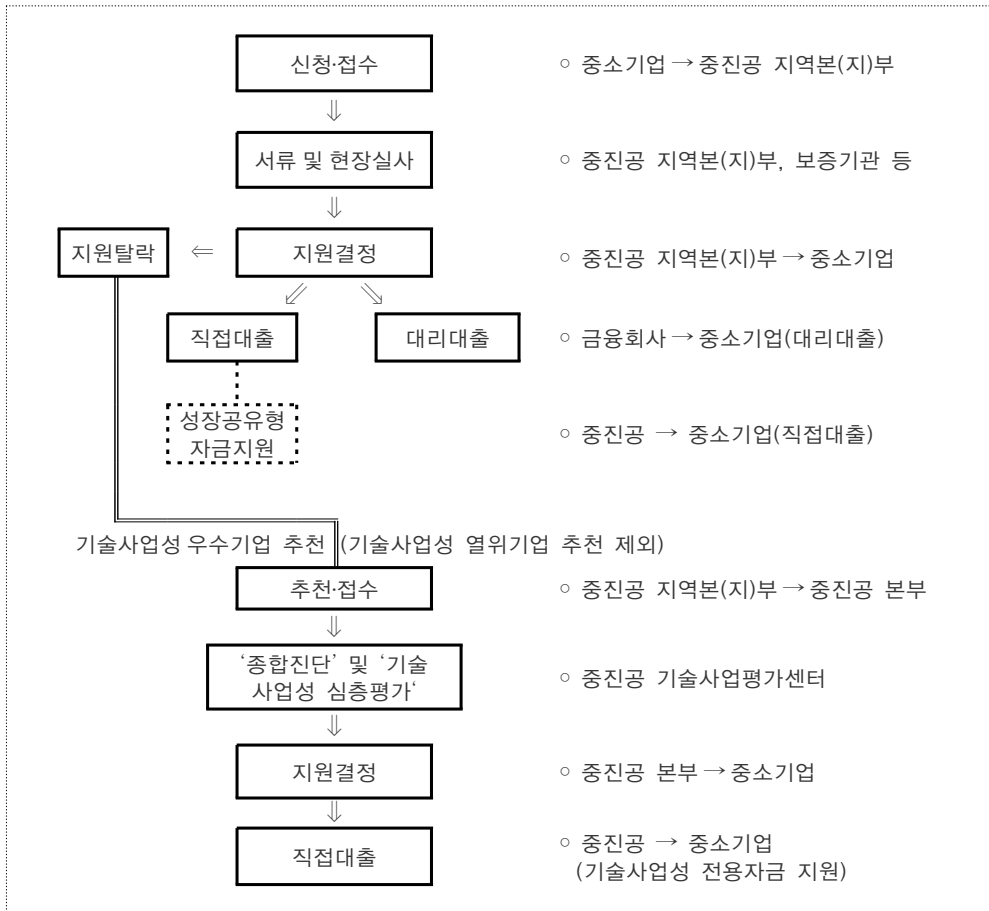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 융자 시기 : 2010. 1. 7 ~ 자금 소진시까지, 매월 구분 접수

* 다만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실천계획 및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피해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시 접수



자금(금융)지원 융자체계도

7) 신보, 기보 신용보증지원

□ 사업목적 :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채무이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76.6, 신용보증기금법) :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기술신용보증기금('89.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 ('96년부터 광역자치단체별로 설립,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 신용보증대상기업 :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 및 이들의 단체

□ 보증한도

- 신용보증 운용 규모 : 기본재산의 20배 범위내에서 운용
- 같은기업당 보증 한도

보증	한도
일반보증	30억원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합산)
구매자금대출보증, 무역금융보증, 지식기반기업보증,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벤처투자보증 등	50억원~70억원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합산)
지역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최고 8억원이내
특례보증의 경우 각 특례보증 별로 보증한도가 상이하니 각 사업별 페이지 참조요망	-

□ 보증료

- 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에 따라 산정
 - 지역신용보증재단
 - 일반보증 : 0.5% ~ 2.0%
 - 특례보증 : 1%

	중소기업	대기업
신용보증기금	0.5% ~ 3.0%	1.0% ~ 3.5%
기술신용보증기금	0.7% ~ 3.0%	1.2% ~ 3.5%

□ 보증방법

- 개별보증 : 채무건별로 보증

- 근보증 :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주채무를 일괄하여 보증

□ 보증거래방법

- 한도거래 : 일정한 한도와 기간을 미리 정하여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신용 조사와 보증심사를 생략하는 거래방법
- 외화보증 : 기업이 부담하는 지정영수통화의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주채무와 동종 통화의 표시로 보증서를 발급

□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대상

- 보증금지대상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 못한 기업
 -위 호 기업의 경영실권자 법인기업인 경우 과점 주주인 이사, 이사 또는 업무집행 위원중 무한책임 사원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P-CBO등 보증관련 개별 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또는 대출 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기업
 -위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영위하는 개인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거래은행간 협의를 통해 대출부적격으로 판명된 기업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보증 연체정·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
 -위 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 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 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보증기관의 보증사고기업
 -보증사고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대상

-휴업, 폐업중인 사업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보증 연체정·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및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등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사업자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사업자
 -과거 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 등)에 대위변제 등의 사고경력이 있는 사업자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사업자
 -부실자료 제출사업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자
 -보증사고자의 연대보증인인 사업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단, 기관구내식당, 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
 -주점업(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 제외)
 -부동산업(단,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 범위 소상공인 제외)
 -골프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gambling 등 사치, 향락 관련 업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리 서비스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을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보증심사 방법

신용보증기금	일반심사	1억원 이하, 심사체크리스트(일반 심사용), 및 간이신용 조사서를 기준으로 산출된 소기업 신용평가등급 (SESS)에 의해 검토
	심층심사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심사체크 리스트(심층 심사용), 금융거래상황검토표, 단기지급 능력검토표와 종합신용등급에 의해 검토
	Hi- Plus심사	10억원 초과, 심사체크 리스트(Hi-Plus심사용), 금융거래 상황검토표, 단기지급 능력검토표와 종합신용 등급에 의해 검토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	기술수준과 위험수준을 기술 평가모형(KTRS)에 의해 종합평가, 신용도 검토
	기술심사보증	기술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미만이나 사업안정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재무 등급 또는 기업 평가등급에 의해 심사, 단기지급 능력·차입금 추이·신용도 검토
지역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최대 8억원이내, 심사체크 리스트, 금융거래 상황검토표, 사업자 업력, 매출 정도, 단기지급 능력검토표와 종합신용 등급에 의해 검토
	특례보증	사업별로 한도가 상이, 특례보증별 기준에 의한 심사체크리스트 및 간이용조사서를 기준으로 산출된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검토

□ 신용보증신청시 제출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 보증기관의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동업자, 공동대표자, 무한책임사원, 경영실권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 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 임차사업장 및 임차주택인 경우는 생략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금융거래확인서 · 보증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해 주거래금융기관 당좌거래은행 및 본건신청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재무제표 · 기업체 제시 재표제표(세무서확인 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 기업실태조사표 · 소정양식에 의해 신청기업이 기재하여 제출
 - *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분, 보증종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 보증기관별로 상이하니 각 보증기관으로 문의
 - * 주민등록등본, 대표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행정 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및 비용 부담시 보증기관에서 직접 발급

□ 보증신청 및 접수

- 보증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¹⁰¹⁾ 소재지” 의 관할 보증기관의 영업점

¹⁰¹⁾ 주된사업장은 본사(주사무소 포함) 또는 주사업장(조사기준일 현재) · 제조업(공장), 광업(광구), 도 · 소매업(판매장), 무역업

8)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 제도개요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신용상태가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 지역재단 현황 : 16개 시도에 16개 재단

□ 보증의 종류

- 대출 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어음 보증, 제2금융 보증, 무역어음 인수담보 보증, 수출 지원자금 대출보증, 시설대여 보증, 이행 보증 등 ※ 신용보증재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지원사항	내용
보증 한도	동일 기업당 최고 8억원
보증료	보증금액의 0.5%~2%(재단 및 보증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보증심사 방법	사업성, 경영능력, 경쟁력, 금융거래상황,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 등
신청시 구비서류	신용보증신청서,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등
신청,접수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문의:국번없이 1588-7365)

9)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

- 사업목적 : 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통해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실업난 해소, 성장산업(수출업,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 보증방법

- 대상기업
 - 신용등급 “CCC”등급 이상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① “2010년 신규고용 창출” 소상공인
 - ② 성장산업(수출업, 1인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 보증제한기업 :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
- 보증규모 : 3,000억원
- 보증한도 : 최대 50백만원
- 대상채무 및 보증방법
 - 대상채무 : 취급 금융기관의 운전자금(개별대출에 한함)
 - 보증방법 :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구보증 회소조건의 신규보증(구상채권회수보증 포함) 취급 불가)
- 취급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기타(주된 경영활동과 금융거래 및 회계활동이 이뤄지는 장소)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분할상환 원칙
- 대출금리 : 연리 5~6%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요율 : 1% 이내
- 연대보증인 : 필수입보 외에 제3자 입보 금지
- 시행기간 : 2010. 6. 14 ~ 한도소진시까지

구분	신규고용창출기업		성장산업
신규고용	1~4명	5명 이상	-
보증금액	보증한도산출액 x 150%	보증한도산출액 x 200%	보증한도산출액 x 200%

※ 상기 보증금액 산정시 기보증금액 제외, 재단 신용평가모형상 신용등급 적용 및 한도산정,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시 신용평가모형(한도산정) 적용 생략

□ 신청 및 문의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신청 보증서 발급이후 취급은행에 대출신청
- 신청 및 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

10) 서민지원 햇살론

□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의 자금수요는 늘어났으나, 서민금융회사¹⁰²⁾는 유가증권투자, 부동산 개발 대출에 치중한 결과 서민대출이 감소
 - 서민들의 사금융 및 대부업 의존도가 높아져 대부업 시장이 급성장하고 결과적으로 서민계층의 금리부담도 동반 증가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 서민가계의 이자부담도 늘어날 전망)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4.1), 당정협의(4.7)를 거쳐 「서민 금융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증부 서민대출('햇살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 '햇살론' 활성화시 서민금융이 확대되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 기대
 - 그 동안 서민금융회사가 서민의 낮은 신용도와 취약한 담보력 때문에 서민대출을 꺼려 왔으나 보증공급으로 이를 보완하여 서민대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서민입장에서는 사금융·제도권 금융회사 보다 금리와 이용도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어 금융소외 현상 완화

102)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 보증대출대상

- 신용 6~10등급(무등급 포함) 또는 저소득층인 자영업자(법인기업 제외)·농림어업인 및 근로자(일용·임시직 포함)
 -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상인회장·인근 고정사업주의 사업영위확인서를 받아 제출시 사업자로 인정 (농림어업인은 농지원부, 영농·영어확인서 등을 통해 종사여부 확인)
 - 일용·작업시직, 근로소득 미신고자는 고용주의 근로(고용)확인서, 급여통장 원본 제출시 근로자로 인정
- 신용등급 요건
 - 대출신청일 현재 3개 신용정보회사¹⁰³⁾에서 평가한 개인신용이 6~10등급(1,292만명)인 사람(소득규모와 상관없이 인정)
 - 서민금융회사가 이용가능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중 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
 - 신용 무등급자(169만명)도 금융소외자이므로 대출대상에 포함
- 저소득 요건
 - 기초생활 수급자(약158만명)·차상위 계층(약16만) 및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사람(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인정)
 - 연소득 2천만원으로 기준설정시 총 887만명 중 신용등급이 1~5등급으로 우량한 579만명 추가
 -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누적분포 약23%(신용평가사)
 - 소득기준은 대출 신청자 개인별로 인정
 - 가구당 소득 적용시 가구원 전체 소득을 증명·확인해야하는 어려움으로 대출실행이 제약될 소지
 - * 유사사례 : (희망홀씨 대출) 개인별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복지부, 저소득층 운영자금 용자)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재산 1억원 이하
 - 보유재산 기준은 확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적용

□ 보증제한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¹⁰⁴⁾(218만명) 및 공공정보¹⁰⁵⁾(189만명)가 등재된 자
- 취급일 현재, 지역신보(중앙회 포함)·신보·기보의 보증사고 또는 대위변제와 관련이 있는 자
- 취급일 현재, 신보·기보 보증 잔액이 있는 자 또는 지역신보(중앙회 포함) 보증 잔액이 보증부 서민대출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자(63.7만명)
- 보증제한 업종¹⁰⁶⁾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적용역제공자 중 유흥접객원 및 댄서, 다단계 판매원
- 빈번한 연체경력¹⁰⁷⁾이 있는 근로자

103)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104) 연체(3개월 이상 등)·부도·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정보

105) 조세·과태료·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 정보(희생·파산·면책)

106) 유흥업소·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

※ 상품출시 후 6개월~1년 동안 운영경과를 보고 필요시 보증대출 대상 조정

□ 대출 운용방안

- 보증비율 : 85%
 - 서민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분보증으로 운영
 - 중소기업 보증비율 정상화조치('10.7이후)¹⁰⁸⁾ 및 보증기관의 평균 보증비율¹⁰⁹⁾ 수준을 고려 85% 적용
- 대출금리

① 금리 결정방식

- 「금리상한」 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결정
- 이용자 선택에 따라 3, 6, 12개월 단위로 조정되는 변동금리 방식(조달원가¹¹⁰⁾ + 스프레드¹¹¹⁾)
 - *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스프레드 상한으로 적극적 취급유인 부여

② 권역별 취급금리 상한

- (상호금융) 조달원가 + 6.38%(스프레드 상한) ➡ 약 11%
- (저축은행) 조달원가 + 8.99%(스프레드 상한) ➡ 약 13%
- 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상호금융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영업행태, 비용구조 차이를 감안하여 취급금리 상한을 결정
- 금년 7월 기준 취급금리상한은 상호금융업권 약 10.6%, 저축은행은 약 13.1% 수준
 - * 이용자는 보증잔액에 대해 연 1%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므로, 보증비율 85%를 고려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0.85%의 추가적 부담 존재
 - ** 조달금리('10.5월 1년 만기 정기예금) : 상호금융 4.27%, 저축은행 4.15%
-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햇살론'을 받게 될 경우, 금리수준이 30~40%대에서 10%대로 낮아져 서민의 이자부담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상호금융업권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햇살론'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10~15%(6~10등급)에서 약 10% 수준으로 소폭 떨어지나, 기존에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일부 경우 연대보증을 세워야했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기대

• 자금용도별 운영방안

① 사업 운영자금

- 대출대상 : 영업 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최소 경력요건 배제)
- 대출한도 :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 사업자 등록 유무, 점포보유(임차포함)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하여 신용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방지
 - * 지역신보 평균보증액 : ('07) 23백만원 → ('08) 20백만원 → ('09) 17백만원

107)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자

108) 지역신보 : 일반보증 비율 95 → 85%, 산·기보 : 최고 90 → 85% (신규보증 ' 10.1월부터 최고 85%)

109) (농 신 보) 농·어업인 85%(법인 80%) / (산·기보) 약88%(' 09년 평균)

110) 대출 또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111) 대손비용 + 판매관리비 + 마진

신용등급	유등록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점포보유(임차포함)	점포 미보유(노점 등)
6등급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7등급	1,7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8등급	1,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9등급이하	1,100만원	700만원	400만원

* 신용 5등급 이상 저소득 사업자는 대상유형별 최고금액 지원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1년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보증수수료) 연 1%(창업·생계자금도 동일 수수료 적용)

* (지역신보) 일반보증 평균보증료 1.35%,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1.0% 저신용 근로자 생계 보증 0.5% (산기보) '09년 1.2%, '10년 평균 보증료 목표수준 1.3%

② 창업자금

- 대출대상 : 정부, 공공기관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점포를 구비하는 경우(사업경력이 존재하므로 창업교육 이수조건 미적용)
- 대출 요건
 - i) 창업교육 이수 : 12시간(장애인 사업자 10시간) 이상 이수
교육기관 (例示) : 소상공인지원센터 '성공창업패키지' 교육과정(7,000명), 창업진흥원 '기술창업학교'(1,200명), 소상공인지원센터(22,000명)·근로복지공단(100명) 창업교육 등
 - ii) 창업요건 :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후 개업한지 1년 이내이어야 함(단,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개업한지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필요한 경우 5천만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③ 생계자금

- 대출대상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포함)와 영업종인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에게 자금을 지원
- 대출한도 : 최고 1천만원¹¹²⁾으로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차등화
- 상환방법 : 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신용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하
대출금액	1천만원	8백만원	6백만원	4백만원

112) 당초 계획(4.7발표)은 5백만원이었으나 지원 금액 확대, 신용5등급 이상 저소득자는 신용6등급의 대출한도 적용

2. 기술지원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부가 제품화에 따른 시장 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 지원규모 : 2,693억 원('10년)
- 지원분야 : 미래선도과제(개발기간 2년 이내, 최고 5억원까지 지원)
 - 2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 핵심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4대 중소기업형 유망기술을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4대분야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신제조기반, 고부가가치분야)
 - 글로벌투자과제(개발기간 3년 이내,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 수입대체 및 수출신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형 전략제품 250개를 발굴하여 민간 투자연계 방식을 통해 지원
 - 창업실용과제(개발기간 1년 이내, 최고 2.5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자유응모과제로서 창업 초기기업 또는 일반 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실용화 기술을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단, 소기업, S/W업,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업체, 창업보육 센터입주기업은 예외인정)

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사업목적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717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역사업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대학의 인적 또는 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지자체와 매칭)	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전국사업	기술적 특성상 개발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거나, 녹색·신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자유응모와 지정공모 병행) * 지정공모과제는 종합관리시스템 (http://sanhak.smba.go.kr)에서 열람 후 신청	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2년간 최대 4억원까지 지원
국제사업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2년간 최대 4억원까지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지역사업 : 해당지역 소재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하되, 창업 7년 이내 또는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을 우선 지원
- 전국 및 국제사업 : 전국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하되, 창업 7년이상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

- 공 통 :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신청제외

□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관은 신청접수 마감일 7일전까지,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를 (사)한국산화연합회에 제출

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사업목적¹¹³⁾

-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사업
-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

□ 지원규모 : 600억원('10년)

□ 지원분야

- 선도과제(수요기관의 구매를 전제로 하는 지정과제)

수요조사과제	구매의사를 밝히고 검증을 거친 기술. 공공기관과제는 총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과제는 총사업비의 5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민간과제는 대기업에서 20% 부담)
투자연계과제	경제성과 개발비 규모가 큰 기술. 공공기관과제는 총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과제는 총사업비의 55%이내에서 외부투자를 조건으로 최고 7.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3년 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민간과제는 대기업에서 20% 부담) *투자기관 :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사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 실용과제 : 해외수요처로부터 주문받은 자유응모 과제로서,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2.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 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선도과제·실용과제) 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 20%를 기술료로 회수

※ 과제발굴은 선도과제만 실시하며, 실용과제는 자유응모 방식으로 진행

□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제조업체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 소기업, SW개발업체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113)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4)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사업목적 : R&D 활동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내 또는 인근지역에 설치·운영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 지원규모 : 380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 신규설치: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R&D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내 또는 인근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토록 지원 (사업비의 75% 범위내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
 - 업그레이드: 기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여 연구소의 규모 확대 및 R&D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화, 제품화 추진 유도 (사업비의 75% 범위내 2년간 최대 5억까지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신규설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또는 인근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업그레이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보유 부설연구소의 인프라 확충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참여기관의 참여자격
 - 국공립(사립)대학, 기능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및 연구기자재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5)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제조과정 상 에너지 절감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국제 녹색규제 경쟁력을 제고
- 지원규모 : 327억원(신규 297억원, 계속 30억원)
- 지원내용

선도과제(150억원)	실용과제(147억원)
연구기관 중심의 연-산 협력과제	제조 중소기업의 녹색관련 자유응모 기술

- 지원조건

구분	지원한도	유형	비고
선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당 최대2년 5-6억원 한 -주관기관: 과제당 2년 이내 4억원한도 지원 -참여기업: 기업당 기술이전비용 1억원 이내 추가 	산-연 공동 (과제당 참여 기업2개 이내)	지정 공모
실용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당 1년이내 2.5억원 한도 지원 	기업 단독	자유 응모

□ 참여자격

- 선도과제 : 주관기관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공공연구기관 등 (참여기업 제조공정을 갖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실용과제 벤처, 이노비즈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으로 제조공정을 갖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상기업체 이외의 제조기업은 위탁연구기관(별도공지)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함

3. 판로/수출지원

1) 수출 금융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담보부족 등으로 시중은행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자금을 신용위주로 지원

- 사업내용('09년 1,200억원)

지원대상	융자제외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융자제외대상 업종 : 게임·도박 등 불건전소비업종 및 고소득서비스업 등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 누계기준)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 제외
융자범위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수출계약 : 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융자한도	업체당 연간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의 경우 20억원) 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실적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 한도내에서 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융자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 △0.33%p(기준금리) * 분기별 연동 및 기업의 신용등급·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기간	180일 이내(최대 1년이내)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2)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 사업목적 : 내수 또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 내용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개발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및 수출마케팅 지원 등 4개 분야 20여 세부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의 9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교육	무역실무기초과정, 글로벌마케팅과정, 글로벌지역전문가과정
디자인	외국어포장, (다목적, 종이, 전자)외국어카탈로그, 외국어 동영상
정보제공 및 홍보	시장조사, 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상품홍보(전문지 및 해외공중파)
마케팅	유명검색엔진등록, 수출지도·자문, 국내·외전시회, 통·번역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개성공단 입주 기업 포함)

제외대상기업	'09년까지 중소기업청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에 3번 참여 혜택을 받은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우선 선정	신청서제출 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출유망중소기업 직전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으로 직전년도 첫수출에 성공(3만불 이상) 하거나 수출 증가율이 30% 이상인 수출기업 지방청장이 선정한 환위험관리 우수중소기업
'10년도 지원규모	'10년도 사업예산 : 230억원 업체당 지원 한도 : 1,500만원 이내 (기업부담 10% 이상)

3)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 사업목적 : 해외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 업종 위주의 무역촉진단(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수출저변 확충 및 수출촉진
- 사업내용(' 10년, 100억원)

지원대상	무역촉진단 활동을 주관하는 단체로 전문업종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종별 협회 및 수출유관기관
지원내용	업체당 1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부스임차료 : 1부스 50%(전시회에 따라 3부스까지 지원) 공동홍보부스 임차료 : 1부스(최대 12㎡)이내에서 100% 장치비 : KOTRA 국가별 기준단가의 50%(보석, 화장품, 공예, 패션, 멀티미디어 업종은 80%) 운송료 : 1CBM이내 편도운송료의 50%(대형전시물의 경우 2CBM까지) 통역, 회선임차료, 바이어간담회, 홍보비(공동홍보물 제작 등) 지원

4)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 사업목적 : 세계경제의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위험부담을 줄이고 조기정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수출증대
- 지원내용(' 10년, 67억원)

현지 수출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사무공간, 공동회의실, 사무용 집기, 전화, 인터넷 등 사무여건 제공
해외마케팅, 법률 및 회계 자문 서비스 지원
중소기업 단기 출장직원의 비즈니스 편의(수출사랑방) 제공
1개 입주업체당 연평균 130백만원의 비용절감 효과

구 분	개별 추진	인큐베이터 이용
소요비용	2억원 내외	약 7~8천만원
파견직원 인건비	최소 2명이상	1명
마케팅컨설팅 비용	30,000\$/년간	-
법률및회계자문 비용	별도 소요	-
판촉비, 기타 시장정보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	별도 소요	정보공유 및 노하우 전수로 초기 시행착오비용 최소화
임대료 및 사무집기	16,000불 내외	월10만원 내외

□ 운영현황

지역	미국				브라질	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러시아	UAE	인도	멕시코
	뉴욕	시카고	워싱턴	LA	상파울루	프랑크푸르트	도쿄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청두	호치민	싱가포르	모스크바	두바이	뉴델리	멕시코 시티
입주규모	23	18	12	23	10	15	13	21	14	26	10	12	11	10	14	15	10

□ 입주업체 선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주업체 선정

5) 수출 중소기업 500 프로그램

- 사업목적: 글로벌 잠재력이 우수한 수출초보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5년내 수출 500만불 이상으로 육성기 위하여 ' 10년 수출 중소기업 500프로그램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직전년도 직수출실적이 100만불 이하 기업(중소기업 글로벌 전략품목 및 수출유망 중소기업, 벤처·이노비즈 기업 등 우대)
* 제외대상기업 : '10년까지 중소기업청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에 3번 참여한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제채납 기업 등

□ 지원 내용 : 수출기업별 전담멘토를 지정, 단계별 Package방식의 집중 지원

- 수출성장단계별 지원사업에 대상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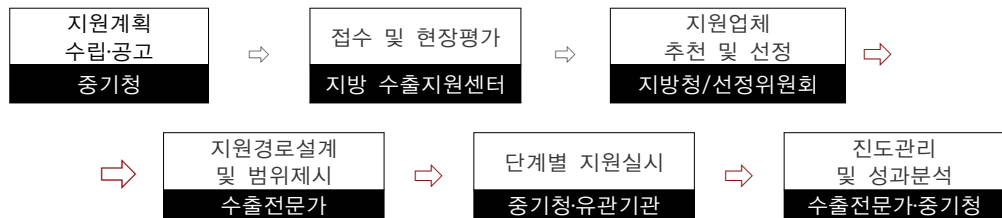
1단계	수출기업화(통번역·무역교육·바이어 연계 등) 해외시장 심층조사(필요시), 해외규격인증	최대 2년간 우선 선정 (100만불 도달시 졸업)
2단계	해외전시회, 수출컨소시엄(선정된 주관단체에 참여시) 해외규격인증(누적액·횟수로 150백만원, 20회까지) 민간네트워크, 수출BI, 글로벌 브랜드(300만불 이상시)	최대 3년간 우선 선정 (500만불 도달시 졸업)

* 기타 수출입 금융(중진공, 국민은행), 일반대출(국민은행) 등 우대

□ 지원규모 : 100개사

□ 지원절차

- 신청기업 대상 현장평가 실시 : 참여자격 등 결격사유를 사전 검토하여 지방청이 수출유관기관(지부) 등과 협의하여 현장평가 대상 범위 결정
- 지방청 추천 : 현장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청장이 본청에 추천
- 지방청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본청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확정(100개사)



6)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 사업목적

- 해외시장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은 갖추고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수출 중소기업(제품)을 글로벌브랜드로 육성
- Brand Power를 창출하여 수출의 고부가 가치화 지향
- 브랜드를 기업활동의 중심에 두는 브랜드경영 인식 및 저변 확대

□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 브랜드 경영실태 기초조사, 브랜드 전략 컨설팅을 공동과제로 하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및 개발된 브랜드 해외마케팅 등 통합 지원

지원항목		지원 내용
공통	기초조사	- 브랜드 경영환경 분석 및 해외시장 진출 로드맵 작성
	브랜드 전략 컨설팅	- 국내외 경쟁사, 소비자 분석을 통한 브랜드 비전 확립 - 브랜드 포지셔닝,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개발 -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브랜드 자산구축을 위한 브랜드 경영관리시스템 설계
브랜드 개발		- 브랜드 네이밍 개발 -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브랜드 해외마케팅		- 해외 마케팅 Tool 기획 및 개발 - 해외마케팅 실행(광고, 온라인마케팅 등) 및 관리

* 브랜드 전문위원을 배정하여 기초조사, 개별자문, 프로젝트 관리 실시

- 지원방법 : 브랜드전문 사업수행사¹¹⁴⁾를 활용하여 브랜드 컨설팅을 지원하고, 매칭비율에 따라

컨설팅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참여기업이 사업비를 분담투자하는 Matching 방식으로 지원형태별로 60~100백만원 한도로 사업비의 50%~70% 지원 (추가 소요비용은 업체부담으로 하되, 규모는 사업수행사와 참여업체(중소기업)간 협의에 따름)
- 지원기간 : 2년 졸업제로 하되 매년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 결정('10년 신규기업부터 적용되며, 기 지원기업의 경우 3년까지 지원)

지원형태	지원한도	지원비율
(브랜드 개발, 브랜드 해외마케팅) 중 1개 분야	60백만원	70%
(브랜드 개발, 브랜드 해외마케팅) 중 2개 분야	100백만원	50%

*계속지원기업은 60백만원을 지원한도로 하여 2차년도에 60% 지원, 3차년도에 50% 지원(지원비율 매년 10%씩 하향조정)

*단계별로 브랜드 개발 이후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브랜드 개발은 1차년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 (브랜드 해외마케팅 분야만 신청하는 경우 전문위원의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매뉴얼 보유 여부 등을 심의하여 지원)

□ 모집규모

- 참여중소기업 : 60개사
- 사업수행사 : 재지정 사업수행사 포함하여 사업수행사 Pool은 20개사 내외로 운영

□ 참여 중소기업 선정

신청자격	<p>해외시장에서 차별화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있는 제품과 중장기 매칭투자 여력 및 의사가 있으며,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수출중소기업</p> <p>-전년도(또는 최근1년) 수출액이 300만불 이상</p> <p>-전년도(또는 최근1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 창출 희망기업</p> <p>-수출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韓流현상과 관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제품 제조기업은 전년도(최근 1년간) 수출액 200만불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p>
선정제외대상	<p>-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p> <p>-국세를 체납 중인 기업</p> <p>-지식경제부의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단, 계속지원기업은 예외)</p>
선정절차 및 기준	<p>-선정절차 : 서류심사 → 실태조사 및 평가 → 브랜드운영위원회 심의</p> <p>-선정기준 : 재무현황, 수출실적 및 추이, 기술경쟁력, 브랜드 경영 추진 준비도, 지원효과, 기술경쟁력 등을 종합평가</p>

□ 모집대상

- 참여중소기업 :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수출액이 300만불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

114) 브랜드 개발 및 해외마케팅 분야에서 우수한 사업실적과 전문 컨설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전문기업(기관)

- 사업수행사 : 브랜드 개발, 해외마케팅 등 동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매출액 5억원 이상, 업력 5년 이상, 단일프로젝트 5천만원 이상 수행경험을 보유한 업체

4. 인력지원 사업

1)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사업목적 : 산업체와 전문계고(대학)를 연계,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사업

- 운용체계

사업규모		95억원
신청		전문계고 및 전문대는 전년도 12월, 기업은 수시접수
지 원 대 상	중소기업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분석하여 전문계고생(대학생)을 맞춤형으로 교육·훈련(국비) 후 공급(최소 2년) -병역업체 선정 우대 및 정책자금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대
	학교	-산업계의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교과과정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실습기자재 구입 등 예산 지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과과정 운영 관련 교사기술연수 지원 등
	학생	-교육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취업기간(2년) 중 입영연기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등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

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의 전문계고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단, 중소기업청 지정 특성화전문계고 제외)
업체	고용보험에 가입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업종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정책마당(인력지원)” 참조)

*참여학교(전문계고 및 대학) 지정은 해당사업 전년도 12월중 신청하여 매년 1월중 중소기업청이 선정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中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中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中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서비스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익업	731	수익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및충전업(75994) 제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숙박업(55111),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

기타 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은 창업기업지원자금 및 사업전환자금을 제외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허용
 * 종합소매업(4712), 산업단체(94110)가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
 * 뷰티산업(96112, 96113, 96119)은 허용(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지식서비스업 육성자금으로 지원)

[별표 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기술혁신 분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Inno-biz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기업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 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컨설팅 추진기업으로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통합 연계형 전문기업(ICMS) 컨소시엄 참여기업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참여기업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별표 3]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구분	신성장동력	세부 분류
녹색 기술 산업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농산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 청정석탄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원전플랜트
	고도 물처리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친환경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기술,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지속가능 물환경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기술
	LED응용	LED응용
	그린수송 시스템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첨단철도
	첨단 그린도시	U-City S/W, U-City IT H/W, U-City IT 융합 H/W, ITS, GIS, 그린홈
첨단 융합 산업	방송통신 융합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방송통신미디어
	IT융합 시스템	IT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로봇응용	로봇응용
	신소재· 나노융합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nonic Liquid(IL) 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 분야, 기능성 나노 필름 분야,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바이오제약 (자원)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 가 서 비 스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녹색금융	(해당사항 없음)
	콘텐츠· 소프트웨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 융합관광	MICE, 생태관광

* 녹색·신성장동력(기반기술 포함)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후 판단하며, <별표 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배제

* 녹색·신성장동력 기반 기술은 '〈별표 3-1〉 한국형 新제조기반 24개 전략기술'이며, 동 기술 관련 표준산업분류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별표 3-1]

한국형 新제조기반 24개 전략기술(녹색·신성장동력 기반 기술)

신제조기반기술		관련 산업(제품/부품/소재)
	세부 연관기술	
사출금형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마이크로 성형기술, 대면적 성형기술	■가전(케이스), 자동차(내장부품, 계기판부품), 휴대폰(케이스) 등
프레스금형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fine blanking 및 forming die 제작기술, 난성형재 성형기술	■자동차(차체 및 샤시 부품), 휴대폰(커넥터), 반도체(IC배선부품) 각종 기능 부품
특수금형	다색다중 사출성형기술, blow 성형기술, 플라스틱 메탈 일체화 성형기술, IMA(In Mold Assy') 성형기술	■휴대폰(2색 컬러 케이스), 융복합 제조 ■디스플레이(LCD초슬림필터), 의약 및 식품산업(용기류), 카메라(렌즈 및 광학부품) 등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기술, 마그네슘 다이캐스팅기술	■자동차(엔진부품, 미션, 크랭크 케이스), 휴대폰(케이스), 정보통신(컴퓨터 케이스) 등
사형주조	주철, 주강 사형주조기술, 비철사형주조 기술	■자동차(실린더 블록), 조선(대형 구조부품) 등
특수주조	금형주조기술, 정밀주조기술	■정밀기계(정밀부품) 등
단조	열·냉·온간 단조기술, 복합 단조기술, 부품 일체화 단조기술	■자동차(조향장치, 엔진관련부품, 기어류), 발전기(변속기, BB), 발전시스템(축류품, 유압밸브 부품, 압축기용 부품), 히프펌프(열교환기) 등
압출·인발	형상재 압출/인발 기술, 정수압 압출기술, 가변단면 압출/인발 기술	■자동차(차체/샤시부품, 볼트류, 범퍼류), 히크펌프(열교환기용 부품), 발전기(프레임, 포크, 핸들) 등
전자접합	wafer Level Packaging 기술, 전자모듈 제조기술, 무연솔더링 실장기술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휴대폰(IC packaging) 등
용접	레이저 용접기술, 아크 용접기술, 저항용접기술, 철강용접기술, 비철용접기술	■조선(블록부품), 자동차(차체 및 샤시 부품), 건설기계(굴삭기 붐, 암 부품), 건설(교량, 철재 구조물), 중공업(플랜트), 발전기 프레임
용접·접합재료 및 시스템	용접재료기술, 전자접합 소재기술, 용접전원기술, 접합시스템기술	■조선(용접재료, 용접전원, 용접와이어 피더), 자동차(용접전원 및 접착재료), 전자(패키징 소재 및 장비)
열처리	질화기술, 침탄기술, 템퍼링기술	■자동차(기어/허브/범퍼/클러치/필러), 건설기계(실린더/부싱/축), 산업기계(사출금형/프레스금형), 에너지(베어링)

신제조기반기술		관련 산업(제품/부품/소재)
	세부 연관기술	
건식코팅	DLC 기술, 경질코팅기술	■ 자동차(실린더/피스톤링), 산업기계(렌즈금형/절삭공구), 휴대폰(외장) 건설기계(내마모부품)
진공유지	진공부품제작기술, 진공시스템설계기술, 박막코팅 공정기술	■ 반도체(배선/유전체/전극/도핑막), 디스플레이(반도체 증착/전극/유전체), 태양전지(반도체박막/전극/배선), 자동차(금속피막증착체), 플라스틱(금속화), 공구류(경질피막/열처리)
도 금	일반전기도금, 무전해도금, 화성처리기술, 양극산화기술	■ 자동차(실린더/휠/배관), 반도체(배선/커넥터), 철강(연주물드/구조물), 정밀기계(미소부품), 태양전지(전극/흡수판)
PCB 표면처리	전기도금기술, 무전해도금기술, 솔더도금기술	■ 휴대폰(연성기판), 디스플레이(COG), 전기전자(FCCCL), 정보통신(COF), 가전(회로기판)
재생가능 연료·소재 생산	바이오원료전처리기술, 연료 전지분리막기술,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기술	■ 대체고급연료(윤활유, 항공유), 점접착제/도료/코팅제, 화학첨가제
고기능성 고분자소재 제조	나노탄소소재기술, 나노필름기술, 검지용소재기술, 식품첨가제기술	■ IT/가전 기판, 디스플레이 필름, 반도체실장, 태양전지 전극 ■ 자동차/조선/항공 내장재, 섬유, 패키징(포장재, 용기 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소재
정밀화학제 품합성분리	나노복합소재 추출분리기술, 그린에너지소재 막 분리 및 상분리기술, 신소재합성 미반응물제거	■ 의약/식품, 정밀화학제품(염료, 화장품 등), 화학플랜트(결정화/추출/증류장치)
발효생산	균주개량기술, 바이오원료전환기술, 모노머 생물합성기술, 고도발효기술	■ 기능성 식품, 바이오화학제품, 모노머, 바이오연료
발효장치	바이오가스정제기술, 발효산물분리기술, 금속성분 회수기술, 발효 약취제거기술	■ 정밀분리막시스템, GMP/HACCP 정제장치, 결정화 분리장치
섬 유 신소재	섬유방사/방적기술, 제편직/부직포화 기술, 섬유 복합재료기술	■ 화섬원사, 복합방적사,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초경량 직편물, 인공피혁, 3차원 스페이서 직물, 자동차 내장재 등
섬 유 신가공	섬유표면가공기술, 섬유복합가공기술	■ 친환경염색가공, 투습방수 섬유, 자외선 차단 섬유, 온도조절섬유, 기능성 염조제 등
패키징	패키징 소재기술, 인디케이터 기술, 맞춤형 설계 기술, 패키징 공정 기술	■ 편의제공 패키징(품질, 유통, 제조 포함), 품질 인디케이터, 온도시간 인디케이터, 가스 농도 인디케이터, 가스투과 제어 패키징, 위조방지 패키징

[별표 4] 지식서비스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계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별표 5] 제조관련서비스업

3701 하수 및 폐수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수출업에 한함)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별표 6]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적용대상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 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품목추가	제조업	현재 영위업종내에서 새로운 품목 추가(기술, 시설, 공정 등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	30% 이상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새로운 품목의 기준 : 별도로 정하는 제조업 품목분류표(www.kerc.or.kr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가 다른 품목(제조업에 한함)

예시)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2)내에서 철강단조물(25912100) → 비철금속단조물(25912200)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별표 7]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별표 8]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캐블링 및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활동	98
국제 및 외국기관	99

[별표 9]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1	A01(농업)	0.0	600.0	1200.0
2	A02(임업)	0.0	600.0	1200.0
3	A03(어업)	149.2	447.6	895.2
4	B05~08(광업)	144.7	434.1	868.2
5	C10(식료품)	213.4	600.0	1200.0
6	C11(음료)	103.7	311.1	622.2
7	C12(담배제조업)	0.0	600.0	1200.0
8	C13(섬유제품(의복제외))	181.8	545.4	1,090.8
9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42.6	427.8	855.6
10	C15(가죽, 가방 및 신발)	135.3	405.9	811.8
11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199.7	599.1	1,198.2
12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59.7	479.1	958.2
13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2.7	578.1	1,156.2
14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65.2	300.0	600.0
15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190.5	571.5	1,143.0
16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68.6	300.0	600.0
17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43.3	429.9	859.8
18	C23(비금속 광물제품)	131.7	395.1	790.2
19	C24(1차 금속)	172.6	517.8	1,035.6
20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97.9	593.7	1,187.4
21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5.9	437.7	875.4
22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07.4	322.2	644.4
23	C28(전기장비)	165.5	496.5	993.0
24	C29(기타 기계 및 장비)	176.7	530.1	1,060.2
25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178.1	534.3	1,068.6
26	C31(기타 운송장비)	381.2	600.0	1200.0
27	C32(가구)	152.1	456.3	912.6
28	C33(기타 제품 제조업)	173.2	519.6	1,039.2
29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6.8	600.0	1200.0
30	D36(수도사업)	0.0	600.0	1200.0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용자
31	E37,381,382(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125.0	375.0	750.0
32	E383(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172.8	518.4	1,036.8
33	D39(환경정화및복원업)	0.0	600.0	1200.0
34	F41(종합 건설업)	177.8	533.4	1,066.8
35	F42(전문직별 공사업)	73.9	300.0	600.0
36	G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04.0	600.0	1200.0
37	G46(도매 및 상품중개업)	160.8	482.4	964.8
38	G47(소매업(자동차 제외))	216.6	600.0	1200.0
39	H49(육상운송업(철도운송업 제외))	341.0	600.0	1200.0
40	H50(수상 운송업)	172.1	516.3	1,032.6
41	H51(항공 운송업)	324.6	600.0	1200.0
42	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01.9	305.7	611.4
43	I55(숙박업)	252.5	600.0	1200.0
44	I56(음식점 및 주점업)	0.0	600.0	1200.0
45	J58(출판업)	99.8	300.0	600.0
46	J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98.7	596.1	1,192.2
47	J60(방송업)	79.5	300.0	600.0
48	J61(전기통신업)	87.7	300.0	600.0
49	J62(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21.1	363.3	726.6
50	J63(정보서비스업)	76.6	300.0	600.0
51	K64~66(금융 및 보험업)	0.0	600.0	1200.0
52	L68~69(부동산업 및 임대업)	273.9	600.0	1200.0
53	M70(연구개발업)	126.3	378.9	757.8
54	M71(전문서비스업)	177.0	531.0	1,062.0
55	M72(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2.3	300.0	600.0
56	M73(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0.9	362.7	725.4
57	N74~75(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6.8	300.0	600.0
58	O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	600.0	1200.0
59	P85(교육서비스업)	0.0	600.0	1200.0
60	Q86~87(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	600.0	1200.0
61	R90~91(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7.6	600.0	1200.0
62	S94~96(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0.0	600.0	1200.0
63	T97~98(가구내 고용활동)	0.0	600.0	1200.0
64	U99(국제 및 외국기관)	0.0	600.0	1200.0

[별표 10]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임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5	숙박업, 단 생계형*은 제외
56	주점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 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711, 712, 731, 86 75993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8550	일반 교습 학원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캐블링 및 베팅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 ¹¹⁵⁾ 은 제외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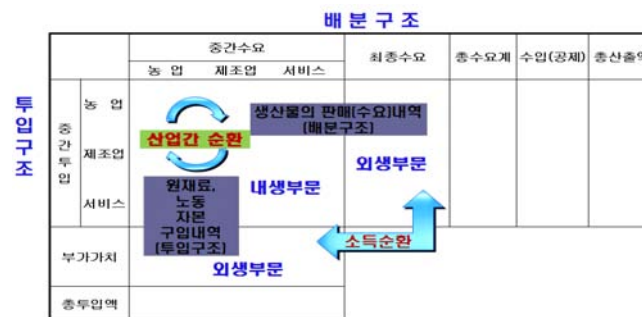
115) 생계형 기준은 지역건강보험료 73,000원 미만 납입하는 개인사업자

부록 6. 산업연관분석¹¹⁶⁾

1. 산업연관분석

산업연관표¹¹⁷⁾의 기본구조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를 과부족 없이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산업의 산출량을 분석하는 일종의 일반균형모형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건축관련서비스업의 투자가 증가하면 “동산업의 생산(건축설계, 구조설계 등)을 위한 본원적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와 중간재의 투입증가(CAD 등) → 연관산업(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수요증가 → 연관산업의 생산증가를 위한 본원적 요소와 중간재의 수요증가 → 건축관련서비스업의 중간수요 증가 및 기타산업의 수요증가”라는 연쇄적 파급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연쇄적 파급과정은 “총수요=총공급”의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되므로 일종의 일반균형 분석이며 산업연관분석은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산업연관표의 작성에서 출발한다.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16) 본 내용은 심우일 박사(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가 작성한 원고를 정리한 것임

117) 각 산업부문간에 거래된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 그리고 각 산업부문생산물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에 따른 판매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한나라의 경제의 종합적인 통계표

□ 산업연관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가정 하에서 작성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계수를 도출하여 고용을 포함한 경제적 파급 영향이 분석됨

- 결합생산(joint production)의 부존재 가정: 한 산업은 1개의 재화 혹은 서비스만을 생산한다는 것으로 산출물과 산업간 1대1의 대응관계를 가정함
- 생산기술의 제한성 가정: 각 생산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생산방법만이 존재하며, 기술적 대체생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투입과 산출간의 비례성 가정: 각 산업은 생산과정에 사용된 투입량과 생산수준간에 비례관계에 있다는 가정으로, 투입의 증가율만큼 생산수준이 증대하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음
- 생산활동의 가법성 가정: 각 산업이 개별적으로 행한 생산활동의 효과의 합계는 각 산업이 동시에 행한 총효과와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이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존재하지 않음

□ 이러한 기본적 가정은 산업활동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선형성(linearity)의 확보로 산업연관분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다음과 같은 기술계수의 도입을 가능케 함

- 기술계수(technical coefficient): i 산업에서 j 산업으로의 재화 혹은 서비스의 흐름을 나타내는 x_{ij} 와 j 산업의 총산출 X_j 가 주어졌을 때 산출에 대한 투입비율임

$$a_{ij} = x_{ij} / X_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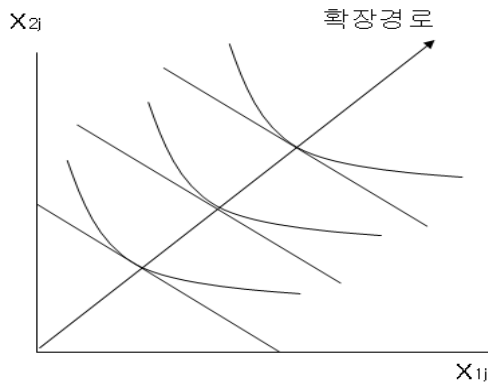
- 산업연관계수(input-output coefficient) 혹은 (직접)투입계수(direct input coefficient) 등으로 불리고 있음
- 기술계수는 특정시점에서는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는데, 투입계수(a_{ij})가 고정되면, 투입계수간 비율 (a_{ij}/a_{kj})도 고정되며, 따라서 j 산업에 투입되는 모든 산업 및 본원적 생산요수의 투입비율이 고정됨

$$X_j = \frac{x_{1j}}{a_{1j}} = \frac{x_{2j}}{a_{2j}} = \dots = \frac{x_{nj}}{a_{n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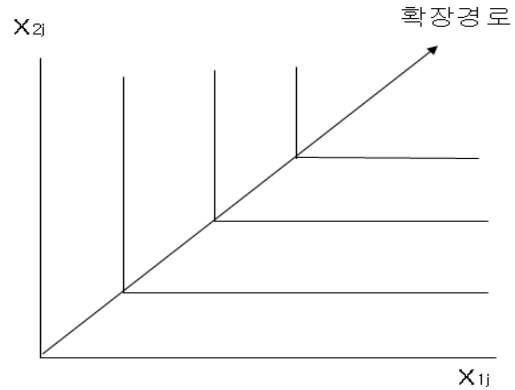
- 이러한 투입계수의 정의에 기초하여 소위 “레온티에프생산함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X_j = \min \left(\frac{x_{1j}}{a_{1j}}, \frac{x_{2j}}{a_{2j}}, \dots, \frac{x_{nj}}{a_{nj}} \right)$$

-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는 어떤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중간투입이 요구되며, 중간 투입의 최소 요구량보다 많으면 생산이 가능하지만 약간이라도 부족하면 생산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고전학파 생산함수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전통적 생산함수와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의 비교

- 기술계수와 동일한 원리로 각산업의 산출과 부가가치 및 노동투입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가가치계수 및 노동계수가 정의될 수 있음

- 부가가치계수(value-added coefficient)는 각 산업의 부가가치(V_j)를 총산출(X_j)로 나눈 것으로, 각 산업에서 1단위 생산함에 있어서 투입되는 본원적 생산요소들에 대한 지불액(부가가치액)을 의미함

$$a_j^v = V_j / X_j$$

- 이러한 부가가치계수와 투입계수를 각 산업별로 합하면 정의에 의해 "1"이 되므로 이들 두 계수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음

$$a_j^v = 1 - \sum_{i=1}^n a_{ij}$$

- 노동계수(labor coefficient)는 각 산업에 투입된 노동량(L_j)을 총산출로 나눈 것으로, 각 산업에서 1단위 생산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노동량을 의미.

$$l_j = L_j / X_j$$

- 기술계수를 이용하여 각산업의 수요-공급균형식을 방정식체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기본모형을 도출할 수 있음

- 각 산업의 생산, 투입계수 및 최종수요를 각각 X_i , a_{ij} 및 F_i 라 할 때 n 개의 산업에 대한 수요-공급균형식은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X_1 &= a_{11}X_1 + a_{12}X_2 + \cdots + a_{1n}X_n + F_1 \\
X_2 &= a_{21}X_1 + a_{22}X_2 + \cdots + a_{2n}X_n + F_2 \\
&\vdots \quad \quad \quad \vdots \quad \quad \quad \vdots \quad \quad \quad \vdots \quad \quad \quad \vdots \\
X_n &= a_{n1}X_1 + a_{n2}X_2 + \cdots + a_{nn}X_n + F_n
\end{aligned} \tag{1}$$

○ 이를 행렬로 나타내면

$$\begin{bmatrix} X_1 \\ X_2 \\ \vdots \\ X_n \end{bmatrix} = \begin{bmatrix} a_{11} & a_{12} & \cdots & a_{1n} \\ a_{21} & a_{22} & \cdots & a_{2n}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a_{n1} & a_{n2} & \cdots & a_{nn} \end{bmatrix} \begin{bmatrix} X_1 \\ X_2 \\ \vdots \\ X_n \end{bmatrix} + \begin{bmatrix} F_1 \\ F_2 \\ \vdots \\ F_n \end{bmatrix} \tag{2}$$

$$X = AX + F \quad (\text{단, } A = [a_{ij}]: \text{투입계수행렬})$$

$$X - AX = F$$

$$\therefore X = (I - A)^{-1}F \quad : \text{산업연관분석의 해} \tag{3}$$

○ 여기서 $(I - A)^{-1}$ 는 Leontief의 역행렬 혹은 생산유발계수행렬이라고 부르는데, $(I - A)$ 의 행렬식(determinant)이 non-zero이면 유일한 해가 존재하므로 최종수요에 어떤 특정한 값들이 주어지면 이에 상응하는 각산업의 생산수준이 결정됨

□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로부터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승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 F 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간재: AF
- AF 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간재: $A(AF) = A^2F$
- 필요한 생산량의 합계(역행렬이 존재할 경우)

$$\begin{aligned}
X &= F + AF + A^2F + \cdots + A^mF \\
&= (I + A + A^2 + \cdots + A^m)F \\
&= (I - A)^{-1}F
\end{aligned}$$

□ 산업연관모형의 승수효과는 산업간 상호의존관계의 2중적인 연쇄성에 기인하는 것임.

- 산업연관분석에서 산업간 상호의존관계의 기본은 한 산업의 생산물(재화 혹은 서비스)이 다른 산업들의

생산과정에서 중간투입재로 사용된다고 하는 기술적 상호의존관계를 의미함

- 현실 경제에서 이러한 상호의존관계는 수많은 산업들의 존재로 인하여 매우 복잡한 연쇄적 파급효과를 초래하는데, 이때 “연쇄적”이라는 것은 2중적인 성격을 가짐
- 그 하나는 한 산업에 있어서 생산증가는 수많은 관련 산업의 생산에 일제히 파급영향을 초래한다는 의미임
- 다른 하나는 그 파급효과가 1차 효과(즉, 직접효과)에 그치지 않고, 2차 효과, 3차 효과 등 여러 차례 걸쳐서 순차적 누적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연쇄적 상호의존성은 또한 두 방향에서 규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i 산업으로부터 중간투입재를 수요하는 j 산업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후방연관관계”와 다른 하나는 j 산업에 대하여 중간투입재를 공급하는 i 산업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전방연관관계임

□ 최종수요가 변화할 경우 이러한 연쇄적 파급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생산의 변화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음

$$\Delta X = (I - A)^{-1} \Delta F \quad (4)$$

- 이러한 생산의 변화에 부가가치계수와 노동계수를 적용하면 부가가치 및 고용의 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음

$$A^v \Delta X = \Delta V \quad (5)$$

$$A^l \Delta X = \Delta L \quad (6)$$

(단, A^v 과 A^l 는 각각 a_{ij}^v , l_{ij} 를 대각원소로 하는 대각행렬)

□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최종수요 중 투자지출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상기의 식을 적용하면 파급효과를 계산할 수 있음

- 즉, (4)식은 기술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모형으로 고쳐 쓰면 다음과 같음.

$$\Delta X = (I - A)^{-1} \Delta F_{RD} \quad (7)$$

(단, ΔF_{RD} =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로서 다른 산업은 “0”이고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에만 투자규모가 발생)

- 위 식은 특정 산업이나 전산업에 걸쳐서 기술개발I가 증가하면 이러한 투자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국내 각 산업들이 추가적으로 생산해야할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 이러한 생산유발에 따라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수준이 식(5)와 (6)에 의해서 계산

□ 산업연관모형은 최종수요부문의 내생화 여부에 따라 개방형 모형(open model)과 폐쇄형

모형(closed model)으로 구분됨

- 산업연관모형은 기본적으로 경제체제의 움직임을 산업간 상호의존관계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도구인데, 기본모형에서와 같이 최종수요부문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을 개방형 모형이라고 부름
- 반면에 최종수요의 변화도 상호의존관계의 체계내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이를 내생화하는 모형을 폐쇄형 모형이라 칭하고 있음

□ 개방형 모형인 기본모형은 외생부문의 내생화, 즉 폐쇄형 모형으로 전환을 통해 확장이 가능함

- 폐쇄형 모형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수입의 내생화 등을 들 수 있음

□ 기본모형은 외생화된 수입을 모형내에서 결정되도록 내생화를 통해 확장이 가능하며, 실제의 응용에도 대부분 수입을 내생화한 모형이 보편적으로 이용됨

- 투입계수행렬 A의 a_{ij} 는 국산재와 수입재를 동질적인 것으로 가정한 것이나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
- 더욱이 수입의존율이 높은 우리경제에 적용할 경우 수입의 외생처리는 파급효과 산출시 국내생산을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높음
- 즉, 최종수요가 증가할 경우 국내생산이 증가하며, 이와 비례적으로 수입도 증가할 것이나, 수입이 외생화될 경우는 이러한 과정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생산의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높음

□ 수입을 내생화하는 방법은 수입재의 성격구분에 따라 몇 가지가 가능하나 가장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비경쟁수입을 가정하는 것임

- 경쟁수입형을 이용해서도 수입의 내생화가 가능하지만, 순수한 국내생산파급효과와 수입으로 인하여 해외로 누출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내포하고 있음

비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

	내생부문				외생부문	수 입	국내 생산
	1	2	3	4	최종수요		
국산	x_{11}^d	x_{12}^d	x_{13}^d	x_{14}^d	F_1^d		X_1
	x_{21}^d	x_{22}^d	x_{23}^d	x_{24}^d	F_2^d		X_2
	x_{31}^d	x_{32}^d	x_{33}^d	x_{34}^d	F_3^d		X_3
	x_{41}^d	x_{42}^d	x_{43}^d	x_{44}^d	F_4^d		X_4
수입	x_{11}^m	x_{12}^m	x_{13}^m	x_{14}^m	F_1^m	M_1	
	x_{21}^m	x_{22}^m	x_{23}^m	x_{24}^m	F_2^m	M_2	
	x_{31}^m	x_{32}^m	x_{33}^m	x_{34}^m	F_3^m	M_3	
	x_{41}^m	x_{42}^m	x_{43}^m	x_{44}^m	F_4^m	M_4	
부가가치	V_1	V_2	V_3	V_4			
국내생산	X_1	X_2	X_3	X_4			

- 비경쟁수입형은 <표 부록 1-1>와 같이 국내재와 수입재를 중간투입과 최종수요 양부문에서 구별하여 작성됨
- 따라서 국내재와 수입재가 이질적이며, 각 산업별로 이들의 투입비율이 상이하다는 보다 현실적인 가정에 입각하고 있어 파급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음

□ 비경쟁수입형에 입각하여 수입내생화 모형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중간투입과 최종수요부분에서 국내재(상첨자 d)와 수입재(상첨자 m)를 별도로 구분됨

$$\langle \text{증가투입} \rangle \quad x_{ij} = x_{ij}^d + x_{ij}^m \rightarrow a_{ij}^d = \frac{x_{ij}^d}{X_j}, \quad a_{ij}^m = \frac{x_{ij}^m}{X_j}$$

$$\langle \text{최종수요} \rangle \quad F_i = F_i^d + F_i^m$$

- 이에 균형식도 생산 및 수입으로 구분됨

$$\langle \text{생산균형식} \rangle \quad X = A^d X + F^d \rightarrow X = (I - A^d)^{-1} F^d$$

$$\langle \text{수입균형식} \rangle \quad M = A^m X + F^m \rightarrow M = A^m (I - A^d)^{-1} F^d + F^m$$

□ 이러한 수입내생화 모형에 기초하여 기술개발 투자효과를 분석할 경우 각 산업별 국내생산뿐만 아니라 수입의 연쇄적 파급영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함

- 수입의 내생화 모형을 기술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모형으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음

$$\langle \text{생산유발} \rangle \quad \Delta X_{RD} = (I - A^d)^{-1} \Delta F_{RD}$$

$$\langle \text{수입유발} \rangle \quad \Delta M_{RD} = A^m (I - A^d)^{-1} \Delta F_{RD}$$

$$\langle \text{부가가치유발} \rangle \quad \Delta V_{RD} = A^v \Delta X_{RD}$$

$$\langle \text{고용유발} \rangle \quad \Delta L_{RD} = A^l \Delta X_{RD}$$